

2012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2012년 ‘연구지원 논문’

- 5·18과 유럽지역 한인 민주화운동사-독일을 중심으로**
 김면(연세대학교 연구교수) 7

- 지역주의를 넘어서**
 : 5·18항쟁이 1980년대 대구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
 김상숙(대구사회연구소 연구원) 29

- 5·18광주항쟁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의 역사적 기원**
 : 전쟁, 학살, 기억
 김정한(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56

- 여순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Psychological Trauma)에 대한 소고(小考)
 이영문(이음병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81

- 1980년대 초반의 공안사건과 사회적고통**
 : ‘햇불회’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정호기(광운대학교 강사) 105

2010년 5·18전문연구자육성 지원 논문

-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연구**
 :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김보경(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131

2012년 연구지원 논문

- 5·18과 유럽지역 한인 민주화운동사-독일을 중심으로
 - 지역주의를 넘어서
- 5·18항쟁이 1980년대 대구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
- 5·18광주항쟁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의 역사적 기원
 - 전쟁, 학살, 기억
- 여순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에 대한 소고(小考)
 - 1980년대 초반의 공안사건과 사회적고통
 - : '햇불회'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5·18과 유럽지역 한인 민주화운동사* : 독일을 중심으로

작성자 : 김 면(연세대학교 연구교수)

I. 서론

II. 5·18과 유럽 민주화운동

1. 5·18 민중항쟁보도와 교민운동의 대중화
2. 김대중 선생 구명운동과 국제사회에 대한 연대활동
3. 민주화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III. 오월민중제와 유럽동포운동의 현재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논문은 5·18 광주민중항쟁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에서 펼쳐진 한인 동포들과 단체의 민주화운동 활동상을 고찰하였다. 유럽 한인사회는 독일로 한인 간호사와 광부들이 이주한 1960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여타 지역에 비해 작은 규모의 한인동포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5·18 민중항쟁을 계기로 유럽 한인들은 해외운동사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대 큰 변혁을 이루게 된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한인동포들의 민주화운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였고 그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히 컸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유럽교민운동이 벌여왔던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양상을 참여자의 기억을 토대로 구술접근을 시도하였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5·18기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우선 5·18 민중항쟁은 일반교민들이 사회의식에 눈을 뜨도록 하여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독일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인들이 시민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중화 과정을 살폈다. 5·18민중항쟁이 전환점이 되어 교민들이 행한 활동방식과 발전방향을 기술하였고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을 통해 그들이 한인사회에서 추구했던 바는 무엇이었는지 고찰하였다. 이어진 장에서 한인단체가 국제사회에서 현지정당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한국의 민주화에 관한 여론형성을 현지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민사회가 5·18 민중항쟁을 계기로 국내민주화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했던 이들의 취지와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남북한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연계하고자 했던 교민들의 노력을 조명해 보았다. 특히 마지막 장은 오늘날까지 교민사회 내 구심점의 역할을 맡아온 5·18 민중제를 중심으로 한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가려는 여러 활동을 살피고자 했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유럽교민들의 민주화운동의 행적을 추적하고 치열했던 교민들의 활동현장을 기록하면서, 5·18 민중항쟁이 유럽교민운동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제어: 5·18 민중항쟁, 유럽한인, 민주화운동, 5·18 민중제, 해외운동사

I. 서론

본 연구는 5·18 민중항쟁을 계기로 촉발된 유럽지역 한인동포들에 의한 민주화운동 및 그 성과를 살피고자 한다. 유럽지역의 한인사회는 중국, 미국, 일본 등 타 지역의 동포사회와 비교해 볼 때 그 인구규모가 크진 않다. 유럽 한인사회는 독일로 한인 간 호사와 광부들이 이주한 1960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1980년 이후에는 이민 유입이 사실상 힘들어져서 여타 지역에 비해 작은 규모의 한인동포 수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약 10만 명을 넘지 않고 있으며 그 중 독일이 3만, 프랑스와 영국이 각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유럽지역은 영주권을 지닌 교민들보다 상사 주재원이나 재외공관, 유학생 등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각 나라별 특성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유럽 내 진보적인 사회분위기는 이념적으로 비교적 개방적이어서 한인민주화단체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 재외한인운동의 전반적 흐름 및 주요 사건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천착되어 왔다고는 말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은 독일 내 한인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활동인원으로 그 의미성이 과소평가된 탓도 있다. 그리고 냉전체제시기 유럽지역을 진보성향 운동가들의 도피처 내지 서방권과 사회주의권 대표자들이 일시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중간지점으로서 그 역할을 축소하여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유럽지역은 미주동포나 재일한인 단체들의 활동 및 규모와 비교하여 1970년대까지 소수 유학생들만을 중심으로 국내의 정치문제를 국제 여론에 알리는 활동을 제한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18 민중항쟁을 계기로 유럽 한인들은 해외운동사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대 큰 변혁을 이루게 된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은 5·18 민중항쟁을 전환점으로 하여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한인동포들의 민주화운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였고 그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히 컸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유럽한인들은 5·18 민중항쟁이후 국내민주화를 위해 유럽 현지의 정

1) (독일) 정착한인 13,575명, 체류자 12,094명/ (프랑스) 정착한인 1,088명, 체류자 9,177명/ (영국) 정착한인 1,527명, 체류자 9,309명/ (이탈리아) 정착한인 70명, 체류자 5,425명으로 독일 근로자와 간호사 파견을 제외하고 유럽에 이주한 한인들은 처음부터 이민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참조, 한·유럽연구회(편), 유럽한인사, 재외동포재단, 2003, pp.6f.

당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시키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이 지역 교민들은 국내의 억압된 정치상황하에서 억눌려 언급조차 힘들었던 민주화문제를 과감하게 국제사회에 드러내어 변화를 유도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한인들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민주화운동이 새로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재독동포들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미국과 일본지역의 동포사회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관련 인사들의 행적을 좌편향적인 관점에서 인식하여 유럽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실증적 접근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결과적으로 유럽 한인사회 내 민간 차원의 민주화운동 상당부분은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민주화과정이 진척이 되고 관련연구가 활성화되고 객관적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면서 과거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규명연구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해외한인운동에 대한 연구도 최근의 연구흐름과 같이 보다 실증적으로 유럽한인의 민주화운동을 고찰하여 역사적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문에서 5·18민중항쟁이 기폭제가 되어 거듭나게 된 유럽의 민주화운동사를 새롭게 조명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현장에 직접 참여했었던 이들의 증언자료를 중심으로 해외한인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역할과 전개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II. 5·18과 유럽 민주화운동

1. 5·18 민중항쟁보도와 교민운동의 대중화

독일 언론은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한 소식을 19일부터 보도하였다. 진보적 신문에서 중도 성향의 잡지와 보수적 신문에 이르기까지 각종언론매체들은 사건의 발발에서 진행과정을 상세히 분석전달하게 되었다. 주요 언론인 『프랑크푸르터 알게 마이네』(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남독신문』(Süddeutsche Zeitung), 『프랑

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 『벨트』(Die Welt)와 『슈피겔』(Der Spiegel)을 포함한 독일의 신문과 잡지는 언론사의 입장과 편집방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었지만 5·18 민주항쟁의 발발, 경과, 결과, 주변 국가들의 반응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²⁾ 보도 출처는 국내기사의 번역,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기자의 직접적인 기록, 일본 동경발 외신 및 중국 인민일보 그리고 북한 통신사 KCNA를 인용한 소식 등이었고 서로 다른 시각의 보도 내용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독일공영방송인 ZDF와 ARD가 취재했던 녹화비디오와 ‘찢어진 깃폭’ 등 각종 민주항쟁 자료들은 방송을 통해 생생히 전달되었다.³⁾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독일의 신문, 잡지와 TV방송은 계엄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국내언론매체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유럽사회에 광주학살의 진상을 객관적인 자료와 영상으로 널리 보도하였다. 페터 크로메(Peter Crome)는 5월27일 “혁명정신이 우리를 엄습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슈트트가르트차이퉁』지에 실었고⁴⁾ 힌츠 페터는 동료 해닝과 함께 5월20일 화요일 오전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도움과 책임자를 찾으러 간다는 기지를 발휘하여 광주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광주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상무대 병원에서 태극기에 싸여진 채 숨진 사람들, 몽둥이에 맞아 죽은 어린 학생의 시체... “내생애에서 한 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서 종군기자로 활동할 때도 이렇듯 비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가슴이 너무 팍 막혀서 사진 찍는 것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위르겐 힌츠페터, 1997)⁵⁾

유럽지역 많은 한인들은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국내소식과 참혹했던 현장사진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분노 속에 군사정권의 탄압에 항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77년 9월 탄광근로자로 독일로 입국했던 이준식 선생은 5·18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 참조, 김성재, “독일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5·18 광주민주항쟁정보”, 『민주주의와 인권』 (4권 1호), p.174.; 논문은 중도적인 신문과 잡지, 진보적인 신문 그리고 보수적인 신문이 언론매체의 편집방향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독일의 모든 신문과 잡지가 한국의 민주화가 5·18로 인해 결정적으로 후퇴했다고 진단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독일의 신문과 잡지는 대화를 통한 정치개혁과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통합문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의 해결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 어수갑,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서울: 휴머니스트, 2004, p.258.

4) 김용출, 『독일아리랑』, 에세이, 2006, p.236

5) (재인용) 같은 책, p.234.

80년 5월 광주가 터집니다. 그 터진 속에서 독일의 제이방송인가? 거기에서 광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제가 기억은 없는데, 한국 특파원으로 가있던 기자가 그걸 찍어서 전세계에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보내게 되죠. 사실 그 실벌한 상황, 보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내서 밝혀지는데, 그걸 보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 독일의 광산 근로자들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소위 좀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세상에 제 나라 민족을 제 나라 군인이 그렇게 짐승처럼 죽이는 그런 광경들을 생생하게 목격했을 때는 정말 치솟는 분노, 민족적인 모멸감, 수치감 이런 것이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조국이 뭔가,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고, 내 나라고, 내 조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본 문제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⁶⁾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관한 외신들의 보도는 유럽 내 교민운동이 대중화하는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TV와 신문 및 잡지를 통해 보도된 광주의 참상과 그 이후 벌어진 국내의 억압상황은 유럽의 한인동포들이 군사정부에 저항하려는 민주화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1974년부터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가 결성되어 국내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주로 소수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한인사회의 저변에 뿌리를 두지 못하였다. 독일로 파견된 광산근로자와 간호사들은 노동체류와 근로조건의 문제로 국내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운동에 주로 몰두해 있었다. 특히 교민사회는 냉전시대에 받았던 반공교육의 영향으로 민주화운동을 조국에 반하는 좌익행동으로 보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시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아예 관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독일방송에서 방영된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식은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다수의 교민들도 사회의식에 눈뜨게 하여 국내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또한 민건회 및 다른 단체에 가입해 있던 개인들 간 연대활동도 활발해지게 되었다.⁷⁾

김아일 선생은 당시 독일 뒤센이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5·18 민중항쟁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느낀 의식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운동 데모 하나 만큼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를 했죠. 운동단체가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거든요. 기껏 해 봤자 소수인데, [...] 주요 시간에 확정뉴스로 광주를 먼저 보여주고 뉴스를 시작했으니

6) 이준식 선생 구술/지자녹취, 2007년 2월.

7) 참조, 조현욱, 해외의 한국민주화운동, 『경제와 사회』 66호(2005), p.88.

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운동권이다 뭐다 이런 거를 떠나서 당연히 어떤 감정이 불타오르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죠, 80년대 기점으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5·18을 계기로 해서 많이 의식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5·18 일어나고 얼마 안돼서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운동단체는 물론이고 평상시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던 일반교민들끼리 또 독일인까지 다 참가한 약 500명 정도해서 푸담 여기 가장 변화가에서부터 저기 뒤텐베르크라는 거리까지 이제 데모를 했어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데모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광범위하게 숲교민 운동단체는 물론 그리고 독일인까지 해서 중심가에서 데모를 했다는 것이 유럽운동사에서 한 획을 긋는 거죠.⁸⁾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군사행동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일반교민들은 심한 분노감을 갖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대중적 정치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군사정부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해외에 한국사정을 알리는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의 긴급한 사정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계기로 소수 운동가들만의 단절된 조직 활동이 아니라 많은 동포들이 민주적 사회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대중적인 유럽민주화운동의 초석을 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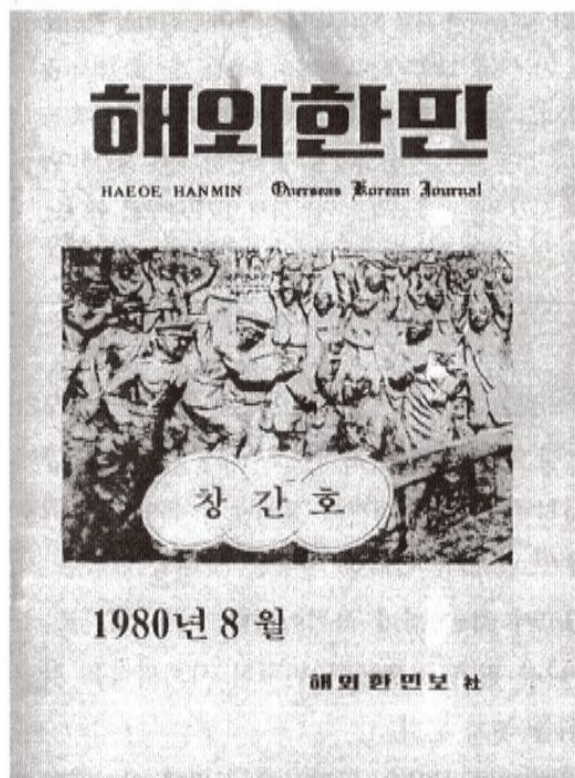
교민들과 함께 일반유학생들도 광주민중항쟁의 실상을 알리고자 시위에 참여하였고 폭넓은 홍보활동을 하였다. 튀빙엔, 괴팅엔, 마부르크, 베를린, 보쿰과 쾰른 등지에서 광주에서 자행된 군사행동에 항거하는 성명서를 재독한국학생 일동으로 내었고, 독일 내 정당과 인권단체 및 저널리스트를 상대로 관련 자료집을 독일어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1980년 6월 3일 튀빙엔 대학교 한인학생회 성명서의 일부 내용이다.

[...] 잔악과 독선의 전제군부 독재를 영원히 분쇄하려는 그들의 결의와 우리의 결의가 뜨겁게 한 핏줄로 만날 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대투쟁의 대열에 모두 함께 앞장서 일하려는 뜨거운 의지가 우리 가슴 속에 불붙을 것이다.[...] 우리는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고난으로 열어 놓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의 말과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또한 정의롭게 장식해 나갈 것이다.⁹⁾

8) 김아일 선생 구술/저자녹취, 2007년 8월.

9) 어수갑, 「유럽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미간행), pp.115f.



해외한민 창간호(1980년 8월 15일)

또한 한인교회소속 기독교목회자들도 광주민중항쟁의 참상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분노 속에서 국내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내중심에 있는 교회를 빌려 약 30명이 단식투쟁을 사흘이나 계속하기도 했다.¹⁰⁾

이처럼 한인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동참하며 앞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 및 '재독한국여성모임'(여성회)에 가입해 있던 인사들과 연대하여 민주화운동을 함께 펼쳐나가게 되었다.

2. 김대중 선생 구명운동과 국제사회에 대한 연대활동

당시 군사법정은 김대중 선생에 대해 5·18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내란음모죄로 구속시킨 이후 사형선고를 내리는 조치를 취한다. 국내 상황이 억압적인 분위기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때 독일교민들은 이 곳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연방정부와 정당 그리고 영향력 있는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국제사회에 김대중 선생의 석방을 호소했다. 윤이상, 정규명씨 등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와 '국제사면위원회'에 민중항쟁의 여론화와 김대중 선생의 구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부교민들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매일 구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간호사로 파견을 왔던 김정숙 선생은 독일사회에 호소문과 서명을 통한 구명 활동에 관하여 구술하였다.

10) 이영빈·김순화, 『경계선』, 서울:신앙과 지성사, p.324.

그 방법들 중에 데모, 나라 수상들에게 호소문 보내는 거, 진실을 알리는 거,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문화 활동을 이 기회에 함께 하면서 우리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들끼리 한독친선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한독친선회에 가입 되어 있던 분들이 독일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됐죠. [...] 서명운동을 해서 여기서는 서명운동을 해서 10만인가 만 이상이 되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숫자 이상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때 외무부장관으로 있던 겐서씨가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가서 전두환한테 이제는 김대중씨, 그때 투옥되어있을 때였어요. 그분이 출옥하게끔, 그때 사형선고 받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¹¹⁾

김대중 선생 석방운동은 한인민주화운동이 국제사회와 연대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심에 ‘한국연대위원회’(Korea Komitee)가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연대위원회는 윤이상 선생과 친분이 있던 귄터 프로이덴베르크(Günter Freudenberg)교수에 의해 1977년 2월 세워져 동백림사건과 유신독재에 항거하던 교민운동을 지원해왔었다.¹²⁾ 이 단체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김대중의 사형선고를 계기로 정치적인 적극성을 띠고 한인단체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조성하며 한국민주화활동을 헌신적으로 돕게 되었다. 프로이덴베르크 교수는 조남호씨와 함께 사회민주당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당수에 공개 항의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한국의 상황과 정치범의 석방에 대해 언급하고 김대중 선생 구명운동을 요구하였다. 빌리 브란트당수는 답장에서 앞으로 남한의 정치범들을 위해 힘을 쓸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1979년부터 발간하던 『한국소식지』(Korea-Korrespondenz)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규탄했다. 1980년 8월호 3/4호에는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실었다.

김대중을 살려라!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명을 모아주십시오! 지역언론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계시는 정치가, 교회관계자, 학자들, 예술가들에게 김대중을 계획적으로 죽이려는 음모를 알려주시고, 공개적인 저항을 요구해 주십시오! 저항이 멈춰서는 안됩니다! 김대중이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전진해야 합니다.¹³⁾

1980년 11월 15일 한국연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150여명의 독일인과 한국인이 모여 김대중 선생의 사형선고를 취소하라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제

11) 김정숙 선생 구술/저자녹취, 2007년 2월

12) Roland Wein, “광주 5·18 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사업”,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4』, pp.212f.

13) 앞의 논문, p.215.

적인 지지모음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일본의 경우 5월부터 6월에 걸쳐, 6월 15일의 도쿄집회 7천명, 28일 한일연대대모 1,200명 등 천 명을 넘는 규모의 광주연대대모가 전개되기도 했다.¹⁴⁾

그리고 1981년 5월에 뒤셀도르프, 뮌헨, 뮌헨글라트바하, 괴팅겐에서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같은 해 5월8일 쾰른에서는 윤이상 선생이 광주를 추모하기 위해 “광주여 영원하라”(Exemplum: In Memoriam Kwangju)라는 교향곡을 만들어 WDR방송국의 교향악단이 연주하였다.¹⁵⁾

1981년 9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가 서울을 올림픽개최지로 결정하자 독일 내 한국 연대그룹들과 언론에서는 일 년 전에 군대를 동원해 민중봉기를 진압한 나라에서 올림픽 경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일 내 한국연대그룹들은 올림픽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활용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홍보사업을 벌이게 되었다.¹⁶⁾

코레아협의회 사무장을 맡고 있던 최현덕 박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전두환 정권이 5·18을 통해서 집권한 정권인데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일종의 정통성을 만들려는 노력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뇌물 수 있는가라는 토론이 있었어요[...] 독재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사람 내지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꾸준히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자, 그러니깐 한국의 두 얼굴을 같이 알려주자,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일종의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코리아 올림픽아 캠페나’,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1986년부터 1988년 정도, 올림픽 끝날 때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문도 내고, ‘Korea Forum’이라고 해서 A4 용지로 4장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쁜 저널리스트들이 다 보고, 그런 것도 내고,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그 연합체를 구성할 때 한국연대위원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이 독일 내에 얼마 안 되는 좀 진보적인 지한파들을 거의 다 결집시키는 그런 연합체였어요.¹⁷⁾

1986년 3월 한국올림픽 캠페인모임이 결성되어 국내의 인권상황, 민주적 운동의 억

14) 무토 이치요, “광주항쟁은 일본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4』, p.231.

15) Roland Wein, 앞의 논문, p.216.

16) 같은 논문, p.218.

17) 최현덕 박사 구술/저지녹취, 2007년 8월.

압, 노동자와 농민의 상황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했다.¹⁸⁾ 이때 관여했던 활동인사들은 한국연대사업관련 단체 소속인데, 독일교회 내 선교단체와 소년단체 그리고 한국선교와 관계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했고, 그 외 저널리스트, 재단,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학분야 학자와 진보 인사 등 독일 내의 지한파들을 거의 망라한 연합체를 이루게 되었다.¹⁹⁾

한국연대위원회의 주요임원은 베어닝(Rainer Werning), 흐루스카(Rainer Hruska)와 바인(Roland Wein)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1987년까지 『한국소식지』를 발행하며 독일사회 안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을 위해 여러 단체들의 활동이나 인사들의 소식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나아가 동포단체들과 함께 유럽사회를 대상으로 전두환 대통령 방독 반대데모, 오월민중제 참여 등을 통해 공동대처하며 한국 내 활동가들을 지원하였다. 이후 단체는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로 계승발전하게 된다.

3. 민주화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5·18 민중항쟁의 영향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대한 변화는 교민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이 중심이던 것에서 통일운동으로 확대 전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 해외동포운동은 국내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활동했었고, 통일운동은 분단구조아래 국가안보를 우선시 하는 분위기에서 금기시되고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신군부가 광주시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함에 있어서 미국이 취한 역할에 대해 교민들은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군사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광주민중항쟁에 군대과전을 방조하였거나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신군부를 지원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았다.²⁰⁾ 따라서 해외한인운동은 미국이 무조건적인 우방이 아

18) Roland Wein, 앞의 논문, p.219.

19) 최현덕 박사 구술.

20) “한국정부는 시위진압과 안보작전을 위해 몇몇 지상군부대를 한미연합사통제로부터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연합사령관 존 워컴장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국방성이 밝혔다”는 1980년 5월 23일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미국국방성 발표내용을 기초로 이상성 교수는 적어도 미국 측이 자신들의 작전권이 실질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명백한 인상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참조, 이상성, “광주민중봉기와 미국의 역할”,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기념재단, 2007, p.471.

나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깨달으면서 자주화 및 민족적인 성격을 띤 통일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²¹⁾

재독동포협력회의 장일중 선생은 5·18과 통일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아직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점점 통일이 아니면 우리나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광주 80년 광주 항쟁은 통일을 위한 항쟁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죠.[...] 광주를 겪고 나서 범민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통일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당시만 해도 통일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운동하던 사람마저도 이상한 눈으로 봤단 말이지.²²⁾

당시 한반도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반공체제가 구조화된 시기였기에 교민사회도 통일논의 자체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고 그 물꼬를 트기도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교회그룹은 통일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교민사회에서 민간 차원까지 확대시키는 발판을 만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주요 인물로 독일의 이영빈 목사와 이화선 목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과 병행해 전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기독교통일협의회'(기통회)를 결성 첫 통일운동의 장을 열게 된다. 당시 기통회는 1978년부터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에 꾸준히 편지글을 통해 통일논의를 제안하는 계기를 만들어 왔었다.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이후 이 만남은 실질적으로 성사된다.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초청하였고 이들은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간 기독교 교류를 맺게 되었다. 이후 1981년 11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남북기독교의 대화모임'을 개최하고 허정숙, 고기준, 최덕신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²³⁾ 이후 1982년 11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간의 대화', 1983년 7월 평양에서 '북과 해외동포 학자 통일문제 토론회 모임'이 잇따라 열렸다. 민간차원의 대북교류를 허용하지 않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실정법상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남북대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²⁴⁾

21) 이시기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재미한인들의 대북한관이 급변하여 1980~1984년 사이에 5백여 명의 재미한인들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고 있다. 참조, 장태한, "재미한인사회의 정치구조 변화 5.18",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4』, 5.18기념재단, 2007, p.199.

22) 장일중 선생 구술/저자녹취, 2007년 2월.

23) 참조, 이영반·김순환, 『통일과 기독교』, 고난함께 1994, pp.304-316.

24) 김 면, "독일한인통일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카프카연구』 18집(2007), p.405.

유럽한인교민들은 1981년부터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기리면서 광주기념행사를 가져왔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유럽의 여러 단체들은 1987년 5월 18일 ‘오월민중제’를 정식으로 개최하여 전체 유럽운동의 연대를 이루어내었다. 나아가 이 행사가 모태가 되어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유럽민협)가 태동되었다. 이전 노동자권익,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및 환경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던 동포운동이 ‘유럽민협’이란 이름하에 통합된 연합운동을 형성하게 된다. 민협은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재독한국여성모임’,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덴마크민중문제연구소’, ‘북구민주사회건설협의회’, ‘불란서민중문제협의회’, ‘스위스민주사회건설협의회’등 단체를 포괄하지만 독자성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⁵⁾

민협은 1989년 7월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평양축전을 참가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통일에 대한 대내외의 큰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으로 보다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제적 여건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는 사건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민협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많은 진보적 민주인사들은 국내외 재야단체들과 더불어 범민족대회라는 민간통일운동행사를 추진하였다. 1990년 8월 제1차 범민족대회 참가차 1차 60여명이 독일 베를린에서 전세비행기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종현 유럽연대 의장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유럽민협에서 처음 통일문제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89년도에 한국의 그 때 연합체가 전국 연합이라고 하지, 연합조직이 있었다고,[...] 89년도에 전국연합에서 우리 통일문제를 갖다 얘기한다고 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해외와 같이 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의 범민족적인 모임을 가지자, 남북회담 그런 제안을 우리한테 해 왔다고요.[...] 89년도에 7.7선언이 아마 노태우 때 나왔을 거라고, 7.7 선언이 뭐냐면 남쪽에서 오라, 북에서 간다 뭐, 아무튼 절대 막 서로가 통일을 위해서는 거기에는 이념 초월해서 얼마든지 뭐, 아주 파격적인 선언했다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해외에 연락이 가고 해서 우리는 범민족 성사시켜야 한다 최소한도 늦어도 90년도에는 통일운동 해야 한다. 그래서 북에도 알아보고, 그때 89년도가 마침 여기 동독이 동독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니까 우리는 북의 대사관에 찾아갔어요. [...] 미국이나 일본 이런데 연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에는 바로 그 지민련 연락을 하면서 범민족 대회를 성사시키자 그러니까 정부 차원이 아닌 소위 민간차원의 범민족적인 대회를 가지자 이렇게 합의를 본거죠. 합의를 보기 위해서 제1차 준비 모

25) 참조, 어수갑,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휴머니스트 2004, pp.235-243.

임이 그게 90년도 7월 말에 있었던 말이에요.²⁶⁾



Zwei Polizeibeamte stechen die streikenden koreanischen Werkschlichter in Brand. Mehr als 600 Personen wurden in der im Süden des Landes gelegenen Stadt Ulsan festgenommen.

Photo Reuters

Massenstreiks nach Polizeieinsatz gegen Arbeiter

Ulsan (Tagesspiegel, 13.Mai) Mit Arbeitsverweigerung haben gestern Zehntausende der Hyundai-Konzern im südkoreanischen Ulsan gegen das gewalttätige Vorgehen der Sicherheitskräfte gegen Streikende am Wochenende protestiert. 20 000 Beschäftigte des Hyundai-Auto-werkes stimmten für einen Streik, der sofort beginnen sollte. Organisierte Arbeiter in sechs weiteren Konzern-Betrieben traten gestern ebenfalls in den Ausstand. Die verbundene Gewerkschaftsbund Chumonghyop hat für heute zu ei-

nen landesweiten Streik aufgerufen.

Gewerkschaftsführer erklärten, das Vorgehen der Regierung zielt auf die Zerschlagung der organisierten Arbeiterschaft. Dem solle mit den Kampfmaßnahmen begegnet werden. Wie berichtet, habe die Polizei am Sonntag rund 2000 Teilneh-mer eines wilden Streiks von der Hyundai-Werft in Ulsan, der größ-ten des Landes, vertrieben. Darauf hatten sich dort und anderswo Arbeiter mit der Polizei schwerk-

1990
Mai
Nr. 2773. Jahrgang

Streiknachrichten aufliefen. Allein am Sonntag nahm die in Ulsan auf 20 000 veranschlagte Betriebschaft (polizei) 650 Arbeiter fest. Die Un-friede umfasste eine Welle von Soli-daritätstreiks in anderen Werken des Konzerns aus.

Das Unternehmen, das sich mit staatlicher Rückenstärkung den Forderungen der Arbeiter teil-nenfalls beugen will, teilte mit, die Polizei bereits die Überwältigung von Dutzenden von Arbeitern vor die eines streikenden Kran auf der Schiffwerft beordert hätten. Sie hätten damit gedroht, in den Fall zu springen, wenn die Polizei verweh-ren sollte, sie festzunehmen. Auf 20 Blüten der Konzerns wurden in-zwischen Anschläge verübt.

Hyundai, Südkoreas größter Kon-zerne, besteht aus rund 30 Fir-men, von denen sich allein 12 in der Hafenstadt Ulsan im Südosten des Landes befinden.

Einem seit 19 Tagen andauernden Streik bei der staatlichen Kook-Tek- und Farnehanstalt bei, die südkoreanische Polizei ge-streift mit Gewalt beendet. Mehr als 300 Teilnehmern des Ausstands wurden im Gebäude festgenommen. Die Streikenden hatten den Ein-tritt des Direktors der Kunden-verwaltung verweigert, weil er reform-ferndlich sei. Erst am 12. April hatten Radio und Fernsehen vor allem alle Sendungen wiederholt.

Auch für freie Gewerkschaften in Südkorea

Zu den diesjährigen Feiern am 1. Mai versammelten sich Gewerk-schaftler aus Ost und West zu ei-ner gemeinsamen Kundgebung vor dem Berliner Reichstag. Neben verschiedenen Vertretern aus der DDR und der BRD sowie internati-onalen Gästen hielt auch der abge-ordnete Vorsitzende der DGB, Ernst Reuter, eine Rede. Reuter warnte vor einer sich abzeichnenden Entwick-lung, die dazu führt, die DDR in ein Billiglohnland umzuwandeln. Er sprach sich für Beziehungen für die Solidarität mit ausländischen Arbeitnehmern aus, wobei er Bezug auf die aktuellen Streiks der Arbeit-er in der südkoreanischen Hyun-dai-Werft nahm und in diesem Zusammenhang auch für freie Gewerkschaften in Korea eintrat.

민주조국 1990년 5월 (독어판)

서 중심역할을 맡아왔던 민협과 공존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민 운동가들 간에 인적 갈등을 겪고 분열되어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유럽민협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92년 9월 해체된다.

범민련 유럽본부는 90년 9월 불과 2개월 만에 급조되어 출범하면서 교민들의 지지 기반이 미약하였고 단체의 좌편향적 성향, 회원들 간의 갈등, 프락치사건 등으로 대중동포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²⁸⁾

26) 이종현 대표 구술/저자녹취, 2007년 8월.

27) 민경우, 『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 1972~2005』, 통일뉴스 2006, pp.132-134.

28) 참조, 한민족유럽연대(편), 『정규명』, pp.82-84.

Ⅲ. 오월민중제와 유럽동포운동의 현재

유럽 내 동포운동이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교민들은 꾸준히 오월민중제를 개최하고 있다. 오월민중제는 5·18 민중항쟁을 국제사회에 알린 이후에 매년 오월이면 유럽의 소단체들이 연대하여 치러온 광주기념행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7년부터 ‘오월민중제’라는 명칭으로 동포운동단체들은 함께 모여서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유럽 민주화운동의 중심체로 자리 잡아 왔다. 현재에도 단체들 간 갈등과 반목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오월민중제는 이견 없이 다함께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월민중제는 유럽민주화운동사에서 모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행사는 유럽 교민단체들이 유일하게 전체 만남을 갖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앞서 이념문제와 내적갈등으로 담보상태에 있던 동포운동을 부활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유럽연대의 최영숙 선생은 오월민중제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월민중제는 단체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만나서 공동으로 준비를 하니깐, 그리고 이제 그게 광주가 저희들한테 하나의 어떤 기동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독일에서, 유일하게 한 해도 안 빠지고 오월민중제를 한 게 이제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우리가 항상 문화활동사업 그러면 문화행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올해 못 만났던 사람들 같이 만나서 하나의 만남의 공동체 그런 게 있는 거예요.²⁹⁾

1999년 독일 빌레펠트에서 유럽지역 각 단체들이 모인 오월민중제때 교민들은 여러 조직을 하나로 묶는 협의체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였다. 교민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새로운 유럽운동의 중심체로 ‘한민족 유럽연대’(유럽연대)가 2001년 5월 출범하게 되었다. 중심인물로 이종현 대표와 최영숙씨 등을 들 수 있다. 단체는 이전 유럽민협의 이념성과 활동을 계승하며 유럽교민사회의 연합운동을 소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대 의장인 이종현 선생은 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럽연대가 그게 2001년도에 생겼는데, 유럽연대가 2001년도에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독일에는 연합체가 없었다고, 각 지역 단체들, 혹은 여성회 같이 퍼져있었는데, 흠, 각 단체별로 움직

29) 최영숙 선생 구술/저자녹취, 2007년 8월.

이고 그랬었는데, 단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오월민중제인데, 그 오월민중제에서 [...] 이제 여론들이 한국도 민주화 돼가고, 변화가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반공의식에 젖어 있어서 우리 활동이 너무 졸렬하다, 너무 미미하다 그런 것 때문에 국내 지금 진보적인 민주단체들과 충분히 얘기하도록 조직체가 있어야 된다고, [...] 그럼 유럽에서, 각 조직이 들어있더라도 조직의 모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부 다 들어오라 해서 만들었어요, 그 때 처음 발기인 수가 90명 명이었어요.³⁰⁾

유럽연대는 기관지로 ‘한민족유럽연대’를 발간하고 있고 여러 민주단체와 개인들이 협력하고 결집하는 연대기구로서 오월민중제 개최이외에 소수동포들의 권익옹호, 민주화운동,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2세를 위한 민족문화 및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독 교포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통일의식조사는 교민2세들이 정체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³¹⁾ 오월민중제는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왔던 유럽이주 1세대뿐만이 아니라 2, 3세대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인식시켜주고 우리민중문화를 전해주는 세대 간의 매개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사일정에 다양한 주제의 연극, 음악 및 전통풍물놀이를 통해 후세들에게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한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고 전달하는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민사회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제로 문부식·김현장 구명운동 단막극, 여성노동운동을 주제로 ‘공장의 불빛’, 동학을 연극으로 꾸민 ‘금강’ 등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졌다. 또한 베를린지역 여성회를 주축으로 풍물패 ‘들풀’과 뮌헨지역 풍물패 ‘바람’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프랑크푸르트의 ‘단비’와 베를린의 ‘천둥소리’를 꾸리게 되었다.³²⁾

최영숙 선생은 연극 및 문화활동의 의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광주항쟁 터지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기서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때부터 서게 된 거 같아요. 광주항쟁이 여기 사람들에게 많이 의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81년도에 미문화원방화사건 그런 거 문화차원에서 연극으로 꾸며서 여성회세미나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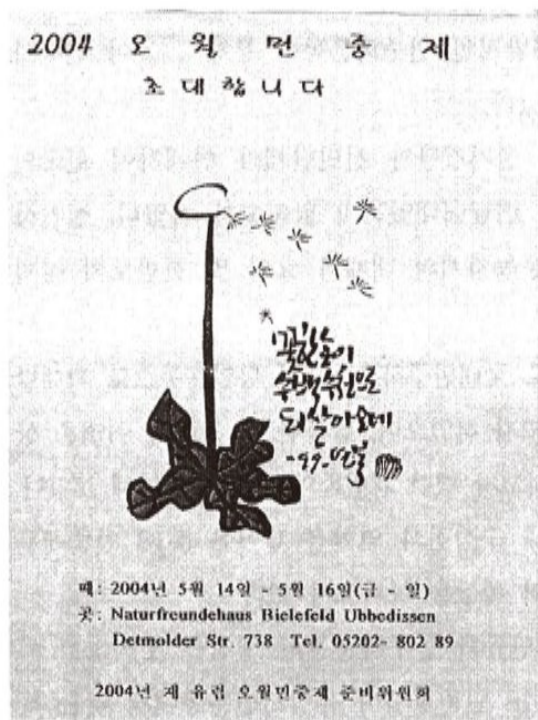
30) 이종현 대표 구술/저자녹취, 2007년 8월.

31) 한인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한국국민이라고 생각한다’가 80%, ‘독일국민이라고 생각한다’ 20%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가 10%, ‘통일이 되면 좋다’가 60%로 나타나며 나머지 30%는 통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통치자를 묻는 질문에 ‘김일성’이라고 답변한 청소년도 20%나 됐다. 참조, 한·유럽연구회, 『유럽한인사』, 재외동포재단, 2003, p.435.

32) 어수갑, 『유럽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p.72.

발표회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한국에서 오신 탈춤 무세중씨 같은 분들에게 탈춤 배워서 문화 프로그램 행사 할 때 항상 곁들여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장에서 연극을 했어요, 노래도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호응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6개 도시 다니면서 순회공연 했었어요, 우리가 연극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³³⁾

이들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끊임없이 유지되어온 오월민중제를 중심으로 후세들에게 민족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자기정체성 문제를 고민하여왔던 2세대에게 비록 유럽지역이지만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지키고 민족적 긍지를 갖고 나아가도록 문화운동과 관련한 교육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집중되어 왔던 민주화운동 및 인권운동을 확장시켜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4년 5월 유럽 오월민중제 초대장



2005년5월 한민족 유럽연대 발간 소식지

33) 최영숙 선생 구술/저자복취, 2007년 8월.

IV. 결 론

본 논문은 5·18 광주민중항쟁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에서 펼쳐진 한인동포들과 단체의 민주화운동 활동상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유럽교민운동이 벌여왔던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양상을 당시의 사회적 조건을 배경 하에 조망하고 그 안에서 해외민주화운동이 갖는 성격을 살펴보았다. 특히 교민사회가 보여 온 민주화운동의 이념관 및 대내외 운동방식에 대해 참여자들의 기억을 토대로 구술접근을 시도하였다.

본문에서 5·18 민중항쟁으로 인하여 유럽동포사회 내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는 과정과 실천했던 사업을 주요한 사건별로 세 가지 측면으로 조명하였다.

우선 5·18 민중항쟁은 일반교민들이 사회의식에 눈을 뜨도록 하여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독일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인들이 시민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중화 과정을 살폈다. 5·18민중항쟁이 전환점이 되어 교민들이 행한 활동방식과 발전방향을 기술하였고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을 통해 그들이 한인사회에서 추구했던 바는 무엇이었는지 고찰하였다.

이어진 장에서 한인단체가 국제사회에서 현지정당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한국의 민주화에 관한 여론형성을 현지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실천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기술하고 운동자체의 내재적 요인 및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교민사회가 5·18 민중항쟁을 계기로 국내민주화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했던 이들의 취지와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남북한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연계하고자 했던 교민들의 노력을 조명해 보았다.

특히 마지막 장은 오늘날까지 교민사회 내 구심점의 역할을 맡아온 5·18 민중제를 중심으로 한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가려는 여러 활동을 살피고자 했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는 1980년대 유럽교민들의 민주화운동의 행적을 추적하고 치열했던 교민들의 활동현장을 기록하면서, 5·18 민중항쟁이 유럽교민운동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에 미주 및 일본을 함께 조망하는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며, 이를 통해 5·18 민중항쟁이 해외한민족의 민주화운동사에서 갖는 전반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역사적 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게브하르트 힐서, “목가적 전원도시에서 펼쳐진 악몽”, 한국기자협회·무등일보·시민연대모임 편, 『5·18 특파원리포트』, 서울: 풀빛 1997.
- 김 면 외, 『구술로 본 해외한인통일운동사의 재인식- 독일지역』, 서울: 선인 2010.
- 김 면, “독일한인통일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카프카연구』 18집(2007), pp.397 -419.
- 김성재, “독일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5·18 광주민중항쟁 보도”, 『민주주의와 인권』 (4권1호), 2004 pp.151-177.
- 김용출, 『독일아리랑』, 서울: 에세이 2006.
- 무토 이치요, “광주항쟁은 일본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4』, 광주 : 5·18기념재단, 2007, pp.225-236.
- 문옥표 외, 『해외한인의 민족관계』, 서울: 아카넷, 2006.
- 민경우, 『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 1972~2005』, 통일뉴스 2006.
- 마쓰나가 세이타로, “80년대 한국민주화는 광주항쟁 정신 때문에 성공했다.” 한국기자협회·무등일보 시민연대모임 편, 『5·18 특파원리포트』, 서울: 풀빛 199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유럽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어수갑 (연구책임), 미간행물 2005.
- 박성희, 『베를린, 그리고 3천일만의 귀향』, 서울: 한울 1999.
- 송두울, 『경계인의 사색』,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2.
-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서울: 북코리아, 2011.
- 이광규, 『동포는 지금』, 서울: 집문당, 2005.
- 이상성, “광주민중봉기와 미국의 역할”,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광주:5·18기념재단, 2007, pp.471-530.
- 어수갑,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서울: 휴머니스트 2004.
- 이수자, 『나의 독백』,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 이승환, “4월혁명에서 광주항쟁까지- 민간통일운동의 성립기”, pp.1-6.
- 이영빈·김순환, 『경계선』,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5.
- 이영빈·김순환, 『통일과 기독교』, 서울: 고난함께 1994.
- 이유진, 『빠리망명객 이유진의 삶과 꿈』, 서울: 필맥 2004.
- 이종수, 유럽의 민주화운동, 『한국 사회민주화와 해외민주화운동』, 한신대 학술원 학술자료집, 2003.
- 이화선, 『비창』, 서울: 예술 2006.
- 장태한, “재미한인사회의 정치구조 변화 5,18”,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4』, 광주: 5·18기념재단, 2007, pp.185-210.

- 조병옥, 『라인강변에 꽃상여가네』, 서울: 한울 2006.
- 조현옥, "해외의 한국민주화운동", 『경제와 사회』 66호(2005), pp.72-94.
- 차종환·이봉수·박상원(편저자), 『미주동포들의 민주화 및 통일운동』, 서울:나산출판사 2004.
-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서울: 유로 2005.
- 한민족유럽연대 편, 『정규명』, 서울 2007.
- 한·유럽연구회 편, 『유럽한인사』, 서울: 재외동포재단 2003.
- Wein, Roland, "광주 5·18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사업",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4』, 광주: 5·18 기념재단, 2007, pp.211-223.

구술증언 / 저자 녹취

- 이영빈(기독교통일협의회 회장)
- 이화선(해외기독교연합회회장)
- 김진항(한민족여성네트워크독일대표)
- 이종현(유럽연대 대표)
- 이준식(범민련 유럽본부 의장)
- 윤운섭(노동교실 대표)
- 김순실(라인마인교회 통일위원회장)
- 이한경(前 재독한인노동자연맹 대표)
- 김순환(기통회 총무)
- 오대석(한민족유럽연대 자문위원)
- 김정숙(前 세종학교 이사장)
- 김아일(前 노동교실 대표)
- 장일중(재독동포협력회 회장)
- 최현덕(前 Korea Verband 사무장)
- 최영숙(유럽연대 부회장)

Zusammenfassung

Der 18. Mai Gwangju Aufstand und die Einflüsse des Demokratisierungskampfs auf die Demokratiebewegung in Europa

Myun Kim(Yonsei Uni)

Dieses Papier befasst sich mit der Demokratiebewegung der Koreaner in Europa nach dem 18. Mai Demokratischen Aufstand. Diese Arbeit versucht die Geschichte der koreanischen Gruppen innerhalb Deutschlands bzw. in Europa für die Demokratiebewegung der Koreaner zu beschreiben. Als Forschungsmethode wurden Interviews mit den Gruppen der in Deutschland lebenden Koreaner gewählt, da so die vielfältigen Facetten der mündlichen Überlieferung wiedergegeben werden können und auf diese Weise am besten die Bandbreite der erlebten Geschichte um die Demokratiebewegung in Europa konkret und lebendig zur Verfügung steht. Vor allem werden die Ideen der Gruppen für die Demokratie von Korea analysiert und die Bewegungen werden im Rahmen der internationalen Umstände erklärt.

Nach der Bekanntgabe des Gwangju-Massakers im Jahr 1980 wurden in ganz Deutschland verschiedene Maßnahmen ergriffen und das gegenwärtige Geschehen durch viele Auskunftsbewegungen rasch bekannt gemacht. Durch diesen Anlass hatten die Koreaner mit unterschiedlichen Gruppen für die Demokratie auf der internationalen Ebene gekämpft. Der Geist des Gwangju Aufstands hat mit Koreanern in der Europa in der globalen Bewegung für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geschwungen.

Seit dem Jahr 1987 findet die Mai Gedenkfeier(Minjungje) ununterbrochen einmal im Jahr statt und wird von der Vorbereitungscommission durch verschiedene Gruppen organisiert. Die Mai Gedenkfeier blieb mit mehrmaliger Wiederholung der Feier nicht nur eine einfache Zeremonie zum Gedenken des Gwangju Aufstandsgeistes, sondern entwickelte sich zu einem Ort des Vorantastens der Solidaritätsbewegung und der koreanischen Zusammengehörigkeit in Europa. Seit 1994 beteiligen sich jüngere Koreaner der 2. Generation an der Zeremonie und gestalteten selbstständig die Veranstaltung mit. Damit wurde die Kulturgemeinschaft zwischen den Generationen geschaffen.

In diesem Aufsatz werden konkret Lee Young-bin, Lee Hwa-sun, Kim Sun-whan, U Su-gab, Yun Un-sub, Kim Jung-suk, Lee Jong-hyun, Kim Jin-hyang, Choi Hyun-duk, Choi Young-suk und Kim A-il untersucht und ihre Rolle und Aktivitäten beschrieben.

Rückblickend stelle ich fest, dass dieser Versuch der Übersicht über die Geschichte der Demokratiebewegung Koreas in Europa die Bedeutung besitzt, den

Grundstein in diesem Forschungsgebiet zu legen, indem die historischen Aktivitäten der Gruppen für das koreanische Volk aufmerksam und unvergeßlich festgehalten werden.

Schlüsselbegriffe: der 18. Mai Gwangju Aufstand, die Zeitzeugeninterviews, die Demokratiebewegung Koreas in Europa, die Mai Gedenkfeier(Minjungje),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지역주의를 넘어서: 5·18항쟁이 1980년대 대구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

작성자 : 김상숙(대구사회연구소 연구원)

1. 서론
 2. 선행연구
 3. 대구지역의 학생운동과 5월운동
 4. 운동 참여자들의 정서와 운동 이념과 노선, 조직형태 등에 미친 영향
 5. 결론
- 참고문헌

〈논문요약〉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에서 5월운동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세 시기로 나눠 살펴보면, 1980년 5월부터 1983년 말까지 제1시기에는 고립된 소수의 운동 참여자들이 학살 진상을 인식하고 폭로활동을 주로 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84년부터 1987년 말까지 제2시기에는 ‘광주학살’만이 아닌 ‘민중항쟁’으로서의 진상을 인식하면서, 유화국면의 총학생회라는 공개적이고 반합법적인 틀을 기반으로 소규모 서클운동을 벗어나 대중운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5·18항쟁 진상규명운동은 거의 폭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는 1987년 6월항쟁의 토대가 되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제3시기는 5·18항쟁에 대한 지식이 전 국민들 사이에 합법화, 대중화되었던 시기로, 5·18항쟁 진상규명운동이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등 총학생회의 지역연대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대구지역의 주요 활동은 학살 가해자에 대한 상징적이고 격렬한 형태의 공격과 대 시민 선도투쟁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이 시기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주요초점을 두었던 광주지역의 5월운동과 대비된다. 즉, 피해

자의 지역인 광주와 가해자의 지역인 대구라는 지역적 상황의 차이가 두 지역에서 5월운동의 초점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운동참여자의 의식의 측면에서 5·18항쟁이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5·18항쟁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광주지역은 주민과 학생운동집단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어서, 학생운동 참여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유대하는 공동체적 에토스를 키우며 활동한 반면, 대구지역은 주민과 학생운동집단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대립적이어서,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고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개별적이고 실존적인 에토스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에토스는 운동권 내부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강화하였지만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향을 만들기도 하였다.

1980년대 대구와 광주의 학생운동조직의 형태는 수도권지역 학생운동조직의 변화 경향을 따라가며 비슷하게 변화해 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광주지역 학생운동에는 대구에 비해 대중노선이 정착된 편이었고, 민주대연합에도 더 적극적이었다. 반면, 대구지역 학생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전국적인 대세에 맞춰 NL-대중노선의 입장이 주류를 차지했으나, 실제로는 좀 더 급진적인 선도투쟁 위주의 전투적 조합주의 성향이 강했다. 또한, 1987년과 1992년 두 차례에 대통령선거에서 광주지역에서는 'DJ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 가까운 '비관적 지지'의 입장이 주류를 이뤘던 반면, 대구지역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입장이 나타났다.

1. 들어가며

이 글은 5·18항쟁이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80년대 대구학생운동 속에서 5월운동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운동 참여자의 의식, 운동 이념과 노선, 조직형태와 실천적 경향 등의 측면에 5·18항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18항쟁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1980년대 한국사회의 운동과 사회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특히, 5·18항쟁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학생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권위주의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선도하였고 다양한 부문과 계층계급의 사회운동이 성장하도록 자극하면서 민주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도 하였는데, 당시 학생운동이 이렇게 성장한 바탕에는 5·18항쟁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5·18항쟁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이 있지만, 5·18항쟁이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당연시 되어왔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의외로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한국 사회운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로는 수도권지역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관심의 영역에서 밀려나 있었던 비수도권지역 학생운동의 역사를 서술하고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간 수도권이 아닌 지방/지역 차원에서 5·18항쟁의 영향을 연구한 경우에도, 그 연구들이 광주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런데 비호남지역에서의 5·18항쟁의 구체적인 영향과 성과를 밝히지 못하면 이러한 연구경향은 결국 호남지역주의적인 것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호남지역이 아닌 비호남지역에 5·18항쟁이 미친 영향을 고찰하여 ‘5·18연구의 호남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화’의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더구나 대구지역에서의 5·18항쟁과 연관된 상황을 고찰하는 것은 다른 비호남지역 연구에 비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사회에서 영남과 호남지역의 주민들은 집권자들의 지역주의 정책에 의해 분리되어 갈등해 왔다. 특히 광주에서 5·18항쟁에 일어난 후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생사를 넘나드는 항쟁의 고비

를 경험한 운명공동체 의식에 근거하여 결속한 지역주의가 형성된 반면, 영남에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집권자들의 지역 연고주의에서 출발한 조작된 욕구에 의한 지역주의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통치기제에 의해 점차 강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는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지역에 5·18항쟁이 미친 영향과 운동집단에 의한 5·18항쟁 사회화 과정을 연구한다면 5·18의 문제가 전남 혹은 호남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의의 정치적 장막 아래에서도 이를 거스르는 목소리들이 존재하였음을 밝힌다면, 집권자에 의한 지역분리주의를 극복해나갈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이 연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5·18연구와 1980년대 학생운동 연구 및 대구지역 운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

1980년대부터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5·18 관련 연구는 항쟁의 배경, 항쟁의 진전과정, 항쟁의 성격, 항쟁의 후속효과, 항쟁의 평가와 의의 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는 여성부문, 문화예술부문, 언론부문, 법률부문, 국제부문 등에 폭넓게 걸쳐져 있다(나간채, 2002). 2000년대 들어서는 광주항쟁의 상처의 치유와 관련된 이른바 트라우마티즘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목받아 왔다. 이 연구들은 5·18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트라우마티즘에 대한 분석이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변주나, 1998; 오수성, 1999, 오수성·조용래 1999; 최선령, 1997; 박영주, 2002), 다른 한편으로는 5·18기념사업 및 보상을 비롯하여 5·18을 복원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억의 정치’라는 해석틀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손호철, 1999; 정근식, 1997; 정근식, 2000; 정호기, 2002; 최정기, 2002). 트라우마나 ‘기억의 정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5·18연구의 영역을 실용적인 측면으로까지 확장하고 5·18의 영향을 현재의 시점까지 확장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상과 같은 5·18 관련 연구는 5·18기념재단에서 발간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총서에 집결되어

있다(5·18기념재단, 2007).

한편, 1980년대 학생운동 연구(일송정 편집부, 1988; 1988a; 1988b; 1988c; 강신철 외 1988; 조지훈 1989; 한용 외 1989)는 1980년대 후반에는 학생운동 출신자들에 의해 수행된 것이 많다. 이 연구들은 운동 상황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당시 학생운동권 내부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나 정치노선, 쟁점 등을 정리한 자료를 소개하거나 해제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으며, 자료의 작성자들이 자신의 정파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던 쟁점들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평가를 추가한 경우도 많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김동춘 외, 1997; 유석춘·박병영, 1991; 한홍수·김도중, 1993; 김도중, 1997; 양병기, 1999; 김원, 1999; 이희영, 2005; 이희영, 2006)는 학문적으로는 보다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1990년대 이후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사회적 위상이 점차 축소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일단 수적으로도 풍부하지 못하며 형식에 있어서도 다소 방만한 토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19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발굴하거나 제기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회고와 전망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시기에도 지역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80년대 학생운동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여 그것에 대한 현재까지의 학술적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지역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980년대 대구지역의 학생운동을 다룬 논문으로는 윤순갑·채장수(2005), 채장수(2006)의 논문이 있다. 이 두 논문은 여러 구술자료들을 사용하여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이념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학계에서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비수도권지역의 운동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글은 선행연구의 설명틀에 의존하여 대구지역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치중하면서, 선행연구의 쟁점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데도 미진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윤순갑·채장수의 논문에서는 김원의 연구(1999) 등 선행연구의 설명틀에 의존하여, 당시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문화적 상황에 대해 ‘민중지향성’을 핵심가치로 지향하는 상상적인 민중공동체, 남성중심주의, 군사주의를 특징으로 보고 그 실상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김원의 연구에서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생운동엘리트와 운동대중의 관계, 운동대중의 실질적 주체성 등의 문제는 규명해내지 않고 있어 결국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문화와 수도권지역의 학생운동 문화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글 외에 1980년대 대구지역 사회운동에 관한 논문으로는 노동운동에 관한 강승구(2005)와 김상숙(2007)의 논문과 여성빈민운동에 관한 정경숙(2006)의 논문이 있다.¹⁾

대구지역 학생운동과 관련된 1차 자료집으로는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05)에서 발간한 자료집과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조사연구특별위원회(2006)에서 발간한 자료집이 있다. 전자는 2.28 대구민주운동 관련 신문자료와 사진자료와 함께, 1980년대 학생운동 관련자 9명의 구술자료를 담고 있다. 후자는 1948년부터 1992년까지 학생운동을 포함한 대구지역 사회운동 관련 문서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일지, 사건 개요 등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다 대구지역 학생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나 관련 자료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히 요긴한 것이나, 자료가 누락된 부분, 편중된 부분이 많으므로 자료를 활용할 때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²⁾

3. 대구지역의 학생운동과 5월운동

5·18항쟁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운동이라면, 이 항쟁이 끝난 후 시작된 '5월운동'은 광주항쟁의 역사적 회생을 추념하고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광주항쟁의 이념 계승을 위한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역사성찰적 사회운동을 뜻한다(정근식, 2000).³⁾ 이처럼 5월운동은 진상규명과 피

1) 광주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운동 연구는 주로 5·18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 대부분으로 부문운동으로서 1980년대 학생운동 전반을 다룬 연구는 없다. 그러나 5·18을 전후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증언과 풍부한 편이며, 1970년대 후반부터 1982년까지의 학생운동 상황은 김병인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김병인, 2007). 그리고 광주지역 노동운동에 관한 단행본과 논문으로 홍성우·강현아(2003)와 송미성(2010)의 글이 있다.

2) 학술논문과는 별도로 1980년대 광주지역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수집되어 있는 1차 자료로는 5·18연구소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에 수집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들이 있다. 이 자료들은 1980년대 광주지역 학생운동 전반에 관한 것 이라기보다는 5·18항쟁에 관한 것, 5월운동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3) 정근식은,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시작하여 1997년 말 민주적 정권교체가 확정되기까지의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역사적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이것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광주민중항쟁'과, 이 항쟁이 끝난 후 시작된 '5월운동'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정근식, 2000).

해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책임자 처벌, 희생자의 추념과 기억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 속에서 5월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대구지역의 학생운동은 5월운동과 어떤 연관성을 맺으며 발전하였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 진영에서 있었던 5월운동 관련 주요 사건을 살펴 보았다. 이는 ① 5·18항쟁이 일어났던 1980년 5월부터 유화국면이 되기 전인 1983년 말까지, ② 유화국면이 전개되었던 1984년부터 1988년 초 노태우정부 출범 직전까지, ③ 1988년 초 노태우정부 출범 이후부터 1992년 말 김영삼정부 출범 직전까지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제1시기(1980년 5월~1983년 말)

5·18항쟁이 일어났던 1980년 5월부터 유화국면이 되기 전인 1983년 말까지 제1시기의 대구지역 학생운동은, 고립된 소수 참여자에 의한 학살 진상 인식 및 진상 폭로 활동기라고 볼 수 있다. 1980년 5·17 직후 대구에서도 학생운동 참여자 중 다수가 계엄사에 포고령 위반 혐의로 끌려가 구속되었고, 당국의 극심한 탄압에 의해 학생운동은 정체상태에 빠졌다.

이후 1982년 10월 말까지 2년 동안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구에서는 이렇다 할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대구지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으로 학생운동 역량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1980년 5월의 탄압을 겪었고, 그 결과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비합법 소모임과 서클, 야학 등을 통해 의식화학습을 하면서, 유인물을 고립 분산적으로 뿌리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리고 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므로 이 시기 대구지역의 학생운동은 그 자체가 5월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

4) 그들에게 광주학살의 진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1981년 중반부터 『광주백서』 등의 문건이 서울을 통해 전달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문서들은 주로 광주에서 직접 전달되기보다는 서울을 거친 뒤 대구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 “광주 상황에 대해 제가 알게 된 것은 81년 초반인가 여름 넘어갈 시기였을 거예요. 광주백서라는 문서를 봤거든요. 김현장 씨가 썼다고 그러던데, 그 문건이 (복사를 여러 번 해서) 글자가 다 지워지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고 광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서울에 한 번씩 다니러 가면 친구들, 야학하는 친구들한테 광주에 대해서 듣고 오고 그랬거든요.” (“1980년대 학생운동 참여자 7의 증언” ,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대형 과제연구단, 2005: 110)

1982년 11월에는 경북대학교에서는 2천여 명이 학생대중이 참여하는 시위사건이 처음으로 있었고 다른 대학에도 유인물 살포활동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학생운동이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 시기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대구지역 학생운동과 5월운동(1980.5~1982.12. 경북대학교의 사례)

일 자	주요 사건
1980년 5월 21~24일경	경북대학교 학생 이윤기, 이상술, 권순형이 대구시내 일대에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 공안기관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남.
1980년 6월 14일	경북대학교 학생 김종길, 정대호, 권용호, 이용학, 장대수, 유수근이 대구시 효목동, 봉덕동, 삼덕동 일대에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됨.
1980년 9월	경북대학교 학생 김동국과 신창일이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건물에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하는 벽서를 쓴 혐의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됨.
1981년 3월 24일	경북대학교 학생 임광호, 이경달, 김승연이 교내에서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1981년 4월 13일	경북대학교 학생 채경희와 강해숙이 교내에서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1982년 4월 19일	경북대학교 학생 강현주가 교내에서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1982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경북대학교 학생 김상숙, 김경록이 교내 합동강의동 건물 배란다에서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후 시위를 주도하다 곧바로 연행되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1982년 11월 17일	경북대학교 학생 김찬수, 박영아가 교내 인문대 건물 배란다에서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후 시위를 주도하다 곧바로 연행되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1982년 11월 18일	경북대학교 학생 권형우, 이병술이 교내 물탱크(취수탑) 등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여 2천여 명이 교내시위를 함. 이후 권형우, 이병술은 연행되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자료 출처: 「김상숙 피의자신문조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자료, 1983; 경북대학교 교지, 1986, 141-143; 석원호, 2005; "1980년대 학생운동 참여자 7의 증언",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대형과제연구단, 2005.

이 중 1982년 11월 18일에 일어난 경북대학교 물탱크(취수탑) 시위 사건(1982.11.18.)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자. 5공 정권의 출범 후 대학교 안에는 정보형사와 사복 전경이 상주하고 있었고, 교직원들도 시위 진압에 적극 동조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시위 주도 는커녕 유인물만 배포해도 현장에서 바로 연행되곤 하였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고공시위와 고공유인물 살포 전술이 등장했고 누구도 쉽게 근접할 수 없는 높은 물탱크,

고층 건물의 베란다, 옥상난간 등이 주요 시위 장소로 선정되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1982년 들어 학내에 비합법 조직 활동은 활발해졌으나 길으로 드러나는 이렇다 할 실천 활동이 없다가, 11월 3일과 11월 17일에 연달아서 김상숙, 김경록, 박영아, 김찬수 등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학교 건물 베란다에서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과 분노가 고조되었던 11월 18일 오전 10시경 경북대학교 학생 권형우는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유인물 배포하다 현장에서 사복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같은 시간에 경북대학교 학생 이병술은 경북대학교 안에서 가장 높은 물탱크(취수탑) 위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병술이 구호를 외치자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사복경찰이 물탱크로 올라가서 이병술을 연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물탱크의 비좁은 계단에서 이병술이 끈질기게 저항하여 경찰이 연행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여학생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 옷이 찢어지고 몸도 노출되는 광경을 보고 수많은 학생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은 강제연행을 시도하던 이병술을 놓아주었다. 이에 이병술과 학생 2천여 명은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광주학살 목인한 미국은 물러가라’, ‘독재자 전두환은 물러가라’, ‘정치경제적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경북대학교 후문으로 가두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결국 경찰의 제지로 가두진출에 실패하였고, 이 와중에 이병술은 탈진하여 정신을 잃었다. 시위를 하던 학생들은 이병술을 부축하여 총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본관으로 이동하였다. 오후에 이병술은 경대병원으로 후송되고, 시위대는 본관 앞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자진 해산하였다. 이 시위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이후로는 대구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위였다.⁵⁾

한편 이 무렵 경북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 중에는 계명대학교 유인물 배포 사건(1982.12.8.)을 살펴볼 수 있다. 계명대학교 유인물 배포 사건은 경북대 물탱크(취수탑) 시위 사건에 연이어, 당시 학생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계명대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다. 계명대학교 1학년 학생 신기복은 고등학교 때부터 YMCA에 출입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키워왔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사회과학 공부를 하며 인간관계를 넓혀 가다가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의분을 토로하며 함께 할 동료들을 찾았다. 그 와중에 경북대학교에서 광

5) 경북대학교 교지, 1986, 141-143; 석원호, 2005.

주학살 만행을 폭로하는 시위가 전개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위 주동을 결심하였다. 그는 1982년 12월 초에 같은 학교 1학년 생인 신재구를 만나 시위계획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기로 한 뒤 역할분담을 하였다. 그들은 12월 5일, 유인물을 1천여 장을 교회에서 등사기로 밀어서 준비하였다. 유인물 내용은 '1.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나라', '2. 학원사찰 중지하고 구속학생 석방하라', '3. 학원민주화 쟁취하자', '4. 반민주악법 철폐하라' 등이었다. 그들은 12월 8일 오후 1시 50분경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사회과학관 건물에 유인물을 뿌리고 핸드마이크로 "학우 여러분, 모여서 나아갑시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 다 사복경찰에 의해 떡살이 잡힌 채 끌려 나가 집회는 성사되지 못했고,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시위는 시작 20여 분만에 그 막을 내렸다. 그리고 신기복과 신재구는 곧바로 연행되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⁶⁾

1983년 초에는 경북대학교의 경우 학생운동 비합법 서클이 '정통파 그룹'과 '비정통파 그룹' 등 수십 명의 그룹 단위 규모로 성장하였고⁷⁾ 인근의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효성가톨릭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 비합법 서클들이 활성화되거나 새로이 생겨났다.

당시 학생운동이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찰과 정보당국은 프락치를 이용하여 지하학습조직 색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1983년 2월말 경북대학교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단대별로 분산되어 있던 비공개 학습 소모임들을 통합하기 위해, 주암산기도원에서 MT를 했다. 그러나 이 MT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못해 3월 중순부터 경찰의 연행·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관련 학생 2명이 제적되고 18명이 휴학 처분을 당했으며, 휴학을 당한 18명 중 남학생 13명은 강제징집 되었다.⁸⁾ '주암산기도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주로 '정통파 그룹' 구성원들이 탄압을 당했으므로 공안당국에서는 소위 '정통파 사건'이라고도 불렀다.

한편, 같은 해 9월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이 발생하자 공안당국에서는 이 폭파사건의 범인을 잡는다는 빌미로 대구지역의 모든 사회운동 전력자를 연행하여 고문하고 취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1980년 5·18 당시 포고령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뒤 학

6) 계명대학교 교지 제20호, 1987, 330.

7) 1980년대 초반 경북대 학생운동 내부에는 1970년대 경북대 학생운동의 흐름을 계승하는 그룹과 1970년대 경북대 학생운동의 흐름을 비판하는 그룹이 있었다. 이 그룹들은 당시 대부분의 비공개 그룹처럼 익명의 그룹들이었으나 공안당국은 전자를 '정통파 그룹' 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비정통파 그룹' 이라고 불렀다.

8) 국방부과거사진상위원회, 「경북대 특수학번자(강제징집자)심사자 명부」, 2006.

생운동조직 재건에 관계하고 있었던 경북대학교의 함종호, 손호만, 박종덕과 우성수, 안상학 등이 구속되고 노동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상당수의 공장활동가들도 취업한 현장이 발각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공안기관에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통파 그룹’도 그 조직이 드러나 경북대학교 이영우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허영, 강태원, 유병철 등 10여 명이 강제 징집되었다(석원호, 2005).

1983년에는 이와 같은 두 차례의 조직탄압사건으로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구속, 강제징집되거나 지도휴학 등의 조치로 학교 현장과 격리되면서 학생운동 조직이 또 다시 대대적으로 파괴되었다.

2) 제2시기(1984년 초~1988년 초)

유화국면이 전개되었던 1984년 초부터 1988년 초 노태우정부 출범 직전까지의 시기인 1984년부터 1987년 말까지 제2시기에는 소규모 서클운동을 벗어나 대중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84년에는 이른바 ‘유화조치’, 혹은 ‘학원자율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지역에도 학교들에도 대중운동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는 1985년 각 대학의 총학생회 부활운동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1985년 4월 5일 직선제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 시위에서부터 꾸준하게 전개된 대시민활동은 1987년 대통령제직선제 개헌 요구 등 민주헌법쟁취투쟁으로 이어져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었다.

5·18항쟁과 연관지어보면 이 시기는 ‘광주학살’만이 아닌 ‘민중항쟁’으로서의 진상 인식기이자 학살 진상을 학생대중들에게 대중적으로 전파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5·18을 ‘학살’만이 아닌 ‘항쟁’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에는 1984년~1985년경 서울지역으로부터 비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전달된 『인식과 전략』 등 문건의 영향이 있었다.

이 무렵 학생대중을 향한 광주항쟁진상규명운동은 유화국면의 총학생회 활동이라는 공개적이고 반합법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거의 폭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일례로 1985년 5월에는 한 달간 계속 대구지역 각 대학 교정에서는 대학 총학생회 또는 대학연합의 투쟁위원회 주최로 시위가 벌어졌는데, 대부분의 시위는 운동권 측에서 주최한 5월 관련 강연이나 공연 후 광주학살의 진상을 새롭게 알고 분노한 학생대중 수백~수천 명이 결집하여 경찰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대구의 종합대학 중 가장 학생운동조직의 규모가 작았던 대구대학교

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표2〉 대구지역 학생운동과 5월운동(1985.5.~1985.6. 대구대학교의 사례)

일자	주요 사건
1985년 5월 8일	대구대학교민주화추진위원회(약칭 대민주) 주최로 민주새터에서 열린 광주민중항쟁 관련 강연 이후 참여한 학생 '광주사태 해명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언론규제 완화하라'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학내로 진입한 경찰과 격렬히 싸움을 벌임.
1985년 5월 15일	대민주 주최로 5·18 유족이자 지역 민주인사인 류연창 목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함.
1985년 5월 17일	광주항쟁 진상 보고대회 및 전국학생총연합 대구지역 평의회 결성식에 참가함.
1985년 5월 20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4개대 연합 '광주영령추모 깃발대행진 및 전학련, 민투련 1차 대회'에 참가함.
1985년 5월 20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놀이마당을 펼치고 광주사태 해명 깃발대행진을 가짐.
1985년 5월 21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4개대 연합 '광주영령추모 깃발대행진 및 전학련, 민투련 2차 대회'에 참가함.
1985년 5월 22일	대민주 주최로 민주새터에서 7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광주항쟁영령 추모제를 열고 제문 낭독, 진혼굿을 진행한 뒤, 정문에서 광주항쟁 책임자의 화형식을 거행하고 투석전을 벌임. 1백50여 명의 학생들은 '광주사태 해명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외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에게 저지당함.
1985년 5월 23일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4개대 연합 '광주항쟁추모 대구학생 총궐기대회 및 전학련, 민투련 3차 결의대회'에 참가함.
1985년 6월 4일	경북대학교에서 4개 대학교 연합으로 미문화원 점거농성 보고대회를 진행함.
1985년 6월 13일	이상재를 포함한 3명이 '관제언론 옹정한다, 광주사태 왜곡보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KBS대구방송국에 화염병을 투척함.

자료 출처: 대구대신문 312호(1985.5.13일자 1면), 대구대신문 315호(1985.6.17일자 1면), 대구대학교 교지 제11호, 1988.

이처럼 대구지역의 종합대학 중 가장 늦게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었던 대구대학교에서도 지속적인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대구지역의 다른 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만 해도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5·18항쟁에 대한 지식을 학생대중에게 전파하는 데 치중하였다. 시민 대상의 활동은 선도적 타격투쟁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시기 시민 대상으로 진행된 5월운동과 관련된 주요 사건으로는 KBS대구방송국 화염병투척 사건과 한미은행 점거·농성사건이 있다.

KBS대구방송국 화염병투척 사건(1985.6.13.)은 1985년 5월 23일 서울에서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광주민중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서울의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소식을 접한 최윤영(계명대), 류동인(경북대), 이상재(대구대) 등 3개 대학교의 학생들은, 대구에서도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왜곡보도로 일관하던 KBS대구방송국을 대상으로 언론의 각성을 요구하는 투쟁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 3명은 1985년 6월 13일 오후 5시경 대구시 동구 소재 KBS대구방송국 앞에 모였으나, 뜻밖에도 전경 1개 소대 병력이 방송국 앞에 있어 점거·농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전경차에는 화염병을, 경비원에게는 최루탄을 던지면서 방송국 쪽으로 나아가며 구호를 외치다가 전경들에게 무차별 진압되었다. 동부경찰서로 이송된 그들은 대구경찰청 대공분실로 보내져 20여 일간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현존 차량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총포도검류화약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⁹⁾

그 1년 뒤에 일어난 한미은행 점거·농성사건(1986.6.18.)은 최우식, 김경륜, 김달수, 김영진, 송근태 등 영남대학교와 계명대학교 학생 5명이 주도한 사건이다. 그들은 ‘광주항쟁계승특별위원회’를 조직한 뒤,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고 이를 대구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반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의 영향으로 대구미문화원의 경비가 한층 강화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은 반미를 위한 농성 목표대상지를 한미은행으로 하였다. 1986년 6월 18일 12시경 이들 5명은 대구시 중구 소재 한미은행 옥상을 점거하고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반대’, ‘광주학살 전두환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3시간 동안 농성을 하였다. 이 농성에 경찰은 은행 앞길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면서 이들에게 해산을 종용하다가 결국은 모두 강제 연행하여 구속하였다.¹⁰⁾

3) 제3시기(1988년 초~1992년 말)

1988년 초 노태우정부 출범 이후부터 1992년 말 김영삼정부 출범 직전까지의 제3시기는 5·18항쟁에 대한 지식이 전 국민들 사이에 합법화, 대중화되었던 시기라고 볼

9) 계명대학교 교지 제20호, 1987, 329; 매일신문 1985.6; 대구대학교 교지 제11호, 1988.

10) 계명대학교 교지 제20호, 1987, 330.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학생운동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광주항쟁진상규명 운동이 대구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대대협),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약칭 대경총련) 등 총학생회연대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88년 10월 광주 청문회를 전후하여서는 광주학살 주범, 5공비리 관련자 처벌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무렵에 두드러진 사건으로는 10월의 대구지검 공안검사 사무실 점거·농성사건, 11월의 전두환 생가 방화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대구지검 공안검사 사무실 점거·농성사건(1988.10.26.)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대대협 산하 광주학살 5공비리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들이 주도한 것이다. 서인찬, 이창환, 김진구, 이수화, 노병두, 변금순 등 이 위원회 소속 청년결사대원 10명은, 1988년 10월 26일 낮 12시 20분경 김현태 대구지검 공안검사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그들은 '구속 전두환, 퇴진 노태우', '전두환 이순자를 구속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약 2시간 20분 동안 농성을 벌였다. 공안당국은 이 농성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 건물에서 뛰어내린 이창환 학생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결사대원 10명은 모두 구속되었다. 같은 날 대구지역 각 대학교 학생 3백여 명은 낮 12시 30분경부터 1시 30분경 사이에 민정당 대구경북지부, 미문화원, 대구시경찰청 등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기습시위를 벌였다.¹¹⁾

전두환 생가 방화사건(1988.11.11.)은 원성희, 조성권, 이영희, 남태우, 이기수, 최정호 등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전두환, 이순자 생포결사대원' 6명이 벌인 일이다. 1988년 11월 11일, 그들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있는 전두환 생가에 가서 경비 중이던 전투경찰을 밀쳐내고 화염병을 던져 본가, 행랑채, 창고 등을 방화한 뒤 모두 구속되었다. 이 무렵 대구지역 각 대학의 학생들은 5공비리 관련자 처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두환과 이순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8백여 명이 서문시장 등 시내 곳곳으로 진출하여 가두시위를 벌였다.¹²⁾

1989년부터는 광주문제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국민들이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1989년 6월에는 고 이철규 열사 희생진상규명 및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정당 국회의원 정

11) 경북대신문 제1022호(1988.10.31일자 1면)

12)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조사연구특별위원회, 2006, 62.

호용 사무실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과 가두시위가 있었다. 이 사건은 1989년 6월 중순(일자 미상)에 일어났다. 이 날 대대협 산하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학생 70여 명은 구 평리네거리 부근 상업은행 근처에 집결하여 대오를 형성한 후 서부경찰서, 서구청 방면으로 달리며 ‘광주학살 오적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서부경찰서 부근에 다다랐을 때 10여 명의 학생들이 서부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던 정호용 민정당 의원 사무실로 달려가 가지고 있던 화염병에 불을 붙여, 당시 2층에 위치해 있던 사무실을 전소시켰다. 이 사건으로 영남대학교 손종환, 김종학 등 5명이 현장에서 붙잡힌 후 구속되었다.¹³⁾

이처럼 이 시기 대구지역의 주요 활동은 학살 가해자에 대한 상징적이고 격렬한 형태의 공격과 대시민 선도투쟁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이 무렵 광주지역에서는, 5·18 문제가 공공담론으로 표면화되면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5월운동의 주요 사안이 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즉, 피해자의 지역인 광주와 가해자의 지역인 대구라는 지역적 상황의 차이가 두 지역에서 5월운동의 초점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광주지역의 5월운동이 대중화되면서, 대구지역에서는 인혁당, 남민전 사건 등 지역 민주화운동 인사의 명예회복 문제와 지역 민주화운동 전통의 복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일어났다. 이에 1989년 4월에는 인혁당, 남민전 관련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추모행사가 열렸고 이 행사는 매년 4.9제 행사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4.9열사 추모비 건립, 이 추모비에 대한 공권력 침탈 저지와 수호 등이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주요 사안 중 하나가 되었다.

4. 운동 참여자들의 정서와 운동 이념과 노선, 조직형태 등에 미친 영향

그러면 대구지역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정서, 운동 이념과 노선, 조직형태와 실천적 경향 등의 측면에서 지역주의와 5·18의 경험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그것은

13)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조사연구특별위원회, 2006, 64.

광주지역과는 어떻게 다를까?

1)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정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의 지역주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에 근거해 이루어져 왔다(최영진, 1999). 그 첫째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으로 영호남 간 정치경제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이 지역주의의 원인이라는 연구가 대표적이다(김만홍, 1994 등). 둘째는 '정치 동원론'으로 민주화 이후 3김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대표 정치인들이 선거 전략의 수단으로 지역주의를 동원했다는 연구들이다(손호철, 1997 등). 셋째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설명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이 사회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투표해온 결과 지역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조기숙, 1996 등).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지역주의는 구체적으로 1960년대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에는 근대화과정에서 지역적 불평등과 지역연고주의의 수준으로 나타났던 지역주의는, 1980년대를 거치며 권위주의정권 창출 초기의 저항을 진압, 봉쇄하고 재집권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되면서 훨씬 더 심화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5·18을 두고 은연중에 영남은 가해자, 호남은 피해자라는 지역주의적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5·18에 대한 상반된 의식을 갖게 되었다.

광주지역에서는 1980년 5·18을 겪으면서 그 이전부터 있어온 지역불평등에 대한 소외감이 군사정권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는 군사정권의 퇴진과 정치적 민주화 요구로 나타났고, 광주문제의 해결은 지역 출신 대통령후보의 집권과 광주 전남에 우호적인 정권 창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5·18=광주=DJ'로 연결되는 상징구조를 구성하였다. 5·18의 경험과 DJ라는 상징은 광주전남 지역주민의 일체감과 결속력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지역 안에서 갈등하던 다양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하나의 결집된 실체를 만들어내었다. 동시에 5·18로 인해 광주는 스스로도, 외부에서도 민주화의 상징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진보성을 지녀왔다(김두식, 2007: 533)

반면, 영남지역, 특히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5·18 당시의 군인들이 바로 자신들과 이웃한 사람들이고 그런 그들에 의해 광주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문제에 대해서는 죄의식과 함께 반공주의와 결합한 '가해자 의식'이 착종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정근식·주보돈 외, 2005). 이 과정에 대구

경북지역에는 ‘전라도=DJ=빨갱이’로 연결되는 상징구조가 구성되었고 정치적으로 더욱 더 보수적인 성향을 표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주민들은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다를 뿐 아니라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도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등 정치성향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이것은 학생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 대한 지지 정도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광주와 대구지역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이 활동한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1980년대 광주지역의 주민들은 학생운동에 대해 더 우호적이었던 반면에 대구지역의 시민들은 학생운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대적이었으며, 이것은 두 지역의 학생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티즘, 에토스, 망탈리테 등의 개념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집단적 정서나 심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 정서가 그들의 집합적 신념을 형성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킨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¹⁴⁾ 그 일례로, 조대엽은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5·18로 인한 상처는 개인의 심리적 트라우마티즘을 넘어서 역사적 트라우마티즘으로 작용하여 당시의 민주화운동 집단 전체의 집합적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조대엽, 2003). 이와 유사하게 다른 연구자들도 1980년 학생운동 참여자들이 5·18항쟁의 진실을 접하면서 가졌던 분노감과 원죄의식, 부채의식, 죽음에 대한 자각 등이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지속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한다(김원, 1999: 172; 한홍구, 2010 등).

그런데 광주지역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에게 5·18 희생자들에 대해 갖는 이런 부채의식은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이었다. 5·18과 관련한 많은 증언 자료에서, 5·18항쟁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 등은 피신한 채 현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살아남은 자’와 ‘도망간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비겁함’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였기에, 5·18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은 옥사를 하였고 1980년대 초반에 광주 출신의 많은 청년들이 분신을 하고 투신자살을 하였다. 그러므로 그 이후 전개된 1980년대의 광주지역 학생운동은 5·18항쟁과 희생자들의 정치적

14) 정근식은 학생운동을 다룬 것은 아니나 광주지역의 5월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광주시민들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의 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망탈리테(일상생활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심층적 심리구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정근식, 2007: 100). 그리고 이수인은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한 운동엘리트들의 에토스에는 지식인으로서의 이성적 성찰 의식에 맞닿은 개인적 도덕 감정과 공동체적 동질성이 빚어내는 집단 차원의 도덕 감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이 공존하고 있었고, 이것이 학생운동의 분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 운동 참여자들의 집단적 정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이수인, 2008).

복원을 위한 운동의 성격이 강하였다(김병인, 2007: 549).

광주의 경우, 5·18의 경험은 지역적 고립에 대한 공포감으로 각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학생들뿐 아니라 광주지역 주민 전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느끼는 것이었다(정근식·주보돈 외, 2005). 고립에 대한 공포감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유대와 공동체적 에토스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광주애국시민의 사랑 속에” 활동하였다고 하며 ‘민주화의 성지’인 자신의 지역에 대한 역사적 긍지를 갖기도 하였다. 다음의 인용자료는 당시 광주지역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이러한 집단적 정서를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80년 5월의 경험은 전남대 학생운동에 민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 (중략) …… ‘다시 5월이 온다면 너는 총을 들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 속에서 자신들의 결의를 모어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배들의 처절한 투쟁 속에서 민족전남대 학생운동은 광주애국시민의 사랑 속에 전국 학생운동의 모범으로 우뚝 서 수많은 신화를 창조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학살의 진상은 은폐되고, 5월정신은 마치 지역감정의 폭발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 80년 광주만의 고립된 투쟁이 ……(하락)……”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1995)

5·18항쟁은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 참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구지역 학생운동 참여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5·18항쟁의 진실을 접하면서 가졌던 죄의식이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채장수, 2006).

“1981년경 광주백서를 읽고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고는 상당히 쇼크를 많이 받았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를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또래인데 산맥 하나 너머에 나는 여기 대구에 있었고 그 친구들은 광주에 있었고 그런데 싸우고 죽었구나. 이런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 참여자 7의 증언,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대형과제연구단, 2005: 110)

특히 이 지역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이 ‘대구’라는 가해자 집단의 일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결백성을 증명하려는 동기가 학생운동을 할 때 내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구지역 운동 참여자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소수집단으로서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에 따른 고립감을

안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생들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에는 학생운동조직에 새로운 구성원을 충당하기도 힘든 경우도 많았고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해도 일반 학생들이 무관심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런 고립감은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나타났다.

“유인물을 뿌린 뒤 전경들에게 양 팔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옆에 교련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수업을 하러 가면서 제 눈을 피하면서 겁에 질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오로지 그냥 외롭고 눈물이 저절로 나고, 얼굴을 철판으로 때리는 듯한 외로움. 얼굴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저는 잡혀서 끌려가는데, 눈을 피하면서 가니까 너무 외로워서, 얼굴이 마비되는 듯한 얼얼한 느낌...” (대구지역 운동가 Z의 증언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1: 185)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지역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광주처럼 지역주민과의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고수해야 한다는 개별적이고 실존적인 에토스를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 내부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서도,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활동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실천관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지역에서는 진보적 주장을 하거나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힘들고 불순한 주장으로 낙인찍힐 공산이 컸지요. 아직도 택시를 타면 기사들이 80년 광주민중항쟁을 빨갱이 소행이라고 하지요. 예전에 대구지역 주민들은 집권층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한 다리 건너면 수구 보수세력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것을 비호하고 지역주의에 매몰되었어요. 사회운동을 하는 토양이 굉장히 척박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소수 개인이 희생하여 선도적으로 운동을 이끌고 운동조직은 일반 대중과 배타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운동가 O의 면접자료, 김상숙, 2007)

2) 학생운동의 이념과 노선, 조직형태와 실천적 경향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은 민주주의, 민중주의, 민족(반미)주의 이념과, 변혁지향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들은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되어 있는데, 당시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계급과 민족, 전위와 대중, 정치투쟁과 일상투쟁이라는 과제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를 놓고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계속 경쟁했고, 이에 따

라 각 시기마다 주도적인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는 광의의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대립이 있었고 1984년~1985년 상반기에는 계급과 전위를 강조하던 흐름이 확산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으로 운동이념의 분화가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민족과 대중을 강조하던 흐름이 우위를 점했고 이 흐름은 학생회의 전국적 건설이라는 상황과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이수인, 2008).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경우 이러한 이념과 노선의 변화가 수도권과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나긴 하였으나 그 표면적인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일례로 경북대의 경우, ① 1980년대 초반 정통파 그룹 대 비정통파 그룹(1982.~1983.)과 해민투 그룹 대 민민투 그룹(1985.) 등 양대 조직이 조직기풍의 차이에 따른 노선 투쟁을 하였고, ② 1986~1987년경에는 수도권지역에서 NL-PD 노선이 각 학교에 전파되었으며, ③ 전대협 결성 이후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편입되면서 NL 흐름이 대세를 장악하였다. ④ 1990년경에는 범 PD연합이 총학생회를 장악하는 형태로 주도적 노선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구지역에서는 이처럼 표면적으로 정치노선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으나 정치적 실천의 관행은 노선 변화 이전부터 있어온 형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례로, 1987년경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주류는 표면적으로는 전국적인 대세에 따라 NL-대중노선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중의 시위 등 대중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어려웠던 대구지역의 조건 때문에 소수에 의한 점거농성이나 타격투쟁 등 선도투쟁 위주의 실천을 더 자주 하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성향이 강했다. 그리고 주류 그룹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소그룹들을 통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류 그룹 안에 통합되지 않은 다양한 비주류 분파가 존재했다. 그런데 이 비주류 분파들은 NL을 주장하는 주류 그룹과 차별되는 노선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당시 대구에는 계급, 선도투쟁, 정치적 독자성을 주장하는 범 PD 분파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한 편이었고 주류 NL 그룹과의 감정적인 대립도 심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광주지역에서는 대구에 비해 NL-대중노선이 정착되어 있었고 학생운동세력이 민주대연합에도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1987년과 199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두 지역 학생운동의 활동을 비교해보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대구지역에서는 총학생회 활동을 하던 주류그룹은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92년 선거에서는 비판적 지지의 입장도 있었지만 진보정당후보 지지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반면, 광주지역에서는 두 차례의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취했는데, 그 내용은 비판적 지지라기보다는 절대적 지지에 가까운 편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지역공동체적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정근식, 2007: 111).

한편, 1980년 학생운동의 주요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제1시기인 1980년 봄에는 총학생회와 공개서클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기, 제2시기인 1980년 5·18 이후부터 유화국면까지의 시기는 비합법 서클과 소모임을 중심으로 운동하던 시기, 제3시기인 유화국면 이후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의 시기는 투쟁위원회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운동하던 시기, 그 이후의 제4시기는 총학생회 및 각종 대중조직과 함께 총학생회연합 등의 연대체를 중심으로 운동하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광주와 대구의 학생운동조직도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조직의 형태가 변화해 가는데, 이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나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 일례로 광주와 대구의 대표적인 대학인 전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를 비교해보면, 전남대학교는 1980년 봄에 '민주총학'을 건설했으나 경북대학교는 당시 운동역량의 부족으로 민주총학을 건설하지 못하였다. 이후 전남대학교는 1984년 11월에 총학생회를 부활시킨 반면, 경북대학교는 약 6개월 뒤인 1985년 5월에 총학생회를 부활시켰다.

5. 결론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에서 5월운동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세 시기로 나눠 살펴보면, 1980년 5월부터 1983년 말까지 제1시기에는 고립된 소수의 운동 참여자들이 학살 진상을 인식하고 폭로활동을 주로 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84년부터 1987년 말까지 제2시기에는 '광주학살'만이 아닌 '민중항쟁'으로서의 진상을 인식하면서, 유화국면의 총학생회라는 공개적이고 반합법적인 틀을 기반으로 소규모 서클운동을 벗어나 대중운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5·18항쟁 진상규명운동은 거의 폭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는 1987년 6월항쟁의 토대가 되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제3시기는 5·18항쟁에 대한 지식이 전 국민들 사이에 합법화, 대중화되었던 시기로, 5·18항쟁 진상규명운동이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등 총학생회의 지역연대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대구지역의 주요 활동은 학살 가해자에 대한 상징적이고 격렬한 형태의 공격과 대시민 선도투쟁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이 시기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주요초점을 두었던 광주지역의 5월운동과 대비된다. 즉, 피해자의 지역인 광주와 가해자의 지역인 대구라는 지역적 상황의 차이가 두 지역에서 5월운동의 초점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운동참여자의 의식의 측면에서 5·18항쟁이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5·18항쟁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광주지역은 주민과 학생운동집단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어서, 학생운동 참여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유대하는 공동체적 에토스를 키우며 활동한 반면, 대구지역은 주민과 학생운동집단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대립적이어서,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고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개별적이고 실존적인 에토스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에토스는 운동권 내부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강화하였지만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향을 만들기도 하였다.

1980년대 대구와 광주의 학생운동조직의 형태는 수도권지역 학생운동조직의 변화 경향을 따라가며 비슷하게 변화해 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광주지역 학생운동에는 대구에 비해 대중노선이 정착된 편이었고, 민주대연합에도 더 적극적이었다. 반면, 대구지역 학생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전국적인 대세에 맞춰 NL-대중노선의 입장이 주류를 차지했으나, 실제로는 좀 더 급진적인 선도투쟁 위주의 전투적 조합주의 성향이 강했다. 또한, 1987년과 1992년 두 차례에 대통령선거에서 광주지역에서는 'DJ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 가까운 '비판적 지지'의 입장이 주류를 이뤘던 반면, 대구지역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입장이 나타났다.

참고문헌 목록

[1차 자료]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각 학교의 교지와 신문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05), 『대구경북의 지성과 운동 자료집 7: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발생과 전개』,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대형과제연구단
 국방부과거사진상위원회(2006), 『경북대 특수학번자(강제징집자)심사자 명부』
 국가인권위원회(2011),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조사연구특별위원회(2006),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보고서: 대구-경북지역』,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지방검찰청(1983), 『김상숙 피의자신문조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자료
 안진 구술자료(1988), “햇불처럼 타오르는 전남대 학생운동”,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1995), “광주민중항쟁 15주기 자료집”,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그 외 관련자 구술면담자료

[단행본]

강신철 외(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형성사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05), 『대구경북의 지성과 운동 자료집 7: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발생과 전개』,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대형과제연구단
 김상숙(2007), 『지역과 젠더통제, 여성노동자들의 저항: 80년대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원(1999),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후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조사연구특별위원회(2006),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보고서: 대구-경북지역』,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기념재단(2007),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심미안
 일송정 편집부 편(1988), 『팜플렛 정치노선』, 일송정
 _____ 편(1988a), 『팜플렛 조직노선』, 일송정
 _____ 편(1988b), 『팜플렛 철학논쟁 I』, 일송정
 _____ 편(1988c),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조기숙(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오름
 조지훈(1989),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최영진(1999), 『한국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오름
 한용 외(1989),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청년사

홍성우·강현아(2003), 『광주지역 노동운동 전개과정』,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논문]

- 강승구(2005), "1989년 대구지방노동청 점거농성사건의 지역노동운동사적 위치",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13권 1호
- 김도종(1997), "1980년대 한국의 정치변동과 학생집단", 『한국정치학회 1997년도 연례학술대회』
- 김동춘(1997), "1980년대 민주번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6월민주항쟁10주년기념학술대회토론회 자료집: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당대
- 김두식(2007),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권, 심미안
- 김만홍(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 영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 김병민(2007), "5·18과 죽음 그리고 학생운동의 정치적 복권",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권, 심미안
- 나간채(2002), "5·18항쟁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열천 임희섭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열천 임희섭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사회운동과 사회변동』
- 박영주(2002), "5·18 트라우마티즘과 기억 되살리기", 한국산업사회학회, 『2002년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정치변동과 사회개혁』
- 변주나(1998), "80년 이후 5·18부상자들의 불행감 정도 및 생활만족도 변화 추이", 5·18민중항쟁부상자회, 『'5·18피해자' 정신적 배상 가능한가?』
- 석원호(2005),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사: 암흑에서 희망으로", 경북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제2차 경북대학교60년사 편찬 학술회의 자료집: 경북대 학생운동의 회고와 전망』, 경북대학교
- 손호철(1997), "지역주의, 진단과 처방", 사회평론 편,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사
- _____ (1999), "기억을 둘러싼 계급투쟁: 5·18민중항쟁, 김대중정권 그리고 노동자계급",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43호
- 송미성(2010), "'1980년대' 광주지역 노동운동 활동가들 -과거 노동운동 경험에 대한 평가와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사회과학연구』 14권
- 양병기(1999), "한국의 군부통치와 학생운동",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 오수성(1999), "광주 5월 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광주 현대사사료연구소
- 오수성·조용래(1999), "5·18 관련자의 심리사회적 적응", 5·18연구소
- 유석춘·박병영(1991), "한국 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1991년도 춘계 특별 세미나』
- 윤순갑·채징수(2005), "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문화적 상황",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13권 2호

- 이수인(2008), "대립성의 경합과 일면성의 확산: 1980년대 학생운동", 한국사회학회, 『사회와 역사』 통권 제77집
- 이희영(2005), "체험된 폭력과 세대간의 소통", 『경제와사회』 통권 제68호
- 이희영(2006), "타자의 (재)구성과 정치사회화", 『한국사회학』 제40집 6호
- 정경숙(2005),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지역 여성빈민운동 연구",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제1호
- 정근식(1997), "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망탈리테의 변화", 나간채 편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광주 전남대 5·18연구소
- _____(2000), "청산과 복원으로서의 5월운동",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민중항쟁사』
- _____(2007), "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망탈리테의 변화",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권, 심미안
- 정근식·주보돈 외(2005), "특집 좌담: 5·18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 살아 있는 광주, 1980년과 200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통권 10호
- 정호기(2002), "트라우마티즘과 기념사업: 5월운동과 5·18기념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2002년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정치변동과 사회개혁』
- 조대엽(2003), "광주항쟁과 80년대의 사회운동문화: 이념 및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1호
- 최영진(1999), "한국 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정치적 정체성 개념과 동기 부여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집 2호
- 채장수(2006), "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에서 '이념'의 전개",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14권 2호,
- 최선령(1997), "5·18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 『제2차 광주 5·18부상자회 학술대회 자료집』
- 최정기(2002), "기억의 정치, 보상의 정치: 5·18기념사업 및 생사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2002년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정치변동과 사회개혁』
- 한흥구(2010), "광주민중항쟁과 죽음의 자각", 『참작과비평 2010년』 여름호(통권 148호)
- 한흥수·김도종(1993),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24호

<Abstract>

Beyond Local Sectionalism: The Impacts of The May 18th Uprising
on the 1980s Student Movement in Daegu

Kim, Sang-Sook

Researcher, Institute of Daegu Social Research

Some of the major activities during the student movements in the 1980s in Daegu associated with the May Movement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hase from May 1980 till the end of 1983, a small number of isolated movement activists recognized and uncovered the true facet of the massacre. In the second phase from 1983 to 1987, they started to be aware of the true facet of not merely the 'Gwangju Massacre' but also 'a democratic uprising.' It was a mass movement beyond a small-scale club movement as it was based on the open and semi-legal framework of the then propitiative university student council. During the period, the fact-finding movement for the May 18th Uprising was heatedly underway,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the 1987 June Uprising. Meanwhile, in the third phase of 1988 to 1992, knowledge about the May 18th Uprising became widely known among the public, which also started to be legalized. As such, the fact-finding movement for the May 18th Uprising took place centered around a regional solidarity network of the student councils including the Daegu Gyeongbuk Federation of Student Councils.

Then, how did the May 18th Uprising impact student movements in Daegu in terms of the mindset of activists? Many students in Daegu, just like those in other regions, took part in the May 18th Uprising, believing that they had to do something about the uprising. While the communal ethos was forged among student activists and local residents in Gwangju since their mutual relationships were relatively friendly, it was not like so in Daegu as they were in mutual conflicts. As such, student activists in Daegu developed an independent and existential ethos by protesting on their own without any solidarity with local residents. This type of ethos strengthened a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movement activists, though creating a sense of exclusivity against external groups.

Forms of student movement organizations in Daegu and Gwangju in the 1980s transformed in parallel with the changes taking place in student movement organiz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Korea. However, student movements in Gwangju post to 1987 tended to arouse the participation of the mass compared to those in Daegu, being more active in the democratic coalition. By contrast, student movements in Daegu mostly took the National Liberation (NL) line, jumping on the nationwide bandwagon back then, while those in Gwangju tended to be militaristic unionism driven by more progressive leading struggle. On two occasion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1987 and 1992, Gwangju mostly showed 'critical advocacy' almost equivalent to 'absolute advocacy for DJ'(i.e., Kim Dae-jung of Gwangju origin, 8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98 to 2003), but Daegu exhibited more diverse stances among the public.

키워드: 5·18항쟁, 1980년대 학생운동, 대구, 광주, 지역주의

The May 18th Uprising, 1980s Student Movement, Daegu, Gwangju, Local Sectionalism

5·18항쟁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의 역사적 기원 : 전쟁, 학살, 기억¹⁾

작성자 : 김정한(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공동연구자 :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조교수)

1. 들어가며: 한 가족사의 비극
2. 일가족 살인 사건의 재구성
3. 섬마을에서의 한국전쟁
4. 결론을 대신하여: 비극 이후의 비극

1. 들어가며: 한 가족사의 비극

1980년 5·18 광주항쟁에 대해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5·18 광주항쟁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것을 전후한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변화 과정을 탐구하거나, 아니면 1980년대 사회운동, 특히 1987년 6월 항쟁을 비롯하여 한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력과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5·18 이전의 역사'보다는 '5·18 이후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5·18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는 먼 과거의 시간들이 그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80년 당시에 광주의 비극을 직관했던 많은 이들은 그

1) 이 연구는 '일가족 살인 사건'의 관련자들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의 구술 증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여전히 비극적인 기억과 아픔을 견디며 살고 계신 힘겨운 상황에서 어렵게 인터뷰를 허락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구술 증언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셨던 시인 김태암 선생님과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의 이대욱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것이 단순히 신군부 세력에 의한 학살일 뿐만 아니라, 더 멀리에 있는 한국전쟁과 분단에서 연원하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간과한바 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들에게 5·18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발포하는 모습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국군과 인민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관한 기억은 5·18에서 계엄군의 잔혹한 학살의 현장과 겹쳐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5·18 광주항쟁 시기에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5·18 광주항쟁의 역사적 관계를 재성찰해보고자 한다. 1980년 5월 26일 새벽에 일가족이 총격에 사망한 이 사례는 시민군에 참여했던 아들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의붓남동생을 살해했다고 알려진 비극적인 사건이다. 더구나 살해된 가족의 아버지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좌익 활동에 관여했다가 좌우익 학살의 소용돌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한국전쟁과 5·18 광주항쟁을 단번에 하나의 계열과 맥락 안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다.

이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난 5월 26일을 전후한 시기에 계엄군과 시민군은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었고, 다음날 5월 27일 새벽에 시민군의 ‘최후의 항전’이 처참하게 진압된 상황에서 당시에 사건 관련 기사들은 신뢰할 만한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같다. 추측컨대, 신군부는 5·18 광주항쟁의 부정적인 면모를 선전하기 위해 이 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사 지면의 비중이 비교적 작았고 어떤 후속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용히 묻힌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아마 5·18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 금기로 만들고자 했던 당시의 정책 때문일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사회운동세력이나 5·18 유가족들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일가족 세 명을 사망자 명단에 올리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진상규명 작업은 없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5·18 광주항쟁의 신화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의 무장투쟁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도 없이 질서정연한 자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런 신화에 반하는 일가족 피살 사건은 눈에 띄지 않았거나 부각되어선 안 되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이 연구는 5·18에 얽혀 있는 ‘일가족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개인과 가족의 생애를 재구성함으로써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1980년 5·18 광주항쟁에 이르는 30여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넓고 깊게 사유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일가족 살인 사건의 재구성

1)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사건의 재현

우선 기존의 문헌 자료들에서 일가족 피살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980년 5월 26일 새벽 광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기록은 많지 않다. 우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광주 일가 3명 총격 피살, 강력 사건 늘어 시민들 불안”¹⁾

광주 시내에서는 무기류의 다량유출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강력 사건이 많지 않았으나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26일 새벽 4시 광주시 동구 학운동 734의 1 최덕춘씨(52) 집에서 최씨와 부인 김소례씨(38) 및 아들 현 군(7) 등 일가족 3명이 카빈 총탄에 난사당한 채 안방에서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최씨 집에서 20여 발의 총성이 나 가보니 최씨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져 있었는데 피해 금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인다는 것. 또 지난 21일 밤 9시 광주시 황금동 76의 3 박승휴씨(43)의 비뇨기과병원에 20대 청년 3명이 각각 카빈총을 들고 들어와 공포 5발을 쏘는 등 간호원과 가족들을 위협, 현금 1백만 원과 다이아 반지 등 모두 3백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동명동에서도 3가구가 털리는 등 번두리 지역에 강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는 소식이 벽보로 나붙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가족 3명 피살 괴한 침입 총난사”²⁾

26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사구동 734의 1 최덕춘씨(52) 집에 10대로 보이는 괴한이 들어와 안방에서 잠자던 최씨 일가족에 총을 난사, 최씨와 부인 최소례씨(35), 아들 현군(7, 사공국교 1년)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같은 방에 있던 딸 은경양(11)은 무사했다. 괴한은 최씨집 담을 넘어들어와 안방 유리창 밖에 서서 난사했는데, 주민들은 도난품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광주 사태를 이용한 원한관계 살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일가족 피살 사건의 범인은 그 집의 장남으로 밝혀졌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 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후속 기사를 보도했다(『조선일보』에는 후속 기사가 없으며, 『경향신문』에는 선행 기사가 없다).

1) 『동아일보』, 1980년 5월 26일, 7면.

2) 『조선일보』, 1980년 5월 27일, 7면. 이 기사에서 ‘최소례’는 ‘김소례’의 오타이다.

“일가 사살범은 아들 20대, ‘계모와 사이 나빠 범행’ ” 3)

광주 경찰서는 28일 광주시 동구 학운동 74의 1 최득춘 씨(54) 일가족 3명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최씨의 장남 철 군(22)을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군은 광주 사태가 계속된 지난 25일 시위대열에 참여했다가 소총 1정을 입수, 26일 새벽 4시 10분경 총을 갖고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최 씨가 “네가 뭔데 총을 갖고 다니느냐” 고 꾸지람해 아버지와 계모인 김소례 부인(36) 이복동생 현 군(7)을 차례로 쏘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최 군은 “계모와 사이가 나쁘데다 아버지가 사사건건 계모 편만 들어 화가 나 있던 중 마침 총을 갖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 고 말했다.

“일가 셋 사살 범인은 장남” 4)

광주 경찰서는 28일 광주시 동구 지운동 최득춘씨(54, 광주시 학운동 743의 1) 일가족 3명을 총으로 사살한 최씨의 장남 최철씨(22)를 검거, 살인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 10분쯤 자기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아버지와 계모 김소례씨(36), 이복동생 현 군(7) 등 3명을 차례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이다. 최씨는 경찰에서 광주 소요사태가 일어난 지난 22일 카르빈 1정을 구해 시위대를 돌아다니다 지난 25일 하오 5시쯤 집에 들어갔으나 “네가 무언데 총을 갖고 다니냐” 는 꾸중을 듣고 이에 대한 화풀이로 총을 쏘아댔다는 것이다.

요컨대 신문에 따라서 인명과 나이, 그밖의 사실관계의 서술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18 광주항쟁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최철이 카빈 소총을 입수한 후 아버지 최득춘과 계모 김소례, 이복동생 최현 등에게 총을 난사해 숨지게 했으며, 그 살해 동기는 ‘가족 간의 원한’이었다는 내용이다.⁵⁾

1980년 6월 5일 계엄사에서 “사태 진압 이후 6월 5일까지의 사망자 처리 상황”에 관해 발표한 신원 확인 사망자 명단에는 해당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⁶⁾

최득춘(52, 소개업, 광주 학운 734-1, 총상)
김소례(38, 여, 무직, 광주 학운 734-1, 타박상)
최현(7, 국교생, 광주 학운 734-1, 총상)

3) 『동아일보』, 1980년 5월 29일, 7면.

4) 『경향신문』, 1980년 5월 29일, 7면.

5) 이 신문 기사들에서는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구술 증언에 따르면 최득춘과 김소례 사이에는 최현 외에 두 딸이 있었고 이들은 살아남았다.

6)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해당 기사 참조. 이 기록에서 최득춘의 직업이 ‘소개업’ 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을 가리킨다. 그러나 김소례의 사망 원인이 ‘타박상’ 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알 수 없는 의문점이다. 타박상이란 (곤봉 같은 것으로) 구타를 당해서 사망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에서 펴낸 『광주민중항쟁일지』 5월 26일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04시

*광주시 동구 학운동 734-1번지, 최득철(52세)씨 집에 10대 괴한이 침입, 최씨와 최씨의 둘째 부인 김소례씨, 아들 최현(7세) 등 3명을 살해. 주민들은 이들 일가족이 원한에 의해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취재일지)

여기서 인용된 조선일보 취재일지는 『월간조선』(1985년 7월)에서 미공개 자료를 공개한 것인데,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원형을 살렸다”고 하는 『조선일보』 사회부의 데스크 일지 가운데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위와 별로 다르지 않다.

26일 오전 11시 광주 ○기자 송고

* 26일 새벽 4시쯤에는 광주시 동구 학운동 734의 1 최득철씨(52) 집에 10대 괴한이 침입, 최씨와 최씨의 둘째 부인 김소례씨, 아들 최현(7)등 3명을 총으로 살해. 주민들은 이들 일가족이 원한에 의해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자료 중에서 보다 상세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1980년 당시 『동아일보』 광주 주재 기자 겸 전남 취재반장으로서 광주항쟁을 취재했던 김영택의 진술이다(김영택 1990, 261-262; 2010, 512-513).

[5월 26일] 새벽 4시 30분쯤 동구 학운동 734의 1 최득춘(崔得春, 52) 집에서 최의 부인 김소례(金小禮, 38), 아들 현(現, 7) 등 일가족 3명이 괴한의 카빈 총격으로 피살되었다. 이웃 주민들은 복덕방 주인인 최의 집에서 20여발의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져 있었으나 피해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한관계에 의한 살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최의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29세 가랑)이 평소 계모와의 잦은 마찰로 함께 살지 못하는 등 가정불화가 잇따랐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아들이 이번 사태의 틈바구니를 이용해 탈취한 총기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나중에 진압작전이 끝난 다음 붙잡힌 범인은 역시 주민들의 말대로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은 돌보지 않고 계모와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만 보살피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 친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은 다행히 광주민중항쟁으로 인해 총기 취득이 가능했다는 사실 이외는 광주항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지만 처음에 일가족 몰살 사건으로만 전해졌을 때 학생 및 시민수습위원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맨처음 발생했던 박순휴 병원장 댁 강도 사건 이후 극히 미미한 사건 밖에 일어나지 않다가 최근 동명동에서 다시 3기구가 털리는 등 불미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불안해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던 중이었다. 나도 일가족 몰살사건 소식을 듣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 터지는 강도사건에 이어 발생한 살인사건이어서 '이거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치안부재 상태의 혼돈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경찰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범죄사건 발생률이 적었다는 사실을 두고 시민들은 자체 질서의식을 크게 자랑했었는데 이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으니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크게 우려되었다. 사실이 그랬다. 무려 2천 5백정이 넘는 총기가 아무런 통제 없이 나돌고 있는 판국에 강도사건은 5일 동안 겨우 5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희한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일이었다.⁷⁾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문헌이 있다. “당시의 수사기록과 상황일지, 군작전 기록 등 각종 정보 자료”를 참조했다고 하는 『광주사태의 실상』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국방부 1985, 2, 67-68).

26일 새벽에는 학운동에 거주하던 최득춘(崔得春) 가의 일가족 3명이 무장 폭도의 총에 살해당하였다. 학운동 일가족 피살 사건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결과 범인은 최득춘의 아들 최철(22세)이 무장 폭도가 되어 저지른 만행으로 밝혀졌다. 최철은 5월 25일 학운동 부근에서 소요에 가담, 활동하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장 폭도로부터 칼빈 1정을 지급받아서 이들과 함께 계엄군에 대항하는 폭도로서 주연(主演) 활동을 하다, 평소 계모가 자기를 학대하고 이복동생 역시 자기를 형으로서 대접해주지 않았다는데 불만을 품고 총을 가진 이때, 이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26일 새벽 4시경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여는 소리에 깨어난 아버지 최득춘이 아들이 총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가 무슨 총을 갖고 있느냐?”고 하자 순간적으로 평소 계모와 이복동생만을 생각해 준다는 감정이 폭발, 아버지마저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칼빈총 20여발을 아버지외 어머니 그리고 동생 등에게 난사하고 도주하였다. 그후 수사기관에서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뜻밖에도 사망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또 다시 광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국방부의 문헌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계엄군에 대항하는 폭도로서 주연 활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계모의 학대에 대한 계획적인 복수’라는 점이

7) 여기서 눈에 띄는 정보는 당시 장남 최철이 방위병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구술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 3명과 함께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불분명하다. 구술 증언자들도 사건에 가담한 최철의 친구들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부각되어 있다. 요컨대 문헌들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시비(是非)가 일어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평소 계모와 사이가 나빴고 학대를 당하여 계획적으로 복수를 준비한 것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계모 김소례와 아들 최철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술 증언들을 통한 사건의 재구성

기존의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록과는 달리, 구술 증언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소례와 최철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소례는 온순한 성품이고 성격도 좋았으며,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학대를 할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최득춘의 사촌동생이며 그의 장례를 함께 치른 최민호(1930년생, 82세, 현재 광주 거주)에 따르면, “형수는 참 사람이 좋았어요. 사람이 좋고 절대 학대할 사람이 아니고, 형님이 성격이 고약”했지만 “형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사람이 온순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⁸⁾ 또한 최득춘의 둘째 여동생인 최완주(1934년생, 78세, 현재 광주 거주)는 “내가 볼 때는 오빠가 [의붓아버지면] 의붓아버지지, [김소례는] 의붓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다.⁹⁾ 김소례는 최철에게 학대는커녕 결코 부박하게 대하지 않았다. 구술 증언자들은 오히려 아버지 최득춘과 아들 최철의 갈등 관계가 심각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최득춘의 고향은 완도군 고금면이다. 최민호는 “형님이 나보다 두 살 더 먹었다”고 했으며, 이는 최득춘이 1928년생으로 1980년에 52세였음을 확인시켜준다. 최득춘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고 공부도 잘하고 문학에도 소질이 있었으며 글씨도 명필이었고”, 자신보다 “키가 크고 힘도 좋았다”(최민호의 키가 약 180cm이다). 필체도 아주 좋았고 특히 수필 같은 것을 잘 썼다. 최득춘의 사촌누이인 최민선(1927년생, 85세, 현재 안양 거주)도 최득춘이 “외모도 범상하고 머리가 아주 뛰어났다”고 기억한다.¹⁰⁾

최득춘이 완도에서 광주로 온 것은 30대에 접어들어 1960년대 초반이었다.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최민선의 소개로 1950년대 중반에 김○○와 결혼해 완도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둘 낳았는데, 한 명이 나중에 ‘일가족 살인 사건’에 연루된 최철이고, 둘째

8) 2012년 5월 22일과 9월 26일 광주에서 구술 증언. 이하 모든 구술 증언자의 이름은 증언자들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한다.

9) 2012년 9월 26일 광주에서 구술 증언.

10) 2012년 4월 18일 안양에서 구술 증언.

는 키우다가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결혼은 평탄하지 못했고 곧 이혼을 한다.¹¹⁾ 신안군 비금도 출신인 김○○는 완도에서 처음으로 하이힐을 신고 투피스를 입었을 정도로 신여성이었으며 일찍이 남다르게 미용기술을 배워서 백운 미장원을 운영했다. 최득춘은 광주에서 조대부고를 졸업하고 조선대를 다닌바 있으며,¹²⁾ 잘 생기고 키가 훗칠하고 똑똑했던 최득춘과 김○○의 결혼은 마을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만남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김○○는 목사의 딸로 집안이 모두 교인이었고, 최득춘은 불신자였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집안사람들이 모두 결혼에 반대하자, 최득춘이 장인어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석 달 동안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아서 혼례를 올렸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믿어버렸고 그에 따른 갈등이 많았다. 또한 성격 차이도 컸던 것 같다. 김○○는 목사 집안이라 교양이 있고 성품이 좋았지만, 최득춘은 강인하고 이기적인 면이 있었다고 한다. 최민호는 최득춘이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생활을 거치면서 “사람이 변해버렸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최득춘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나쁘지 않았다.¹³⁾ “젊었을 때는 사람이 참 좋았어요. 부드럽고 잘 웃기도 하고 장난도 잘 하고 참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남 같이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권력욕, 명예욕, 재욕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시절에 최득춘은 김 양식에 필요한 대를 판매하는 사업을 박○○매제(첫째 여동생과 혼인)와 함께 했는데, 이혼을 하고 완도를 떠나며 사업을 싹 정리하고 나주에 밭을 사서 이사했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광주로 올라왔다.

광주로 올라오면서 최득춘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한동안 ‘새끼 공장’을 운영했다. ‘새끼 공장’은 제송기로 굵은 새끼줄을 생산해 내다파는 일을 가리키는 것 같다. 제송기는 1925년경에 보급되어 1970년대까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기계만 있으면 원료비가 거의 들지 않아서 농가 부업으로 권장되었다. ‘새끼 공장’은 1961년 6월부터 시작된 재건국민운동(가난을 벗어나자는 신생활운동)과 더불어 활성화되었

11) 당시에 이혼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음은 분명하지만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술 증언자들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다만 둘째 아이가 사망한 후에 이혼했다는 진술로 짐작해볼 때, 아이의 사망이 이혼에 큰 영향을 준 것일 수 있다.

12) 최민호는 최득춘이 조선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대학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완주는 조선대에 2학년까지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

13) 청년기 최득춘의 성품을 시사하는 일화가 있다. 최민호는 최득춘이 김○○와 선을 보러 갈 때 비금도까지 동행했다. 그런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어떤 두 여자가 다투는 것을 봤다. 아마 한 여자가 식모살이를 하다가 무슨 일로 도망친 후 몇 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모양이었다. 주인집 여자는 낯선 창피를 다주고 모욕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식모살이를 했던 여자가 모멸감 때문인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버렸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여기저기서 소리치는데, 최득춘은 물살이 깊고 센 것을 무릅쓰고 여자를 살리겠다고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다. 이를 최민호가 다같이 죽는다고 설득해 간신히 말렸다고 한다. 이 일화는 최득춘이 의협심이 강했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가 1975년경에는 나일론 등이 싼 값에 보급되면서 사양 산업이 되었다.¹⁴⁾ 최득춘은 '새끼 공장'을 정리한 후에는 가발 공장을 차렸다. 한옥을 한 채 빌려서 운영했고 10여 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짐작된다. 1966년 6월 1일 가공하지 않은 머리털의 대미 수출이 금지됨으로써 기왕의 모발 가공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가발 수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아마 최득춘이 가발 공장을 차린 것은 이런 흐름을 재빠르게 읽어냈기 때문일 것이다.¹⁵⁾ 하지만 가발 산업도 1970년대 중반부터 가발 유행의 퇴조와 함께 수출 증가율이 감소했다. 최득춘은 가발 산업의 호황이 시들해지기 시작하자 공장 문을 닫은 후에는 잠시 만화가게를 열기도 했다. 만화가게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아이를 찾으려면 만화가게에 가거라'는 새말이 생길 만큼 크게 증가했는데, 1968년 8월 31일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발족될 정도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는 불량만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았고 불량만화 추방 캠페인이 확산되었다. 1972년 2월에 만화가게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실시되었고 이후 매년 단속이 강화되었는데,¹⁶⁾ 아마 최득춘은 이 무렵에 만화가게를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 것 같다.

이혼하고 광주로 올라와 사업을 하면서 최득춘은 제주 출신의 고씨(성명 미상)와 두 번째 살림을 차려서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곧 이혼했다. 고씨는 "전남방직 공장에서 조장을 맡을 정도로 말도 사납고 보통이 아니었다"고 한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한 살림이라서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아 사실 이혼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가발 공장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처녀"하고 세 번째 결혼을 했다. 이 처녀가 김소레이며, 최민호는 그때 당시 김소레의 나이가 19세였다고 기억한다. 최득춘과

14) "새끼와 가마니 생산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요즘 나일론 PP사 등 화학사에 의한 대용품들이 많이 나와 판로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모우터 달린 새끼 꼬는 기계가 한 대에 8만 원 정도니 제대로 수입만 된다면 농가 부업으로는 밀천도 별로 안 드는 업종이나 워낙 요즘은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점점 이 업을 청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했다." 『서울의 농촌(4) 개화동 새끼마을』, 『동아일보』, 1975년 11월 12일, 7면.

15) "64년 하반기부터 대미시장이 개척되어 작년에 1백65만 불(가발 한 개=1백60g에 12불 내외)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 현재로 약 2백만 불이 수출되어 대미 수출 인기 상품으로 등장, 머리털 수집에 끔찍한 소녀의 타살 사건까지 빚어낸 사회 문제까지 생겼지만 30여 업자(기계시설=5, 수제공장=30개)들은 신바람이 나 오는 10일 가발수출조합을 창립하고 가발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신바람 난 가발 수출 사람 머리도 계약 생산(?)』, 『경향신문』, 1966년 6월 4일 5면. "1966년에 국내에 20여 개의 큰 가발 공장에서 수출 실적을 올렸고, 8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수공업으로 가발을 만들었다. 가발의 수집은 인모 수집원들이 지방을 돌며 구입하기도 하고 엽장수를 통해 사들이기도 했다." 『가발』, 『매일경제』, 1966년 7월 8일, 4면.

16) "서울시경은 1일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불량만화 일제단속에 나서 하룻동안 만화가게 517개소에서 2만 440건의 불량만화를 거두어 들었으며 104개소를 즉시에 회부했고 194개소는 경고, 219개소는 훈방처분했다." 『불량 만화가게 104곳 즉심』, 『경향신문』, 1972년 2월 3일.

김소례는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았다.¹⁷⁾ 이 아들이 1980년에 죽임을 당하는 최현이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고 법적으로도 혼인관계는 아니었지만,¹⁸⁾ 김소례는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했으며, 최득춘과 사이가 좋았다. 김소례와 결혼생활을 하며 최득춘은 가발공장을 정리하고 얼마간 만화가계를 하다가, 곧이어 부동산 중개업(소개업)을 시작했고, 당시 변화가었던 (구)시청 부근에서 “부동산을 잘 해서 곤란한 것 없이 살았다.” 1970년대 초중반에 서울에서는 강남과 잠실 지역에 투기 바람이 불었고, 그밖의 대도시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사회적 우려가 높았지만 중개업은 호황을 누렸다.¹⁹⁾ 최득춘이 부동산 중개업으로 ‘업종 전환’을 한 이유도 이런 시류를 따랐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⁰⁾

이 시기에 최득춘은 학운동에 큰 집을 두 채 지어서 한 집에 자기 가족이 살고, 시집간 둘째 여동생 최완주 가족을 광주로 오라고 해서 옆집에 살게 했다.²¹⁾ 최완주는 자신이 광주에 올라온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41세였다고 하는데, 그녀가 1934년생이므로 추정하면 1975년경이다. 옆집이라고 하지만 두 집 사이에 대충 통나무로 경계를 표시한 정도라서 사실은 한 집이나 마찬가지로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완주는 1980년 5월 26일에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되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 오빠네 집에서 “드르르 하는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 안방에서 자던 최득춘과 김소례, 최현이 사망했다고 한다. 최완주의 집에 딸린 다른 방에서 자던 딸 둘은 소리치며 살아나왔다. 최완주는 사건 현장의 최초 목격자이기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오빠네 집에 간 것이어서 범인이나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녀의 기억에 따르면, 최철이 장독대에 올라가서 안방 창문을 향해 난사했다는 말을 나중

17) 신문기사와 문헌자료에서 1980년에 김소례의 나이는 35세, 36세, 38세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많은 36세라고 추정할 때 김소례는 1944년생이며, 최득춘과 김소례는 16살 차이가 난다. 최득춘과 김소례의 딸들 가운데 큰 딸이 1980년에 고등학교 2학년(17세)이었다는 구술 증언과 작은 딸이 11세였다는 신문 보도를 참조하자면, 최득춘과 김소례가 결혼한 것은 적어도 17년 전인 1963년경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당시 최득춘은 35세이고 김소례는 19세인데, 이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김소례의 나이가 19세였다는 구술 증언자의 기억과 부합한다. 한편 1980년에 22세인 최철은 1958년생이며, 김소례와는 14살 차이가 난다.

18) 최득춘의 첫째 아내였던 김○○와의 이혼도 법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마 김소례와 낳은 아이들은 자신의 호적에 올렸을 것이다.

19) “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때의 1차 투기 붐, 67년 서울 신시가지개발계획에서 온 2차 투기 붐, 그리고 73년 말 오일쇼크 직후의 3차 투기 붐 때 하룻밤새 지가가 배로 뛰어버리는가 하면 불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땅값은 춤을 추기도 했었다.” 『토지 투기 시대의 종언, 『매일경제』, 1976년 12월 10일, 1면.

20) 최민호는 최득춘이 중개업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 신고제였다. 부동산중개업법은 1983년에 제정되었고 1985년에 제1회 중개사 시험이 시행되었다.

21) 최득춘의 형제자매는 형하고 남동생, 여동생 셋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에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한다.

최득춘과 김○○가 이혼한 후 최철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모래 사업”을 하는 삼촌(어머니의 오빠)이 사는 곳에서 기거하며 서울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해에 최득춘이 “내 아들”이라며 강제로 광주로 끌고 왔다. 최완주가 광주에 왔을 때 이미 최철이 내려와 있었다고 하니, 최득춘이 최철을 데리고 온 것은 1975년 이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최득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아들을 정규 중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최민호는 최득춘이 최철을 광주에 데리고 왔을 때 이미 정규 학교에 다닐 시기를 놓쳤던 것 같다고 한다.²²⁾ 최민호에 따르면, 최득춘은 아들에게 앞으로 중국이 월등한 나라가 될 테니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며 중국어 학원에 보냈다.²³⁾ 1970년대는 한국에 중국 열풍이 몰려온 시대이기도 했다. 1971년 4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른바 ‘핑퐁 외교’가 시작되었고, 7월 9일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와 비밀 회담을 하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문 계획에 합의하여 7월 15일 공표되었다. 닉슨 대통령의 방중은 1972년 2월 21일에 이루어졌고 한국 텔레비전에서도 위성을 통해 실황 중계되었다. 중국 공산화 이후 최초였던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세계적인 화제로 떠올랐으며, 이 시기에 한국에도 중국 바람이 불어와 중국어학원이 큰 관심을 끌었다.²⁴⁾ 또한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 간에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는데, 이 시기에도 한국에서 중국 열풍이 불붙어 전국 8개 대학에 중국관계 학과가 신설되었고, 학원 수강생이 늘고 회화 책자와 카세트가 쏟아져 나오는 등 중국어 학습 관련 업계가 호황을 누렸다.²⁵⁾ 1958년생이라고 추정되는 최철은 1972년에 14세, 1979년이면 21세인 시기였다. 그러나 최철은 중국어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학업을 등한시했다.

22) 최철이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한 것이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4년에 교육법이 개정되어 1985년부터 시행되었다.

23) 최완주는 중국어 ‘학원’이 아니라 ‘중국 학교’에 보낸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철은 ‘광주화교소학교’에 다녔던 것일 수도 있다. 이 화교 학교는 광주에 1949년에 설립되었고, 대만 학력을 인정해주지만 인가학교는 아니어서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따로 치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등 전국에 대소 49개(학생 9천여명)의 화교소학교가 있고 초중부(중학교) 고중부(고등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5곳에 있다. 그중 서울에는 연희동에 중등학교, 명동에 초등학교와 일부 중학교, 영등포에 화교국민학교가 있으며 회현동에 흥화리는 화교사회 유일의 유치원이 있다. 전국 49개 화교 학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희동에 있는 한국한성화교중학이다.” 「서울 새 풍속도 외국인촌」, 『경향신문』, 1971년 6월 14일, 7면. 최근 중국어 열풍과 함께 중국어 조기 유학을 보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으로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화교 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인권도시' 광주, 화교 인권은 '사각지대'」, 『경향신문』, 2011년 4월 20일; 『뽕비는 화교 학교』, 『주간조선』, 2012년 12월 11일. 만일 최철을 화교 학교에 보낸 것이라면, 최득춘은 상당한 선견지명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24) 「수김문의 하루 10여 중국어학원에도 붐」, 『경향신문』, 1972년 2월 21일, 7면.

25) 「모습 드러나는 중국의 문화(2) 중국어 학습열」, 『동아일보』, 1979년 1월 29일, 5면.

최철이 중국어를 잘 배우지 못하자, 최득춘은 기술 하나는 갖고 있어야 먹고 산다며 당시 “좋은 기술”이었던 “냉동 기술” 자격증을 따도록 했다. 1960년대 말부터 공화당 정부는 1인 1기 정책을 통해 산업 기능공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1966년 10월 6일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정회원에 가입하고 11월 제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렸으며, 이 대회는 매년 개최되었고 기능공 육성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기능공 중에서도 냉동공은 유망한 직종이었다.²⁶⁾ 특히 냉동 관련 산업은 1970년대에 각광을 받았고, 자격증만 따면 취직은 아무 걱정이 없을 정도였다.²⁷⁾ 최철도 냉동 기술 자격증을 따고, 아버지의 주선으로 여수의 한 공장에 취직을 했다.²⁸⁾

그러나 최철은 여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곧 광주로 되돌아왔다.²⁹⁾ 아들이 여수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돌아온 후 최득춘의 구박은 매우 심해졌다. 최완주에 따르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런 데도 못 있고 왔느냐고, 아빠 성질이 또 가만히 놔둘 성질이 아니니까, 막 구박을 했다.” 최득춘은 무슨 일을 하든 일처리를 매우 말끔하고 꼼꼼하게 해냈다. 광주에서 부동산을 하면서는 남동생에게 목수일을 배워서 먹고 살라고 권유하고, “네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악써서 해야 쓸 거 아니냐”고 하며 일을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고 형제 중에 누가 술을 먹고 들어오거나 하면 질색을 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도 최득춘은 아들 교육에 매우 엄격했다.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대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를 때려가

-
- 26) 당시 한 기사는 냉동공 부족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5개월 배우면 2, 3급 자격 응시가 가능하고 월수입이 3~4만 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얼음공장에서 비롯된 냉동시설은 원양어선이나 식품가공업소는 물론 오늘날 대중요식업소와 호텔 등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고 있다. 냉동공과 별도로 에어콘을 만지는 공기조화공 또는 냉방공이 있긴 하지만 기술에는 별 차이가 없고 냉동공은 영하의 저온을, 에어콘은 실내적정온도를 취급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냉동공은 냉동기계를 조작 또는 운전하거나 수리 설치하는 기술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냉동시설업소가 부쩍 늘어나자 작년 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바뀌어 일반냉동업소는 의무적으로 냉동기사를 채용토록 됐으나 자격증을 가진 기능공은 기술자 열 명 중 서너 명 꼴에 불과하다.” 「기능공이 되려면 (2) 냉동공」, 『동아일보』 1974년 2월 6일, 『동아일보』는 1974년 1월부터 1975년 4월까지 「기능공이 되려면」이란 제하의 기획 기사를 통해 보일러공, 냉동공, 텔레콤전화교환원, 차량정비공, 라디오-TV수리공, 시계수리공, 목각공, 보석가공공, 광부, 타자수, 공기조화공, 원동기공, 용접공, 천공(電工), 중장비공, 판금공, 배관공, 선반공, 금형공, 미싱자수공, 주물공, 목형공, 기계공, 컴퓨터요원, 봉제공, 자수, 원예사, 조화공, 양재공, 열관리사, 무선통신사 등을 차례로 다루었다.
- 27)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or.kr)의 협회 연혁을 참고하면, 1967년 한국냉동공조기술개발협회가 창립되었고, 1968년부터 고압가스냉동기계 기능사 자격검정시험이 치러졌으며, 1974~77년에 월간 냉난방시대가 발간되었고, 1974~77년 한국냉동공조직업훈련소가 운영되었다.
- 28) 여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1967년 여천공업기지를 기공하면서 산업단지로 발전했다. 현재 명칭은 2001년 10월에 개명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이다.
- 29) 최민호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최철이 어느날 여수의 공장 주인집에서 금반지를 몰래 훔쳐서 말썽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한다. 아버지와 달리 최철의 성품은 나쁘지 않았지만,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면서 키웠고,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며 억압하는 일이 많았다. 최민호는 “형님은 성격이 남한테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잘못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사람 만들려고 하는 성격”이었으며, “잘못하면 사정없이 패버리고 해서 [둘 사이의] 감정이 나뻐다”고 전한다. 젊었을 때 성품이 좋았던 최득춘은 군대를 다녀오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면서 성격이 변했고, 이기적인 명예욕과 재욕이 많아졌다.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최득춘은 화가 나면 아들을 잡는 일이 잦았다. 더구나 여수 직장을 그만둔 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더욱 격해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전에도 좋지 않았지만, 이 여수 사건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부자 사이가 악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최철은 여수에서 돌아온 후 1980년 5·18이 일어나기 전에 방위로 입대했다. 군복무를 하려면 만20세가 넘어야 하고, 여수에서 직장생활을 얼마간 했으니, 아마 21세인 1979년경에 입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에 최철이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5·18 시위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구술 증언자들도 알지 못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정한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5·18 광주항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대개 사회 하층민 출신의 백수나 건달인 경우가 많았고,³⁰⁾ 이들에게는 가족관계보다 친구 간에 의리나 우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김정한 2010).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최철도 이와 유사한 부류에 속했을 수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젊은 혈기로 계엄군의 만행에 격분하여, 혹은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 계엄군에게 심하게 맞아서 시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5월 21일부터 무장하기 시작한 시민들에게 총을 서로 나눠주는 일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민군이 되었던 임영상은 자신의 친구인 이승진이 겪은 경험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이승진은 광주시내에서 시위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광주시민 단결을 외치고 다녔다. 5월 21일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에 분노한 시민들이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하던 5월 24일 오후였다. 시위대 트럭에 타고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광주공원 앞에서 총기류를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위대원들과 함께 광주공원에 갔다. 광주공원 앞에는 카빈소총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무장한 시위대원들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총과 실탄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승진은 카빈소총과 실탄이 든 탄창을 받았다. 그는 총을 휴대한 채 시위대 트럭을 타고 광주 시내에서 흥

30) “대부분은 노동자, 목공, 공사장 인부 등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구두둑이, 냄마주이, 술집 웨이터, 부랑아, 일용 품팔이 등등이었으며 또한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도 많았고 가끔은 예비군복을 입은 장년층도 보였다” (황석영 1985, 122).

보전을 전개하다 잠시 쉬기 위해 총을 가지고 자취방에 왔다(임영상 2009, 181-182).³¹⁾

이와 유사하게 최철도 5월 25일에 어딘가에서 시민군들이 나눠주는 소총과 실탄을 받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그대로 소지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최철은 아버지 몰래 옆집에 사는 고모집에 총을 갖다 놓았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최득춘은 “네가 뭘데 총을 갖고 다니느냐”며 평소보다 더 심하게 최철을 몰아세웠을 것이고, 최철은 아버지의 오랜 억압과 폭력, 자신이 속한 참을 수 없는 가족관계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최완주는 최철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오래 지나지 않아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 살아남은 가족은 면회도 한번 하지 못했고 시신을 넘겨 받지도 못했으며,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시대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 김○○는 아들의 시신을 보지도 못한 채 그후로 실신하여 정신을 잃고 “미쳤다”고 하는 풍문이 들렸다. 그 누구라도 온전한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었을 것이다.

3. 섬마을에서의 한국전쟁

아들에게 “네가 뭘데 총을 갖고 다니느냐”고 힐난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여기에는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가 개시된 상황에서 자식의 생명과 안위를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득춘의 그 말의 의미가 범상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좌익 활동에 가담했으며,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이 완도를 점령했던 시기에는 인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력 때문이다. 최득춘은 완도에서 일어난 수많은 좌우 학살의 핵심은 아닐지라도 그 중심부 언저리 어딘가에 서 있던 인물이다.

최득춘에 관한 뜻밖의 기록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보고서에서 단 한 차례 예상하지 못한 대목에서 등장한다.

31) 이후 이승진은 5월 27일 도청 진압 후 소총과 실탄을 반납하려 했으나 기회를 놓쳐 자취방에 보관하다가 친구와 함께 카빈소총 2정, 실탄 198발, 탄창 7개를 야산에 묻었는데, 1986년 말 군 전역 후 가보니 야산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며 소총과 실탄의 행방은 묘연했다고 한다. 그만큼 시민군의 총기 관리는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다-2340호 오승연

오승연(1919년생, 고금면 덕암리)은 고금지서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자신의 사촌처남 최득춘이 좌익혐의로 고금지서에 잡혀오자 그를 풀어주었다는 오해를 받았다. 오승연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1951년 2월 말 고금지서에서 고문을 받은 후 귀가하여 1951년 3월 2일 집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오승연의 아들 오광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듣기로 “아버지가 지서에 구금되어 고춧가루 물고문을 받았다. 어머니가 밥을 해 날랐고 묘는 마을에 있다. 최득춘은 전쟁과 상관없이 나중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고 진술하였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a, 594).

오승연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부당하게 희생되었다고 진술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득춘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2월 사이의 어느 시점에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에서 좌익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풀려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어떤 연유로 완도에서 좌익 활동에 연루되었으며, 또 어떤 인생을 거쳐 광주에서 시민군의 무장투쟁에 반대하다가 총을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 하지만 한국전쟁 시기에 좌우를 막론하고 자행한 무수한 학살들과 5·18 광주항쟁에서 일어난 수많은 죽음들을 상기한다면, 이 극적인 이야기는 최득춘과 그 가족만의 이례적인 사례는 아닐 것이다.

완도에서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머리가 좋고 수완이 뛰어나며 매사에 철저했던 최득춘은, 이윤이 물리는 호황 사업과 사양 직종의 흐름을 영리하게 읽어가며 새끼 공장, 가발공장, 만화가게, 부동산중개업 등에 뛰어들었고, 아주 풍족하지는 않아도 큰 집을 두 채 지어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살 만큼 재력을 쌓았다. 여기에는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변해버린 최득춘의 성격과 욕망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완도에서 좌익 활동에 참여했던 20대의 최득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1) ‘빨갱이 섬’: 소안도에서 고금도로

전라남도 완도 지역에서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민족해방운동에 관해서는 비교적 여러 연구논문들이 존재한다(김승 2003; 김인덕 1997; 나승만 2004; 손형부 1992; 송윤경 2007; 윤종배 1994). 특히 박찬승은 구술사 연구를 통해 완도 지역의 항일민족운동에 관한 뛰어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해왔다(박찬승 1993, 1994, 1995, 2001). 그에 따르면, 완도군에 속하는 작은 섬인 소안도에서 특이하게도 강력한 민족해방운동이 성장하고 활성화되었는데, 그 출발점이자 근거지 역할을 한 것이 소안사립학교였다(소

안항일운동사료집편찬위원회 1990). 1922년 소안도 토지계쟁사건에서 친일파 이완용의 아들 이기용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를 기념하여 1923년 5월 16일 소안사립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공동체 질서가 드높았던 것이다(정근식·김준 1998; 지수걸 1991). 더구나 당시 소안도는 목포와 제주도, 인천과 일본 오사카를 연결하는 항로의 일종의 '중간 기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박찬승 1993, 84; 김인덕 1997, 362), 이 때문에 소안사립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일본 유학생들을 다수 배출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완도와 일본을 잇는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했고, 이는 해방 직후 완도 지역에 사회주의 의식이 남달리 유포되고 내면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소안도의 항일민족운동에서 중요한 비밀결사는 송내호가 조직한 수의위친계(守義爲親契)였다(박찬승 1993, 87-92). 송내호는 1895년 소안도 비자리에서 태어나 1914년 서울 사립중앙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소안도로 내려와 교육운동에 매진했으며, 1919년 3월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했고, 1920년에 무장독립운동단체인 대한독립단의 전라도 지부 건설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년 동안 복역한 후 출소해 1922년 수의위친계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소안도만이 아니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까지 확대되었으며, 완도 지역에서는 사회운동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을 모두 배출했다. 또한 송내호는 1927년 위경량의 집에서 수의위친계의 청년 조직으로 일심단(一心團)을 결성했으며, 중국 광둥 황포군관학교와 일본 노동운동에 책임자를 파견해 조선, 중국, 일본 3국을 무대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특히 정남국(1897-1955)과 위경량(1907-1950)은 1920년대 도쿄와 오사카의 노동운동에 투신해 재일조선인운동을 이끌고, 1927년 제3차 조선공산당(또는 춘경원공산당) 일본총국에 입당했으며, 1928년 제3차 공산당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을 살기도 했다(김인덕 1997, 364-365).³²⁾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완도에서 좌우 대립이 극렬하게 일어나고, 우파에 의한 보도연맹 수장 사건, 그에 대한 좌파의 보복 등이 연이어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을 낳는다. 특히 소안도에서 주민 700-800세대 중에서 270여 명이

32) 정남국은 해방 직후 1945년 10월 완도로 귀국하여 1950-1954년 제2대 국회의원(민국당)을 지냈다. 최초로 노동쟁의법을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정남국의 아들 정기탁은 현재 완도에서 살고 있다. 그는 정남국이 귀국한 이후 끊임없는 감시와 조사에 시달려 정치 활동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2012년 6월 28일 완도에서 구술 증언.

수장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섬마을에서의 한국전쟁은 치열하고 강력했다. 최근에 이루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10a, 2010b 참조). 완도군 군외면, 완도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소안면, 노화읍 등 완도 전역에 걸쳐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들은 일제강점기에 확립된 진실한 마을공동체를 해체하고, 개인들과 가족들 간의 관계를 대립과 적대, 원한으로 뒤엎히게 만들었다.

최득춘의 고향인 고금도(고금면)는, 1920년대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소안도 세력이 1927년 소안사립학교의 폐지, 연이어 수의위친계가 관여한 배달청년회 사건, 1928년 송내호의 서거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하는 와중에, 1930년대에 완도 군외면과 더불어 새로운 항일운동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박찬승 1995, 188-189). 고금면에서는 1920년 1월 이현렬, 정학균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운동, 1929년 이현렬이 지도한 용지포간척지투쟁 등이 전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30년대에 공산주의 이론을 계승한 최창규, 이기홍, 이홍쇄 등이 전남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농민조합을 결성하는 농민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홍쇄(1900-1942)는 수의위친계의 고금도 책임자이기도 했다. 1933년 고금면에는 (적색)농민조합의 하부조직으로 1개의 청년반과 4개의 농민반이 조직되었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박찬승 1995, 182).

2) 청년 좌익에서 상무대 조사병으로

1928년생인 최득춘은 소안도에서 고금도로 이어지는 항일운동의 역사와 분위기를 어려서부터 부지불식간에 익히며 자라났을 것이고, 해방 이후에 널리 퍼진 사회주의 사상과도 상당히 친밀했을 것이다.

최민호는 해방 이후 고금도에서 좌익 지도자는 독립운동가 출신인 정광택이었다고 기억한다. 정약용의 후손으로 알려진 정광택은 당시 40-50세 사이의 나이였고,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고금도에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렸다. “고금면에서는 정광택이 최고 우두머리”였고 “그 사람이 다 교육시키고 다 가르치고” 했다. “6·25가 나기 전에도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말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따르고 맞는 말이라고 인정해주고 했다.” 특히 정광택은 송내호가 조직한 수의위친계의 이홍쇄와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고 짐작된다.³³⁾ 정광택의 아래에는 김호진(가명)과 손영진(가명)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고종사촌 사이이며, 손영진은 최

득춘의 외가 쪽 사촌이다.

해방 이후 최득춘이 좌익 활동에 관여한 ‘알려진’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48년 고금지서 습격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950년 인민군이 완도를 점령한 시기의 일이다. 해방 이후 결혼해서 목포에 살던 최민선은 최득춘이 “고금지서를 습격하고 완도에서 산으로 산으로 걸어서 목포로 숨으러” 왔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³⁴⁾ 최득춘은 사촌누나네 집에 두 달 동안 피신해 있다가 결국 발각되어 잡혀갔는데, 고문을 받다가 도중에 풀려났다. 이는 당시 습격 사건으로 체포되어 타살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³⁵⁾ 영리했던 최득춘은 피를 내어, 사람들이 작대기를 들고 나오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지서를 습격해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누나네 집에 왔다고 둘러댔으며, 그를 체포한 청년단원들이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한 일이고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뇌궤버렸다. 그런데 풀려나는 대신에 최득춘은 그 우익 청년단체에 들어가서 그 편이 되어버렸다.³⁶⁾ 아마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완주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무렵 최득춘은 광주에서 학교(조대부고 또는 조선대 2학년)에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완도에서도 경찰과 인민군의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었는데, 1950년 9월 14일 경찰이 인민군의 총공세에 밀려 완도군 청산도로 후퇴하면서 인민군이 일부 섬을 제외하고 완도를 일시적으로 점령했다. 광주에 있던 최득춘은 고금면에서 불러들여서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최완주에 따르면, “불려서 내려갔지요. 오빠는 뭘 일인지도 모르고 내려갔지요. 거기서는 고금면에서 네가 뭐를 책임져라, 딱 이렇게 지정을 했대요.” 아마 김호진과 함께 활동한 손영진의 부름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때 최득춘은 완도군 인민위원회에서 한

33) 잘 알려지지 않은 정광택의 행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참조할 수 있다. “정오섭(1912년생, 고금면 도남리)은 해방 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한 정광택, 이흥쇄 등과 자주 어울렸다고 한다. 이런 일로 정오섭은 몇 차례 고금지서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은 뒤 풀려났다. 1948년 12월 18일 밤, 정오섭은 좌익혐의로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어 고금면 장풍리 뒷산에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진살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a, 585) “김철규와 한 동네 사람 박봉규는 ‘해방 후 정광택, 정오섭, 배기섭, 오기창, 김성욱, 김철규, 박선규 등이 민족주의활동을 하면서 이승만정부 편을 들지 않아 경찰의 탄압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진살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a, 588).

34) 최민선은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자료에 따르면 고금지서 습격 사건은 1948년 3월과 12월에 두 차례 일어났다. 3월에 100여 명이 습격하고, 12월에 여순사건 담당자 6인이 습격했다는 진술을 참조하면, 최득춘이 고금지서를 습격한 것은 1948년 3월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진살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a, 586 주108, 636). 1948년에 최득춘은 20세이다.

35) 예컨대 “이규설(1919년생, 고금면 회룡리)은 1948년 3월 고금지서 습격사건 등에 가담한 후 경찰의 수배를 피해 고금면 칠인리 뒷산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마을사람들을 동원한 일명 ‘토끼몰이’ 작전에 걸려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1949년 2월 25일 고금지서에서 경찰에게 타살(打殺)되었다” (진살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a, 586).

36) 여러 우익 청년단체들의 통합체인 대한청년단은 1948년 12월 19일에 창립한다. 최득춘이 가입한 청년단체는 당시 난립했던 단체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자리를 하며 가담했다. 하지만 인민위원회에서 최득춘의 지위와 역할,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최민선은 최득춘이 완도에서 ‘군수 노릇’을 했고, 손영진이 ‘면장 노릇’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1950년에 최득춘은 22세로 ‘군수 노릇’을 하기에는 다소 어린 편이다. 또한 손영진이 나이로 보면 최민호보다 6-8살 정도 더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영진이 키가 크고 인물이 좋은 최득춘을 전면에 내세웠을 가능성은 있지만, 비록 형식적인 직위는 낮았을지라도 최득춘보다 손영진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과 결정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최득춘에 대해서는 고금도 출신 사람들 사이에서 인민군 점령기에 우익 관련자들을 다수 바다에 수장시킨 장본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당시 수장된 사람들 중에는 최득춘의 사촌인 최경춘도 포함되어 있었다.³⁷⁾ 그러나 최민선은 실제로 수장시킨 것은 최득춘이 아니라 손영진이라고 증언한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손영진은 최경춘이 의경 활동을 할 때 사회운동을 하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데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친척 간의 수장 사건은 가족끼리의 원한으로 격하게 확산되었고, 나중에 손영진은 어찌어찌 살아남기는 했지만 고향을 떠나 인천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비록 최득춘이 오해를 받은 일이지는 하지만, 그가 손영진과 가까이에서 함께 활동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최득춘으로서도 결코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는 틀림없다.

또한 다른 증언에 따르면, 인민군 점령기에 완도군 전체를 총괄하는 군 위원장은 위경량이 맡고 있었다. 소안도에서 수의위친계의 정남국, 위경량 등이 중국과 일본을 오갈 때 드문드문 활동을 함께 한 박상오(1925년생, 1950년 당시 25세, 현 86살, 소안도 거주)는 한국전쟁 시기에 완도군 인민위원장은 위경량이 맡았다고 단언하고 있다.³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지도적 인물로서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투옥된바 있는 위경량은 “늘 지하에서” 활동하다가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나타났고, 인민군이 그에게

37) “3) 최경춘 희생사건(마-7277, 1950. 9. 30.). 진실규명대상자 최경춘(崔慶春, 남, 26)은 고금면 가교리에 거주하며 의경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최경춘의 집안은 농업 규모가 커 가교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는데, 이러한 집안 배경과 최경춘의 의경 활동 경력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경춘은 1950. 9. 26.(음 8. 15.) 이전,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 나갔고, 이후 완도 내무서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30.(음 8. 19.),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 최경춘의 유가족은 완도 내무서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나 고금면으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최경춘의 희생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후 완도를 군내리 바닷가로 가 수많은 시신을 모두 뒤집어 보며 최경춘의 시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b, 248).

38) 2012년 6월 27일 소안도에서 구술 증언. 위경량의 이름은 몇몇 문헌에서 ‘위경영’, ‘위경양’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박상오는 ‘위경량’이 확실히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즉각 군 위원장 직책을 줬다. 그렇다면, 최득춘이 ‘군수 노릇’을 했다는 진술은 그만큼 최득춘의 활동이 눈에 띄게 왕성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민군이 완도를 점령한 것은 곧바로 재앙이 되었다. 9월 14일 완도를 점령한 인민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자 9월 30일에 후퇴를 개시했고, 경찰이 10월 1일에 본심을, 5일경에 각 심들을 수복했던 것이다. 약 15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의 인민군 점령은 나중에 완도에서 부역자 색출과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왜 인민군이 그저 섬마을에 불과한 완도까지 점령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위경량 또한 변변한 활동조차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다. 박상오는 현재 실종 처리되어 있는 위경량이 사실은 인민군 후퇴와 더불어 살해되었다고 증언한다. “별로 활동도 못하고 멀리 가도 못하고 중간에 실은 사살당했지. 시신도 못찾고. 거기서 죽은 줄은 알아도 시신을 어떻게 찾아낼꺼여.” 위경량은 그때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던, “시대를 잘못탄” “아까운 사람”이었다.

최득춘도 산속에 도피해서 7일 동안 숨어지내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와서 친척집에서 밥을 해달라고 해서 먹고 잡혀갔다. 최득춘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일가친척들이 모두 “영망”이 되었다. 그를 살린 것은 첫째 여동생 최완희(가명)였다. 고금지서 서장이 미모가 뛰어났던 그녀에게 오빠를 살리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피었고, 최완희가 오빠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최득춘은 최완희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동생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떨어졌다”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첫째 여동생은 자살을 기도했다가, 나중에 최득춘이 사업을 함께 하는 매제 박○○의 소첩으로 살았다.³⁹⁾ 둘째 여동생 최완주도 최득춘이 수배생활을 하는 동안 경찰에 끌려가 고난을 겪었다. 1950년 당시 16세였던 최완주는 최득춘이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 주면 머리에 총을 쏜다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당했고, 경찰이 실제로 바로 앞에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했다. “그때 죽을 뻔 했다.”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매도 많이 맞고 고춧가루를 얼굴에 뿌리는 고문도 당했다. 그래도 차마 오빠가 있는 곳을 말하지 못했고, 끝내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아마 나중에 최득춘이 돈을 좀 모으고 나서 둘째 여동생을 광주로 불러와 옆집에 살게 한 이유가 그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을지도 모

39) 이 증언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금지서 임시직원인 오승연이 최득춘을 풀어주었다는 혐의로 고문을 당한 것은 지서 서장이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는 술책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른다.

른다. 최득춘의 형은 일본 유학 출신으로 완도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고 나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올라가 옛장수를 하며 살았다. 최득춘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두 엄한 삶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렇지만 최득춘은 고금 지서 습격 사건 때와 유사하게 ‘말 재주’가 좋아서 나중에 지서 서장과 의형제를 맺었고, 서장의 딸을 잘 가르쳐서 웅변대회에 출전해 1등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⁴⁰⁾

하지만 최득춘은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에 곧 국군에 입대했다. 최민호는 최득춘이 광주 상무대에서 군복무를 했으며, 자주 휴가를 나올 때마다 만났다고 한다. 상무대 전투병과교육사령부는 한국전쟁 시기에 광주에서 창설되어 5개 병과(보병, 포병, 기계화, 공병, 화학)의 육군 전투교육을 담당했으며, 또한 상무대에는 헌병대 영창이 있었다.⁴¹⁾ 최민호에 따르면, 최득춘은 헌병은 아니었지만 정보계통이나 수사계통에 근무하고 있어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최완주도 최득춘이 군대에서 수사기관 비슷한 곳에서 일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최득춘이 좋은 자리에서 편히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아마 최득춘은 상무대의 헌병대 영창 소속으로 영창 감시병이나 군기문란자 조사병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최득춘이 어떻게 그런 보직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리하고 철두철미하게 일처리를 하는 최득춘을 상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배치했을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민호는 최득춘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결혼생활을 하며 사람이 변했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는 어쩌면 최득춘이 수사계통에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자신이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역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비극 이후의 비극

한국전쟁에서 완도의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위원회에 가담하며 좌익에 의한 수장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우익 경찰에 의해 가족들이 모두 고문을 당하거나 심한 고통을 겪

40) 『동아일보』는 완도에서 1949년 4월 9일에 반공웅변대회가, 1950년 3월 15일에 대한청년단 완도군단부 여성웅변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각각 4월 25일자, 3월 16일자). 기사에는 수상자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구술 증언의 내용과는 연도나 날짜가 부합하지 않는다.

41) 5·18 광주항쟁 시기에 상무대는 계엄사령부의 전남북 계엄분소로 사용되었으며, 상무대에 있는 헌병대 영창은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을 구금하고 고문과 구타를 자행한 공간이었다(정재호 외 2004, 72).

는 모습을 보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최득춘에게 5·18은 무엇이었을까? 계엄군이 학살을 자행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최철은 방위병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지 않은 채 시위에 참여했고, 이는 곧 탈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최득춘은 총을 들고 시민군의 편에 서려는 최철을 보며 자신의 젊은 날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최완주에 따르면, 최철은 방위로 입대했다가 5·18이 일어나자 집으로 왔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⁴²⁾ 최득춘은 “너는 죽어도 거기 가 있어라. 군대에 가 있어라. 여기는 오지 말고 군대에 가 있어라”라고 했지만, 최철은 가지 않았다. 최득춘은 군대에 가지 않는 아들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너는 그리 가야 한다.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최득춘의 성격상 최철은 아버지에게 잡히면 거의 죽게 생긴 형편이었는데도, 최철은 안 간다고 버텼다.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난 5월 26일 새벽은 월요일이었고, 그날이 최철에게는 군대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최득춘은 최철이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집에까지 피해를 볼까 무서워 [최철을] 몰아쳤다.” 최득춘은 연좌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최철을 강하게 키우려 했던 것도, 애시당초 자신의 과거 때문에 출세와 성공의 길이 막혀버린 아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최득춘은 “6·25가 안 났으면 아마 무엇을 [한 자리] 해 먹어도 해 먹었을 것”인데, 한국전쟁 때 전과자가 되어서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 써먹지를 못했다. 최완주는 “우리 오빠가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5·18에 대해서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⁴³⁾ “5·18 전쟁”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빠는 뒷일을 생각하는데, “애기들은 뒷일을 생각 안 하게 된다고요. 뒷일을 모르죠.” 요즘 아이들은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철이는 아버지에게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얘기만 하고 그랬다.

최철은 아버지의 폭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민군으로 남으려 했다. 최완주는 최철

42) 최철은 방위병이었지만 집에서 출퇴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완주도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추론해 보자면, 최철이 방위병으로 입대한 것은 냉동공 자격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972년 국가기능 검정시험에 합격한 기능공의 경우 현역 징집을 면제하고 국가가 지정한 주요 기간 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1976년에는 일반 국영기업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보충역 편입대상을 확대했다. 「현역 징집 면제」, 『경향신문』, 1972년 1월 24일, 7면; 「검정시 합격 기능공 등 보충역 편입대상 확대」, 『경향신문』, 1976년 7월 8일, 1면. 아마 최철은 냉동공으로서 관련 기업체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기업체의 기숙사에서 숙식을 했을 수도 있다.

43) 또한 최완주는 5·18에 대해 말하면서도 ‘피난’이란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총이 그때는 막 만발했어요”, “[친척 아이들]들이 우리 집으로 피난 오고”, “우리 아이들 셋 하고, 또 철이, 그렇게 방에 한 가득” 있었고, 그 방에 [한국전쟁 때처럼 총알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불을 갖다가 쌓아 놓고” 했다.

이 “아기가 순진하고 정말로 다른 것이 뭐 없었다”고 한다. “이 아기가 꺾어보면 참 순진해서 누구하고 말다툼 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도 못해요. 우리 애기를 하고도 꼭 한 형제 같이 그렇게 지냈지.” 평소에 최철은 자신에게 고모가 되는 최완주의 집에서 그녀의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곤 했으며 형제처럼 잘 지냈다. 말다툼하거나 싸우는 일이 없었다. 그런 최철이 5·18에서는 계엄군에 맞서 싸웠고 계속 싸울 결심이었다. 최철은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성품이 모나지 않고 온화한 편이었다.

계엄군에 대항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려 했던 최철에게 5·18은 무엇이었을까? 해방 이후 좌우대립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최득춘에게 시민들에 대한 계엄군의 과잉진압과 학살은 억압되었던 역사의 기억을 순식간에 회귀시켰을 것이다. 그에게 5·18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악무한의 선택을 반복했던 잊고 싶었던 젊은 날의 ‘지옥’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사독재의 정책과 명령에 자신을 적응시키며 살아온 아버지의 억압과 학대를 견뎌냈던 최철에게 5·18은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해방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 ‘해방의 기회’를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던 최철이 과연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 때문에, 아니면 우발적인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 최철은 친어머니의 영향으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증오를 남몰래 간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아버지에게 존경심을 가졌을리는 만무하며, 아버지의 가족에 깊은 정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해도 역시 분명한 ‘살해 동기’로는 부족하다. 5·18이 진압된 후 당시 최철과 함께 상무대에 구속되어 있던 허춘섭(23세, 무직)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긴바 있다.

군사재판을 받는 날이었다. 나는 조서에 도장도 지장도 찍지 않았는데 계엄이 해제될 기미가 보이자 재판을 서둘렀다. 담당 변호사도 군인이어서 변호해도 소용없었다. 재판장이 형을 구형할 때 책상, 의자 등을 던져버렸다. 방위병이었던 최철이라는 사람은 학운동에서 자기 부모를 죽였다고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같이 생활해보면 사형수들은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했다. 어머니가 계모라는 이유로 학대받아 원한에 차서 일가족을 살해했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을 아들인 그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것이었다. 그러나 군법 재판은 일심밖에 없어 그는 그대로 남원에 가서 사형당했다. 무고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 죽인 것이다. 나는 무기형을 받고 교도소로 넘어왔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1990, 428).

최완주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 현장 조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철이야, 철이야, 네가 진짜 그랬냐’ 하니깐, ‘고모, 나 안했다’ 고 그러니까. 지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뭐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돈을 오천 원을 주머니에다 던져줬어요. ‘철이야, 이거 갖고 가서 뭐 사먹어라’ 하고 주니까 필요 없다고, 돈이, 돈이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못 만났어요.

최완주에 따르면, 최철이 살인범으로 붙들린 이유는 정황 때문인 것 같다. 분명한 증거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길 건너 집에 사는 이웃사람이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다가 총소리가 나서 보니 누군가 방위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었다.⁴⁴⁾ 당시 상황에서 최철이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이웃사람은 곧 이사를 가버렸고, 나중에 진상규명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무엇이 진실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 사건 이후 최득춘의 여동생 최완주의 가족도 풍파를 겪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조사를 받으러 다 붙잡혀 가고,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얼마 되지도 않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최완주는 5·18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직도 심장이 요동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한다. 최득춘의 사촌누이인 최민선은 한국전쟁 때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부역 혐의로 우익 경찰에 의해 살해되는 아픔을 겪었다. 어두운 산속의 수많은 시체더미들을 뒤지며 남편이 입었던 옷가지를 떠올려 형체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찾아 헤메었던 기억을 마음 깊이 숨겨두고 있었다. 박상오는 소안도의 보도연맹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기막히게 우연한 인연으로 친한 친구의 선배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처음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아마 그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 모두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했다. 한국전쟁과 5·18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는 겹쳐지고 포개진다. 최득춘의 묘는 망월동에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

44) 그러나 탈영한 신분으로서 평상복으로 같이입지 않고 방위군복을 입고 범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예컨대 당시 방위병 신분이었던 이재춘(방위병, 21세)은 시내에 나갈 때는 사복을 입고 항쟁에 참여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1990, 494).

<참고문헌>

- 고금면지발간위원회, 『고금면지』, 2001.
- 국방부, 1985, 『광주사태의 실상』, 국방홍보관리소.
- 김승, 2003, “구한말 소안도 주민소요사태의 진상과 그 성격,” 『한국도서연구』 15권 2호, 한국도서학회.
- 김영택, 1990, 『5·18 광주민중항쟁』, 동아일보사.
- 김영택, 2010,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역사공간.
- 김인덕, 1997, “민족해방운동과 정남국,” 『사람』 12·13, 성균관대학교.
- 김정환, 2010, “5·18 광주항쟁에서 시민군의 주체성,” 『사회과학연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 나승만, 2004, 『일제하 소안도 민족해방운동가의 수용과 전승』,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 박찬승, 1993, “일제하 소안도의 항일민족운동,” 『도서문화』 제11집.
- 박찬승, 1994, “일제하 조약도의 항일민족운동,” 『도서문화』 제12집.
- 박찬승, 1995, “일제하 고금도의 항일민족운동,” 『도서문화』 제13집.
- 박찬승, 2001, “일제하 원도(體島)의 항일민족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 박찬승, 2010,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돌베개.
- 소안항일운동사료편찬위원회, 1990, 『소안항일운동사료집』,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 손형부, 1992, 『植民地時代 宋乃浩·琪浩 兄弟의 民族解放運動』, 國史編纂委員會.
- 송윤경, 2007, “소안도 항일운동사, 전설에서 역사로,” 『뉴스메이커』, 경향신문사.
- 윤종배, 1994, 『1920년대 所安島 민족 해방운동의 성격: 민요에 나타난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준, 1993, “所安島의 歷史·文化的 背景,” 『도서문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 임영상, 2009, 『부끄러운 탈출: 고교생 시민군의 5·18 회상기』, 푸른미디어.
- 정근식·김준, 1998, “어촌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연구: 원도 정도리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재호·이상호·이강복 공저, 2004, 『오월꽃 피고 지는 자리』, 전라도닷컴.
- 조경만, 1993, “원도 소안도지역의 사회문화적 성격 연구,” 『도서문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 지수걸, 1991, “日帝下 全南 莞島·海南地域의 農民組合運動 研究: ‘全南運動協議會’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49집, 역사교육연구회.
- 진살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a, “원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권.
- 진살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b, “원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권.
- 황석영, 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여순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Psychological Trauma)에 대한 소고(小考)

작성자 : 이 영 문(이음병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1. 여순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개요
2. 현대 역사와 대량학살 피해자 연구 현황
3. 정신건강의 문제성 범위
4.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건강 차원의 해석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6. 인간의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고통
7. 여순사건을 통한 트라우마의 재정의
8. 극한 트라우마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9. 트라우마 연구의 역사적 배경
10. 트라우마의 신경생리학
11.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외상 치유의 필요성
12. 여순사건, 다시 프로이트를 읽다
13. 에필로그 :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

1. 여순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개요

1) 역사적 사건

한 인간집단이 다른 인간집단을 죽이는 행위를 인간학살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때 그 역사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이후의 인간학살의 특성은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대단위로 커지고 있고, 희생자의 범위 또한 커지고 있으며, 학살에 사용된 기술이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

살의 동기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생기는 정신적 외상의 정도와 질병 양상 또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현대 사회의 사회적 사건들에 해석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제시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사건의 결과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한 범위와 정도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정신적 외상에 대한 인간반응을 유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치유방안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역사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신건강 해석의 부족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폭력, 왕따 현상,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사회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늘 반복적인 국가 및 매스컴들의 학교 관리책임의 변을 듣게 된다. 모든 학교에는 학원폭력 추방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이는 실종되고 만다. 결국 몇 명의 폭력 가해자만이 처벌되는 상황으로 끝나게 된다. 우리 내부에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다수의 안위를 지키려는 성향이 있다.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 당연히 가장 힘없고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가 쏠리게 된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86년에 뉴욕시 페리유람선상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도 똑같은 맥락에서 처리되었다. 당시 43세의 쿠바난민 출신의 홈리스 환자는 환청에 의해 순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여 여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며칠전 이미 이 환자는 뉴욕시립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입원실 부족으로 인해 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보다는 홈리스 상태로 몇 년을 지내는 동안 의료보험은 상실되었고 정신장애에 대한 평가조차 받을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은 우선 환자 자체와 시립병원의 직원교육 수준 문제로 초점이 모아졌다. 또한 이 사건 이후 갑자기 홈리스들의 응급실 방문이 50%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뉴욕 외곽의 정신병원에 입원환자 또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과연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잘 알려진 매트릭스 모형에 따라 이를 대입시켜보자.

표 1. New York 총기 난사 사건의 이해

Dimension	(A) Input Phase	(B) Process Phase	(C) Outcome Phase
1) Country/ Regional Level	총기공급의 문제점 지역분포에 따르지 않 은 지나친 탈수용화	홀리스 정신건강정책의 부재	관료주의 실적주의
2) Local Level	입원병상의 부족	1)시립병원 직원의 응급 치료서비스 부재 2) 표준 치료의 부족	안이한 응급구조체 계 운영
3) Patient Level	무보험	평가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 접근부재	환청에 의한 총기 난사

상기 표 1에 따라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줄이기 위해 뉴욕시는 입원병상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process phase에 초점을 두어, 뉴욕시 정신병원 전체 스텝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과연 이 같은 조치는 뉴욕시 정신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인가? 우선 무리한 입원병상 제한으로 인해 적절한 병상회전율이 유지되었는가 하는 지역 수준에서의 input phase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수준에 있어 몇 년째 방치된 홀리스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수준의 문제와 지역정신보건의 입원병상 문제를 덮어둔 채 매우 제한적인 조치만으로 끝나고 환자 및 보호자 수준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사고는 반복되었다. 결국 이 같은 미봉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3) 여순사건의 사회학적 의미

제주4.3항쟁이나 광주5.18민주화항쟁 등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중폭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일련의 민족사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치적 사과와 경제적 보상,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의 삶의 질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내부 환기를 통한 심리적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순사건은 전혀 경제적 보상과 물리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 대한 개요는 1948년의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려고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은 잘 낫지 않는다. 여순사건의 1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오늘도 스스로 피해자임을 밝히지 않는다. 아무런 보상도 없거니와 낙인효과가 생길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4) 심리적 외상과 PTSD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은 그 자체만으로도 희생자들에게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외상 사건 이후에 여전히 그 사건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상황들과 이 사건을 대하는 주변인 및 사회적 반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유발되기도 한다. 때로는 외상 사건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경험이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심리 외상의 희생자들의 예후는 단지 외상 사건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상 전의 위험인자와 외상 후의 조치들, 즉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피해자를 처음 대하는 치료자 및 전문가의 태도 및 접근방법, 사회적 지지의 정도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외상 후에 추가되는 이차적 외상의 경험은 희생자들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는 정신질환의 한 특수한 형태가 정신의학 내부의 중요한 진단의 하나로 정식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을 전후해서 이다. 비록 1980년이 되어서야 중요한 정신질환의 하나로 트라우마 연관 진단이 나타나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TSD 진단 이전에 존재하였던 트라우마 증후군으로는 ‘전쟁 피로증’, ‘생존자 증후군’, ‘전쟁신경증’, ‘일과성 상황 장애’ 등으로 불리는 일련의 질환도 존재하였다.

최근에는 아동폭력 관련 질환, 여성의 성폭력 관련, 자동차 사고, 사회적 재난 등과 연관된 새로운 형태의 트라우마 관련 질환들의 발병율과 재발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들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¹⁾.

1) 일반적인 PTSD 유병률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사고 12%, 전쟁 생존 병사 15%, 성폭행 피해자 69%, 강간피해 76%, 정치적 망명자와 난민 50%, 고문피해자 70% 등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출처 : 518 기념재단 :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 조사연구보고서, 2006

2. 현대 역사와 대량학살 피해자 연구 현황

한국 사회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인한 고문피해는 1970년대부터 주요 성명서와 회고록, 사례집과 자료집을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르러서는 고문 근절과 고문 후유증 해결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시도되었다. 최근에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문피해사례가 보도되는 등 고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량 민간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대량학살 피해자 연구

	조사 대상자수	PTSD 진단 가능군 (PSS 사용)	비고
4.3 제주항쟁 유가족	70명	68.6%	이 중 약 53.3%가 우울증 동반
5·18 광주민주항쟁 유가족	291명	41.6%	인터뷰 version
여순사건 피해자 유가족	150명	평균 점수 35.8	비고 15점 이상 질환군 *30점 이상을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

이 연구들은 모두 양적 연구에 집중되었다. 기존 패널조사와 같은 방법론의 도입없이 단순 현황 파악에만 치우친 면이 많다. 예를 들어 민간인 학살을 목격한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 65세-70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차를 두고 몇 %가 PTSD인가의 중요성보다는 PTSD를 매개로 어떤 변화가 개인 혹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표 3. 정신건강 체크를 위한 설문지 구성안

기본 측정도구	항목 구분	비고
SSI(자살생각척도)	21문항 version	신뢰도 계수 0.87
PSS(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척도)	17문항 version	제주 4.3 연구 사용버전
BDI(우울증 척도)	21문항 version	자가 척도
BAI(불안척도)	19문항	자가 척도

아직까지 제주4·3항쟁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건강 실태에 관한 규모 있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김문두 교수가 발표한 “4·3후유

장애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조사보고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70명 중 68.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겪고 있고, 53.3%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다.²⁾ 이는 2006년 실시된 광주 5·18 유공자와 가족의 PTSD 장애율 41.6%라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이다. 또 이 조사에서 PTSD 장애를 겪는 4·3피해자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이고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어 적절한 보호와 지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신건강의 문제성 범위

1) 역학연구 결과

5년마다 행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나타난 정신건강의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field 연구결과를 2012년 2월에 발표하고 4월에 최종 version을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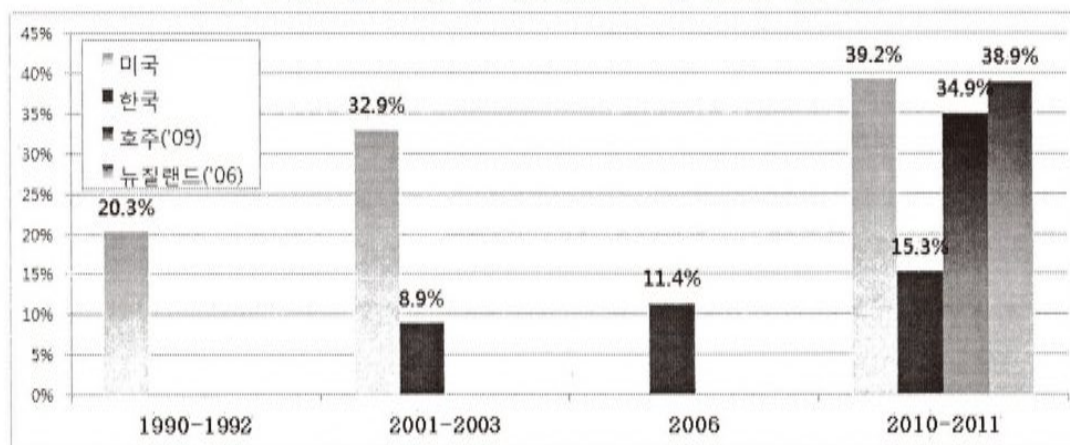
- 주요 정신질환별 평생 유병률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13.4%, 불안장애가 8.7%, 기분장애가 7.5%(주요우울장애 6.7%), 니코틴 사용장애가 7.2%, 신체형장애가 1.5%, 정신병적 장애가 0.6% 순서로 나타났다.
- 알코올 사용장애가 가장 흔했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가, 여성에서는 불안장애가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표준인구로 삼고, 유병률 수치를 이용하여 국내 추정 정신질환자수를 추산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1년 사이, 만 18세 이상 만 74세 이하에서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남자 2,071,597명, 여자 2,802,958명으로 총 4,873,160 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알코올,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경우 남자 1,098,847명, 여자 2,585,955명, 전체 3,681,943명으로 추산된다.

2) 김문두, 「4·3후유장애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4.3트라우마 그 치유의 모색』, 제주4·3 63주년 기념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2011. 4. 29.~30. 제주4·3평화재단

2)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심한편이라, 실제 질병빈도에 따라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지역사회 일반성인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7.0%이었다.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15.3%만이 의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기타 정신건강전문가를 한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정신질환 이환자 중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비교



*호주, 뉴질랜드: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단, 2001년의 경우 기분장애에는 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만이 포함됨

*미국 :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2010)

2006년에 정신장애 이환자 중 의료서비스이용률이 11.4%였던 것에 비하면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한 비율은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11.9%에 지나지 않았다. 정신의료 서비스 사용률은 2001년 8.7%, 2006년 11.4%, 2011년 15.3%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3) 정신건강의 문제성 : 자살문제

- 급격한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의 결여

뒤르케임은 과도한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가 자살률을 높인다고 주장하였고, 이기주의는 개인이 타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가는 현대 사회의 일

반적인 상태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한국 문화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라는 서구의 가치들에 의해 변환을 겪고 있다. 이 변환은 표면적인 개인과 사회의 유대를 깨뜨렸다는 것이고 세계시장과의 경쟁에 과도하게 노출된 개인은 결속력이 강한 전통적 공동체와 가족관계를 소홀하게 만들었다. 개인과 사회의 강한 유대가 깨어질 때 무의미한 개인은 이기주의적 자살의 충동에 노출되며 또한 노년층에게 사회변환의 속도가 너무 빨라 개인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때 경제적 이유와 함께 문화의 변화는 그들의 자기 보존성 관리에 위협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급격하게 진행된 핵가족화, 도시화로 대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의 붕괴, 이혼율 증가, 개인주의의 심화, 정보화 등에 따른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빠른 이유는 한국인들이 각종 위기와 기회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배제와 차별에 대해 개인적인 역동적 대응력이 크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노동조합의 결성, 높은 임금 인상률과 높은 생산성 향상률, 인구의 수도권 집중, 청년 인재의 수도권 대학집중 현상 등이 그 예로 나타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율, 청년 실업률, 대학진학률, 특목고, 사교육, 유학열풍 등은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의 대표적인 징표들이다. 한국은 시장, 자원, 에너지 등의 해외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제정치와 경제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급속한 도시화는 밀집사회를 낳고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고, 고학력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정보화의 변화가 또한 빠르다.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외부환경과 시스템(법과 제도) 및 문화와 리더십의 충돌이 격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 시스템, 리더십의 부조화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모순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의 스펙트럼은 매우 크다. 가족 영역의 변화는 그 중 가장 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핵가족은 1970년 71.5%에서 2005년 82.7%로 증가하였다. 3대가족 등의 직계가족 비중은 동일 기간 중에 18.8%에서 6.9%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 편, 현재의 노년 세대는 전통적 가족관계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가족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왔으며 전통적 가족관계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자식세대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는 이타적 자살에 대한 동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봉양과 효라는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짐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여명의 증가와 더불어 닦쳐온 경제적 취약성과 전통가치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철학의 부재, 부풀어 오른 성과주의, 가족관계의 변화 등은 노년 세대의 자살에 대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4)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 요약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 연금제정의 고갈, 건강보험제정의 위기 등과 같이 사회정책과 관련된 국가재정 지출부문에서는 부정적인 현상과 예측이 매일 나오고 있다. 또한 소득양극화, 사회계층의 고착화와 가난의 대물림, 사회적 배제의 일상화(학원폭력, 자정폭력, 왕따 현상 등), 근로빈곤층의 양산, 가족의 해체,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이 새로운 사회위기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황폐해지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산발적인 복지정책의 난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통합되지 못한 국가 재정구조는 각 부처의 이익에 부합되는 혹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문제는 많으나 이를 산발적인 사안으로 처리한 결과, 핵심 원인에 대한 규명보다는 대응방식에 주목하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발상과 전문가들의 해법은 해법만이 끼어 맞추기 식의 땀질용 보고서만이 남고 있다. 즉, 해결책은 매번 페이지 상에 나와 있으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탁상공론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4.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건강 차원의 해석

트라우마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반응은 매우 중요한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하게, 세상

에 대처하는 태도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피해자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경생리학적인 새로운 지견, 새로운 형태의 치료기법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가 실제로 우리의 삶 주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에, 트라우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넓혀가고 효율적인 치료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 주요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크게 나누었을 때 3가지 주요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충격적인 외상 기억의 반복적인 재경험(re-experience)이다.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마치 현재에서도 그 외상사건이 계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하철을 편하게 타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재경험의 증상 때문이다. 이러한 외상 기억의 재경험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어떤 이미지나 잔상의 형태로 일어나는 플래시백(flashback)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반복적인 악몽으로 거침없이 의식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대개 이러한 재경험은 원래의 외상 기억과 비슷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 비오는 날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비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 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그 때 폭행을 한 가해자와 비슷한 옷을 입을 남자만 보아도 공포에 질리게 된다. 때로는 외상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비슷한 곳에만 가도 그 때의 기억의 파편이 아주 생생하게 떠올라 괴로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외상 기억의 재경험은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반복하여 유발하기 때문에 생존자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공포심, 무력감, 분노감에 반복하여 시달리게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두 번째 증상인 회피(avoidance)와 둔감화(numbness)라

는 증상이다. 압도적인 위협에 대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대개 실제 어떤 저항을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차라리 의식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방어를 하게 된다.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꿈을 꾸듯이 멍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 감각이 둔해지거나 상실되고, 시간 감각마저 변형이 된다. 그래서 마치 트라우마가 자신에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현실을 생생한 실재가 아니라 마치 아련한 꿈같이 경험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의 몸에서 의식이 옆으로 분리되어 나와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몸이 느끼는 고통, 놀람, 두려움을 직접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분리된 의식은 아무 것도 느끼지 않고 그저 멍하니 외상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게 된다. 때로는 아예 외상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을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둔감화 증상은 해리라고 하는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리와 같은 의식의 변형 상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무력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 매커니즘이다. 완전히 의식을 잃거나 미쳐버리게 되기 직전에 자동적으로 의식을 변형하여 주변 자극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적응적인 방어 매커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트라우마의 위협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이러한 의식의 변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 생기게 된다. 주변의 자극에 대해 되도록이면 정서적 동요를 안 느끼려 하고, 외상과 연관된 어떠한 기억도 하지 않기 위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한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삶의 주도성, 적극성, 계획성, 의미부여 같은 것들은 다 포기하게 되고, 그저 최소화된 삶을 영위하려 하게 된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점차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회피 증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세 번째 증상은 과도한 각성상태(hyper-arousal state)와 연관된 증상들이다. 충격적 사건 이후 언제 또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늘 위협에 대한 경계상태가 지속된다.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예상하지 못한 자극에 대해 심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다보니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집중이 안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매우 커진다. 이러한 과도한 각성상태와 연관된 증상들은 대부분의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협에 처했거나 놀랐거나 혹

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외부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그러다가 위험이 사라지거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활성화된 교감신경계가 다시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교감신경계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과도한 각성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 되다 보면 스트레스에 점점 취약해져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며, 때로는 심한 분노 폭발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도한 각성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만성화 되었을 때 위의 회피증상과 같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된다.

2) 사회적 결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은 위에서 말한 극단적인 흥분 상태의 증상들(hyperarousal state)과 극단적인 회피와 둔감 상태(hypoarousal state)의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극단적 상태로의 전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수 년 동안 계속 되기도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 처리하지도 못하고 현실에 집중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미래에 대한 준비나 계획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들은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잘 믿지도 못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주의 집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쉽게 지치게 되어 결국 점점 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조절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점점 더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우울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폭식, 등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심한 자살사고를 갖게 되기도 하고 결국 사회생활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다양한 심리적 외상으로 생기는 증상들은 삶의 질을 한없이 떨어뜨리고 인간을 마치 영혼이 없는 꼭두각시(walking zombee) 같은 존재로 만든다. 삶에 침입(intrusion)하는 공포성 기억이나 이로 인한 심신의 과민화(hypersensitivity), 그리고 공포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요소를 피하기 위한 무감각과 무기력 등은 참기 어려운 고통

이고 이 때문에 하루하루 의미도 생동감도 없는 좀비와 같은 나날을 보낸다.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매사에 자신이 없으니 무엇을 해 볼 의욕이 나지 않는다. 물론 대인관계는 어렵게 제한되고 외상 이전에 즐겼던 일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나날이 지루하기 한이 없는 권태의 지속이다.

6. 인간의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고통

1) 인간의 기억

인간의 기억시스템은 내재적 기억과 외재적 기억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기억이라는 것은 흔히 3세 전의 기억장치로써 생후 바로 활성화되어 발달하는 기억 시스템을 말한다. 주로 정서적 기억, 신체 감각적 기억, 행동기억 등과 같은 비언어적 기억이 해당된다. 이러한 내재적 기억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기억들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뚜렷하지 않다. 이와 같은 내재적 기억은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일생을 통해 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아기 때 겪는 엄마와 아기의 애착반응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외현적 기억시스템이 있다. 약 3세 이후 언어적 도구를 습득한 이후에 발달되는 이 시스템은 말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억이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 단어의 의미 등과 같은 기억이 여기에 속한다. 이 외현적 기억시스템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가능하다.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평가하고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뇌안은 이와 같은 내재적 기억과 외현적 기억 시스템이 서로 혼재되어 존재한다.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적절하게 기능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는 경험과 함께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게 된다.

2)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의 왜곡

압도적인 트라우마가 갑자기 몰아쳤을 때, 특히 그 당시 나이가 3세 이전의 나이로 언어적 도구가 없는 상태일 때 겪게 되는 트라우마는 내재적 기억으로 남게 된다. 뇌

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마비가 오게 되고 온통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미지가 기억된 채 강렬한 신체감과 고통으로 남게 된다. 정서적 교감 또한 산산히 부서진 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으로 남지 않게 된다.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는 것은 이같은 기억들이 시간 개념 없이 단편적인 감각들로 산산히 부서진 채 내재적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적으로 이 고통을 전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외현화 되지 못한 내재적 기억의 고통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고통을 몰아간다.

7. 여순사건을 통한 트라우마의 재정의

여순사건과 같은 대량학살,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예측할 수 없던 상황에서의 사회적 사건은 일생을 두고 큰 공포 반응을 희생자들에게 남긴다. 일반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건은 특별하다. 사건이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적응 능력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이다.

트라우마는 대개 저항을 할 수도 없고 도망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꿈쩍 못하고 생명과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게 되는 사건이다. 때문에 보통의 인간은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통제력 상실, 붕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

여순사건에서의 학살을 목격한 경우, 혹은 생존한 경우, 이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정신의학 진단분류(미국 정신의학 분류 DSM-IV)에서는, 트라우마를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범주를 넘어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전쟁, 강간, 성폭력, 신체적 폭력, 강도, 재난, 재해, 유괴, 인질, 테러공격, 교통사고, 생명이 위협한 질병, 죽음이나 심한 상처의 목격,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트라우마는 매우 극심한 전쟁과 같은 상황의 생명 위협 트라우마로 평가될 수 있다.

8. 극한 트라우마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일부 전문가들은 사건의 끔찍함이나 두려움의 정도로 트라우마를 정의하지 말고, 그 사건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 혹은 사건이 개인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트라우마를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여순사건에 대입시켜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외상은 대부분이 학살에 의한 것이지만, 각 개인에 따라 그 기억을 무의식 속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라우마 정도가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에게 동일한 국가폭력이 가해진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심리적 방어 정도를 굳이 구분하는 것은 국가폭력 정도를 개인의 심리적 역량에 따라 축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주로 단일 사건(single event)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순사건 이후 피해자 각 개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사건까지도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발달학적 트라우마(Developmental trauma disorder)의 진단명이 붙는 경우인데, 큰 트라우마 유무와 상관없이 발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양육자의 방임, 무시, 강압적인 훈육, 학대와 같은 대인관계적 트라우마(interpersonal trauma)가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평생의 기억을 좌우하는 트라우마, 일명 빅 트라우마(T Trauma³⁾)가 있었을 경우, 발달학적 트라우마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의 존재 유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big T 트라우마란 강간, 아동기의 성폭행 혹은 신체적 학대, 재난, 사고, 상실과 같이 한 개인에게 극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말하는데, 개인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강렬한 위협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악몽, 플래시백, 불안, 공포, 두려움, 집과 직장에서의 부적응과 같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일으킨다.

9. 트라우마 연구의 역사적 배경

트라우마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사건을 증언함으로써 인간의 취약성과 나약함, 그리고 때로는 인간본성의 악의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제 3자, 중립자는 대부분 이러한 트라우마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역사 속에서 트라우마의 연구는 수면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왔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신경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Jean Martin Charcot)은 그의 유명한 화요강의를 통해 히스테리아 환자의 마비 증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히스테리아 증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분류하였다. 샤르코 이전 시대에는 히스테리아 증상을 보이는 여자들은 피병을 부리는 것, 혹은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치료 또한 대개는 최면술사나 마술사, 혹은 종교적인 치료자들이 맡았다. 과학적 계몽주의자였던 샤르코는 종교적인 개념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일반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령에 홀린 상태, 종교적인 황홀경, 주술, 등과 같은 현상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히스테리아 증상의 원인에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샤르코의 제자였던 자네는 심리적 외상 사건으로 인한 압도적인 정서적 반응(vehement emotion)이 의식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것이 히스테리아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의식의 변형을 해리(dissociation)라고 하였다. 그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지 못하고, 강한 정서적 경험, 신체적 고통, 혹은 신체감각으로 단지 반복하여 재경험할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트라우마의 기억이 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리된 이 트라우마의 기억 파편(fragmented memory)이 통합되지 않는 한 그들의 인간적인 삶이나 기능이 발달하는데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프로이트 역시 히스테리아 환자들의 증상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히스테리아 환자들 이 트라우마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는 1896년 18명의 히스테리아 환자의 사례 연구를 토대로 히스테리아의 원인론을 발표하면서 히스테리아에 관한 모든 사례의 근원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아동기 성적 경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으로 인한 외상 신경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찰스 마이어스(Charles Myers)는 전쟁 공포증에 시달리는 군인들이 보이는 증상에 대해 “Shell shock”이라고 명명을 하였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이브럼 카디너(Abram Kardiner)는 “The Traumatic neurosis of War”라는 저서에서 전쟁의 참혹함이 인간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발표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전쟁 신경증의 개념을 상세히 소개하는데, 많은 전쟁 신경증 환자들이 전쟁터에서 떠나고 난 뒤에도 마치 원래의 트라우마 상황에 놓인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전쟁 신경증에 대한 이러한 의학적 관심 역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바로 사라져갔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베트남 전쟁의 참전용사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의 조직적인 노력에 의해 전쟁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더 정확히 알리려 위해, 전쟁의 후유증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규모의 연구를 정신의학자들에게 의뢰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들이 가족과 잘 지내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결혼하는 비율은 낮았고, 이혼하는 비율은 높았으며,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으며,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마침내 베트남 전쟁이 남긴 후유증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 결과에 자극받은 미국 정신의학회는 1980년 처음으로 전쟁 신경증의 실체를 인정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새로운 진단명을 붙여주게 되었다.

그 이후 강간,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보이는 증상들이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같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근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와 치료가 다시 많은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여기에

에착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조명, 신경생리학의 발달, 새로운 치료기법의 개발,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10. 트라우마의 신경생리학

1) 내재적 기억과 외현적 기억

우리 인간의 기억 시스템은 내재적 기억(implicit memory)과 외현적 기억(explicit memory)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억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다.

내재적 기억(implicit memory)은 생후에 바로 활성화되어 발달하는 기억 시스템으로 주로 편도체(amygdala)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으며, 정서적 기억, 신체감각적 기억, 행동기억, 등과 같은 비언어적 기억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내재적 기억 시스템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잘 안되며, 언제 어디서 경험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 이 내재적 기억 시스템은 비록 의식적으로 자각을 못하고 논리적인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지만, 일생을 통해 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 그리고 신념이나 가치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외현적 기억(explicit memory)은 약 3세 이후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발달하는 기억 시스템으로 주로 해마(hippocampus)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 말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억(narrative memory),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 단어의 의미에 대한 기억, 등과 같이 주로 언어적 기억이 여기에 속한다. 외현적 기억 시스템에는 시간 개념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가능 합니다. 또한 외현적 기억 시스템에는 경험을 평가하고 분류하고 사건 전후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 뇌 안에서 이러한 내재적 기억 시스템과 외현적 기억 시스템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적절히 할 때,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즉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입력되는 정보는 위의 두 가지 기억 처리 시스템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정서적 기억이나 신체감각의 기억이 이야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2) 여순사건의 트라우마

그런데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훨씬 더 뛰어넘는 압도적인 트라우마의 경험은 이러한 뇌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마비를 일으켜, 언어로 된 일상의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되는 해마의 기능을 억제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미지로 기억을 저장하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 트라우마의 기억은 주로 우측뇌의 편도체에 내재적 기억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즉 트라우마의 기억은 강렬한 신체감각들과 이미지, 그리고 강렬한 정서의 상태로 조각조각 분리가 되어, 통합적인 이야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저장이 되는 것이다. 트라우마 기억이 시간이 지나가도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내재적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렬한 감정으로 느껴지는 트라우마의 기억을 이야기 기억으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1.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외상 치유의 필요성⁴⁾

국가폭력의 대표적 형태로서 고문은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다수 연구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은 개인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피해자에게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후유증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대표적이며, 이는 생명을 위협당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 밖에도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후유증은 심각해지며 자살,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과 같은 이차

4) 임채도 : 4.3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방안,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2012

적 피해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해체,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게 한다, 이러한 정신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은 한 개인에게 “영구적인 내적 폭력”으로 작용하여 고문과 같은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사건 당시의 경험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고 악몽을 꾸며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나 우리 사회가 이런 심리적 위급성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폭로, 모임 결성, 소송제기 등의 과정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존재와 고통들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 참여정부에서 과거청산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들의 결정과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았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배상금과 보상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금전적·물질적 지원에 치중되었고, 정신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을 치유하는 의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당사자들과 가족,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알려져 왔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피해자, 가족 및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⁵⁾에서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PTSD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피해자 가족들도 10명 중 3명꼴로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있어 국가폭력의 내용은 고문 및 불법 구금 등으로 만성적인 피해의식이 상당기간 존속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로 인해 개인의 삶이 왜곡되고 불행이 지속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주위 가족들이 피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특징이 있었다.

2007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 유족 후유증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전남대심리건강연구소,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 2007.

실태조사⁶⁾를 시행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중 다수가 고문, 수감, 장기간 수배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불안, 수면장애, 악몽, 외상 재경험, 회피 등이 수반되는 PTSD와 우울장애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매우 심각한 후유증으로는 고립 경향을 보고하면서 피해자들은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림으로써 사회로부터 위축되고 고립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다고 하였다.

2011년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폭력의 가장 극심한 형태인 고문피해자 인권실태조사⁷⁾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여러 상황에서 인간성과 정체성을 유린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심리적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213명 중 163명(76.5%)에서 PTSD를 확인할 수 있었다. PTSD 외에도 심리적 고통을 신체적 증상으로 지각하는 신체화증상(43.2%), 대인관계적응문제(27.7%), 우울(25.4%), 불안(31.9%), 적대감(27.7%)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증상들은 국가폭력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20~30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높은 강도의 신체적 고문을 경험하였거나 사건 이후 사회적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24.4%에 달했는데, 이는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수준이 '하'인 계층의 자살시도율 10.4%에 비하면 2.4배 높은 수치이다. 정신질환 유병률을 보면 우울증은 22.8%로 우울장애 평생 전체유병률에 비해 약 4배정도 많았고, 불안장애는 17.9%로 불안장애 평생 전체유병률보다 2.8배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높은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빈번한 자살 시도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치료 개입의 위급성과 절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피해 경험이 가족에게로 전달되는 전

6)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 유족 후유증 실태조사』, 2007.

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의학연구소 (<http://www.imhr.or.kr>) 『고문피해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1

이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또한 상당히 높은 비율로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이 나타났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과 관련하여 취조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목격하거나, 보안관찰을 겪었으며,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주변사람들과 친인척의 외면과 배척, 국가나 사회의 지원 부재 등 사회적 지지부재의 고통을 겪었다. 피해당사자에 대한 지원조차 부재한 환경에서 특히 가족으로서 겪은 특수한 피해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지지받은 경험은 더욱이 부족했을 것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관련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 사회적 지지 부재, 피해당사자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의 악순환 경험을 매우 고통스럽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역시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은 국가기관의 재조사를 통한 피해 사실의 인정이나 법원 재판 결과 국가폭력을 인정받은 사실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즉 과거사 관련 국가기관의 재조사 결과 진실이 규명되거나 재판을 거쳐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여러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이는 국가구제조치를 통한 진실 규명이나 법적 결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배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정신 심리적 후유증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조사 후 배상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피해자가 사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나 법적 구제조치 이외에 심리 치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2. 여순사건, 다시 프로이트를 읽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외상성 신경증의 근원은 그 외상을 초래했던 재해의 순간이 무의식에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이 환자들에게 외상의 무의식적 저항이 그대로 눌러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겪었던 외상과 유사한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급격하

게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다시 말해 외상을 입었던 상황으로 마음이 되돌아가게 되고 그 당시의 기억에 의존해 신체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짧은 시간에 겪은 심적생활의 자극이 너무도 큰 나머지,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 충격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불리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 또한 무의식의 심리적 부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한 많은 영화들 속에 그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PTSD의 주요한 증상은 심적 외상을 몇 번이고 떠올리며 반복해서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 결과 심적 외상이 떠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억 상실이나 한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전쟁 증후군을 겪는 환자들에게 불면과 더불어 공포반응, 불면이 동반되는 것은 매우 흔한 PTSD의 증상이 된다.

이번 조사에서 직접적인 증상을 의사에 의해 평가하기는 방법론의 한계가 있었다. 다만, 간접적으로 측정한 자살생각 척도, 우울증 척도와 불안감 척도, 자기 존중감 등은 구체적인 피해자들이 존재불안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전체 150명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일반적 정신건강 상태(N=150)

	평균 점수	결과 판정
SSI(자살생각 척도)	17,9	일반적인 결과와 유사
PSS(외상후 스트레스 척도)	35,8	매우 높은 점수
BDI(우울증 자가 척도)	32,8	극심한 우울상태
BAI(불안증 자가 척도)	31,1	심한 불안 상태

13. 에필로그 :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 : Safe Environment와 Safe Milieu의 차이

안전한 생활환경이 안정된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 앞선 환경의 개념은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진행된 안전감이다. 자유 공간속에서의 불확실성과 모순성. 이것은 인간에게 하등의 자유를 주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인간 성숙을 전제로 한다. 안전한 환경 속에 있다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그것을 정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 성숙이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지닌다. 안정된 심리적 환경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정신건강의 현상이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치료공동체 개념은 이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한다. 공동체내부의 치료과정에 대한 합의나, 원칙들을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고유한 판단을 적극 존중하지만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최소한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안정된 심리적 환경의 구축에 있다. 안전한 공간만을 향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신보건현장을 포함한 인간 조직은 모두 안전한 공간만들기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사람이 물리는 것이 안전한 공간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의 추구형태이다. 치료공동체는 이와 같은 권력의 구성을 뒤바꾸어 놓는다. 모두가 권력이자, 또한 모두가 권력의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소유하려고 노력한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은 좋은 치료환경이 되고 그곳에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단순한 치료센터가 아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치유와 성찰이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1980년대 초반 지역의 야당정치와 공안사건 : 광주의 '햇불회'를 중심으로*

작성자 : 정 호 기(광운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 II. 연구의 배경과 대상 그리고 방법
- III. 햇불회의 재구성과 사법부의 낙인
- IV. 죽음과 고통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분열
- V. 맺음말

I. 머 리 말

1980년대 초반은 한국에서 정치·사회적 격변기였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과 조치 그리고 공안기구를 기반으로 1960~70년대를 집권했던 박정희시대가 마감하고, 권위주의 체제가 이완되고 있었다. 이런 변화의 음지에서 신군부는 지배의 연장을 기도했다. 마침내 '하나회'를 주축으로 했던 신군부가 '12·12'와 '5·17'사건을 통해 국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주요 거점과 기관에 군인을 배치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은 연행·구금·수배 상태에 있었고, 민주화와 자유화의 열망은 금지되었다. 이에 관한 진상들은 수차례 공론화되었으나, 핵심 쟁점들의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해소되지 않았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10).

5·18민중항쟁(이하 5·18)은 이와 같은 신군부의 집권 계획과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재 강화를 중단시키려 했던 시민의 마지막 항거였다. 5·18의 진압은 신군부가 국가권력

* 이 논문은 2012년도 5·18기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을 논평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연구 지원 및 자료 수집을 도와주신 주장립, 김점욱, 정호문, 김결, 서의환 님에게 감사드린다. 심사위원님들이 보내주신 논평의 일부는 지면의 제한으로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놓았다.

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미했다. 5·18의 주요 현장이었던 광주·전남의 시민사회는 초토화되어 있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5·18 참여자들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수감 또는 도피 중이었다. 당시 광주·전남에서는 5·18 피해자와 관련자의 일부 가족들만 사회운동의 명맥을 잇고 있었다(나간채, 2001). 김의기(1908. 5. 30.), 김종태(1980. 6. 9.), 김태훈(1981. 5. 27.) 등이 목숨을 던져 5·18의 진상규명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은 정부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군부는 정체(政體)를 정당화하고, 5·18의 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들의 분출 및 활성화를 억제할 방침을 강구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197). 모든 정치 활동은 5·17 비상계엄 선포로 중지되어 있었다. 신군부는 지연되었던 집권 시나리오의 실행을 속개했다. 5월 31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했던 것이다. 국보위는 중앙정보부장서리와 국군보안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던 전두환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추가로 맡으면서 사실상 ‘군사혁명위원회’와 같이 기능했다. 전두환은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자, 유신헌법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개최하여 15일 만인 9월 1일에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신군부는 국보위 설치에서 대통령 취임까지의 기간에 집권의 필요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5·18이 한창이던 5월 22일에 계엄사령부가 김대중 등에 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7월에 4일에 김대중을 비롯하여 37명을 내란음모, 계엄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고 발표한 것,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의 전모를 공개했던 것은 그 활동의 정점이었다(이만열, 2000: 136~137). 군사재판부의 첫 공판은 8월 13일에 열렸고, 첫 판결은 9월 17일에 있었다. 이후 1981년 1월 23일 대법원 판결까지 김대중은 계속 사형을 언도받았다.¹⁾

전남도청의 시민군이 진압된 광주에서는 국가폭력 제2막이 전개되었다. 계엄당국은 5·18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 및 추정되는 시민과 재야인사 그리고 학생들을 체포했다. 이를 겨우 모면했던 사람들에게는 수배령이 내려졌다.²⁾ 폭력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상무대에 설치된 특별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유신

1) 김대중은 사형이 선고된 직후에 장관회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전두환이 새로운 헌법에 의거하여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했던 1주년을 기념하여 1982년 3월 2일에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되었다. 김대중은 1982년 12월 23일에 신병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미국으로 강제 출국되었다(이영석, 1987: 438; 김대중, 2010).

2) 5·18 관련 마지막 수배령은 1982년 4월 5일에 내려졌다. 윤한봉, 심재권, 장기표, 박계동, 박관현, 최운용, 박우섭, 소준섭, 최혜정으로 총 9명이었다.

체제에서도 어렵사리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마저 구속되었거나 도피하는 상황이었어서 시민의 침묵은 더 깊을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이른바 공안사건들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무림사건(1980. 12.)’, ‘학림사건(1981. 5.)’, ‘아람회 사건(1981. 7.)’, ‘부림 사건(1981. 9.)’, ‘햇불회 사건(1982. 3.)’, ‘오송회 사건(1982. 11.)’ 등이 대표적이었다.³⁾ 이 사건들의 조사 주체는 다양한 기관들로 이루어진 광의의 공안당국이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활약했다(한홍구, 2011: 67). 또한 북한과의 연계성이 보다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던 간첩(단)사건들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긴장과 경색을 고조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이었다. 유사한 성격의 사건들이 거의 동시공간에 전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시민사회의 반응과 대응은 미약했다.

2000년대에 들어 과거사 청산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위 사건들은 대체로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되었다.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법부에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 더 나아가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활동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는 민주화운동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피해로 재평가되었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 ‘햇불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었다. 즉 햇불회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매우 소극적·피동적이었고, 과거사 청산 작업에서는 진상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⁴⁾ 햇불회 사건은 시민사회에 심대한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⁵⁾을 당했던 사건으로 조금 알려졌으나, 규명되지 않은 과거사로 남았다. 그래서 이 글은 첫째, 1980년대 초반기에 광주에서 결성되었던 햇불회의 활동과 성격을 야당정치와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둘째, 이 시기 공안사건이 탄생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사법적 주요 쟁점들을 밝힐 것이다. 셋째, 햇불회를 매개로 했

3) 사건이 발생한 지역들을 보면, 무림사건과 학림사건은 서울을, 아람회 사건은 대전·충남을, 부림 사건은 부산을, 햇불회 사건은 광주·전남을, 오송회 사건은 전북을 각각 배경으로 했다.

4) 과거사 청산에서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경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관련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사 기구들이 필요에 따라 선정한 경우였다. 햇불회는 전자에 해당되었는데, 관련자들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는 인정을 받았다.

5) 아서 클라인만(A. Kleinman)과 비나 다스(V. Das)는 사회적 고통을 “사회적인 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파괴적인 상처들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데 모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적 고통은 정치적·경제적·제도적 권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국가폭력 혹은 사회적 폭력이 행위와 피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고통은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인간의 고통이 지속되거나 억순환 혹은 심화되며, 치유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이나 기술에 의해 변질된다는 점들을 중시한다(Kleinman & Das, 2002: 9~15).

던 다양한 사회관계들의 변화를 김대중을 정점으로 한 중앙과 지역의 정치 구조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춰 부각시키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과 대상 그리고 방법

1. 연구 배경 : 권위주의 체제에서 야당정치와 민주화운동

대의제의 발전과 보통선거권의 확대는 정당에 의거한 정치제도를 발전·정착시켰다. 정당정치(party politics)는 선거라는 정치행위의 공간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이를 근거로 정치권력의 장악에 필요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다(김영태, 2009: 104~105). 이 제도가 성립되고 안정화되려면 다양한 정당들이 병존해야 하며, 이들의 경합이 보장되는 공정한 규칙과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찍이 로버트 달(R. A. Dahl)은 정당들의 평화롭고 합법적인 반대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 드문 일임을 알았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서구 국가들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Dhal, 1978: x iv). 그의 논의는 다양한 정치체제에서의 세력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지만,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시기의 한국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무엇보다도 여당과 야당이 일방적 관계였고, 시민사회의 존재감이 미약했다.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제도가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시아의 국가들에서 정당정치에 입각하여 정치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군부나 폐쇄된 정치집단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당정치 제도를 부정하거나 무력화시켰다(박은홍 외, 2008). 한국도 오랫동안 이러한 범주로 분류되었다. 박정희시대는 유신헌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통치체제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기는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정치제도와 정치행위를 일방적으로 주도했고, 야당은 선거 국면이나 매우 민감한 정치적 쟁점이 부각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정영국, 1999: 229~237). 이 시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무력화와 분열 획책, 탄압과 위해 등 다양한 방법들로 정당정치를 유린했다. 야당은 여당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왜소했다. 야당은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내적 갈등에 휩싸이곤 했다. 무리수를 두기도 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을 얼마든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야

당을 불편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했지만, 정치제도에서 퇴출시키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미성숙했던 시민사회에서 어렵사리 전개되었던 재야, 학생, 노동운동 등에는 수시로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안병욱, 2005). 그리하여 야당과 사회운동 세력은 '반독재 민주화'라는 대의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연대 관계를 형성했다. 5·16군사정변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신군부는 기존의 정치구조를 해산하고, 자신의 구미에 맞춰 재구조화했다. 신군부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당정치 구조를 복원했으나, 야당들은 신군부의 각본과 지시에 의해 만들어져서 여당과 다르지 않았다(이계희, 1992: 295~300). 기존의 야당 세력들은 정당정치의 장 외부로 퇴출되었다. 이 시기의 야당은 기존의 인맥과 조직을 관리하는데 주력했고, 재기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해 침체기에 있던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반대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국가폭력의 증가는 권위주의 국가체제의 증가와 상관적이었다(홍성흡, 2008: 28). 불관용의 극단은 정적을 살해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감금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사회구성원들로부터의 낙인 등 사회적 폭력이 수반되었다. 폭력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폭력은 삶의 연속성을 단절시켰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순한 의미에서 전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Sofsky, 2010: 112~113). 권위주의 체제가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근절시킬 수는 없었다. 심지어 과도한 탄압과 통제가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반대를 양상하거나 반대의 과격화를 촉진하기도 했다(이계희, 1991: 22).

이 글의 배경이 되던 시기의 정세와 국면에서 야당은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다.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민주화운동이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었는데, 야당이 그나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대표가 되어 합법 공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야당은 민주화운동의 요구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거나 상충될 때에는 제도정치 내로 안주하면서 권력의 이익과 확장에 역점을 두었다(김용복, 2002: 366~367). 그러므로 민주화가 진전되면, 정당 특히 야당의 역할과 입지가 확대되는 대신에 사회운동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사회운동의 활동 기반과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요구와 쟁점들에 대한 야당의 수용성이 지연되기도 하고, 사회운동 인사들을 정당체제로 유입시킴으로서 활동력을 위축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Sørensen, 1994: 117~119). 이러한 현상은 야당과 사회운동 영역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당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party)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들 가운데

하나이다(정기영, 1998: 38). 정당의 제도화는 정당의 외부 방계조직과의 관계, 즉 환경에 대한 통제 수준에 따라 차별성을 나타낸다. 야당의 역할과 입지가 축소되거나, 제도화 수준이 낮은 시기에는 최대 연합의 원칙 아래 포용성이 확장되지만, 역할과 입지가 확대되고 제도화 수준이 높은 시기에는 외부조직을 지배한다. 한편 정당의 높은 제도화는 내부의 차이들을 부각시키고 과당화를 촉진시킨다. 즉 민주화운동 시기에 야당은 내적 차이보다는 다양한 세력의 연합적 성격을 유지하지만, 민주화 이행기에는 권력 추구가 전면화 되면서 정당 내의 이합집산과 파벌의 정당화가 진행된다(김용복, 2002: 362~363).

2. 연구 대상과 방법

햇볕회는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다. 햇볕회는 5·18 이후 광주·전남에서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사건이었다. 햇볕회는 5·18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던 광주시를 배경으로 했으며, 그들의 일부는 5·18 관련자였고, 주류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야당 당원들이었다. 햇볕회는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이던 김대중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햇볕회는 종으로는 6·25전쟁 시기와 횡으로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단체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햇볕회는 공안사건으로 규정되는데 손색이 없었고, 사건의 확대가 얼마든지 가능한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햇볕회 사건이 여론을 통해 알려졌던 때는 ‘부산미문화원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이 연일 언론을 달구던 무렵이었다. 햇볕회 사건은 1982년 4월 9일 국회 내무위원회 출석한 치안본부장이 민한당 손세일(孫世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었고, 이는 4월 10일자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 외의 자료들로는 판결문, 관련자 유언문, 호소문, 성명서 등이 남아 있고, 직접 관련 자료들은 압수되었거나, 소각되었다. 이 자료들에는 오인과 오기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관련자들이 드러내지 않았던 혹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들도 많다.

햇볕회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명은 ‘구술사방법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요 관련자들 가운데 절반이 사망한 상태이다. 생존자의 구술 또는 증언은 1989년 2월에, 1997년에, 그리고 2001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 특정인에게 집중되었다.⁶⁾ 회장이었던 김

6) 제1차 구술 자료는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수록되어 있고, 제2차 구술 자료는 ‘5·18영상기록특별위원회’가 1997년에 수행한 ‘5·18민중항쟁 증언자료 조사’의 결과물(VHS 테이프 5개 분량)로 (재)5·18기념재단이 보관하고 있다. 제2차 구술 작업의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제3차 구술 자료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 II』에 수록되어 있다.

결(金潔)은 가족사의 특수성, 사회운동가, 야당 정당인 등의 경력이 중첩되어 있어 구술과 증언 대상으로 선호되었다. 구술 자료들은 1~2년의 시차를 두고 문자화되어 공개되었다. 구술의 진행과 공개 형태는 제각각이었다. 제1차는 면접 녹음한 것을 토대로 면접자가 재구성을 한 기록물이었다. 제2차는 영상으로 증언한 것을 문자로 녹취한 것인데,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으나, 검독이 미진하여 인명, 지명, 건물명 등 곳곳에서 오류 및 오기가 발견되었다. 제3차는 구술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문답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한편 김결은 2011년 10월에 개최되었던 한 학술행사에서 짧게 증언한 바 있다(김결, 2011).

한편 기종도(奇鐘度)의 유족을 면담한 글이 있다. 그의 부인 박유덕이 1988년 8월에 기종도의 삶과 일대기를 증언한 것이다.⁷⁾ 이는 기종도가 사망 직전에 남긴 A4 2쪽의 '병상 유언문'과 사망 직후에 박유덕이 남긴 「광주 햇불회사건 관련자 기종도씨의 사망」이라는 A4 5쪽의 호소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증언은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엮음(2007),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2 : 상이 후 사망자 편』에 수록된 글의 근간을 이룬다.

구술과 증언 자료들은 생산 시기와 목적 그리고 질문 등에 따라 강조된 내용, 생략된 내용, 불일치한 내용 등이 발견되었다. 증언이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다수 있었다. 그리고 구술조사방법론의 강점으로 또는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31~36), 자기중심적 구술이어서 타인의 기억 및 증언과 상반되거나 다른 점들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정확한 근거가 없이 추정과 오인에 의해,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쇠퇴한 기억에 의거하여 구술과 증언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므로, 자료 독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이상의 자료들을 토대로 3회에 걸쳐 구술과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⁸⁾ 조사는 기존 자료들에서 누락되었거나 밝히지 않은 사실의 규명, 잘못된 내용들의 수정과 확인, 그동안 조사에서 배제되었던 시기와 사건의 내막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부합하지 않거나 불일치한 점들이 여전히 남았다. 이런 경우 생애와 사건의 전개에 관한 부분은 판결문을 우선시했다. 대부분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했고, 이를 근거로 사건이 구성되었음을 관련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이었다.⁹⁾

7) 구술 자료는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수록되어 있다.

8) 김결에 대한 조사는 2012년 9월 18일과 10월 6일에, 서익환에 대한 조사는 9월 23일에 이루어졌다.

9) 이 글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자료들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Ⅲ. 햇불회의 재구성과 사법부의 낙인

1. 햇불회의 유관 단체들과 정치적 계보

햇불회를 이해하는데 유의할 점은 다른 단체들과의 관계 또는 차별성이다. 햇불회는 독립된 모임이었으나, 공안사건화 과정과 재판에서 여러 단체들과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먼저 확인할 사안은 햇불회와 ‘아람회’가 별개의 모임이라는 점이다. 아래는 햇불회 사건에 관한 신문 기사인데, 정부의 책임자가 이 내용을 공개했던 시점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였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햇불회의 구성과 성격 그리고 활동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책임 당국자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수사관들이 햇불회의 실체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당국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공개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에서는 「햇불회」 「아람회」라는 2개 불순단체의 모의가 적발돼 관련자 24명 중 4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9일 뒤늦게 밝혀졌다.”¹⁰⁾

“최근 광주에서 아람회(일명 햇불회)란 민간인들의 불순모임을 적발, 관련자 24명 중 4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문에 붙였다”고 밝히고, “이들은 「미국이 물러가게 해야 한다」는 플래카드와 「민주혁명 일어나야 한다」 「반공행사와 반공의 비극적 논리」 등을 내용으로 한 불온유인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¹¹⁾

이로 인해 오늘날에도 햇불회와 아람회의 관계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법도 한 것이 햇불회 사건이 발생하기 약 8개월 전에 아람회 사건¹²⁾이 발생했다. 그래서 햇불회와 아람회가 동일한 조직이거나, 유관한 사건으로 오해할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아람회는 동명의 다른 모임이다. 아람회는 1980년 12월 7일 경에 광주시 소재 병원들에 근무하던 간호보조원 11명이 근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친목모임이었다. 수사기관이 굳이 아람회를 연계하여 햇불회의 범죄 사실을 구성

10) '광주서 2개 불순단체 적발', 「광주일보」, 1982. 4. 10.

11) '서 내무 국회 답변 방화 수사 종교와는 무관', 「경향신문」, 1982. 4. 10.

12) 아람회는 1980년 5월에서 1981년 7월 사이에 충청남도 금산과 대전 등지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동창생 등 11명이 결성한 친목단체였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7월에 공안당국이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려 했던 것은 햇불회의 총무와 아람회의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이었다.

수사기관은 아람회가 1982년 1월 31일에 미니버스를 대절하여 서울시 동교동 소재 김대중 집을 방문했던 것을 햇불회와 관련지으려 했다. 아람회 회원들이 김대중의 집을 방문한 것은 평범하지 않았다. 당시 김대중은 사형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의 예서 그의 집은 공안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던 위험지대였다. 이들이 김대중의 집을 방문했던 표면적 이유는 악화된 이회호의 건강을 위문하는 것이었으나,¹³⁾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형성되지 않은 의 예서 김대중의 집을 방문방문했는 없었다. 김대중의 집 방문 그 자체로만집은면, 햇불회와 아람회는 무관하지만, 관련이 전혀 없던 것도 아니었다. 판결문에는 아람회 회원들만이 김대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방문에는 햇불회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김결과 기종도가 동행했다. 이들이 방문 행사가 성사되도록 주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아람회 회원들결교도소에 수감된 의려 했다이들이 야당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람회 회원들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두 단체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둘째, 햇불회의 판결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민주통일당'이다. 민주통일당은 1973년 1월 27일에 양일동(梁一東)을 대표최고위원으로 결성하여 유신체제에서 존립했던 두 개의 야당 가운데 하나였다.¹⁴⁾ 민주통일당은 유진산(柳珍山)이 신민당의 당권을 장악하자, 이에 반대한 사람들이 탈당하여 창당했다. 이들은 “건전야당의 필요성에 따라 일체 사이비 야당정치인과 정상모리배를 제거하고 투철한 야당인사만으로” 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장준하(張俊河), 김선태(金善太), 김홍일(金弘日), 정화암(鄭華岩), 서민호(徐珉濠)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 가운데 4월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혁신계로 분류되었던 인물이 여럿 눈에 띈다는 점에서 신민당과 차별화를 추구했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민주통일당은 1973년 제9대 총선에서 다수 야당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54명이 출마했으나 3명만 당선되었고, 1978년 제10대 총선에서도 3명만 당선되었다(송기준, 1990: 291~294; 이기택, 1987: 371~381). 그래서 창당 취지와

13) 아람회 회장은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간호보조원의 복지와 정치는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고, '정치가 잘 되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고 생각하여 김대중의 집 방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2012. 9. 23, 서의환 면접).

14) 민주통일당은 재야세력과 더 높은 친화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1974년에는 재야에서 촉발되었던 '개헌서명청원운동'에 전력을 다했고, 1979년에는 YH노동조합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0·26 이후에는 선 개헌 후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범야권세력의 통합과 재야인사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 2월에 당 간부 30여 명이 신민당에 입당하고, 4월에 양일동이 사망하면서 당세가 급격히 약화되었다(전대열·김현 역음, 2010; 김삼웅, 2004).

달리 신민당과 합당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는데,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당이 해산할 때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 광주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김녹영(金祿永)은 그 가운데 한 명으로, 8~10대까지 광주에서 연속해서 선출되었던 야당 의원이었다. 김녹영은 신민당에서 민주통일당으로 당적을 변경했으나, 더 높은 득표수로 당선되었다(이기홍, 1996: 41). 지역민은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을 완전히 다른 정당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정당보다 개인을 중시해 투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녹영과 김대중은 긴밀한 관계였다. 김녹영 뿐만 아니라, 민주통일당은 친 김대중 노선을 떠났다(이기택, 1987: 381; 이영훈, 2000: 155~180). 이 관계는 1980년 4월에 김대중이 신민당 입당을 포기하고, 재야민주세력을 발판으로 권력에 도전하는 의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을 순회할 때, 민주통일당 총재대행이었던 김녹영과 국회의원 등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이영석, 1987: 424~426).¹⁵⁾

햇불회의 주요 인물과 회원의 다수는 바로 민주통일당의 광주 지역 당원 또는 당직자들이었다. 이들이 민주통일당에 가입했던 시점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민주통일당이 해산할 때까지 당원으로 활동했다. 민주통일당이 해산한 이후에도 이들의 일부는 '정우회'라는 모임을 통해 관계를 유지했다. 정우회는 민주통일당의 광주 지역 당원들이 김녹영을 중심으로 결성했던 후속모임이었다. 이들은 정우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면서 정치 활동이 재개되어 김녹영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

셋째, 햇불회와 '민주헌정동지회'의 관계이다. 햇불회 회원들 가운데 일부가 민주헌정동지회에 가입해 있었다. 그리고 햇불회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던 인물이 민주헌정동지회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사법부는 민주헌정동지회를 김대중이 정치적 재기를 목적으로 결성했던 사조직으로 규정했다.¹⁶⁾ 민주헌정동지회의 이사장은 김종완(金鍾完)¹⁷⁾ 이었고, 전남 조직책은 홍남순(洪南淳) 변호사였다. 이 단체는 한국정치문화연구소(소장 金相賢), 민주연합청년동지회(회장 金弘一) 등과 더불어 김대중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민주헌정동지회는 1979년 중반에 결성되었으며, 1980년대 초 김대중의 정치 활동

15) 「내란음모사건 판결문」에는 김대중과 김녹영의 관계가 1975년 이전부터 긴밀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6) '광주사태 관련자 처리 방침 발표 전문', 『경향신문』, 1980. 7. 3.

17) 「내란음모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김종완은 1932년생으로 오랜 기간 야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한국정치범 동지회, 한국인권옹호협의회 등의 활동을 했으며, 1978년 9월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었다.

재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영석, 1987: 426). 김종완이 밝혔듯이, 민주헌정동지회의 주요 활동은 외신을 들여와 번역하고 유인물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이었다.¹⁸⁾

2. 햇불회의 결성과정과 참여자의 특성 및 관계

햇불회의 결성 시점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¹⁹⁾ 판결문에는 1981년 9월 8일에 김결이 경영하던 창성전파사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고 적시했다. 김결은 첫 모임에 서의환(徐義煥)과 기종도 3명이 참석했고, 곧이어 공영석(孔英石)이 합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면 서의환은 처음부터 공영석을 포함한 4명이 참여했다고 말한다. 모임 장소에 대해 김결은 첫 모임은 창성전파사가 아니라, 광주 시내 소재 어느 다방이었다고 한다. 햇불회는 정치적 혹은 사회운동의 목적을 갖고 결성되었던 모임이 아니었고, 김대중에 대한 지지 활동을 염두에 두었던 것도 아니었다. 햇불회는 이전에 형성되었던 친분관계를 모임화한 것이었고, 인맥으로 회원을 늘려갔다. 이 모임이 햇불회로 명명되었던 것은 1982년 10월 3일경이었다. 햇불회라는 이름은 김결이 제안한 것인데, '타오른다', '봉화를 피운다' 등에서 착안되었다. 여기에는 5·18 이후 어두운 시대를 밝히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햇불을 북한과 연계시키려 했고, 혁명 모의로 규정했으며, 이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햇불회는 강령이나 활동 목적 등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 모임 개최일, 회비, 임원 등 최소한의 사항들만 규정했다. 회원들은 경력, 경험, 직업 등이 다양했으나, 시국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성이 있었다. 다양한 활동 경력과 배경 그리고 직업을 가진 이들이 조직화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은 회원 다수가 민주통일당의 당원이었거나 이들과 친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햇불회의 중심은 지역에서 야당정치를 하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유사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었다. 햇불회를 통해 일면식을 갖게 되었던 회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쉽게 동화되었다. 따라서 햇불회 모임에서 시국에 관한 토론이나 자신이 탐독한 사회과학 서적에 관한 의견 제시가 자연스러웠고, 이러한 활동이 단체의 특성으로 정착되었다.

햇불회가 민주화운동 지향성을 갖는 모임으로 변화한 것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였

18) '김대중의 장외 정치활동(1)', 『중부매일』, 2011. 4. 25.

19) 김결은 1980년 12월부터 결성을 준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김결, 2011: 142), 이번 면접조사에서는 모호하게 응답했다.

다. 이들은 시국 토론 모임 수준을 넘어 구체적 활동 목표를 수립했다. 해외에서 발행되었던 신문이나 잡지 등을 회원에게 배포하기로 했던 것이다. 회원들은 이 자료들을 지인들에게도 유통시켰다. 햇불회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구체적 목표를 갖는 모임으로 변화했으나,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구두로 의견을 교환했다.²⁰⁾

<표 1> 햇불회 회원들의 명단과 주요 경력 그리고 활동

성명 (역할)	민주통일당 관련	정우회 관련	518 관련	주요 경력 또는 직업	기타(주요 경력, 햇불회 입회 경위 등)
김결 (회장)	당원, 전남지구 조직부장	회원	인정	민주헌정동지회 회원	민중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서익환 (총무)		회원	인정	한국간호보조원협회 전남지부 사무장	한나라당, 선진한국당
공영석	당원, 전남 제5 선거구 대의원	회원	인정	민주헌정동지회 전남 광산군 연락책	사망
기종도	당원	회원	인정	민주헌정동지회 회원	사망
범인규	당원			농업	김결 소개
정상근	당원				광주 남구의원, 사망
김계명	당원, 총무부장	회원		노동	김결 소개
정광진				홍남순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기정도 소개
변동강				회사원(보험회사)	서익환 소개
유복용			인정	농업	기정도 소개
김학섭				운수업(트럭)	기정도 소개
이종업				운수업(택시)	서익환 소개
정태성	당원			자영업(수도사)	광주시의회 의원, 부의장, 기정도 소개
이종우	당원	회원	인정	한약재 건재상	김결 소개
김인섭	당원, 사진 담당	회원		사진사	김결 소개, 사망
김영만	당원			부동산 중개업	김결 소개
이상규	당원	회원		농업	김결 소개
한상열	당원			부동산 중개업	김결 소개
오치갑	당원(탈당)				김영삼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사 역임

* 주 : 바탕색이 있는 명단은 판결문에 명시된 회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면접에서 밝힌 회원이다. 이 내용은 완벽하지는 않다.

현재 확인되는 회원은 19명이다. 이 가운데 판결문에 적시되었던 적극 참여자는 13명이다. 회원들은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지 않았다. 직업으로 봐도 상류층 또는 지식인층이 아니었다. 당시 정당 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이들은 경제 활동에 적극

20) 회원들은 햇불회라는 조직명과 회원에게 배포되었던 자료들에 '민주회복에 앞장서지' 등을 기록한 것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식했다고 한다.

적이지 않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지녔거나, 활동이 자유로운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직업과 신분상으로 소속 집단이나 장소에서 벗어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술회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햇불회에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은 일찍이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던 4명이었다. 연령대는 호적과 약간 다른데, 김결과 기정도가 1935년생이었고, 서의환과 공영석은 1945생이었다.²¹⁾ 김결, 기종도, 공영석은 민주통일당 당원들이었다.²²⁾ 서의환은 민주통일당 당원은 아니었으나, 1970년대 말 무렵부터 김결과 친분관계를 맺었다.²³⁾ 서의환은 김결 등이 야당에서 활동할 무렵, 즉 1979년 10월경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포포에서 한양주택의 간호보조업무 사원으로 일하다가 1980년 4월 29일에 귀국했다. 김결이 서의환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²⁴⁾

위의 4명 모두는 1990년 8월 6일에 제정되었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민주통일당 전남지부 당사는 광주시 금남로 4가 소재 중국음식점 익화루 3층에 위치했다. 당원들은 5·18 발발 직전이었던 5월 14~16일까지 전남도청 앞 일대에서 전개되었던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 5월 16일에 김결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의 사회로 열린 전남도청 앞 집회의 단상에 '시민대표'로 올라가 집회 및 시위의 정당성과 시국에 관한 의견을 담은 연설을 했다.

5월 18일 오후 금남로 일대에 출동한 계엄군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폭력을 가했다. 당시 민주통일당이 일시에 동원 가능한 당원들은 40~50명 정도였는데 일시에 가운데 다수가 시위에 가담했다. 김결은 이날 계엄군의 곤봉에 구타를 당했고, 201동원에는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서의환을 부축을 받고 금남로 5가 소재 최원섭 외과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다. 한편 서의환은 5·18이 종료되고 난 뒤인 6월 초경 대동고와 석산고 학생회 간부를 만나 시국에 관한 의견을 나뉘이 조금서 의환은 시에에게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김결이 운영하던 가게의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일누군가 경찰에 이틀20고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김결과 한양대에 재학 중이던 그의 아들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

21) 호적에는 김결이 1937년생으로, 서의환이 1947년생으로 수록되었으나, 실제 나이는 각각 2살이 더 많다.

22) 김결은 1979년 5월경에, 공영석은 1978년 12월경에 민주통일당에 입당했다.

23) 김결이 운영하던 전파사에 서의환이 물건을 사거나 수리하러 출입하게 되면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

24) 서의환은 한양주택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김결은 김녹영의 비서였던 전성규를 소개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도왔다. 서의환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

었다. 수사관은 폭력 2궤문을 바탕으로 위의 활동에 대해 조사했다. 다행히도 김결은 일면식이 있던 군인 상사를 만나게 되어 야만적 행위에야 서의날 재학 있다. 그는 C등급 처분을 받아 상무대 영창으로 이송되었다가, 6월 중순경 석방되었다.

기종도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매진했다. 계엄군이 일시 철수한 후,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시민들의 시신이 집결되었다. 기종도는 시신을 광목으로 싸서 관에 안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광목 조달은 민주통일당 당원의 인맥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기종도는 계엄군의 재진입이 임박할 때까지 시신의 곁을 지켰다.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진입한 직후, 그는 당국의 수배를 모면하고, 일자리를 찾을 겸 부산으로 도피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5·18의 진상을 이야기했는데, 누군가 그를 신고했다. 6월 12일에 그는 부산현병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기종도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날이 1981년 5월 15일이므로, 사회에 복귀한지 얼마 안 되어 햇불회가 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⁵⁾

서의환은 5·18이 진행되는 동안 김결 등과 집회와 시위 등에 참여했다. 그는 계엄군의 발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무기를 수집하고자 나주로 진출했던 트럭에 동승했고, 나주 소재 모 지서에서 무기를 취득하여 광주공원으로 운반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는 5·18이 종료되고 나서 얼마 후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2일 가량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고 한다.²⁶⁾

공영석은 1980년 4월경에 민주헌정동지회에 가입했다. 그는 전라남도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어 전라남도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활동했다.²⁷⁾ 민주헌정동지회 전라남도 지역 책임자였던 홍남순은 5·18 관련 재야인사로 분류되어 1심에서 무기형을, 3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정웅태, 2001). 당연히 조사 과정에서 공영석의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그는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최운용(崔雲龍)은 햇불회의 회원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았다. 최운용은 1970년 3월경에 신민당에 입당한 이래 주로 신민당 광주지구당에서 활동했다. 그는 1979년 11월 말경 민주헌정동지회에 가입했고, 홍남순에 의해 중앙연락책으로 선임되었다. 최운용도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 최운용과 공영석은 가입 정당

25) 1988. 8. 기종도의 부인 박유덕의 구술.

26) 2012. 9. 23. 서의환 면접.

27) 「광주사태 공소장(재야)」 3쪽.

이 서로 달랐으나, 민주헌정동지회를 매개로 각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김경과 기종도도 민주헌정동지회 회원들이었으나,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3. 햇불회의 활동과 사법부가 판시한 위법 사항

김경, 서의환, 기종도, 공영석은 전남경찰청 수사관에 의해 1982년 3월 23일에 검거되었다. 최운용은 각주 2)와 같이 수배를 받았고, 나중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소재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약 2주간 조사를 받은 뒤, 4월 6일에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보내졌다. 관련자들은 지금도 햇불회가 어떻게 공안당국에 포착되었는가를 정확히 몰랐다. 그들은 특정인 또는 그의 지인에 의한 발고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으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기소했던 엄중한 죄목들과 달리, 광주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담당했던 판사는 이상수(李相洙)²⁸⁾였다. 대학 재학 시에 학생운동을 했던 그는 직후에 판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사건이 강압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항변했다. 수사기관은 다른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다.²⁹⁾ 이와 같이 햇불회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햇불회와 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재판부의 견해가 일치했던 것은 다음 사안들이었다. 첫째, 햇불회를 결성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햇불회를 '김대중이 출소하면 정계에 복귀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규합했던 지지 조직'이라고 파악했다. 내란음모사건의 주모자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을 지지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결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시했다.

둘째, 불온 유인물을 교부받아, 취득, 보관, 반포했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문제로 삼은 유인물은 재미한인단체인 「한국민주화운동연합(이하 한민련)」에서 발행했던

28) 이상수는 고려대학교 법대에 재학 중 3선개헌 반대 전국비상학생총회 회장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하여 강제 징집되었다. 1978년에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0년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우성종합법무법인 변호사가 되었다. 1987년 8월 거제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사망사건에서 노무현 변호사와 더불어 진상규명 작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장식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9) 수사관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달리 안용모 치안본부장이 밝힌 햇불회 사건은 "주한미군 철수, 올림픽의 부작용, 외국에의 예측화, 반공 행사와 반공의 비극적 논리 등의 내용으로 각종 유언비어가 담긴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82, 4, 10.).

주간지 「신한민보」였다.³⁰⁾ 수사기관은 「신한민보」의 내용을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된 표현물’로 규정하고 송치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찬양·고무)을 적용했다.³¹⁾

「신한민보」는 김윤식(金允植)³²⁾이 최운용에게 전달하고, 최운용은 직접 또는 공영석을 경유하여 김결, 서의환, 기종도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판결문과 달리 이들은 「신한민보」를 단지 전달받고 회람한 수준이 아니었다. 「신한민보」는 서의환에게 집결되었다. 서의환은 김결과 의논하거나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주요 내용을 A4 크기의 유인물로 편집·제작했다. 유인물 분량은 한 장에서 여러 장까지 다양했다. 공소장과 재판부의 판결문과 달리, 일본에서 출간되던 잡지인 『世界』와 「미국의 소리」 방송 녹취문도 유인물 제작에 활용되었다. 『世界』가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번역은 성흥기와 편철우가 주로 담당했다.³³⁾ 서의환은 소유하고 있던 한글과 영문 타자기 그리고 등사기 등을 이용해 유인물을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유인물은 조선대학교 정문 앞 복사 가게, 계림동 옛 광주시청 앞 복사 가게 그리고 정수만(현 5·18 유족회장)이 운영하던 인쇄소 등에서 1회당 100~200매 가량 복사되었다.³⁴⁾

위의 내용과 달리 수사기관이 조사를 집중했으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공소 사실에서 배제되었던 사안들이 있다. 첫째,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였다. 김대중을 지지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응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최대 관건이었다. 특히 김결은 판결문에서도 약간 언급되고 있듯이,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 시기에 형들이 인민유격대의 고위직 및 일원으로 활동했거나 이 과정에서 사망했던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았는가, 북한의 지령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형님들의 원수를 갚고자 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것은 아닌가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³⁵⁾ 다

30) 「신한민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아카이브즈를 통해 일부 살펴볼 수 있다.

31) 「판결문」에 의하면, 이 신문은 ‘헌 정권의 경제 상황은 심한 외채에 허덕이고 있고, 팃소통치를 하고 있다’, ‘전두환 팃소정권은 친인한 고문을 행하는 등 폭력정치를 하고 있다’, ‘88년 서울올림픽 유치는 남북분단과 대립을 양극화시키고 전두환 정권을 88올림픽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음모이다’, ‘한국의 민중과 학생들의 반팃소 투쟁에 연대하면서’, ‘전두환 군사독재를 청산하자, 민중정권을 수립하자, 반외세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자’ 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32) 김윤식도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3) 성흥기와 편철우는 민주통일당 전남지구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성흥기의 역할이 컸다.

34) 서의환과 정수만의 인연은 깊다. 서의환의 제수 동생이 5·18에서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 유족회 총무였던 정수만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정수만은 1981년 5월 18일 망월묘역에서 개최되었던 「광주사태 희생자 추도식」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행사에서 사용하려 했던 플래카드를 서의환이 제작했다.

35) 김결의 제2차 구술 자료.

른 연행자들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둘째, 부산미문화원사건과 관련성 여부였다.³⁶⁾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햇불회 관련자들이 구속되기 직전인 3월 18일에 발생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배령을 내렸고, 방송과 신문은 관련 내용들을 중요 기사로 매일 보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햇불회 관련자들은 부산미문화원사건과 관련성에 대해 조사받았다. 조사는 특히 서의환에게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들은 그의 부인까지 호출하여 사건 관련성 여부에 대해 구타하며 조사했다.

IV. 죽음과 고통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분열

1. 죽음과 고통

햇불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주요 관련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요인은 수사기관의 폭력과 고문이었다. 관련자들은 경찰과 안기부가 교차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하지만, 주로 담당했던 기관은 경찰이었다. 수사관들은 햇불회의 실체가 예상했던 규모와 수준에 미달하자, 사건화를 위해 폭력과 고문의 강도를 높였다. 가족들은 이들에 대한 조사 장소와 방법을 알지 못했다. 관련자들과 가족들이 상봉한 것은 조사가 마무리되고,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넘겨진 이후였다. 관련자들이 당한 고통은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만 회자되었다.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에도 이런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햇불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관의 폭력과 고문이 극심했음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일이 발생했다.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기종도가 1982년 5월 31일에 사망했던 것이다. 그는 사망 전날에 아들(기봉관)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 형식으로 A4 2장의 「병상 유언문」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5·18을 전후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행적이 담겨있었다. 유언문의 주요 요지는 햇불회 사건은 폭력과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기종도는 5·18로 인한 조사에서도 고문을 받았고, 수감 생활의 후유증을 완치하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다가, 햇불회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연행되었다. 수사관들은 검은 보자기를 씌워 연행한 뒤에 몽둥이와 발로 전신을 구타하며 “반국

36) 김결의 제1차 구술 자료.

가단체를 조직했음을 인정하라”고 했다고 한다. 기종도는 고문을 받다가 기절했고, 어느 지하실 방에서 깨어났다. 수사관들은 그를 안정남 외과에 입원시키고, 가족에게 통보했다. 그는 위궤양으로 진단을 받았고, 1주일 동안 수사관들의 감시 하에 치료를 받았다.

기종도의 건강이 다소 호전되자, 수사관들은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다. 그는 이곳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교도소 당국에 일반 식사 대신 죽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이 영치한 약도 전해지지 않았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으나, 교도소 당국은 방치했다. 당시 교도소에는 박관현과 최운용 등을 비롯해 다수의 양심수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교도소 당국을 상대로 기종도의 질병이 심각하다고 항의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기종도는 1982년 5월 15일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그의 건강 상태는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했지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지연되었다. 교도소 측은 수술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가족들이 겨우 비용을 마련하여 수술이 이루어졌다. 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나, 1주일 만에 합병증이 왔고, 5월 30일에 사망했다.³⁷⁾

공영석은 5·18로 인한 수감생활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햇볕희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되기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의 건강은 조사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악화되었고, 석방되고 나서는 척추 수술을 받았다. 이외에도 그는 다종의 질병을 앓았는데,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1994년 8월 14일 그는 파킨슨씨병에 의한 언어장애와 전신마비 증세로 사망했다. 그와 활동을 함께 했던 관련자들은 그의 질병이 고문과 폭력에 의해 악화 또는 발생한 것이며, 이것이 심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³⁸⁾

다른 두 사람도 폭력과 고문에 의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김결은 당시 구타로 인해 이명을 앓게 되었는데, 지금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수사관들은 성기를 이용해 인간의 극한적 수치심을 유발했고,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했다고 한다.³⁹⁾ 서의환은 수사관들이 고문의 흔적을 완화시키기 위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고 찜질을 시켰

37) 기종도는 고향인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선산에 묻혔다가, 1987년 11월 15일(수) 오후 4시에 민주열사이장추모제준비위원회의 노력으로 박선영, 김정렬과 함께 망월묘역으로 이장되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역 83번에 안장되어 있다.

38) 공영석은 국립5·18민주묘지 제4묘역 28번에 안장되어 있다.

39) 2012. 9. 18, 김결 면접.

고, 가족들이 요로를 통해 보내온 안티프라민을 발라 흔적을 지웠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관이 담뱃불로 지졌다고 하는 눈썹 부위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⁴⁰⁾ 이외에도 이들은 당시의 고문과 폭력으로 인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5·18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고문과 폭력을 당했던 것이다.⁴¹⁾ 이로 인해 폭력과 고문에 의한 고통이 가시지 않았고,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에 가해자들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고소는 지역 재야인사의 중재로 취하되었으나, 수사관 몇 명의 이름을 지금도 거명하며, 참혹했던 기억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2. 야당 정치공동체의 분열 : 반(비) 김대중 노선

사법부는 햇불회 활동을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된 표현물을 취득하거나 반포 또는 소지’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법부는 그 내용이 북한에 동조한 것이라고 했으나,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은 당시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추창되던 것들이었다. 이 내용이 판결문의 주요 구성이지만, 진정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아래와 같이 김대중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이었다.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반역죄로 처벌받고 수감 중에 있는 김대중의 출소에 대비하여, 동인의 지지 조직체를 미리 만들고, 용공 유인물 및 서적을 입수하는 데로 회원들 간에 배포, 탐독하면서 뜻이 맞는 동지들을 많이 규합, 지하세력을 확장 도모하고자 모의”⁴²⁾

햇불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김대중을 지지했고,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주장했던 논리와 쟁점에 동조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결은 ‘그 당시만 해도 김대중씨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⁴³⁾ 햇불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5·18이 전개되었던 주요 배경이 되었던 지역들에서 김대중은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었다. 김대중은 5·18과 긴밀하게 결합된 인물이었으며, 민주화운동과 야당정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기도 했다(최정기, 2010: 121). 그래서 햇불회 회원들의 다수는 유신체제에서부터 지역의 야당 정치공동체에 참여했고, 김대중과 그를 보좌하는 집단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그들 자신이 5·18 피해자라는 점도 연대와 정체성 형성의 주요

40) 2012. 9. 23. 서의환 면접.

41) 5·18 관련자들의 고문에 의한 피해와 상흔에 관한 점은 박영주·신행우(2007)를 참조.

42) 1983. 1. 21.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사건 82노 1315) 15쪽.

43) 김결의 제차 구술 자료.

기반이 되었다.⁴⁴⁾ 햇불회가 조직적 틀의 완성도를 높이고, 활동을 본격화 무렵에 김대중 등은 수감되어 있었다. 대법원이 1982년 1월 23일 김대중 등 1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지었던 것도 이들의 활동을 자극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⁴⁵⁾ 이와 같은 맥락은 햇불회 가담자들이 어떤 생각과 정서를 공유했는가를 잘 말해 준다.

김대중이 햇불회 회원들의 정신적 정치 지도자였다면, 지역에서의 정치 활동의 구심은 김녹영이었다. 햇불회 회원들은 지금도 김녹영에게 존경심을 표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선진들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김녹영은 민주통일당이 해산된 뒤에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고,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비록 그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으나, 민생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였다. 1981년 말에 5·18 유족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200만원을 보내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활동 등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녹영은 차기 선거를 대비하면서 월산동에 사무실을 두고, 정우회 등을 통해 인맥 관리를 지속했다. 김결은 햇불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뒤 이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김녹영은 1984년 2월에 제2차로 「정치피규제법」에서 해금되었다. 그는 신한민주당 창당 발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1985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4선 의원이 되었고, 제12대 국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활동을 재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병을 앓게 되었다. 공안당국에 연행되어 특명한 심장병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그는 일본여자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85년 7월 10일에 사망했다(김대열·김현 역음, 2010).⁴⁶⁾ 김녹영의 죽음은 햇불회 관련 주요 인물들에게 정치적 구심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은 5·18 관련자이며 김대중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변호를 하는 등 오랫동안 재야운동에 몸담았던 이기홍(李基洪) 변호사를 정치공동체의 새로운 구심으로 추대했다. 이기홍은 이들의 요청을 수락했고, 김녹영이 관리 및 운영했던 지구당 사무실을 비롯하여 관련 업무와 활동 일체를 인수했다. 이들은 3년 동안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며, 야당정치를 계속했다. 그 동안에 김대중을 비롯하여 가신 그룹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결과 서의환 등은 1988년에 개최되었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기홍이 평화민

44) 이만열은 내란음모사건이 김대중과 광주·전남 지역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호남지역의 정치적 상징이었던 김대중 탄압은 광주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자극했다는 것이다(이만열, 2000: 152).

45) 앞에서 언급했던 김대중의 집을 방문한 날이 1982년 1월 31일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6) 김녹영은 국립5·18민주묘지 제4묘역 20번에 안장되어 있다.

주당 후보로 지명될 것을 낙관했다. 이에 관하여 김대중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냉대를 받았고, 강압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 평화민주당이 공천했던 국회의원 후보는 박종태(朴鍾泰)였다. 박종태는 유신체제 이전에는 전라남도 광산군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다. 유신체제 말기에 김대중을 지지했던 인물이었다. 박종태의 주요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⁴⁷⁾ 그는 다양한 단체와 활동 경력을 가진 중앙 무대의 유력 정치인이었다. 이와 대비적으로 이기홍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활동 경력이 취약했던 재야인사였다.

박종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이기홍을 구심으로 했던 이들의 관계는 지속될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햇불회의 주요 회원들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야당 정치공동체에서 점차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간의 김대중의 정치 활동과 지향을 복기하고, 자신들의 삶과 역할을 회고했다. 결국 이들은 반(비) 김대중 노선으로 선회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신뢰와 헌신적 활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엄밀하게 보면, 이들은 야당정치의 양면성(박태균, 1993: 166), 즉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들에게 중앙무대의 정치인과 지역무대의 정치인이 갖는 위상과 관계, 그리고 김대중의 정치 활동과 상징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들은 각각 다른 정치 행로를 찾아 점차 분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행로의 편차는 점점 확대되었다. 이들의 정치 활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김결은 민중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같이 보다 진보적인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둘째, 서의환은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했으나, 당론에 반하여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했던 문제가 되어 제명되었다. 그는 이회창이 총재로 재임하던 때에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회창이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자, 그를 따라 당적을 변경했다.⁴⁸⁾ 셋째, 일부 회원들은 야당정치를 계속하여 지방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에는 공공 기관의 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47) 박종태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6~7대(1963~1971년) 민주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나, 유신체제 말기에는 민주헌정동지회 공동대표, 명동YMCA 위장결혼집회 대회장, 민주화추진협의회 부의장, 평화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07년 7월 16일 사망했다.

48) 서의환은 지역의 정서로 볼 때, 쉽지 않은 용단이었다고 말한다. 이회창은 햇불회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장이었는데, 교도소에서 읽은 그의 책을 통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정치활동을 계속하려면 정당에 소속되어야 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V. 맺음말

1980년 초반은 신군부의 집권과 5·18 그리고 김대중 관련 재판 등을 주제로 중요하게 연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당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학생운동, 5월운동, 민중운동, 청년운동 등과 같이 몇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게 되었고,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에 반독재 민주화라는 대의 하에 연대하고 있었던 지역의 야당정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정치제도가 실행되는 주요 장소가 서울이어서 지역의 정치 활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점과 사회운동이 급격하게 활성화됨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영역에서 야당정치가 차지하는 역할이 축소되었던 점에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글은 햇볕회를 통해 1980년대 초반기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야당정치의 한 흐름을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공안사건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햇볕회 사건 이후 야당의 정치공동체가 분열되었던 계기와 이유를 고찰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으로 이어지는 정치 구조와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정치공동체의 특성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상관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5·18과 그 이후 전개된 사회운동으로 보면, 민주통일당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했던 야당의 정치공동체는 민주화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이 5·18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고,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렇지만, 그들의 활동은 개별적이었고, 필요에 따라 인맥을 활용하는 형태였다. 햇볕회는 재야운동과 일정하게 거리를 둔 지역 내 야당정치 공동체의 일부가 구심을 이뤘다. 햇볕회는 5·18 이후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통제되었던 시기에 재기를 모색하던 지역 내 야당 정치공동체의 일부가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했던 모임이었다. 햇볕회가 경색된 공안정국의 국면에서 민주화운동 혹은 정치운동의 성격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햇볕회를 공안사건으로 단죄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었다. 햇볕회 회원들은 여러 갈래로 집합되고 활동하던 지역의 야당정치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정당의 당원들이 아니었고, 평범한 시민의식 수준에서 좀 더 진전된 정치의식을 갖는 회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 어찌다. 5·18 이후 대부분의 사회운동 모임과 단체가 와해되고 주요 인물들의 활동이 정지되었던 광주·전남의 실상이 햇볕회를 두드러지게 보이

게 했고, 그래서 공안당국에 쉽게 포착되었을 수 있다. 영향력을 갖는 야당정치인이 아닌, 지역 내 야당의 정치공동체가 공안사건으로 탄압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달리인물들 의면, 당시 광주·전남의 상황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공안사건화 할 정도로 척박했고, 신군부는 이런 모임도 공안사건화 할 만큼 절실했다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햇불회의 성격과 활동을 북한, 김대중, 부산미문화원사건 등과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미리 선정하고, 맞춤형 조사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이런 방식의 조사는 사건을 구성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폭력과 고문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목숨을 잃은 사람과 단명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생존자들은 지금도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햇불회 사건은 정치·사회적 폭력이 정당화되고, 은폐되던 시대에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그다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모임과 활동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고문하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항거할 수도 없던 시대는 2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군사 정부의 유산이었다. 폭력과 고문에 의거해 공안사건을 양산하고,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관심을 조종하며, 통치의 정당성과 안정화를 도모⁴⁹⁾하던 5공화국 출범 초반기는 그들이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이 미래로 더 멀어져 갔고, 암울했던 시기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햇불회 사건과 주요 관련자들의 삶은 당시 민주화운동과 인권 그리고 팔시받는 호남을 상징하는 야당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관한 일면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비록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나, 이들의 인식 전환과 삶은 야당정치에서 중앙과 지역의 관계, 민주화의 진전에 연동한 야당의 위상과 변화, 인물을 매개로 한 정치 세력들의 존재와 활동, 그리고 이들 사이를 관류하는 관계적 정서와 심리적 교착 등을 보여준다.

49) 아렌트(H. Arendt)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폭력의 정당화는 그 의도했던 목적이 미래로 더 멀어질수록 설득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Arendt, 1999: 85).

참고문헌

〈문헌〉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 김대중, 2010, 『김대중 자서전 1』, 삼인.
- 김삼웅, 2004, “영욕의 한국 정통 야당사,” 『인물과 사상』 76, 95~113쪽.
- 김영태, 2009, “정당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강의 3 : 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용복, 2002, “한국 민주주의와 야당정치 : 민주적 실천·역사적 희생·정치적 보상,”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 책.
- 나간채, 2001, “5월단체의 형성과 활동,”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680-712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 박연철, 2001,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분석,”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 박영주·신행우, 2007, “사회적 폭력 : 5·18에 나타난 고문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호, 294~321쪽.
- 박은홍 외, 2008,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 나남.
- 박태균, 1993,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창작과 비평사.
- 송기준, 1999, 『한국의 여당과 야당』, 웅비사.
- 안병욱, 2005, “유신체제와 반유신 민주화운동,”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계희, 1991, “권위주의 정권 하의 야당정치 연구 : 신민당(1967~1980)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2, “민주화운동과 야당정치 : 1980년대 한국의 사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3, 285~341쪽.
- 이기택, 1987, 『한국야당사』, 백산서당.
- 이기홍, 1996, 『호남의 정치 : 국회의원 선거 50년의 명암』, 학민사.
- 이만열, 2000, “‘5·17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진실과 그 역사적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14, 131~153쪽.
- 이영훈, 2000, 『파벌로 보는 한국야당사』, 에디터.
- 전대열·김현 엮음, 2010, 『빛 고을의 빛! 김복영』, 신안애드피.
- 정기영, 1998, “한국의 민주화와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 : 야당의 구조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국, 1999, “유신체제 성립 전후의 국내정치,”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 정웅태, 2001, “5·18관련자 재판의 전개과정,”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 정해구, 2002, "한국 민주주의와 재야운동 : 재야의 형성·분화와 민주적 실천."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 책.
- 최정기, 2010, "1980년 봄의 위기담론과 지역엘리트의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 10-3, 111-135쪽,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 한홍구, 2011, "1981~1982년 공안조작사건의 현재적 의미." 『민주연구단체협의회 2011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홍성흠, 2008, "국가폭력의 이론과 사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심미안.
- Arendt, Hannah(김정한 역), 1999, 『폭력의 세기』, 이후.
- Aahl, Robert A (ed.), 1978, Political Oppositions In Western Democrac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Kleinman, K. & Das, V. etc.(안종설 역), 2002, 『사회적 고통』, 그린비.
- Sotsky, Wolfgang(이한우 역), 2010, 『폭력사회』, 푸른 숲.
- Sørensen, Georg(김만홍 역), 1994, 『민주주의와 민주화』, 풀빛.
- 岩崎育夫(최은봉 역), 2002, 『아시아 국기와 시민 사회』, 을유문화사.

〈구술·증언〉

-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엮음, 2007, 「5월 희생자들 옆에 묻어 달라(기종도, 묘지번호 2-83)」,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2 : 상이 후 사망자 편』, 5·18기념재단.
- 5·18영상기록특별위원회, 1997, "5·18민중항쟁 증언자료 조사"의 결과물(김결 구술)
- 김결 구술, 양난희 조사·정리, 1990, 「머리가 찢기는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김결 구술, 조지 카치아피카스 면접조사, 나간채·이명규 엮음, 2003, 「그런 포악한 현장을 보면은 폭발이 되지요」, 『5·18항쟁 증언자료집 II』, 전남대학교 출판부.
- 김결 구술, 정호기 면접, 2012, 9, 18., 10, 6.
- 김결, 2011, 「햇불회 사건의 진실」, 『민주연구단체협의회 2011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박유덕(기종도 처) 구술, 임금옥 조사·정리, 1990, 「'햇불회' 사건의 희생자」,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서의환 구술, 정호기 면접, 2012, 9, 23.

〈자료〉

- 「병상 유언문」, 1982, 5, 30, 기종도 작성.
- 「광주 햇불회 사건 관련자 기종도씨의 사망」, 1982, 6, 기종도의 처 박유덕 작성.
-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암흑속의 햇불』 5권.

박형규 등. 1987. “7. 광주학살회 사건 관련자 기종도씨의 사망.” 『고문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80년대 민주화운동 VIII』, 한국기독교협의회.

2010년 5·18전문연구자 육성 지원 논문

▣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 연구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The May 16 Memorial Foundation
5·18 기념재단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인의 구조를 연구하였다.¹⁾ 인권침해의 재생산은 사회심리학적 부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부인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가해자들의 부인과 과거청산 이후 가해자 측 지지자들의 부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스탠리 코언의 부인이론과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활용하여, 두 사건과 관련한 부인의 사회심리학적 기법, 과거청산 부인의 구조 및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부인의 사회심리학적 기법은 문자적 부인, 해석적 부인, 함축적 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과거청산 부인의 구조는 부인주체, 부인기법, 부인시점, 부인활동과 채널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무시형태의 극복 및 가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정투쟁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 측 지지자들이 행하는 과거청산의 부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해자와 지지자 모두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문자적 부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가해자는 인권침해 사건의 쟁점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였고, 지지자는 과거청산의 내용을 부정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려 하였다. 안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건을 정당화하는 함축적 부인도 가해자와 지지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석적 부인의 경우, 가해자는 위계서열에 의한 부인 등 책임의 부인을, 지지자는 법률적으로 과거청산의 오류를 지적하는 법형식주의적 부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부인의 구조와 관련하여, 가해자는 정권교체에 청문회, 조사기구,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심문에 대한 자기방어의 일환으로 부인을 하였다. 이에 비해 지지자는 국군 예비역, 반공주의적 개신교 목사 등 가해자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세력으로, 과거청산 이후 민주 세력의 힘이 약해진 시기에 능동적인 담론생산의 형태로 부인활동을 하였다. 지지자는 주로 온라인에서 부인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였으며, 소규모

1) 정부의 5.18 공식 명칭 변경, 연구자들의 5.18 용어 혼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주 용어로 하여 5.18, 광주항쟁, 5.18항쟁, 5.18 광주 등을 혼용하였다. 현재 공식 명칭은 5.18민주화운동이다.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고소고발 운동, 법정투쟁, 대중설교 및 강연의 방식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담론을 외화 시켰다. 그리고 진보-보수 대립, 대선과 같은 정치 일정, 특정 부인주체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집중 부인을 하였다.

가해자 측 지지자들의 과거청산 부인은 이들의 정체성 상실에 기인한다. 지지자들은 대부분 수구세력으로서, 이들은 사회변화, 정권교체, 과거청산으로 인해서 반공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라는 정체성이 해체되고 사회적 가치가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적 무시에 대한 대응으로 과거청산 부인이라는 인정투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체성 복원 및 '성장을 위한 반공 공동체'라는 가치 공동체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철저히 하지 못한 과거청산은 과거청산 부인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은 거시적 한계인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로 인한 한계를 비롯하여, 과거청산에 대한 총체적 관점 결여, 조사기구의 법적 권한 부족과 정부기관의 비협조, 가해자 처벌 없는 과거청산, 반성과 시인의 문화 미형성, 사회적 고통과 트라우마의 관점 부족과 같은 한계들이 있었다.

과거청산 부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통과 트라우마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재심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부인, 대법원의 배상금 축소 판결,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재건위 법원 판결 부인으로 인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수구세력의 집단적이고 집요한 5-18 왜곡 담론의 생성과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는 철저한 과거청산과 함께 전문치유센터의 운영, 개방된 공간 및 사회적 인정과 지지가 필요하다.

* Key Word : 인혁당 재건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폭력, 과거청산, 과거청산 부인, 가해자, 지지자, 문자적 부인, 해석적 부인, 함축적 부인, 정체성 투쟁, 사회적 무시, 가치 공동체, 트라우마

* 이 논문은 5-18기념재단의 '2010년도 5-18 전문연구자 육성 사업' 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감사의 글

나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당시의 피해자도 아니지만, 논문 관련 자료들을 보는 동안 가해자, 지지자, 피해자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논문을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족한 나를 지지하고 기다려 주었던 분들의 도움으로 이 논문은 완성될 수 있었다. 특별히 논문을 시작하게 해 준 사회학과 김명희 선생님, 논문을 신뢰하고 애정을 보내주신 조희연, 조효제 선생님,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논문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지적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 준 한홍구 선생님과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화 된 과거청산 작업들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드러내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피해에 대한 진실은 규명되거나 피해구제 되었으나 가해자는 밝혀지지 않거나, 밝히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 가해세력은 그들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고 있으며, 그들이 양산한 지지세력은 가해자들을 옹호하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지지세력에 의한 과거청산 부인은 언어화 된 폭력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행하고 있으며, 대중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함으로써 연연중에 폭력을 옹호하는 방관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족하지만 국가와 자본의 폭력을 증언하며,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견디고 진실을 밝히는데 일생을 바쳐 온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이 논문이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8여 년의 시간을 수많은 열사 영정들 속에서 일하는 동안,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주셨던 분들이 열사 유가족 어머니, 아버님들이다. 그 분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논문을 수정하고 있던 시점에 연이은 사람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 멍멍함의 시간을 나 스스로를 성찰하며 보내야 했다. 삶의 고비마다 함께 해 주었던 분들이 있어 내 삶은 충만했었다. 그 분들을 항상 기억하며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그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연구 :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작성자 : 김보경(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II.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인구조 분석

1.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개요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인 분석
3.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인 분석
4. 소결 : 가해자들의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의 특징

III.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이후 가해자 측 지지자의 부인구조 분석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내용과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
2.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내용과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
3.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부인주체
4.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부인시점
5.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활동과 채널
6.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의 원인
7. 소결 : 지지자의 과거청산 부인구조 정리 및 가해자의 인권침해 부인구조와의 비교분석

IV. 과거청산 부인과 트라우마

1. 한국사회 과거청산의 한계와 과거청산 부인
2. 과거청산 부인과 트라우마의 강화

V. 결론

1. 주요 연구내용 정리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과거청산의 개념과 역사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반민족행위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친일부역 및 독립운동가 탄압, 여운형 등 민족지도자 암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그리고 5·18 광주, 삼청교육대, 녹화사업, 노동자학생 의문사,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고문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있었으나, 이러한 국가폭력은 국가의 부인과 국민들의 침묵 속에서 은폐되었다. 해방 이후 친일파가 정치, 경제, 지식 권력을 장악하면서 “30년간의 일제 통치가 너무 길어서 누구도 친일파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식의 상황논리가 횡행하는가 하면, 권위주의 통치에 대항하는 민주화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좌익세력으로 규정되어 갖은 탄압과 고초를 겪었다. 20세기 한반도에는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국가폭력의 역사가 반복되었고, 역사적 진실은 20세기말 과거청산이 추진되기 이전까지 장시간 어둠속에 묻혀 있었다.

과거청산은 과거에 발생한 공권력의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피해를 회복하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5월 운동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이를 토대로 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재심과 같은 법적 판결 및 국가의 공식적 사과 등을 통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적·사회적 기념사업을 통한 정신계승이라는 과거청산 모델이 정식화되었다(정근식, 2001: 65쪽). 김동춘은 여기에 덧붙여 과거청산을 인적청산과 제도적 청산으로 구분하였다. 인적청산은 과거 불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거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며, 제도적 청산은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했거나 정당화했던 법, 제도를 폐지하고 민주적 법, 제도적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인적청산이 강조될 경우 국가보안법, 강압적 수사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법, 제도, 관행이 그대로 남아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도적 청산이 강조될 경우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이 그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김동춘, 2007: 549-550쪽).

나찌 전범재판,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역사적 사례를 보면 권위주의 통치

이후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과거청산이 시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상규명 및 인적·물적 피해 회복, 가해자 척결, 법·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시도되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과거청산은 권력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로 추진되었다. 첫 시도는 일제 해방 이후인 1948-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권이 대거 기용하였던 친일파의 탄압으로 인해 반민특위는 큰 성과 없이 해산되었다. 1960년에는 4·19 혁명으로 열린 해방 공간 속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 진상규명, 자유당 간부 및 이승만 정부의 부정 축재자 처단 요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1961년 5·16 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무산되었다. 이후 19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되면서 과거청산은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었다. 의문사한 노동자, 학생, 군인들의 유가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1988년 10월 17일부터 1989년 2월 27일까지 기독교회관에서 135일간 농성을 벌였고, 1988년 11월에는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6공화국 역시 5·18로 집권한 군사정권이라는 점에서 5·18 광주청문회가 본격적인 과거청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및 전두환·노태우 사법처리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5공과 6공의 뒤를 잇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과거청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과거 세력과 단절이 필요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살자를 법적으로 심판하게 되었다²⁾. 그리고 장면정부 이후 최초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과거청산 운동이 본격화되었다³⁾.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 10월 설립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활동이었다. 의문사위를 통해 그동안 생소했던 과거청산이란 의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소극적이었던 정치권, 언론, 사회운동 진영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2004년 의문사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 산하 과거청

2) 전두환, 노태우 등은 이후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사면되는데, 이를 통해서 5·18 특별법 제정과 학살 주범 구속 및 재판, 사면까지의 과정이 정치적 이해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1998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시작으로 2004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6년 '군인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재위원회', 국방부, 경찰 산하에 설치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이 출범, 운영되었다(서중석, 2007).

산 기구들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독립적 과거청산 기구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청산 기구들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법적 활동 기간 만료와 함께 해산되었다.

2) 인권침해와 과거청산의 부인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정치적 행위이다. 그리고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혀내고, 가해자 세력을 척결하며,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는 행위 역시 정치적 행위이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가해자와 우호적 지지자 측에서는 인권침해 및 과거청산 전후의 각 국면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과거청산을 부인하는 정치적 담론투쟁을 벌인다. 이러한 담론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한다. 우선 인권침해 사건 시기부터 과거청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언론, 군, 경찰력을 장악한 가운데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들의 침묵을 조장한다. 민주화 이행 시기,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과거청산을 옹호하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고, 가해자 측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부인을 한다. 그리고 과거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반동적 이데올로기의 발호와 함께 가해자에 우호적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그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행위들이 발생한다.

이중 마지막, 과거청산 이후 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인이다. 홀로코스트의 경우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확정된 가장 대표적인 과거청산 사례임에도 나치 추종자, 신나치주의자, 수정주의 역사가 등에 의해서 부인되고 있으며⁴⁾, 10여개 이상의 유럽 국가들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의 부인과 증오적 표현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재승, 2010: 555쪽).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만원, 자유북한군인연합 등 수구세력들의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 주장으로, 이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4) 이들은 홀로코스트 자체를 유대인의 이익을 위한 음모론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유대인 절멸을 위한 종합계획과 대량살상을 위한 가스실이 없었고, 홀로코스트 연구자들은 객관적인 문서가 아니라 생존자의 증언에 의존하였으며,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유대인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등 몇 가지 주장을 근거로 제기하였다. 또한 국제정치와 연계되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비판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도 반시오니즘의 일환으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이재승, 2010: 546-551쪽).

이들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결과 및 법원의 재심판결을 비판하면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부인하였고, 더 나아가서 과거청산 일반을 부정하였다.

3) 과거청산 패러다임과 부인-시인 패러다임의 결합

지금까지 과거청산에 대한 연구는 과거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과거청산의 모델과 조직, 주체, 활동 범위와 권한, 그리고 피해자 구제와 정신계승 및 제도개선방안 등이 과거청산 연구의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앞서 언급했던 인권침해 및 과거청산 부인이라는 쟁점을 모두 빗겨나가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부인담론은 국가폭력과 동시에 형성되어 이후 과거청산 과정과 과거청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과거청산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인권침해의 재생산이 사회심리학적 부인 메커니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조직적, 문화적 부인을 간파하고 이를 사실의 시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작업이다.

조효제는 인권침해와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부인’과 ‘시인’이라는 틀로 이해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이 문제들에 접근을 하였으나, 이러한 접근은 단선적 논리구조를 상정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심리학적 해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가해행위 이면에 인권침해와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재생산하는 가해자와 방관자의 부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관하는 대중의 주관적 심리상황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스탠리 코언 중 「웁긴이 해설」, 2009: 24쪽).

따라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및 제도개선이라는 기존의 과거청산 패러다임에 부인과 시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철저한 과거청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청산 과정과 과거청산 이후 사후적 부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향후 부인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스탠리 코언 중 「웁긴이 해설」, 2009: 26쪽). 또한 진실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인간 양성을 통하여 인권침해 재생산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체성 형성 투쟁으로서의 과거청산 부인

과거청산 작업은 민주화 이행기에 민주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민주화 이행기에는 집권세력이 교체되며 과거청산 과정에서 구세력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가 낱알이 폭로된다. 이에 따라 사회 기득권층의 위상은 약화되고 반면에 권위주의 정부에서 억압받고 소외되던 약자들이 사회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확산, 낡은 법과 제도, 관행의 폐지 및 새로운 시스템의 형성과 함께 진행된다.

구 기득권 세력에게 이러한 과거청산은 놀라운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신념처럼 여기던 가치관들이 부정되고, 옳바르다고 여겼던 사회적 행위들이 부도덕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구 기득권 세력의 정체성 혼란은 민주화 이행기를 주도하는 새로운 집권세력과 과거청산 세력의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이 투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구체제에 의존하던 국민들이 새로운 체제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통합되고 민주화 이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의 과정에서 구 기득권 세력들이 집결하여 저항을 할 수 있는데, 그 형태 중 하나가 과거청산 부인이다. 과거청산 부인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당화하고 과거청산 세력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한 투쟁이다. 즉,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이들만의 대응방식이 과거청산 부인인 것이다.

본 논문은 정체성 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개별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과거청산과 관련된 논쟁을 정체성 투쟁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의 변화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두 사건에 대한 과거청산 부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목적

본 논문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두 사건은 각각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해서 발생한 최초의 조직사건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8명이 사법 살해되었다는 점에서 유신정권의 위헌성과 반인권성을 폭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시민들의 항쟁으로 이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전두환 세력의 잔인함, 폭력성, 반민증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또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에서 과거청산 원칙들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는 점에서도 한국 과거청산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배상, 재심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가 회복된 드문 사례로서, 이로 인하여 조작간첩 사건 등 다른 인권침해 사건의 재심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국가기념일 제정 및 기념재단 설립이 이루어지는 등 과거청산의 원칙들이 충실하게 실현되었고, 1980년대 과거청산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사건 역시 과거청산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사실관계를 시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였다. 그리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해자를 지지하는 수구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부인담론을 형성하고 유포하였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수구세력의 부인은 한국의 과거청산 부인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하여 가해자와 지지자들이 어떻게 부인을 하고 있으며, 부인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과거청산 부인을 과거청산 세력과 부인세력과의 정체성 투쟁으로 접근하여 부인주체들의 정체성과 이들의 사회적 가치 회복을 위한 인정투쟁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과거청산 부인으로 인한 피해자 트라우마의 강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 연구

한국에서는 아직 과거청산 부인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과거청산의 역사가 길지 않고⁵⁾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5) 이 글에서는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 시기, 특히 2000년 의문사위의 출범 이후부터를 5·18 이외의 과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과거청산이 이루어진 시기로 설정하고 있다.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이때부터 군사정권 시기 의문사를 시작으로 각종 인권침해, 집단학살, 반민족행위 등에 대한 진상이 본격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들 중에서 과거청산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2002년 의문사위, 2005년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 조사, 2007년 재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수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과거청산 부인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청산이 진행되면서 인혁당에 대한 기억운동, 희생자 가족의 피해, 사법살인 및 사법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동진(2009)은 기억 운동, 대항기억 체제, 기억 체제, 새로운 기억 운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의 주기'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기억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기억 운동은 권력 작용으로 인해서 망각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행위로, 기존의 지배적인 기억에 대한 대항기억이다. 기억 운동 과정에서 기억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표상인 문화적 기억이 창출되어 대항기억 체제가 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억 운동이 성공하여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게 되면 하나의 '기억 체제'가 출현하고 여기에 대한 문화적 기억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기억 체제가 형성되면 다시 새로운 기억 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기억의 주기이다. 이동진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기억은 기억 운동과 기억 체제의 사이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진상규명운동, 의문사위 조사, 법원 재심을 거치면서 인혁당에 대한 기억이 가족의 기억, 동지의 기억에서 사회운동의 기억으로 발전하는 등 기억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여전히 민주화 운동의 변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혁당에 대한 기억은 지자체 및 국가에 의해 공인된 기억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기억 체제가 형성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⁶⁾.

오승용(2007)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2차 피해자인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는 피해자 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피해의 차원을 국가, 생활공동체, 가족, 개인으로, 피해의 종류를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로 구분하여 총 8가지 유형으로 피해 사례를 분류하였다. 희생자 가족의 피해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6) 이동진에 의하면, 기억운동이 기억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법률적 재해석을 통해서 승인된 기억을 공식적 기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억 특별법의 제정, 기억 NGO의 국가 기억기구(재단)로의 전환, 국가 기억기구에 의한 기념시설 설립과 기념사업 전개 등이 필요하다. (이동진, 2009: 36)

<표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가족의 피해 유형

차원 \ 피해	물리적 피해	정신적 피해
국가	관계기관에 의한 불법연행, 구속, 가혹행위, 요시찰	공산주의자 가족 낙인, 협박, 회유, 침묵강요 등
생활공동체	경제활동 곤란 (해고, 폐업, 취업 불이익 등)	이웃에 의한 집단 따돌림 (격리, 고립 등)
가족	자녀의 교육문제 (교육기회 제한 등)	가족해체(Fathering의 부재) 친척관계 소외·고립
개인	육체적 고통 (고문 후유증, 합병증 등)	불안, 공포,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 자료 : 오승용, 2007: 211

허일태(2007)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통해서 법관의 법외곡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조작 또는 왜곡되고 이를 기초로 법률이 왜곡 적용되며 사형선고 등 양형이 남용되는, 법관의 법외곡행위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또한 사형제의 존치, 정치위기 해소 위한 도구로서 사형제의 오용, 법관의 법외곡위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사법살인을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법관의 사법살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법외곡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호중(2007)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무죄판결을 국가기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과거청산을 이룩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재심법정이 재심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심의 문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여 과거의 재판과 유죄판결을 탄핵한다는 재심의 의미와 불일치한 결정을 하였으며,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 피해자의 국가 손해배상 주장이 어렵게 되었다는 한계들이 나타났다. 이호중은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자행된 사법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을 청산하기 위해서, 검찰의 적극적인 재심청구,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재심법원의 사실 증명 의무와 책임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문조작사건에 대한 재심사유 완화 내지 특별재심사유 인정,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에 대한 특별재심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반인권적이거나 위헌적인 법령에 의해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입법을

통하여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을 사법과거청산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연구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이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학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과 배경, 전개과정, 성격 및 주제, 의의, 5·18 이후 5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과거청산, 5·18 문학·예술, 5·18과 법학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관계가 있는 5·18과 과거청산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루도록 하겠다.

5·18 과거청산에 대한 연구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⁷⁾, 피해자 배상 및 재심, 5·18 정신계승과 기념사업,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을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5·18 과거청산은 5공 시절 5·18 진상규명 투쟁과 1988년 광주청문회,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1996년 전·노 재판으로 흐름이 이어졌다. 조현연(2007)은 광주청문회 이전까지 5·18 진상규명 투쟁을 제한적 실천 국면, 활성화 국면, 부차화 국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988년 광주청문회의 개최배경, 주요쟁점, 종결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청문회의 개최배경은 5공과 6공으로 나누어진 지배블록 내부의 갈등, 이러한 내부갈등을 규정한 아래로부터의 민족민주운동의 투쟁과 여소야대 국면의 형성으로 분석하였으며,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5월 광주의 발생 원인과 집단발포 명령의 책임 소재, 미국의 역할과 책임문제, 5·18의 성격 규정으로 제시하였다.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는 공수부대의 과잉진압 주장과 시위대의 과격시위 주장이 대립하였고, 집단발포 명령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지위권의 2원화'와 '신군부의 직접 지휘론'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89년 초반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둘러싼 정략적 이해에 따른 야3당 공조체제가 이완되면서 청문회는 중단되었다. 안종철(2007)은 광주청문회의 대표적인 미해결과제로 발포명령계통과 지휘체계의 이원화 배경, 민간인 사망자 숫자, 미행정부의 역할과 책임문제를 정식화하였다.

7)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5·18 특별법 제정, 피해자 배상 및 광주보상법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5·18과 법학이라는 연구범주에 해당되지만, 이들은 또한 과거청산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1995년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 박원순(2006)은 5·18 관련 공소시효 문제 해결,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독재정권의 통치자 처벌의 법적 기초 마련, 5·18 특별법의 인권법으로서의 의미를 그 의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전·노 재판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불법성에 치중함으로써 광주진압군 지휘체계 이원화, 양민학살의 책임 등 광주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의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였고, 5·18민중항쟁에 대한 국민적 왜곡 극복의 한계, 전두환, 노태우 이외의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형량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김상곤, 2006 : 정웅태, 2006). 조용환(2006)과 양영태(2006)는 5·18을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학살과 인권유린을 자행한 국가의 범죄로 보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저지른 개인의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이 5·18 특별법과 전·노재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비상계엄의 확대 및 시위의 무차별 진압행위의 존재 확인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5·18의 진압과정과 책임자 규명은 도외시한 채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또한 주모자만 처벌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주문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만 수집하여 기소를 함으로써 광주 전남 지역의 양민학살 진상, 학살 규모 및 실종자 시신 소재, 광주만 진압 대상이 된 이유, 미국의 역할 등 5·18의 완전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광주학살의 현장책임자와 신군부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수사 포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조용환(2006)은 후자의 경우 검찰이 5·18을 국가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범죄로 보는 한계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설령 국가에 대한 범죄라는 관점에서 내란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이들이 전두환, 정호용의 비정상적 지휘를 받으면서 학살을 했다는 점에서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했다고 볼 수 있어, 내란죄의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아울러 5·18 특별법에서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이유가 '국가의 소추권 행사 장애사유의 존재'이므로, 5, 6공 치하에서 소추권 행사가 어려웠던 5·18 현장책임자의 살인죄나 광주학살 전후의 범죄들 역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곽노현(2006)은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헌정과괴범죄에 대한 수사로 축소해서 바라보면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청산적 관점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실패, 삼청교육대 사건이나 언론인, 교수, 노동자 해직에 대한 언급 부재 등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5·18 관련 배상과 재심,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신일섭(2006), 박원순(2006), 정웅태(2006)의 연구가 있다. 신일섭(2006)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법은 1990년 7월, 민자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며, 금전적 보상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법안을 제정하면서 계엄군의 광주항쟁 진압을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을 사망, 행불자, 상이자로 규정하여 유죄판결 확정자, 구급자, 재산피해자 등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⁸⁾. 한편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보상의 배상 간주 조항에 의해 광주보상법에 근거한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급은 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나, 5·18 희생자의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대해서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18 희생자들은 5·18 당시 살해 장면 목격 등 정신적 충격과 5·18 이후 폭도라는 오명 및 사회적 고립감 등의 고통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통증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으나, 5·18 보상법은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보상의 범위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박원순, 2006). 5·18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명예회복 역시 1995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별재심 조항 제정 이후 현실화되었다.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는 1998년 2월 현재 278명에 이르며⁹⁾, 2011년까지 꾸준히 무죄판결이 내려졌다¹⁰⁾.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은 과거청산의 중요한 영역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문민정부 등장 이전까지는 야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을 중심으로 기념사업이 이뤄졌으나 1993년 5·18 13주기 대통령 특별담화를 계기로 국가의 5·18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5·18 행사가 공식화되고, 학술연구, 기념일 제정, 교과서 일부 반영, 5·18 기념재단 출범 등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5·18 묘역 성역화, 전남도청 기념관화, 상무대 부지의 공원 조성 등 기념공간 조성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나 기념공간이 제도화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광주에 대한 민주성지로서의 기억은 약화되고 있다. 민주성지로서 광주의 이미지는 1997년 이전까지는 예향론과 공존했으며,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상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 법에 의하여 1990년 1차, 1993년 2차, 1998년 3차, 2000년 4차, 2005년 5차 보상이 이뤄졌다(신일섭, 2006: 189~200).

9) 정웅태, 2006: 464-465쪽

10) 2000.12.20, 「5·18관련자 재심판결서 무죄」, 연합뉴스, 2011.3.2, 「5·18광주항쟁 참가자 재심무죄 확정」, 연합뉴스, 2011.12.4, 「5·18 민주화운동 3명 재심서 무죄」, 시민뉴스.

1997년 이후에는 문화도시론과 경쟁을 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민주성지로의 중심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민형배, 2007). 은우근(2007)은 5·18 기념사업의 전국화, 세계화 담론을 평가하면서 대안으로 지역화, 민족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화와 세계화는 5·18이 전 국민의 5·18, 세계 속의 5·18로 되도록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1997년 국가기념일 제정, 희생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 5·18묘역의 국립묘지화가 이뤄지면서 5·18에 대한 전국적 관심은 약해지고, 5·18이 광주, 전남의 지역적 행사로 축소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여기에 대해 은우근은 5월 민중이 실현해낸 역사적 공동체와 정서를 지역적으로 부활, 재생시킨다는 의미의 '지역화'와 민족사적 차원에서 5월 민중의 공동체 의식과 정서에 대한 평가와 계승을 통해 5·18 정신을 민족 내부로 확산시킨다는 '민족화'를 새로운 과제로 정식화하였다.

5·18 트라우마의 해소는 피해자 관점에서 과거청산을 접근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제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은 그동안 과거청산 5원칙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 보상 및 배상, 기념사업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구속 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국가에서 5·18을 공식적 기념일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18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오수성과 변주나 등 연구자들은 주로 5·18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주(2004)는 기존 연구가 단순한 조사에 그쳐서 5·18 트라우마티즘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과 사회적 지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하고, 사회·경제적 트라우마티즘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2000년대에는 5·18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정호기(2003)는 트라우마티즘이 기념공간 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우선 신체적·심리적 트라우마티즘이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트라우마티즘과 경제적 빈곤을 겪게 되는 경제적 트라우마티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트라우마티즘은 다시 신체적·심리적 트라우마티즘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트라우마티즘은 부모와 자식, 배우자에게로 전해지면서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호기는 5·18 부

상자, 구속자, 유족들이 이러한 트라우마티즘을 해소하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공간의 조성에 상당한 애착을 갖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5·18 피해자들은 기념공간을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의식을 상쇄시키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정호기는 이 과정에서 5·18 피해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기념공간 조성이 추진되면서 이 단체들과 민주화단체들이 서로 구별되고 5월정신과 민중성이 희석되거나 누락된 채로 5·18 묘역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수성·신현균·조용범(2006)은 외상적 사건 경험 이후 장시간 유지되는 만성적인 심리적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오수성 등은 5·18 피해자와 가족 291명과 일반인 대조집단 43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진단 척도-인터뷰 버전, 생활 스트레스 설문지, 일반 건강 질문지를 측정도구로 활용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이후 2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5·18 피해자의 41.6%, 5·18 유공자(부상자, 구속자, 유족)의 55.8%가 PTSD로 진단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생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부상자, 구속자, 유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곤란, 직업문제,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경우는 부상자와 유족이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안, 우울, 신체화와 같은 증상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등 정신 건강도 가장 안 좋았다. 오수성 등은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5·18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해 적용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피해자들의 삶 전체에 국가적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정기(2008)는 5·18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하였다. 그는 육체적 고통, 개인의 고통, 사회적 고통 사이에 어떤 사회적 변수가 개입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사회운동 경력이 없는 경우 트라우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직접적으로 트라우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대한 해석체계에 의해서 트라우마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위 변수들은 이러한 해석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육체적, 사회·경제적 상황이 트라우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하였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부상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육체적 고통이 계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생활이 어렵다면 고통이 트라우마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통이 발생한 직후 빠른 시간 안에 보상, 치료

와 같은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피해자의 트라우마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고 결론 내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피해자 10명을 분석해 본 결과, 발병 시기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직후 1~3년 내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감시와 탄압, 사회적 관계 해체, 개인의 음주 의존과 같이 부적절한 사회적, 개인적 대응이 있었다.

(3)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 연구

최근에는 본 논문의 직접적인 선행연구인 5·18항쟁 왜곡 및 부인에 대한 연구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기념재단에서 새롭게 이루어졌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왜곡 및 부인담론을 연구하였다. 기간은 2009년 6~7월 두 달, 대상은 시스템클럽, 올인코리아, 구국기도회, 독립신문 등 5개의 보수웹사이트들이며, 표본샘플은 총 493개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요 서술형태는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 에세이형, 물음에 대한 답변 또는 의문을 제시하는 문답형, 주요 내용을 인용·짜집기하거나 사례 및 부연설명의 자료로 활용하여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핍글’의 형태를 띠는 복합·첨부형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내용은 ‘계엄군의 합법적 진압 및 자위권 행사로서의 발포’, ‘5·18 당시 간첩의 활동’, ‘5·18 원인으로서 유언비어’, ‘시위대의 폭력 및 발포’, ‘북한, 김대중의 시주를 받은 선전활동’, ‘시민군의 정체와 시민군의 살인행위’, ‘시위대의 교도소 습격 이유’, ‘사망자 중 신원 미확인자의 정체와 군경의 피해’, ‘북한의 개입’, ‘5·18의 성격, 민주유공자, 특별법 및 재판에 대한 비판’, ‘기타 사항’이라는 총11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복권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아직 미해결된 진실규명의 과제들로서, 5·18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시민군의 무장과 북한의 연계설을 제기하여 진정한 가해자를 재규정하는 등 기존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보수웹사이트의 게시글 중 대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신뢰도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 신문, 사진, 동영상, 서적 및 잡지, 5·18 참여자의 증언, 청문회·수사·재판기록 등 자료들을 가공, 편집,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광주항쟁을 폄하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 근거가 불분명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을 ‘직접적 참여자’의 증언처럼 제시하기도 한다. 보수웹사이트의 텍스트는 주로 지만원, 역사학도, 바로잡기라는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노무

현 대통령 탄핵, 총선, 자유주의연대 출범 등이 있었던 2004년에 전체 글의 29.4%, 이중 절반은 '광주사태의 재평가'라는 관점에서 5월에 집중 생산되었다. 그리고 지만원 이외의 필자들의 글이 거의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도 2004년이다. 이들은 5·18을 '사태, 반란, 내란, 폭동행위'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빨갱이, 좌파, 조작' 등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9).

오승용(2012)은 5·18 진실규명을 1980년 5월부터 1989년 광주청문회, 1989년 광주청문회 이후부터 1998년 특별법 및 재판까지 시기,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는 정권이 5·18항쟁을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 지역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정권의 입장은 곧 보수세력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당시에도 국가권력의 조직적 부인 행위가 있었다.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결과 광주청문회 당시 국방부 511위원회와 보안사 511분석반이 청문회에 대비를 하였는데, 보안사는 5·18 당시 보안사의 활동에 대한 예상 질의답변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파일을 준비하고, 민정당 의원들의 역할도 미리 분담하였다. 5·18에 대한 부인주체는 1996-1997년 전·노 재판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정권이 아니라, 언론이나 보수적 시민사회가 5·18 왜곡의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5·18 특별법 위한 주장, 전두환 정권 정통성 옹호, 간첩침투, 색깔론 제기 등 5·18 왜곡 시도를 하였다¹¹⁾. 오승용은 2000년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주도하는 세력을 뉴라이트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왜곡을 시도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독재수구세력에서 반공주의 회복을 통한 국가정체성 수호세력으로 보수의 정체성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상징조작을 통하여 진보진영의 정당성의 근거를 박탈하고, 보수세력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는 '광주=용공=친북=반민족', '영남=반공=반북=국가정통성'이라는 호남과 비호남의 두 개의 국민전략을 통하여 5·18을 지역주의적 틀에 가두는 것이다. 네 번째는 2002년 촛불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및 총선 등 특정 정세에 개입하여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이다. 다섯 번째는 한 집단 내의 입장이 점차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집단사고와 집단극화의 영향이다. 한편 뉴라이트의 5·18 왜곡은 사실관계의 왜곡,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의견·경험담의 인용 및 기존 자료의

11) 구체적인 내용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2009) 참조.

가공과 재해석, 5·18항쟁의 민주화 운동적 성격의 부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관계의 왜곡은 직접적인 왜곡과 함께 자료의 의도적 오역을 통한 왜곡 등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은 5·18항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사건이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가 아니며,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¹²⁾.

2) 관련이론 검토

(1) 스탠리 코언의 ‘부인이론’

부인(否認)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¹³⁾, 사실관계나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불인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개념 규정과 달리, 부인 내용과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부인의 주체에 따라 개인적 부인, 국가의 공식적 부인, 또는 사회 전체적인 문화적 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해자, 방관자, 피해자의 부인으로도 구분 가능하다. 또한 부인의 시점에 따라 동시대적 부인과 역사적 부인으로, 부인의 공간에 따라 국내 사건에 대한 부인과 국외 사건에 대한 부인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혹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스탠리코언, 2009: 52쪽)”이다. 이러한 주장은 진실일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거짓일 수 있다. 또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경우일 수도 있다. 스탠리 코언은 이러한 부인의 내용을 문자적 부인과 해석적 부인, 함축적 부인으로 구분하였다. 문자적 부인은 사실, 또는 사실에 관한 지식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수사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해석적 부인은 사실의 발생은 인정하지만 그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어 변경, 완곡어법 구사, 기술적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인종청소가 아니라 인구교체, 고문이 아니

12) 보수세력은 광주시민들이 계엄군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고, 파출소, 교도소 등 국가기관을 습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5·18항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경제개발의 수혜를 받지 못한 호남인들의 불만이 김대중의 배후조종 하에 표출된 것이 5·18항쟁이기 때문에 5·18항쟁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인데, 5·18 당시 간첩,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시민을 선동, 폭동을 일으켜 군인을 살상하였기 때문에 이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오승용, 2012: 62, 63쪽)

13)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라 경미한 물리적 압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합축적 부인은 사실 자체와 사실에 대한 해석을 부정하지 않으나, 심리적, 정치적, 도덕적 함의를 부정, 축소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는 정당화, 사건의 중요성이나 함의를 부정하는 합리화 또는 회피 등이 있다(스탠리 코언, 2009: 52-61쪽).

스탠리 코언은 부인을 심리학적 의미에서 분석하여 정신분석학, 자기기만 이론, 인지심리학 이론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인의 실제 작동방식 분석을 위해 해명과 정당화, 핑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정당화는 어떤 행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행위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는 요인을 부인하는 해명이고, 핑계는 어떤 행위가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부인하는 해명이다. 한편, 부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도 있다. 공유된 부인인 공모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가장 잘 작동되나, 사실이 너무 명백할 때는 최소화, 완곡어법, 농담 등의 기법으로 포장된다. 또한, 부인기법 중 타인에게 자신의 일탈을 전가하여 비난받게 하는 '공격적 결백'이 있는데, 이 경우 주변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집단사고 역시 조직적 부인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집단사고는 불편한 진실을 차단하여 집단 환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개인의 문제의식은 억압되고, 외부 정보는 검열되며, 이 가운데 집단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부인의 방법 중 또 하나는 의도적인 정보 흐름의 차단이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묻지 않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부인이 성공하는 것이다(스탠리코언, 2009: 152-171쪽).

인권침해자의 부인은 인지의 부인, 도덕적 무관심과 5대 무효화 기법인 책임의 부인, 피해나 손상의 부인, 피해자의 문제 및 잘못 지적, 비판자에 대한 비판, 하위문화의 중시 및 충성과 같은 7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는 것의 부인', 즉 인지의 부인은 보통 하급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인권침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인지의 부인을 하지 않는다. 사실 자체의 부인, 현실을 모호하게 함, 명백한 진실의 흔적과 자취를 지우는 것 등은 인지의 부인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이다. '도덕적 무관심'은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도덕률을 과격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행위 자체에 이미 정당화가 녹아 들어가 있으며, 자신들이 믿는 이데올로기 바깥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세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책임의 부인'은 주도적인 행위의 부인, 의도의 부인, 자율성의 부인, 선택의 부인 등이 있으며, 권위에의 복종, 순응, 필요성, 분할이 책임의 부인에

대한 해명이 된다. 하급자들에게는 상부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것이 가장 손쉽게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상황의 압박, 주위의 요구, 기대 같은 요소들에 의해 순응을 하게 되거나, 자기방어의 필요성 때문에 행동을 하였고, 자아 분할된 자율적인 부분의 자기 행동 조종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피해자 '손해의 부인'에는 손해의 축소 또는 법적인 재해석 등이 포함된다. 공식 담론에서 손해의 부인은 피해자들이 천대받는 소수집단이거나 집단의 언어와 문화가 폭력적일 때, 인권침해자가 평소 피해자를 경멸할 때, 가해자가 장기간 인구집단 전체를 완전 지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 존재 부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비판자를 비판하'는 것은 비판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역비판이다. '더 높은 차원의 충성심에 호소'하는 것은 친구, 또래집단, 패거리 의리에 호소하는 것으로, 민족지상주의도 여기에 해당한다(스탠리코언, 2009: 187-228쪽).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집단적 부인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우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경우, 그리고 문화적 망각이 일어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주도의 부인은 사건 발생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선전하는 방법 등으로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부인은 수정주의자들의 홀로코스트 부인운동 같은 것이다. 문화적 망각은 부인의 가장 폭넓은 형태이다. 이때 문화적 억압이 합의를 가장한 현실로 변질된다. 국가가 개입할 경우 집단적 기억이 억압되면서 문화적 망각이 일어나고, 국가의 개입이 없을 때는 과거를 잊은 것 같은 대중적 문화가 형성되면서 문화적 망각이 일어난다(스탠리코언, 2009: 273-300쪽).

한편, 코언은 가해자, 피해자 외에도 방관자를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에 의하면 방관자는 타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은 사건을 목격하고,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도 눈을 감는데,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를 승인, 방조하고 다른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방관자들은 가해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명을 하고, 양자는 모두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책임을 법적 유죄성으로, 방관자는 이를 인간의 의무로 파악하는 등 같은 말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스탠리코언, 2009: 172-179쪽).

(2) 악셀 호네프의 '인정투쟁'

악셀 호네프는 관념론적인 헤겔의 초기 인정이론을 조지 허버트 미드의 사회심리학을

토대로 자연주의적으로 전환하여, 도덕적 사회발전을 해명하는 기본적인 이론의 틀로서 인정투쟁을 제시하였다. 조지 허버트 미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작용을 자기 안에 불러일으킬 때, 주체는 자기 행위의 상호주관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내적 충동의 집합이자 창조적 반응과 개성화의 원천인 '주격 나'와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상으로서 자신을 대상화시킴으로써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해주는 '목적격 나'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주체의 형성 문제에 적용하였다. 미드는 헤겔의 관념론적 인정이론을 다음과 같이 경험적으로 변환시켰다. 그는 우선 자아의식 형성을 상호주관주의적 관념 아래 접근하였다. 이것은 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타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재현된 관점인 '목적격 나'에 의해서 지각할 때 주체에게 자기의식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드는 다음으로 실천적 자기관계, 즉 도덕적·실천적 정체성의 형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주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수행하는 반작용 행위는 개인적 환경 속에서 부여된 규범적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체는 점점 많은 수의 상호작용 상대자의 규범적 기대를 자신의 행위 속에 일반화함으로써 사회적 행위규범의 표상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미드는 사회적 의무에 대한 창조적 이탈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격 나'를 끌어들인다. '주격 나'는 사회의 자극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반작용을 통해 개성화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요구는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목적격 나'와 갈등을 일으킨다. 이때 주체는 '주격 나'를 위한 새로운 인정형태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주체는 이상적인 '목적격 나'를 수립하여 미래의 전체의지인 확장된 법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새로운 인정형태를 형성한다. 미드는 다음 단계로 가치평가적 '목적격 나'의 형성을 연구하였다. 미드에 의하면, 공동체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담지자로서 주체에게 인정된 속성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체는 상호작용 상대자에게 자신의 능력과 속성이 사회에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로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실현을 하고자 한다(악셀 호네프, 2011: 144-182쪽).

악셀 호네프는 이러한 미드의 논지를 발전시켜서 인정이론의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다양한 상호인정 형태에 인간의 실천적 자기관계의 다양한 단계가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과정에서 인정투쟁이 등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무시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인정형태를 원초적 관계인 사랑 및 우정, 권리관계인 권리, 가치 공동체인 연대로 나누고 각각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라는 실천적 자기

관계가 대응한다고 정리하였다. 사랑, 우정이라는 인정형태에서, 주체들은 서로를 욕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욕구 속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한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인정형태인 권리와 관련해서는, 주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때, 그 주체는 공동체 내에서 권리의 담지체로 이해될 수 있으며, 권리인정을 통해서 자신을 공동체 내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인격체로 존중하게 된다. 세 번째 인정형태는 연대이며, 인정 방식은 인간의 개인적 차이를 결정짓는 사회적 가치부여이다. 사회적 가치부여는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가치 지평인 지배적인 윤리적 목표관을 통해 규정되며, 그 형태는 역사적으로 가변적이다. 즉 윤리적 목표관이 개방적이고 위계적 배열이 약하면, 사회적 가치부여는 개인적 차이를 수용하고 비위계적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적 가치부여의 대상은 집단적 속성에서 개인의 업적과 능력으로 변한다. 새로운 인정질서가 의존하는 보편적 가치지평은 자기실현의 다양한 방식을 위해 개방되어야 하지만, 또한 가치부여를 포괄하는 체계로서도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적 갈등이 발생한다. 사회적 목표는 그 추상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의 평가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차적인 문화적 해석에 의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차적인 해석 행위는 문화적인 장기적 투쟁으로서, 사회 집단이 자신의 생활방식, 능력, 속성을 공개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성공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목표를 지배하는 해석 내용이 결정된다. 악셀 호네프는 근대사회라는 조건 속에서 사회적 가치부여에 따른 실천적 자기관계로 자기가치부여를, 인정형태로는 사회적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는 개성화된 주체들 사이의 대등한 가치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의 전제이다. 여기에서 대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동일한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활동과 능력이 가치 있다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대등하게 주어진다(악셀 호네프, 2011: 183-248쪽).

한편 사랑, 권리, 연대라는 인정형태에는 각각 대응하는 무시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무시는 상호주관적으로 획득한 자기이해를 훼손하며, 이 경험은 바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의 동기를 제공한다. 무시의 형태 중 첫 번째, 주체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사랑이라는 인정형태를 통해서 익힌, 자기 몸의 자주적 사용 능력에 대한 믿음을 훼손한다. 이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세계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 이어진다. 두 번째 무시

의 형태는 특정한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것은 주체의 자기존중을 훼손하는 굴욕의 경험으로, 자기 존중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세 번째 무시의 형태는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질서가 어떤 생활방식과 신념방식을 평가절하 한다면 이와 관련된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능력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되고, 이는 개인적 자기가치 부여의 상실로 이어진다(악셀 호네트, 2011: 250-263쪽).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

인정방식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부여
개성의 차원	욕구 및 정서본능	도덕적 판단능력	능력, 속성
인정형태	원초적 관계 (사랑, 우정)	권리관계 (권리)	가치 공동체 (연대)
진행방향	-	일반화, 실질화	개성화, 평등화
실천적 자기관계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
무시의 형태	학대, 폭행	권리부정, 제외시킴	존엄성 부정, 모욕
위협받는 개성요소	신체적 불가침성	사회적 불가침성	명예, 존엄성

* 출처 : 악셀 호네트, 2011: 249쪽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해자의 부인과 가해자의 지지자들이 행한 두 사건의 과거청산 성과들에 대한 부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부인의 구체적인 사회심리학적 기제, 인권침해에 대한 부인의 구조, 인정투쟁을 통한 정체성 형성과정으로서의 과거청산 부인,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부인의 특성이라는 네 가지 맥락으로 연구문제를 제기하여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정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가해자와 가해자 측 지지자들의 부인내용과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을 분석하여, 부인주체들이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밝혀낸다.

둘째,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가해자 측 지지자들의 부인과 관련하여, 부인주체, 부인시점, 부인활동과 채널을 분석하여 부인구조를 밝혀낸다. 또한 두 사건에 대한 과거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부인구조와 과거청산 이후 가해자 측 지지자의 부인구조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다.

셋째, 과거청산 부인을 인정투쟁을 통한 정체성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과거청산을 통한 정체성 해체에 대한 수구세력의 정체성 복원 투쟁이 과거청산 부인이며, 이것은 사회적 가치 및 존엄성 부정이라는 무시형태에 대응하는 수구세력의 자기 가치부여 시도라는 것을 밝혀내고자 한다.

넷째, 철저하지 못한 과거청산은 과거청산 부인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과거청산의 한계를 정리한다. 또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부인 사례를 통해서 과거청산 부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중시키고 재생산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인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 위주로 연구를 하면서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의문사위 및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 보고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공판기록 분석과 의문사위 담당 조사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해자 측 조사를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한 기관은 의문사위이나 국가기록원에서 조사기록을 비공개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 열람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개기록의 분석과 당시 사건 조사를 담당하였던 조사관 인터뷰가 필요하였다. 5·18 광주학살에 대한 가해자의 부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1988년 13대 국회 광주청문회 회의록, 1995년 이후 5·18 수사기록을 분석하였다. 이 두 자료는 5·18 광주학살의 가해자 진술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인내용과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 연구에 적합하였다.

두 사건에 대한 과거청산 이후 부인 구조 분석은 인터넷 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매체는 인터넷 수구언론매체인 조갑제닷컴, 한국논단, 독립신문, 프리즌뉴스, 코나스, 뉴스타운, 올인코리아, 구국기도, 신보수주의를 지

향하는 구국기도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부인담론을 유포하고 있는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카페의 '광주사태의 진실탐구마당' 코너,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의 '5·18' 코너, '프리존'의 '5·18 진상규명촉구방'을 분석하였다. 이 사이트들의 관련내용은 인혁당, 5·18, 광주사태를 검색어로 하여 찾았다. 문헌연구는 안병직, 지만원, 자유북한군인연합 등이 저술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관련 서적을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검색 및 분석 대상 기간은 각 사건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2011년까지로 하였다. 좀 더 구체화하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시점인 2002년 9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구축된 이듬해인 199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을 작성 중인 2012년 9월 대선정국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발언이 이슈가 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3) 연구의 분석틀

(1) 부인의 분석틀

부인은 크게 문자적 부인, 해석적 부인, 함축적 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부인들에는 완곡어법 사용, 피해자 부인, 손해의 부인, 권위에의 복종 등 다양한 구체적 부인기법들이 제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탠리 코언이 제시한 문자적, 해석적, 함축적 부인을 기본 구조로 하고, 그 하위에 보다 세분화된 부인기법을 분류·정리하여 이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을 분석하는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스탠리 코언, 2009: 209-251쪽).

문자적 부인은 가장 단순한 부인방법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자적 부인은 검증 수단이 차단되어 있고 정치적 책임 대상이 없는 독재국가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도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구사한다. 방관자, 피해자, 증인, 언론인, 인권감시단을 반박하는 것도 은연중에 문자적 부인을 하는 효과를 낳는다.

해석적 부인은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부인이 어려운 경우 기본 사실은 인정하되, 거기에 적용되는 해석을 달리하여 사건을 새로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피해자

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상식적 의미는 부인·반박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해석적 부인의 방법은 총 네 가지이다. 첫 번째, 완곡어법 사용이다. 완곡하게 사용된 호칭, 전문용어는 현실을 가리고 무해하게 보이도록 한다. 또한 완곡한 표현은 잔인한 행위를 중립화하고, 행위의 잔인성을 부인·왜곡한다. 두 번째, 범형식주의이다. 이 방법은 공인된 인권담론에서 도출된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변명을 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책임의 부인이다. 이는 위계질서 상의 부인, 순응, 필요성, 분할로 구분된다. 위계질서 상의 부인의 경우 상급자는 명령 하달의 부인, 명령에 대한 하부조직의 잘못된 이해, 비밀조직 결성 승인의 부인 등을 하고, 하급자는 상부 권위에 복종하였다고 책임을 부인한다. 순응의 경우 상황의 압박, 주의의 요구, 기대로 인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필요성은 누군가 꼭 해야 하는 더러운 일을 대신 했다는 자기방어 논리이다. 분할은 자신의 자아 중 자율적인 부분이 자기 행동을 조종했다는 변명으로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의 비행을 분리하여 자신의 부도덕성을 부정하는 제한적 혹은 상황적 도덕성, 부도덕한 행위를 실행하는 분업체계에서 아주 작은 역할만 맡은 자신은 일의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수단과 목표 해리, 부도덕한 행위는 자아 중 아주 작은 부분이 저지른 것이라는 도덕적 균형,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엄밀히 구분한다는 자기기만과 역할 거리두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 예외적 사건 주장이다.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체계적, 일상적,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 예외적 사건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합축적 부인은 사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정당화, 합리화 하는 것으로 정의의 주장, 필요성, 피해자 존재의 부인, 손해의 부인, 맥락화, 유리한 방식으로 비교가 있다. 첫 번째, 정의의 주장은 국제 인권기준의 가치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사회는 자체 도덕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초월적 사상, 독선적 주의주장, 신성한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허용된다는 것은 더욱 강한 정의의 주장이다. 두 번째, 필요성이다. 이것은 완화된 정당화 형태로, 생존투쟁, 안보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피해자 존재의 부인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원래 가해자였다, 피해자의 긴박한 공격에 대한 방어였다, 피해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논리로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둔 현상이다. 이 논리는 사건의 정당화뿐만 아니라 자기사면의 근

거도 된다. 네 번째, 손해의 부인이다. 어떤 행위로 인한 피해나 손상을 축소하거나 평가절하 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무효화하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맥락화이다. 맥락화는 보편적 기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처한 특별한 역사적 맥락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자신의 악행과 적의 악행을 비교하여 자신의 행위가 나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비판자에 대한 비판이다. 외부비판자의 위선이나 선택적 태도를 비난하여, 그들 역시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아서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와 자신들을 비교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 부인의 분석틀〉



(2) 정체성 투쟁의 분석틀 : 인정투쟁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수구세력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과거청산 성과를 부인하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 복원을 위한 인정투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의 보수·수구세력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과거청산이 준비되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해체되었으며, 다시 이들이 해체되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과거청산 부인이라는 수구세력의 정체성 투쟁은 악셀 호네프의 사회적 인정관계 구조를 토대로 접근하고자 한다. 악셀 호네프는 사회적 인정형태를 원초적 관계, 권리관계, 가치 공동체로 구분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무시의 형태를 각각 학대 및 폭행, 권리 부정 및 제외, 존엄성 부정 및 모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체는 사회적 인정을 통하여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라는 실천적 자기 관계에 도달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인정이론을 폈다. 이중 한국의 수구세력의 정체성 투쟁과 관련된 무시 및 인정형태, 실천적 자기 관계는 존엄성 부정과 가치 공동체, 자기 가치 부여이다. 즉,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역사적 성과와 도덕성, 가치관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및 과거청산을 통해서 무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굴욕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기관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 과거청산 부인을 통한 인정투쟁의 구조〉

인정방식	사회적 가치부여	➔	무시형태	수구세력의 도덕성, 가치관 및 역사적 성과의 정당성 부정
인정형태	가치 공동체		인정투쟁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
실천적 자기관계	집단적 자부심 또는 자기가치 부여		인정형태	성장을 위한 반공 공동체
무시의 형태	사회적 가치 부정 존엄성 부정, 모욕			

4) 연구내용 소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부인구조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각각 사건 발생과 과거청산의 개요를 정리하고 부인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건별로 과거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가해자의 부인내용과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부인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과거청산 이후 가해자 측 지지자들의 부인내용, 부인기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인주체인 지지자들의 특성과 지지자들의 부인시점, 부인채널과 활동을 정리하

여 과거청산 이후 부인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인정이론을 활용하여, 정체성 투쟁의 관점에서 지지자의 부인원인을 파악하였다. 3장 말미에서는 지지자들의 부인구조를 가해자들의 부인구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서로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장에서는 과거청산의 한계를 정리하고, 과거청산 부인과 피해자 트라우마의 관계를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연구의 의의, 한계를 정리하여 향후 과거청산 부인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II.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인구조 분석

1.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개요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의 개요

(1)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개요

인혁당 사건은 1964년과 1974년 총 2차례 발생하였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당시 전국적으로 정부의 '대일굴욕외교'에 저항하는 시위가 격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8월 14일 남파간첩이 개입한 인민혁명당이 학생들의 시위를 지도하였다는 인혁당 사건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시 담당검사 4명이 기소를 포기하고, 변호사가 피의자들에 대한 중정의 고문을 폭로하면서 인혁당 사건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피의자들은 반공법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위반 혐의만 적용,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113-115쪽).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대학생들의 유신반대운동을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1974년 신학기를 맞아서 대학생들은 4월 3일에 대학, 지역 연계 유신 반대 데모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월 8일 긴급조치 1호,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면서 학생 시위 주동자들과 혁신계 인사들을 대거 검거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재건위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이하 민청학련)을 지도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하였다(동아일보, 1974.4.25). 이 사건은 인혁당 사건의 연장선 위에 있었지만, 8명이 사형되고, 15명이 15년, 2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그 피해가 훨씬 커서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의 개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의문사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사를 하였다. 의문사위는 2001년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찾았고, 2002년에는 사건 피해자, 피해자 가족, 서울구치소 교도관, 경찰, 중앙정보부, 비상군법회의 관계자들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자백에 의한 사건 조작,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변조, 공판조서 허위 작성, 전격적인 사형집행과 유언 조작 등을 밝혀내었다. 의문사위의 조사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조작이 사회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는 법원의 재심 개시 및 무죄 선고에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일이 촉박한 관계로 고문에 대한 폭넓은 진술 확보 및 수사지휘라인 규명,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판결 시 외압 여부, 대법원 판결 이후 전격적인 사형집행 이유와 이 사건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86-137쪽).

의문사위 조사 이후 2005년에는 국정원 진실위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추가 조사하여, 피의자들은 인혁당 재건위가 아니라 씨클수준의 혁신계 모임을 가졌고,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받아서 강제 자백을 하였으며, 공판조서 및 사형수들의 최후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점 등을 조사결과로 발표하였다.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는 당시 수사주체였던 국정원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104-291쪽). 그러나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는, 이용택을 제외하면 의문사위와 조사 대상자가 겹쳤으며, 의문사위 조사 당시 고문 현장 및 정황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반복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253-254쪽).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유족들과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였다. 재심개시는 2005년 12월 27일에 결정되었고, 이후 16차례 공판을 진행한 결

과, 2007년 1월 23일에 하재완, 우홍선, 이수병 등 사형수 8명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한국일보, 2007.1.23). 또한 2008년 1월과 9월에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16명이 추가로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인혁당 사건 관련 옥사한 장석구도 2010년 3월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연합뉴스, 2008.1.23·2008.9.18·2009.11.17). 재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2007년 8월 245억원, 2009년 6월 200억원, 2009년 7월 약 46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연합뉴스, 2009.7.22). 이 사건의 재심 무죄판결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과거 군사정권에서 발생했던 조작간첩 사건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회복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개요

(1)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개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장기 집권을 하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되자, 군사정권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신헌법 폐기를 결정하고, 정승화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하나회는 12·12 쿠데타를 통해 군부를 장악하고 국방부장관과 총무처장관 등 내각에도 신군부 세력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맡으면서 국가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민주화운동과 야당을 탄압하였다. 그러자 학생들은 1980년 봄 신학기가 되자 비상계엄해제와 신군부퇴진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신군부는 이에 5월 17일 계엄사 전국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 건의를 의결하였다. 이후 신군부는 계엄포고령 10호를 통해서 모든 정치활동 중지, 대학교 휴교, 국회폐쇄, 김대중 등 구금, 김영삼 가택연금, 전국 대도시 군대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김용철, 2007: 72-75쪽).

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이 학교 교문에 배치된 계엄군에 항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비상계엄해제, 휴교령철폐, 전두환 퇴진 등을 외치면서 시

위를 벌였고, 계엄군은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였다. 또한 계엄군은 5월 21일에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하는 광주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인근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에서 확보한 총기로 무장을 하고 계엄군에 맞서 시가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계엄군은 5월 21일 저녁에 광주시 외곽으로 후퇴를 하였으나, 5월 27일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시민군이 집결해 있는 도청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10일간 진행되었던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61명이 사망하고 64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2,948명이 부상을 당하고 1,364명이 연행·구금되었다(안종철, 2007: 504-507쪽).

(2)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개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시도는 제13대 국회에서 결성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에서 개최된 5·18 청문회를 통해서 처음 이루어졌다. 당시 5·18 청문회가 성사되는 데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 번째, 노태우 정권은 87년 6월 항쟁의 영향을 받아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비록 군사정권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지만 5공 청산이라는 쟁점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두 번째, 1988년 4.26 총선의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소수정당이 되면서 5공 청산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학생 및 재야의 역량이 '전두환, 이순자 구속 처벌투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 올림픽이 폐막한 뒤, 10월 학생들이 집중적인 5·18 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여파는 11월 5·18 청문회의 개최로 이어졌다(조현연, 2007: 467-472쪽). 5·18 청문회는 많은 성과도 낳았고, 한계도 보였다. 성과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관계가 밝혀졌다. 즉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하고 이어서 5·17 비상계엄확대조치로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광주가 희생양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1980년 초 전군에 걸쳐 실시된 폭동진압훈련의 실상이 드러났다. 비상계엄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에는 북한의 특별한 도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군에서 실시되었던 '충정훈련'도 북한을 상대로 한 훈련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폭동을 진압하는 훈련이었던 것이다. 또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신군부 세력의 정권찬탈 음모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초기의 과잉진압 및 계엄군의 집단발포, 양민학살의 진상이 국민들에게 낱알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5·18 청

문회의 한계도 분명했다.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였고, 그 결과 발포 책임자, 명령계통과 지휘체계의 이원화 배경, 미국의 역할 등 핵심적인 사안들이 규명되지 못했다(안종철, 2007: 511-512쪽). 그리고 신군부의 핵심이었던 전두환은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던 1988년에는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결국 1989년 12월 31일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증언으로 일관하였고, 이날 증언을 끝으로 사실상 청문회는 종결되었다.

한편, 광주청문회 무렵부터 5·18 관련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 운동을 대중운동과 함께 전개하였다. 1988년 10월에는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에서 전두환 등 군지휘관 9명을 고소하였고, 1994년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와 광주항쟁 피해자·부상자·유가족 등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전두환 등 35명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전자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2년에 무혐의 처리를 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95년 7월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결정에 반대하여 야당을 비롯하여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학생 등 전 국민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1995년 10월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사태가 급반전되어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1995년 12월 21일에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¹⁴⁾'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도록 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¹⁵⁾'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6년 2월 26일부터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선고통해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등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재수사를 통해서도 집단 발포 책임자, 지휘권 이원화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내란죄를 범한 전두환, 노태우가 1997년 12월 사면되는 등 한계가 존재하였다.

14)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국가의 소추권 행사 장애로 인한 공소시효 진행 정지,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5·18 관련자들의 특별재심, 정부의 정신계승 기념사업 추진, 5·18관련자 보상의 배상 간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인한 상훈 치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천(2006)은 공정한 검찰권 운용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1항의 재정신청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야 하며, 현재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재심 개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거의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5) 이 법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와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인 분석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부인은 의문사위와 국정원 진실위, 법원 재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다. 부인내용과 방법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문사위와 국정원 진실위의 진술조서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어 있어 공개된 보고서와 의문사위 조사관의 면담, 그리고 재심재판 당시 공판조서를 기초 자료로 하여, 가해자의 부인구조를 분석하였다.

핵심적인 가해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수사를 총 지휘했던 중앙정보부의 6국장 이용택과 윤종원 계장,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했던 경북도경 소속 경찰관이 다. 가해자의 범위를 좀 더 넓히면 당시 중정에서 인혁당 재건위 수사를 보조하였던 서울시경 소속 경찰관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외에 공소를 제기했던 군 검찰관과 보조를 했던 검찰서기,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 및 대법관, 그리고 공판조서를 위변조한 법원서기, 구치소에서 유언을 조작한 교도관이 가해자 그룹이 될 수 있다.

이들의 부인은 사건 수사의 책임성, 고문수사, 공판조서 및 유언의 조작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부인 방법은 문자적 부인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외에 해석적 부인, 함축적 부인이 일부 사용되었다. 의문사위 조사 당시에는 유신정부의 재판결과를 뒤엎는 사실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부인을 주로 하였다. 부인의 내용과 사회심리학적 부인방법을 쟁점별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1) 고문수사와 관련한 부인 : 문자적 부인의 사용

고문수사와 관련해서 1974년 중앙정보부 6국장이었던 이용택은 자신이 아는 한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법원 자진출석, 당시 중앙정보부장 방침 등을 설명하여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이용택) 내가 아는 한 중정에서는 고문이 없었다. 74년 당시에도 하도 고문당했다고 해서 법원에 내가 증인으로 나간 적도 있다. 법적으로 정보기관 소속 요원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해명하겠다고 자진해서 나갔다. (현재 살아 있는 이들의 증언에 의해 고문이 인정되는데)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인혁당 사건 당시에는 중정부장이 검찰 출신의 신직수 씨여서 간부들에게 매일같이 ‘따귀 한 대라도 때렸다는 말 들리면 국장부터 당장 모가지’ 라고 주지 시키곤 했다. 당연히 나도 매일 조사실을 순찰하고 했는데 (일요신문, 2007.2.8)”

중앙정보부 계장인 윤종원, 사건 전담 수사관인 손중덕, 박재명, 임찬욱은 의문사위와 국정원 진실위 조사에서 고문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또한 고문이 주로 이뤄졌다고 지목되었던 중정 지하 보일러실과 관련해서 윤종원, 손중덕, 박재명은 마치 부인의 공모가 이루어진 것처럼 동 장소가 협소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경북도경 파견 경찰) 손중덕, 박재명, 임찬욱은 고문을 한 일도 없고 고문 장면을 목격한 일도 없다고 완전히 부인을 했다. 다만 박재명은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꼈던지 대공업무를 수십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반문한 적이 있었다(의문사위 조사관 면담기록, 2012: 4쪽). 그리고 수사장소 중에서 고문실로 지목되었던 중정 지하 보일러실에 대해서, 손중덕은 전혀 내려가 본 일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의문사위 조사관 면담기록, 2012: 4쪽).”

“(윤종원) 남산 6국 건물 1층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방이 다 민기여서 큰 소리라도 나면 다 들리는 곳이었고, 보일러실은 매우 협소한 장소이고 옥조 같은 것도 없었다. (손중덕) 지하실은 보일러실로 이용하고 있고 매우 협소했던 곳이라 지하실에서 고문은 커녕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박재명) 중정 6국 지하실은 큼지막한 보일러 기계가 딱 차 있었던 곳인데 그곳까지 내려가 조사할 일도 없었고 고문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임찬욱) 6국 건물 지하 조사실을 가보거나 본 사실이 없고, 고문에 사용한다는 전화기를 본 기억이 없다(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252-253쪽).”

한편, 의문사위 조사에서 이덕삼과 신홍수는 자신들은 고문을 하지 않았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문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다. 즉, 고문수사라는 행위는 인정을 하되 자신들이 행위자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문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건 이덕삼이 최초였다. 당시 대구에 직접 내려가서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조사를 했는데, 이때 이덕삼이 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에서 물고문 장면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소위 통달구이라는 것인데 사람을 막대기에 매달고 물을 얼굴에 붓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덕삼은 자신은 고문을 안했고, 중정 수사관이 고문을 했으며, 경북도경 경찰들은 보조만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박재명, 손중덕 등 가해자를 정확히 지적했는데, 이덕삼은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문 주체를 중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시 또 기억나는 것은 이덕삼이 먼저 전기고문 도구를 넣는 가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꺼냈다가 진술을 더 하지 않고 멈춘 일이 있었다. 그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실수를 했다. 이덕삼한테 나중에 그 가방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 이외에 신홍수도 피의자들이 중정 수사관들한테

는 고문을 당했을 거라고 답했다(의문사위 조사관 면담기록, 2012: 4쪽)”

“(신홍수 의문사위 진술내용) 고문은 아마 윤종원의 부하들이 했을 것이다.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 별로 저항하지 않았고, 중정 사람들이 고문하는 등 따로 처리하는 것 같았다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251쪽)”

그러나 이덕삼은 국정원 진실위 조사와 재심법원 증인신문에서 의문사위 진술을 반복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덕삼은 의문사위에서 인혁당 재건위 수사 당시 물고문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진술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극단적인 문자적 부인을 보였다. 이러한 이덕삼의 태도는 앞서 언급했던 부인의 공모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당시 고문수사에 대한 입증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은 대부분 간접적인 입증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시 진술을 반복한다 해도 허위 진술을 폭로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6국에서는 2~3층 일반 사무실에서 조사하였다. 보일러실에서 조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물고문은 본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 조사 중에 제일 심한 고문이 잠 안재우는 정도였다(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253쪽)”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서는 증인의 기억대로 된 조서가 아니라는 건가요) 물고문 했었던가 그런 이야기한 사실 없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가혹행위 본 적 없네요)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8.28a).”

또한 신홍수 역시 재심법원 증인신문 당시 고문수사와 관련하여 의문사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회피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와 상반되게 “고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의문사위 진술을 반복하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9.18).

2) 검찰관 조사 당시 수사관 입회에 대한 부인 : 문자적 부인의 사용

수사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지만, 검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의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관 조사의 임의성 확보는 대단히 중

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보부의 고문수사가 일반화되어 있던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검찰관 조사에 입회했다면, 피의자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로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위 조사 당시 검찰서기였던 이상대를 비롯해서, 이덕삼, 서울성북서 파견경찰 나갑열은 검찰관 조사에 수사경찰이 입회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검찰서기 이상대, 경찰 나갑열, 이덕삼이 검찰관 조사에 수사관이 입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나갑열은 그 목적이 피의자의 혐의 부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문사위 조사관 면담기록, 2012: 5쪽).”

그러나 검찰관 이원무와 전세봉 등은 의문사위와 국정원 진실위 조사에서, 검찰관 김강진과 김태근은 재심법원 증인신문에서 검찰관 조사 시 수사경찰 입회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갑열과 이덕삼 역시 국정원 진실위 조사와 재심 법원 증인신문 당시 수사경찰의 검찰관 조사 입회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며,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241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23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23b;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8.28b).

3) 인혁당 재건위 조작에 대한 부인 : 문자적 부인의 사용

의문사위 조사에 의하면 중정의 수사팀장인 윤종원을 비롯하여 경북도경 파견경찰인 신흥수, 박재명, 손중덕, 이덕삼, 임찬욱, 그리고 서울시경 파견경찰인 전재팔, 군검찰관인 이원무 등이 인혁당 재건위 결성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며, 단지 하재완이 작성한 북한방송 청취노트만이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또한 윤종원, 이덕삼, 신흥수는 첩보를 입수하거나 광범위한 내사활동을 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다(대통령 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116쪽). 그리고 당시 수사 경찰관들은 자신들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아니라 단지 긴급조치 위반사건으로 조사를 하였고, 조사 말미에 윤종원의 지시로 인혁당 재건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수사기록에도 인혁당 재건위 결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었다(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120쪽).

그러나, 중앙정보부 6국장이었던 이용택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전혀 조작되지 않

있고, 당시 많은 증거 자료들이 확보되었다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조작을 문자적 부인 하였다.

“(이용택) 사건 자체가 엉터리고 조작이고 날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간생략) 이게 바로 2차 인혁당 사건인데 수사 과정에서 많은 증거 자료들이 확보됐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으로 구속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마치 중정에 의해 완전 날조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일요신문, 2007.2.8).”

이러한 문자적 부인은 발생한지 오래된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극복하기 대단히 어렵다. 각종 기록 등 물질적인 증거가 이미 사라졌고, 증인들도 사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 재소자 신분장들이 보존되어 있어, 이러한 부인의 허와 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4) 공판조서 조작 : 문자적 부인의 사용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의문사위와 국정원 진실위는 공판조서가 조작, 변조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당시 유가족과 피고인, 변호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부인한 내용이 공판조서에는 시인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인들을 계호하였던 교도관 김광식 역시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보통군법회의의 서기로 공판조서를 작성했던 조규철은 의문사위와 국정원 진실위 조사에서 “공판조서는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공판조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279-283쪽).

5) 사형수들의 최후진술 조작 : 함축적 부인과 문자적 부인의 사용

한편 사형집행명령부 상의 사형수들의 최후진술 조작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것은 사형수 8명의 ‘종교의식을 거부한다’는 진술과 도예종의 ‘조국이 하루 속히 적화통일 되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진술이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었던 김판근은 도예종이 “통일을 못보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한마디만 말했지 적화통일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사형장에 입회하였던 교도관 이정희, 안종율, 김용표는 사

형수들이 종교의식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사형집행명령부를 직접 작성한 이강준은 의문사위 조사에서 “공산주의자가 ‘통일’이라고 하면 적화통일이라고 생각해 기재”했을 것이라고 자기 행위를 남북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맥락화하여 정당화하는 함축적 부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강준은 국정원 진실위 조사에서는 이 입장을 번복하고 문자적 부인으로 돌아선다. 이강준은 “사형수 대부분이 종교의식을 거부했”고, “사형수들을 상대하면서 양심상 유언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의역할 수는 없고, 액면 그대로 유언내용을 적었다. 도예종이 분명 적화통일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265-266쪽).

6) 수사의 책임과 관련한 부인 : 해석적 부인의 사용

국가폭력은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군대, 경찰, 정보기관 등 정부 조직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러한 조직은 강력한 상명하복 및 지시-보고 라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책임의 부인이 발생한다. 책임의 부인은 해석적 부인의 하나인데, 해석적 부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경북도경 파견경찰들은 인혁당 재건위 수사가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한다. 이덕삼은 윤종원 계장이 와꾸를 만들었고 자신들은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해야 했다고 하며 박재명은 이 사건이 정책적 사건이어서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관 이원무 역시 자신은 중정의 조서에 맞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의문사위 조사에서 진술했다. 특히 윤종원, 박재명, 이덕삼은 이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직접 보고되고 결재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들의 뜻에 의해 사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상부 권위에 복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감면된다는 논리이다.

“대부분은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에서 지휘하는 사건이라서, 중앙정보부에서 시키는 대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재명은 이 사건이 정부의 정책적 사건이라서 일개 수사관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그랬고, 이덕삼은 윤종원이 사건의 와꾸를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다(의문사위 조사관 면담기록, 2012: 2~3쪽)."

"이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 이것은 증정의 계장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종원이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고, 경북도경 소속 경찰관 역시 '이용택 증정 6국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 고 윤종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115~116쪽)"

책임의 부인은 이 뿐만 아니라 '분할' 중 '수단과 목표의 해리'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체 분업체계에서 자신은 아주 작은 역할만 맡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주 미미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의문사위 조사 당시 임찬욱이 자신은 당시 순경으로 주심문관이 아니고 주로 감시업무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의문사위 조사관 면담기록, 2012: 3쪽) 이것은 '수단과 목표의 해리'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책임의 부인 중에서 상부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인권침해를 직접 수행한 하급자에게 책임을 묻고 상급자는 명령 하달을 하지 않았다거나 명령을 하급자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의 부인은 윤종원에게 있었다. 윤종원은 국정원 진실위 조사에서 "인혁당 재건위 관련 수사는 경북도경이 주도했고, 일일수사상황을 경찰 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취합하는 과정은 있었을 것"이라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통한발전위원회, 2007: 239쪽).

7)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발언: 해석적 부인의 사용

이덕삼은 윤종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사건을 만들라는 의미로 '물건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의문사위 조사에 의하면 당시 경북도경 파견경찰들은 수사 말미에 갑자기 당시 혁신계 피의자들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했다는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120쪽),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물건을 만들라'는 지시는 조직사건을 만들라는 지시였지만,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건 조작이라는 현실이 가려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완곡어법, 전문용어 또는 은어의 사용은 행위의 성격을 다르게 해석하는 매개가 되고 사건의 잔인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곤 한다.

8) 안보를 위한 사건 수사의 정당화 : 함축적 부인의 사용

함축적 부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발생한 사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하는 논리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함축적 부인의 기법으로 안보를 위한 '필요성', 공산체제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특별한 역사적 맥락으로 인하여 일반적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맥락화'가 활용되었다. 이러한 부인은 중앙정보부 6국장이었던 이용택의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당시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모두 반민주 인사로 매도당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공산체제하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절대 과제였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무리도 뒤따랐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인데 '과'가 전체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일요신문, 2007.2.12).”

위와 같은 함축적 부인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보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설득력을 발휘한다.

9) 비판자에 대한 비판을 통한 신뢰성 부정 : 문자적 부인의 사용

사실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비판자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자의 태도와 위선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함축적 부인과의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문자적 부인에 속한다. 이러한 비판은 이용택의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발견된다. 그는 이러한 부인기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비판자인 국정원 진실위를 비판하였다. 그는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면 조사의 신뢰성을 부정하였다.

“작년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국정원 진실위 관계자들에게 네 시간에 걸쳐서 다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말은 아예 귀담아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나.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일요신문, 2007.2.12).”

3.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인 분석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해자의 부인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와 1996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본 논문에서는

1988~1989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과 1995년 전투환의 답변서, 1995~1996년 5·18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서 가해자들의 부인구조를 분석했다.

핵심적인 가해자는 전투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등 군 지휘부와 허화평 비서실장, 이학봉 대공처장, 권정달 정보처장 등 보안사 핵심간부, 그리고 임수원 3공수 11대대장, 권승만 7공수 33대대장, 김일옥 7공수 35대대장, 최용 11공수여단장, 안부용 11공수 61대대장 등 공수부대 현장지휘관이다. 물론 이외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조작·은폐 및 신군부의 정권 장악에 동조한 언론사, 5월 17일 국무회의 참가자 위협 및 5월 20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를 자행한 군인들, 학생 및 정치인 체포·구금 및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수사·재판 가담자 등 수많은 직·간접적인 가해자들이 있으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권력의 교체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해서 핵심적인 가해자를 설정했다.

이들의 부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5·17 비상계엄확대와 관련한 부인들이다. 5·18은 5·17 비상계엄확대 이후에 공수부대가 광주에 배치되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한 부인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국수습방안 수립과정 참여 및 공유, 북한의 남침위기설 등 5·17 비상계엄확대의 이유, 5·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국무회의 병력배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한편, 5·20 국회의원 등원 저지, 5·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 등은 모두 5·17 비상계엄확대와 연관되어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들을 본 논문에서 다룬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부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 범위에서는 제외했다. 두 번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인이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지휘권 이원화, 계엄군 발포 명령자이며, 이외에도 시위진압 초기 계엄군의 과잉진압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원인, 계엄군 실탄지급 경위, 희생자 숫자와 같은 쟁점들이 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문자적 부인과 함께, 완곡어법 사용, 범형식주의, 책임의 부인, 필요성, 피해자 존재의 부인, 손해의 부인 등 다양한 해석적, 함축적 부인의 기법을 활용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아래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인의 내용과 기법을 쟁점별로 자세히 분석하겠다.

1) 5·17 비상계엄확대와 관련한 부인

5·17 비상계엄확대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확대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시국수습방안 수립 참여 및 공유, 비상계엄의 확대 이유, 비상계엄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신군부 주도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국무회의 장소인 중앙청 병력 배치에 대한 부인 내용 및 기법을 분석하였다.

(1) 시국수습방안 수립 참여 및 공유 : 문자적 부인과 진술의 회피

시국수습방안은 1980년 5월 초순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 하에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이 주도하여 수립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국가비상기구 설치이다. 권정달은 검찰조사에서 시국수습방안 수립을 위해서 전두환을 비롯하여 보안사의 허화평 비서실장, 허삼수 인사실장, 이학봉 대공처장, 장도영 보안처장 등과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후 유학성, 황영시, 차규현,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세력들과 초안내용을 검토하고 실행과정에서의 병력 동원 등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1999a, 「권정달 진술조서 제3회」: 202, 203쪽).

그러나 신군부 핵심세력과 보안사 참모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시국수습방안을 국방부장관에게만 통보하였다고 부정하였고,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5·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이전에는 시국수습방안에 대해서 몰랐다고 부인하였다.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은 시국수습방안 협의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회피했지만, 진술내용을 보면 시국수습방안 수립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문자적 부인을 하는 것이다.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 역시 군의 정국 장악 지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비상계엄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 정치활동 규제문제에 대해 정호용, 노태우, 황영시, 차규현, 유학성 장군 등은 알고 있었나] 질의내용과 같은 사실은 없었음. 시국수습방안을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만 통보하였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인사에게도 통보한 바가 없음(전두환 측, 1995)”

“저는 5월 17일 회의에 나가서 비상계엄확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국회, 1988.12.7: 17쪽 정호용 증언), 저는 권정달씨가 그런 것(국보위)을 기안을 하고 있다든가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한테 그러한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국회, 1988.12.7: 73쪽 정호용 증언).”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문제 등은 보안사 정보처 산하 정세분석반이 계획, 입안하여 참모들 간에 협의를 거쳐 확정됐는데) 그런 문제를 협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권정달 정보처장이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참모들 간에 논의했다는 뜻이 아니라 참모회의에서 일의 진행 경과를 제목 정도 이야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검찰, 1999b, 「허화평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 146, 147쪽).”

“(5월 초경 전두환이 보안사 핵심참모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지시를 했나) 그런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검찰, 1999c, 「이학봉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 146쪽).”

이와 같은 사실관계 부인 이외에 ‘기억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며 진술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태우는 시국수습방안 수립 경위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이학봉은 보안사 참모들의 시국수습방안 확정, 신군부세력들의 시국수습방안 공유 및 임무 분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이라며 시인을 거부하였다.

“(5월 초 전두환이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의자와 정호용, 유학성, 황영시, 차규현 등 신군부 세력이 전두환으로부터 시국수습방안을 듣고 지지하기로 결의했나) 기억이 없습니다(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 51, 52쪽).”

“(전두환의 대책강구 지시에 따라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정도영, 피의자 등이 시국수습방안을 확정했나)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보안사 처장들과 유학성, 황영시, 차규현, 노태우, 정호용 등이 권정달에게 시국수습방안 설명들은 후 참석자 전원이 임무를 분담해 실행하기로 결의했나)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검찰, 1999c, 「이학봉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 176, 177쪽)

(2) 5·17 비상계엄확대 이유 : 함축적 부인의 사용

5·17 비상계엄확대 이후 국회 소집 저지, 정치인 구속 및 연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공수부대에 의한 광주학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상계엄확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의 원인에 해당된다. 신군부 세력은 이러한 5·17 비상계엄확대의 이유와 관련하여 주로 함축적 부인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남침위협, 남한 내 혼란수습과 같이 안보를 위해 비상계엄의 확대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학생, 정치권, 재야세력이

사회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안보와 관련되어 있지만 광주학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정치인 구속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비상계엄확대의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존재를 부인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전두환과 국방부 장관 주영복, 계엄사령관 이회성은 모두 북괴의 남침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전두환은 “북한이 대남간첩지령을 통하여…… 시위 군중이 폭도로 변질되도록 점화 기폭조를 잠입시키라고 남한 내 간첩들에게 지시하고, 재야세력 중 중요인사를 암살함으로써 국민의 우발적 반감을 일으켜 대대적인 민중봉기의 계기를 조성하라고 조총련에 지령을 내렸다” 주장하였으며(전두환 측, 1995), 주영복은 “당시의 혼란한 국내상황, 수차례에 걸친 간첩침투 기도 등 북한의 남침위협 징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며(검찰, 1999e, 「주영복 진술조서」: 104쪽), “국가적인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확대하였다(국회, 1988.11.19: 88쪽 주영복 증언)고 증언하였다. 이회성은 5·18 이전 미군에서 북한의 남침 징후가 없다고 하였다고 검찰이 반박을 하자 “군사판단을 할 때에는 징후 못지않게 북괴가 남침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북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태세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징후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하는데 그 당시에는 앞에 얘기한 세 가지가 다 충족” 된다고 당시의 안보적 위협을 증언하였다(국회, 1988.12.19: 42쪽 이회성 증언).

허화평은 비상계엄확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피해자 존재를 부인하였다. 그는 “당시 학생, 정치권이나 재야 일부에서 최대통령이 제시한 정치일정을 따르지 않고 성급한 요구를 하면서 최규하 정권을 접수하겠다고 덤비고, 일부 국민들이 이에 부화뇌동하니까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면서,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는 신군부의 “집권계획의 일환이 아니라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함으로써 최규하 정권의 임무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덧붙여 “1980년 당시 혼란 조성에 앞장선 사람들은 대부분 유신 때부터 싸움을 일삼아오던 사람”이라고 비상계엄확대로 인한 피해자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강조하였다(검찰, 1999b, 「허화평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151, 152쪽.」

(3) 신군부 주도 하 5·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문자적 부인과 해석적 부인의 사용

1980년 5월 17일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확대가 의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압력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신군부는 전군주요 지휘관회의 참석자에게서 비상계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서명을 받아서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전군의 결의라며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결의가 전두환 및 신군부 주도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두환은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신은 시국수습방안을 단순히 통보하였을 뿐 논의 요청한 바 없고, 이 회의 이전 국방장관실에서 사전논의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아울러 군부의 결의를 국무위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1980년 5월 17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주영복 국방장관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는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시국수습방안의 내용을 단순히 통보하였으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시국수습방안을 논의하여 달라는 요청을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한 바가 없었음. 주영복 국방장관실에서 군수뇌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시국수습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후에도 논의내용을 들은 바가 없었음(전두환 측, 1995)”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군부의 결의를 이용하였나) 사실이 아닙니다(검찰, 1999, 「전두환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 34 쪽).”

주영복 역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협의를 하던 중 필요성을 느껴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문자적으로 부인을 하였다. 또한 회의 당일 권정달 정보처장이 찾아와서 시국수습방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당시에 저희들은 수시로 계엄하고 또 그 때는 상당히 사회가 혼란되고 그래서 모두 협의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의를 한번 할 필요도 있다. 이래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국회, 1988, 11, 19: 28쪽 주영복 증언)”

“(국보위 설립과 같은 중대사를 보안사 정보처장이 협의한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국회, 1988.11.19: 69쪽 주영복 증언).”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의 비상계엄확대 의결에 대해 전두환의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국회, 1988.11.19: 109쪽 주영복 증언).”

한편 허화평은, 5월 20일에 계엄해제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국회가 소집되자 애초에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5월 17일로 앞당긴 것이 아닌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일정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보안사에서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며, 조직에게 부여된 역할의 차이를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는 해석적 부인을 하였다(검찰, 1999. 「허화평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147쪽).”

(4) 5·17 국무회의장 계엄군 배치 : 문자적, 해석적 부인과 진술의 회피

5월 17일 21:42분 중앙청에서는 비상계엄 확대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8분 만에 처리되었다. 이 당시 국무회의장에 수도권경비사령부 무장병력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청 근무 공무원들은 5층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전화선은 절단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노태우는 무장병력을 배치해 국무위원을 위협, 비상계엄 확대선포안 의결을 강제하기로 모의한 것을 부인하였고, 본인이 주요시설 경호 차원에서 무장병력을 배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전두환 역시 이와 관련하여 노태우와 협의를 하거나 논의한 일이 없다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국무회의장 주변에 무장병력을 배치, 국무위원들을 위협해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에 대한 의결을 강제하기로 모의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무장병력 배치와 관련) 전두환 사령관과 상의한 사실은 없고, 수경사령관이 일반적인 경호, 경비 차원에서 지시한 것입니다(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54, 55쪽).”

“중앙청 병력배치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사항이며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의 소관사항도 아니며 관여한 바도 없음.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는 노태우 당시 수경사령관과 중앙청 군병력 배치

는 물론, 수경사의 어떠한 병력동원에 대하여서도 협의를 하거나 논의한 바 없음(전두환 측, 1995)”

보통 위계서열이 엄격한 조직에서 하급자가 불법적,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경우 상급자는 구체적인 명령하달을 부인하곤 한다. 이는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해석적 부인의 방법인데, 당시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관련 최고 책임자였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역시 이러한 부인 기법을 활용하였다. 노태우는 당시 중앙청 경비 지시는 인정하였지만, 공무원 감금, 전화선 절단 등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이다.

“(5.17 17시경 340여명의 병력을 출동시켜 광화문 앞에 전차 4대와 장갑차 배치, 중앙청을 에워싸고, 250여명의 헌병을 출동시켜 중앙청 현관에서 국무회의장 입구까지,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배치시켰으며 공무원들을 5층에 있는 방에 감금하고, 전화선을 절단한 것에 대해) 제가 수경사령관으로서 중앙청 경호 경비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중앙청 전화선 절단 관련) 저는 그런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 55쪽).

위와 같이 문자적 부인과 해석적 부인 외에도, ‘기억이 없다’,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5월 17일 19시 최규하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지시를 하기 이전인 17시에 이미 중앙청에 무장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조기 병력배치 근거에 대해서 노태우는 기억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하였다(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 55쪽). 이학봉은 중앙청 병력배치, 전화선 절단, 공무원 5층 감금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 비상계엄 확대 안건이 8분 만에 의결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중 보안사 요원의 중앙청 정문 출입자 통제 역시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라고 모든 답변을 회피하였다(검찰, 1999c. 「이학봉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 176, 177쪽).

2)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부인

여기에서는 가해자들이 주로 부인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 이유, 충정훈련의 책임 소재, 계엄군의 이동 관련 신군부 내 협의, 계엄군의 과잉진압, 지휘권 이원화, 계엄군 실탄지급 경위, 계엄군의 발포명령 및 경위, 양민학살 및 상무충정작전 경위, 광주학살의 희생자 규모와 관련하여 부인내용 및 사회심리학적 부인방법을 분석하였다.

(1)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 이유 : 함축적 부인의 사용

신군부 측 가해자들은 광주시민의 투석행위 등 과격시위 또는 '폭동'과 광주시민들이 퍼뜨린 악성 유언비어를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 이유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광주시민들이 공수부대 투입 이전까지 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였고, 5월 18일 이후에는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대한 자구책으로 광주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였다는 것을 무시하고, 공수부대가 투입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서 광주만의 특성, 유언비어 유포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을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게 된 이유라고 말하는 피해자 존재의 부인 기법으로서 함축적 부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함축적 부인은 노태우, 주영복, 이회성, 허화평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는 광주에 퍼진 악성 유언비어와 군 병력 투입사례가 없어 군인에게 투석을 하게 되었던 광주지역의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주영복은 학생들의 투석전이 지역 감정, 유언비어, 과잉진압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회성은 강화된 훈련, 즉 총정훈련 때문이 아니라 쌍방 간에 고조된 흥분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허화평은 광주시민을 폭도로, 그들의 행위를 폭동으로 규정하였고, 조직적인 선동과 정치적 상황이 얽혀서 큰 폭동이 일어났다면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광주사태 원인에 대해) 첫째, 광주에 퍼진 악성 유언비어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 ‘공수대원이 대검으로 임신부 배를 갈라 태아를 꺼냈다’, ‘공수부대원이 대검으로 처녀 유방을 도려냈다’ 등. 둘째 광주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서울은 시위가 자주 발생하나,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전혀 대항을 하지 않는데, 광주시민들은 이전에 군병력이 투입된 사례가 전혀 없어 군인을 경찰병력과 같이 생각해 함부로 군인에게 투석하는 등이 과잉진압을 부른 것입니다(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 63쪽).”

“1980년 5월 18일 아침 전남대 앞에서 학생 2백여명이 학교 출입을 요구하다 계엄군에 의해 거절하자 책가방 속에 준비해 온 돌을 던져 투석전을 전개한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역 감정, 유언비어 난무, 과잉진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악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검찰, 1999e, 「주영복 진술조서」 : 115쪽).”

“강화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훈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쌍방 간에 고조되어 있던 흥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회, 1988,12,19: 28쪽 이희성 증언).”

“결국 광주시민들이 한계를 넘어 무리하게 저항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권력과 폭도의 대결이었지요. 광주사태는 엄연히 폭동입니다. 광주사태는 조직적인 선동과 정치적인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오는 바람에 공권력이 마비될 지경의 폭동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김대중씨가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검찰, 1999b, 「허화평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 156, 157쪽)

(2) 충정훈련에 대한 책임 회피 : 해석적 부인의 사용

충정훈련은 군에서 실시하는 시위진압 훈련으로 1980년 2월 18일에 전군에 충정훈련 강화 지시가 하달되었다. 신군부 측의 주장에 의하면 ‘복귀’의 남침 위협이 비상개업의 유지 및 확대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당시 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북 전투태세 강화이어야 했다. 그러나 충정훈련과 같은 시위진압 훈련에 군이 주력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은 이들이 평소에 받았던 충정훈련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마치 공수부대의 시위진압 투입을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사전에 강화되어 실시되었던 충정훈련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 등 계엄군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전두환은 조직에게 부여된 역할의 차이를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였고, 주영복은 위계질서 상 자신이 직접 명령을 하는 위치가 아니고 보고 역시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으로서 충정훈련 실시와 관련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희성은 ‘하달한 기억이 없다’면서 충정훈련 실시명령 하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인들은 저마다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형태가 다르지만 모두 조직의 편제와 위계질서를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는 해석적 부인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충정훈련이 시위진압 훈련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나 1980년 2월경에는 제가 충정훈련 강화를 지시할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검찰, 1999, 「전두환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 29쪽).”

“(총정훈련 계획이 주영복 책임 하에 작성됐는지) 총정훈련을 만든 곳이 육군본부라면 육군참모총장이 전결하는 문제입니다. (군의 동원계획이 수립되어서 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은) 전연 기억이 없습니다.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총정훈련의 기획, 입안, 훈련한 책임부대, 책임자는) 모르겠습니다(국회, 1988.11.19: 33쪽 주영복 증언).”

“(총정훈련이라는 폭동진압훈련을 전군에 걸쳐서 하달한 것에 대해)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하달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국회, 1988.11.18: 112쪽 이희성 증언)

(3) 계엄군의 이동 관련 신군부 내 협의 : 문자적, 해석적 부인과 진술의 회피

신군부 측 가해자들은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 당시 계엄군의 이동과 관련하여 이회성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세력과 상호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부인하였다. 계엄군의 이동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국무회의 비상계엄확대 의결 이전에 계엄군이 출동 준비를 마치고 광주 등 현장으로 이동한 것과 5월 18일 7공수의 광주 배치 이후 연이어 11공수, 3공수, 20사단이 광주에 추가 파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두환과 허화평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합동수사본부와 계엄사령부의 역할과 권한이 다르다고 제기하면서 전두환의 책임을 부인하는 일종의 해석적 부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계엄군의 출동, 배치 등 계엄군 운용은 계엄사령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계엄군 운용에 일체 관여한 바 없음(전두환 측, 1995)”

“(5월 21일 20사단의 증강 투입에 대한 전두환의 지시 여부)부대 이동에 관한 문제는 보안사령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며(검찰, 1999b, 「허화평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 155쪽).”

한편, 노태우와 정호용은 비상계엄 확대 이전 병력 이동 및 광주 병력 추가 투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을 회피하였다.

“(국무회의 개최 결정 이전인 5.17 16:50경 육본에서 계엄확대에 따른 전면적 병력 투입 준비가 되고, 일부 부대병력은 이동한 것에 대해) 저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 56쪽).”

“(5월 17일 21:40 비상계엄확대 결의 이전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5.19일, 20일 11공수와 3공수의 추가투입 결정이 본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마 전교사 사령관이나 2군의 요청을 받아서 육군본부에서 결정한 조치입니다. 저는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18일, 19일은 상황보고도 못 들었습니다(국회, 1988.12.7: 17, 33, 34쪽 정호용 증언).”

한편, 이회성은 전두환, 노태우 등과 병력 이동, 증파와 관련하여 협의한 일이 없다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비상계엄확대 이전 공수부대 이동은) 저의 작전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일이) 없습니다(국회, 1988.11.18: 114쪽 이회성 증언)”

“광주지역 병력 증파 문제에 관해 전두환이나 노태우 수경사령관과 상의한 기억이 없습니다(검찰, 1999g, 「이회성 진술조서」 : 136쪽).”

“(공수부대 투입 지시 및 건의한 사람이 전두환이나 정호용이라는데) 전연 다릅니다(국회, 1988.12.19: 19, 20쪽 이회성 증언).”

(4) 계엄군의 과잉진압 부인 : 문자적, 해석적, 함축적 부인의 사용

국회 청문회에서는 5월 18일 오전부터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학교 앞에서 공수부대에 의한 과잉진압이 있었고 학생과 시민들이 폭행을 당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잇달았다. 신군부와 계엄군 현장 지휘자들은 이에 대해서 문자적, 해석적, 함축적 부인의 기법을 총망라하면서 부인하였다.

신군부 측 가해자로서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검찰에게 조사받은 사람들은 모두 군 수뇌부이거나 현장 최고 책임자인 여단장, 대대장이었다. 이들은 시위대와 충돌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부인을 많이 하였다. 가장 많은 부인 유형은 과잉진압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문자적 부인이다. 이회성, 정호용, 권승만 7공수여단 33대대장, 김일옥 7공수여단 35대대장, 안부용 11공수여단 61대대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잉진압에 대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고 또 보고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국회, 1988.11.18: 92쪽 이희성 증언)”

“(7공수의 시민에 대한 잔악 행위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광주사태에서 그러한 보고를 한 번도 접해본 일도 없습니다(국회, 1988.12.7: 19쪽 정호용 증언).”

“(5월 18일 학생 체포나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구타, 가혹행위 사례는) 확인은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국회, 1988.12.20: 131쪽 권승만 증언).”

“(5월 18일 10시 30분경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 사이로 들어가 곤봉으로 때리고 군화발로 차면서 진압하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따라가 이수라장으로 만드는 등 33대대 병력이 과잉진압을 했는데) 저는 부대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검찰, 1999h, 「권승만 진술조서」: 344, 345쪽).”

“(5월 18일 12~13시경 조선대 정문에서 학교로 들어가려다가 35대대원에게 붙잡혀 군화로 무수히 구타당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오려 해 되돌려 보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구타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검찰, 1999i, 「김일옥 진술조서」: 351쪽)

“(평민당 접수 피해자 신고서에는 칼에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났으며 많은 사람이 진압봉으로 얼굴 등을 구타당했다는데) 그 당시 보고받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피의자 소속 대대 장교에 의하면 시위버스 공용터미널 앞 시위진압 시 시위대 얼굴을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는데) 제가 목격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검찰, 1999j, 「안부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366쪽)

한편 최웅 11공수여단장은 군대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인의 책임을 조각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하급자의 부인 방법으로 해석적 부인에 해당한다.

“(전두환 그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포고령을 발동한 것이라는데) 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이고 저는 그 현장에 나갔던 현장지휘관입니다. 아전지휘관이고 하니까 저는 명령에 움직이는 것에 불과합니다(국회, 1988.12.20: 98쪽 최웅 증언).”

해석적 부인 중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행위의 잔인성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5·18 현장 대대장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다. 권승만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몇 대 때리고’, ‘교육을 시킨’ 행위로 완화시켰고, 김일옥은 과잉진압을 ‘심한 몸싸움’이라고 말해서 행위의 성격을 은폐하였다.

“버스에서 아우와 소리를 질러 보초를 서던 초병이 몇 명을 끌어내 몇 대 때리고 무릎 꿇게 하여 지역대장이 교육을 시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검찰, 1999h, 「권승만 진술조서」 : 345쪽).”

“연행과정에서 좀 다소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 할지언정 그것을 과잉진압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국회, 1989.1.26: 115쪽 김일옥 증언).”

함축적 부인 기법 중에서는 피해자 존재의 부인이 활용되었다. 이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이 포고령을 어기고 경찰행위를 하는 군에게 먼저 돌, 화염병을 던지면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흥분하여 시위대를 때렸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최웅과 안부웅이 하였다.

“저는 (과잉진압을) 자인할 수가 없습니다. 포고령을 위반하고 뭐 그것은 되는 것입니까? 시위를 하지 말고 집회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경찰행위를 하는 군에 대해서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국회, 1988.12.20: 98쪽 최웅 증언)”

“계엄군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시위대를 추격하여 때리거나 순순히 해산하는 시위대를 끝까지 쫓아가 때린 것이 아닙니다. 공수부대원들은 경계만 하며 시위대에게 해산을 종용하고 있는데 시위대가 먼저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니까 병사들이 흥분하여 때린 격입니다(검찰, 1999). 「안부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 357쪽.”

공수부대원들이 시위 진압에 대검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 대대장인 권승만, 김일옥, 안부웅 모두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시위 군중에게 대검을 사용하여 찌르고 베는 행위는 구타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19일 아침 후송자의 인적사항 중 12명이 자상, 누가 찌른 것인가) 전남대 데모에 관련하여 연행된 부상자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9일 자상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자상을 입힐 만큼 어떤 소요진압에 동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국회, 1988.12.21: 8, 9쪽 권승만 증언).”

“(7공수에서는 분명히 총검 진압을 안했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이 대검이나 총검으로 진압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국회, 1989.1.26: 102쪽 김일옥 증언).”

“저희 대대는 착검한 적이 없습니다. 5월 19일이면 저희 대대로서는 진압초기인데 초기부터 착검하고 진압할 리가 있겠습니까?(검찰, 1999, 「안부옹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366쪽)”

(5) 지휘체계의 이원화 : 문자적 부인과 해석적 부인의 사용

지휘체계 이원화는 광주에 급파된 3, 7, 11공수부대가 지휘계통인 31사단,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신군부 핵심인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국회 청문회 당시 정웅 31사단장이 한 것으로, 31사단에 배속된 공수부대에 지시한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현장 보고도 31사단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내려온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공수여단장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것 등을 근거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5월 19일 23시경 정웅 사단장이 지시한 무혈저지 명령이 5월 20일에 이행되지 않고 유혈 진압이 계속된 것이다. 한편 61대대 대대장 안부옹도 지휘체계 이원화를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 및 살상행위, 실탄분배 및 발포에 대해서 31사단에 사전,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대장들이 31사단장을 실질적인 지휘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 있는데, 사령관의 말을 듣지 힘없는 31사단장 말을 듣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공수부대의 정서와 현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검찰, 1999m, 「안부옹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396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 진술들에 대하여 전두환, 정호용, 이회성,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소준열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전두환은 ‘광주사태’ 기간 소요진압작전에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고, 정호용 특전사령관과도 5월 25일 가발과 편의복 지원 건과 관련하여 한번 만난 것이 전부라고 직접적인 작전 개입을 부인하였고, 이회성도 신군부가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광주사태기간 중 군통수체계상에 있지 않았던 중앙정보부장서리겸 보안사령관은 소요진압작전에 관련된 군사조치 사항에 대하여 주영복 국방장관이나 이회성 계엄사령관과 대책을 논의하거

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투정보도 모집 분석한 바가 없었음.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 기간 중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서리겸 보안사령관이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만난 것은 (정호용 사령관이 보안사에 편의복과 가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980년 5월 25일 단 한번 뿐이었으며, 그 외에는 양인 간에 어떠한 접촉이나 대화가 없었음(전두환 측, 1995)”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사실상 군권을 장악해 군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직접 제가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관여해 간섭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지휘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검찰, 1999g, 「이희성 진술조서」 : 140쪽).”

5월 22일 오후부터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시위진압을 책임졌던 소준열과 광주 현장에 수시로 내려갔던 정호용은 기본적으로 정호용의 시위 진압 지휘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정호용이 광주에 내려와서 공수부대 보급을 책임졌으며, 5월 22일 이후 소준열에게 철수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여 지휘권 이원화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남겼다.

“제가 직접 예하 지휘관에게 뭘 지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법이고 탈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그 상황 돌아가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충고나 또는 조언을 해드리지 못했고 다만 마지막 단계에 제가 22일부터는 주로 광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소준열장군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해드리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전지휘체계가 2원화 되어 2번 오인 총격이 벌어졌고 12명의 병사가 죽었는데) 저는 한번도 11여단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라고 지시해 본 일이 없고 명령을 내려본 일이 없습니다(국회, 1988.12.7: 53, 82, 83쪽 정호용 증언).”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일단 배속을 시켜주었지만 3개 여단이 와 있으니까 자기 부하가 와 있으니까 와서 간접적으로 보급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민화위 증언과 같이 공수단 병력배치도 증인하고 상의했나) 배치를 상의한 것이 아니고 철수를 상의했습니다(국회, 1988.12.19: 100쪽 소준열 증언).”

한편 전두환과 정호용은 문자적 부인의 과정에서 자신의 비판자를 역으로 비판하면서 부인 논리를 강화하였다. 전두환은 지휘권 이원화 문제를 제기한 정용 31사단장이 초기 진압에 실패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고, 정호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문

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의 주장을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비판하여, 지휘권 이원화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31사단장 정웅은 진압 과정에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검찰, 1999f, 「전두환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 40쪽).”

“(5.21 새벽 0시부터 2시 사이에 광주에서 최경록에게 시외전화를 하여 모든 작전지시가 끝났다고 보고했는데) 최경록은 당시 현역도 아니고, 국방부장관도 아닌데 제가 최경록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합니까? 어째서 국회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믿습니까?(국회, 1988.12.7: 19쪽 정호용 증언)”

전두환, 정호용, 이희성, 소준열과 달리 수도경비사령관으로서 광주진압작전과 관련이 없는 위치에 있었던 노태우는 지휘권 이원화에 대해서도 “광주시위 진압문제는 모르고 있습니다”라면서 진술을 피하는 부인 전략을 구사했다(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 63쪽).

한편 5·18 당시 지휘권 이원화를 입증하는 정황 중 하나는 계엄사에서 광주에 투입된 부대에 지휘체계를 일원화라고 지시를 하달한 것이다. 이는 지휘권이 이원화되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내린 지시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 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해 이희성은 명령하달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해석적 부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육본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소장이 그런 지시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광주에 소속이 다른 여러 부대가 출동해 있어 노파심에서 그와 같이 지시를 한 것으로 짐작합니다(검찰, 1999g, 「이희성 진술조서」 : 138쪽).”

정호용은 이희성과 달리, 아예 지휘체계 일원화 지시가 있었던 것을 국회에서 처음 들었다고 부인을 하였으며(국회, 1988.12.7: 43쪽 정호용 증언), 소준열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육군사에 수록되어 있었던 5·18 초기 지휘권 문란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하였다(국회, 1988.12. 19: 105쪽 소준열 증언).

(6) 계엄군 실탄지급 경위 : 문자적 부인의 사용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된 경위는 지휘권 이원화, 집단발포 명령과 함께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다. 최웅, 김일옥, 임수원 3공수여단 11대대장, 안부웅은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기 전까지 공수부대가 가져왔던 실탄을 분배한 일이 없으며, 도청 앞 발포 당시 사용되었던 실탄은 31사단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라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실탄을) 도청 앞에서는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로 일단 철수하고 난 다음에 외곽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탄약을 분배했습니다(국회, 1988.12. 20: 93쪽 최웅 증언).”

“31사단으로부터 철수병력으로부터 실탄을 인수를 했지 저희들이 실탄을 지급해서 가지고 가서 사격을 한 일은 전연 없습니다(국회, 1989.1.26: 121쪽 김일옥 증언).”

“저희는 (작전을 나가면서 실탄을) 분명히 안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5월 20일 밤 현장에서 병사들에게 현장을 지급한)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요(국회, 1989.1.27: 63쪽 임수원 증언).”

“(실탄은 헬기를 타고 온) 31사단병력한테 배급받은 것입니다(국회, 1989.1.27: 103쪽 안부웅 증언).”

그러나 안부웅은 검찰 2회 조사에 앞서 국회 청문회 증언과 검찰 1회 조사 진술을 번복한다. 그는 검찰 재조사에서 “전회 진술시에는 5월 21일 31사단 경계병력으로부터 실탄을 얻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은 5월 20일 야간에 62대대로부터 실탄을 얻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역대장과 중대장의 요구가 있어) 중대장들에게 1탄창씩 (실탄을) 지급했습니다(검찰, 1999k, 「안부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383쪽)”라고, 공수부대가 가져온 실탄을 발포 이전 부대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시인을 하였다.

이와 달리, 안부웅은 상부에 실탄 지급을 요청하는 건의는 하지 않았으며, 상부로부터 실탄을 분배하라는 명령도 없었다고 문자적 부인을 하여, 실탄 지급을 현장 지휘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돌렸다.

“화가 나서 참모장에게 ‘실탄이라도 보내든지 하라’ 고 쏘아붙인 적은 있지만,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제가 여단과 교신하면서 실탄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검찰, 1999), 「안부

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376쪽)”

“제가 기억하기는 5월 20일 밤 실탄을 나누어 주기 전 여단장으로부터 분배 지시를 받거나 사전 보고를 하고 분배하지는 않았습니다(검찰, 1999, 「안부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 390쪽).”

한편 안부웅의 실탄지급과 관련한 진술은 국회 청문회와 검찰조사 기간 중 계속 바뀌는데, 이것은 안부웅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부웅의 변화하는 부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다른 대대에도 작전장교에게 각각 400발씩 실탄을 지급하였으며, 이때 대대장이 입회를 하였다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실탄을 지급하는 자리에 자신이 없었다는 35대대장 김일옥의 청문회 증언을 국회의원이 소개하자, 안부웅은 실탄을 작전장교에게 주었으면 대대장이 입회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증언을 번복하였다(국회, 1989.1.27: 117쪽 안부웅 증언). 이러한 국회 증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번복된다. 안부웅은 63대대 작전장교 차정환 대위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다른 대대에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당시 안부웅은 소속 대대 중대장에게도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고 병사들에게는 실탄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하였는데(검찰, 1999j, 「안부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378쪽), 바로 다음 번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소속 대대 중대장들에게 실탄을 지급한 것을 인정하였다.

(7) 계엄군의 발포 경위 및 명령 : 문자적, 해석적, 함축적 부인의 사용

계엄군의 발포는 5월 20일, 5월 21일에 있었다. 특히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는 다수의 광주시민과 공수부대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신군부 및 계엄군 지휘관들은 문자적 부인부터 해석적 부인, 함축적 부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부인을 하였다.

이러한 부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의 발동이라는 가해자들의 주장이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 21일 19시 30분경 자위권 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20시 30분에 전교사를 통해 20사단과 3개 공수여단에 자위권 발동을 명령하였다. 이 당시 계엄사에서 자위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발포명령을 한 것은 해석적 부인의 하나인 법형식주의로서, 당시 상부의 발포명령은

없었으며 시위대를 향한 계엄군의 발포는 정당방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광주에 출동한 부대에) 발포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5월 21일 19:30에 본인이 천명한) 자위권이 발포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 자위권이라 하는 것은 누가 허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국회, 1988.11.18: 87, 88쪽 이희성 증언).”

“자위권은 군대에서 실시하는 하나의 정당방위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하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합니까? (5월 21일 집단발포에 대한 상부지시가 있었는지) 저는 광주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격행위는 자위권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국회, 1988.12.19: 40, 41쪽 이희성 증언).”

당시 집단발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쟁점은 신군부 핵심세력인 전두환, 정호용 등 신군부가 발포명령 또는 자위권 발동 명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두환 측은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에 대한 작전지휘, 발포명령, 5.20, 5.21 발포에 대한 상황보고 접수 등이 일체 없었다고 문자적으로 부인하였고, 정호용, 최웅은 5.21 전교사 사령부 상황실에서 정호용이 3, 7, 11공수여단장과 작전회의를 하여 자위권 발동을 명령한 것을 부인하였다. 또한 최웅은 자위권 발동을 정호용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희성, 최웅은 이런 사실을 문자적으로 부인하였다.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겸 보안사령관은 광주사태 기간 중 출동 계엄군에 대한 작전지휘를 한 바도 없고 발포명령을 내린 사실도 없었음. 자위권 보유 천명은 계엄사령관의 조치사항이며 자위권 발동문제에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겸 보안사령관이 관여하거나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보안사령부는 5월 20일 자위권 발동사태, 5월 21일 자위권 발동사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상황을 인지한 사실이 없음(전두환 측, 1995)”

“(21일 전교사 사령부 상황실에서 3, 7, 11공수여단장과 작전회의를 해서, 오후 6시에 자위를 위한 발포허용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저는 21일 광주에 가 있지도 않았습니. 광주에 없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교사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안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국회, 1988.12.7: 20, 21쪽 정호용 증언)”

“(하와이 한국방송에서 광주항쟁에서의 발사명령은 자신이 했다고 방송을 하는 것을 많은 교민들이 들었고 녹음테이프도 있다) 아마 그것은 누가 가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녹음테이프를

제시해도 좋은데 그것은 가짜입니다(국회, 1988.12.7: 84쪽 정호용 증언).”

“(자위권 보유 천명은 최웅이 정호용에게 보고하고 정호용이 전두환과 의논하여 계엄사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검찰, 1999g, 「이희성 진술조서」: 137쪽).”

“(5월 21일 발포 관련 정호용) 사령관하고는 무슨 얘기할 것이 없고요. 계엄분소장이 어차피 책임자고 하니깐, (정호용 사령관에게) 보고한 일 없습니다. (자위권 부여를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건의한 바는 있나) 21일에는 정호용씨가 없었습니다. 또 건의할 성질도 아니고(국회, 1988.12.20: 65, 92쪽 최웅 증언).”

당시 정호용이 최웅 등 공수여단장들과 함께 5월 21일에 작전회의를 했다는 내용은 조갑제 기자가 작성한 1988년 7월호 월간조선, 최웅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그러나 최웅은 인터뷰 당시 자신이 투숙하는 호텔에 조갑제 기자가 찾아와서 그와 이것저것 잡담을 하였을 뿐인데 이후 그가 자신이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로 썼다면 기사 진실성을 부정하였고, 이는 문자적 부인의 효과를 높였다(국회, 1988.12.20: 92쪽 최웅 증언).

한편, 5월 21일 이희성이 발표한 자위권 보유 담화문은 보안사 정도영 보안처장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신군부에서 자위권 발동 명령에 관여한 유력한 근거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이학봉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하였다(검찰, 1999c, 「이학봉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186쪽).”

이희성, 최웅은 위계질서에 의해서 집단발포의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도 하였다. 이희성은 당시 발포가 조그마한 말단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휘체계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자신으로서는 발포의 자세한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최웅은 당시 상부의 발포명령 없이 현장의 간부들에 의해서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해석적 부인을 하였다.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가) 그와 같은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조그만 말단부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제일 먼저 발포가 있었다 하는 것도 그 당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국회, 1988.11.18: 88쪽 이희성 증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청 앞에서 21일 오후에 있었던 특전부대발포는 그 현장에 있었던 간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발포명령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국회, 1988.12.20: 87, 88쪽 최웅 증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와 관련해서 5월 20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광주역 앞 발포에 의한 피해자 발생이고, 두 번째는 23시 30분 경 2군 사령부에서 실탄 통제, 발포 금지 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이 두 가지 사항들을 모두 문자적으로 부인하였다. 임수원은 광주역전 발포와 관련, “발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20일 어떻게 저희가 발포를 할 수 있습니까(국회, 1989.1.27: 56, 57쪽 임수원 증언)”라고 부인을 하였고, 최웅은 2군 사령부의 지시에 대해서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발포금지지시는 없었습니다(국회, 1988.12.20: 53, 54쪽 최웅 증언)”라고 부인을 하였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3개의 공수여단에서 2군 사령부의 발포금지지시를 접수하였다면 다음 날 13시경 발포행위는 상부의 명령을 위반하고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발포 건의 및 승인 요청, 명령, 사전·사후 보고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앞서 이회성, 전투환, 정호용 등 계엄사와 신군부의 명령이 없었다는 부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발포 건의, 명령, 보고에 대한 부인은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병과교육사령부, 31사단, 공수여단 및 대대 사이에서 더욱 복잡하게 발생하였다. 당시 5월 21일 공수부대에 대한 지휘권이 박탈되었던 정웅 31사단장, 5월 22일 예편하고 체신부 장관이 된 윤희정 전교사 사령관은 전남도청 앞 발포에 대한 승인 요청 및 사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웅은 사전에 윤희정에게 발포 허용 여부를 상의하였고, 발포 이후 전교사에 발포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5월 21일 도청 앞에서 (발포)상황은 저희들이 전부 광주시내에서 부터 철수하고 난 다음 대대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보고한 곳은) 전교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참모들이 한 것으로 압니다. (61대대장이 발포 승인요청을 했을 때 윤희정에게 발포 허용 여부를 상의했는지) 그렇습니다(국회, 1988.12.20: 53쪽 최웅 증언).”

당시 61대대장 안부웅은 상급부대로부터 사격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없으며, 여단장에게 발포 승인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하였다(국회, 1989.1.27: 108, 119쪽

안부옹 증언). 또한 사후 보고 역시 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김찰, 1999m: 393쪽). 그러나 위 최웅의 증언을 보면, 최웅은 안부옹으로부터 발포 승인요청을 받은 일이 있고, 광주에서 철수한 다음에 발포에 대한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두 사람의 증언과 진술을 비교해 보면, 최소한 한 사람은 문자적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남도청 앞 발포 경위에 대해서, 현장 대대장이었던 안부옹과 김일옥은 모두 자신들이 부하들에게 사격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김찰, 1999j. 「안부옹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379쪽; 국회, 1989.1.26: 120, 121쪽 김일옥 증언). 그리고 정호용, 최웅, 안부옹 등 공수부대 간부들은 무장한 시민들의 과격 행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피해자가 곧 가해자이며, 가해 행위는 불가피한 정당방위라면서, 피해자 존재를 부인하는 함축적 부인을 한 것이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21일 새벽부터 무기고가 많이 탈취되고 또 실탄도 많이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21일 13시경부터 상당히 그 시위가 과격했고 또 그때 사람도 차에 치어 죽었고 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제 무장을 해서 발포를 계엄군에다 대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국회, 1988.12.7: 20쪽 정호용 증언).”

“그 때 일부 시민은 무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대원들은) 사격을 받았습니다. 5월 21일 상황이 되겠습니다(국회, 1988.12.20: 95쪽 최웅 증언).”

“시위대 장갑차와 5톤 트럭이 계엄군 쪽을 향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장갑차 1대만 빠른 속력으로 도망가는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여 계엄군 1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해 들어옴과 동시에 시위대 쪽에서 총소리가 연발로 났습니다. 순전히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원들이 조건반사적인 사격, 그러니까 돌진하는 시위대의 차량에 압사 당할지도 모르는 심한 공포감으로 인해 실탄을 삽입하여 발사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김찰, 1999j. 「안부옹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375, 379쪽).”

이외에도 5월 21일 발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공수부대가 비무장시민들을 정조준해서 사격을 했는지 여부이다. 여기에 대해서 안부옹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부대원들이 옥상에 올라간 일도 없다고 부인하였다(국회, 1989.1.27: 109쪽 안부옹 증언). 또 다른 내용은 무장헬리콥터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난사를 했다는 주장인데 정호용은 무장헬기의 사격이 있었다는 얘기는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듣는다고 증언을 하였다.

“무장헬리콥터가 와서 무차별 난사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공수부대에
서 한 것으로 그렇게 비약시키지는 마십시오, 무장헬기의 사격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국회, 1988.12.7: 40쪽 정호용 증언).”

(8) 양민학살에 대한 부인 : 진술의 회피 ‘잘 모른다’

5·18 당시 공수부대의 양민학살은 모두 5월 21일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에서 철수한
뒤에 발생하였다. 3공수는 5월 21일~24일 중 광주교도소 앞을 지나가는 시위대와 담
양으로 가는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20사단은 5월 22일 광주통합병원 인
근 시위대와 민가에 총을 난사했다. 11공수는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국도를 지나가
던 미니버스를 집중사격하고 부상자 2명을 인근 야산에서 총살하였으며, 5월 24일에
는 송암동 부근에서 주민들에게 무차별 난사를 하였다.

그러나 신군부와 계엄군 책임자들은 모두 당시 양민학살을 잘 몰랐다고 답변을 회피
하였다. 노태우는 모든 양민학살에 대하여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진술을 회피하
였고(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60쪽), 주영복, 이회성, 11공수여
단장이었던 최용은 송암동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모릅니다”, “지금 광주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역시 답변을 회피하였다(국회, 1988.11.19: 26쪽
주영복 증언; 1988.11.18: 116쪽 이회성 증언; 1988.12.20: 97쪽 최용 증언). 또한 송
암동 학살을 일으켰던 11공수 61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안부용 역시 송암동 양민학살과
관련하여 “당시는 부상자 후송과 사후 처리에 정신이 없어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라
고 시인을 하지 않았다(검찰, 1999l, 「안부용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 392쪽).

(9) 상무충정작전 관련 부인 : 문자적 부인과 진술의 회피

상무충정작전은 5월 27일 실행된 광주제진입작전으로, 도청을 지키던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 역시 충정작전의 일환이었다. 상무충정작전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작전을 결
정하고 지시하는 과정에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이며, 주영복, 이회성, 정호용, 소준
열은 모두 이에 대해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주영복은 자신이 상무충정작전에 대해서
이회성, 전두환, 정호용과 함께 논의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며(국회, 1988.11.19:
112쪽 주영복 증언), 정호용도 주영복, 전두환 및 노태우, 백운택 9사단장, 소준열 등

과의 충청작전계획 논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였다(국회, 1988.12.7: 21쪽 정호용 증언). 한편 5월 26일 오후에 광주비행장 사령관실에서 정호용이 20사단장과 3개 공수여단장을 불러서 최후 충청작전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정호용, 소준열은 모두 이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국회, 1988.12.7: 22쪽 정호용 증언; 1988.12.19: 61쪽 소준열 증언). 한편 소준열은 광주재진입 작전을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작전참모 등과 함께 작전을 만들었고, 31사단장, 20사단장, 3개 공수부대 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작전회의를 하였으며, 특전사령관은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국회, 1988.12. 19: 84, 85, 95쪽 소준열 증언).

한편, 노태우는 “상무충정작전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른다(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61쪽), 이학봉은 전두환, 정호용, 황영시가 보안사령관실에서 상무충정작전을 논의한 것을 “모르는 일”이라고(검찰, 1999c, 「이학봉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186, 187쪽) 답변을 회피하였다.

(10)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축소 : 문자적, 함축적 부인의 사용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들은 시위 진압으로 인한 희생자의 규모를 축소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도청진압 작전의 경우 소준열은 국회의원이 추산하는 소재 불상자의 숫자인 160명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사망자 숫자 13명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소수의 사망이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희생자 규모의 축소 시도는 초기 시위진압과 마지막 도청진압작전 시기로 구분되어 나타나며, 방법은 손해를 부인하는 함축적 부인과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문자적 부인으로 구분된다.

초기 시위진압 관련 부인은 김일옥과 안부웅에게서 나타났다. 김일옥은 5월 18일 오전 조선대에서 연행한 학생 수가 전교사 전투상보에 보고된 43명보다 적은 23명이라고 피해를 축소하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고(국회, 1989.1.26: 108쪽 김일옥 증언), 안부웅은 5월 19일 16시경 공용버스터미널 앞 시위군중 진압 후 7, 8구의 시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국회, 1989.1.27: 100쪽 안부웅 증언).

또한, 5월 27일 도청진압 작전 당시 사망자 숫자도 쟁점이 되고 있다.

20사단 자료에 의하면 13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3공수 11대대의 임수원 대대장은 4명의 사상자만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피해숫자를

축소하였다. 또한 도청진압 작전 당시 사살당한 시체가 눈에 보이지 않았고, 민원실과 도청 사이 시체들은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사살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3공수 여단에서는 적 사살 13명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손해를 부인하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국회, 1989.1.27: 54, 60, 61쪽 임수원 증언). 한편 소준열은 1988년 국회 청문회 이전 민화위에서 증언을 하면서 도청진압 당시 도청 안에 360여명이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전교사와 특전사 작전일지에는 생포자가 각각 172명, 200여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증언과 자료에 의하면 최소 160여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소준열은 사상자가 13명, 연행된 사람이 279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생포자의 숫자를 늘려서 진술하여 소재 불상자의 숫자를 축소시키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국회, 1988.12.7: 63쪽 소준열 증언).

4. 소결 : 가해자들의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의 특징

지금까지 스탠리 코언이 제시한 사회심리학적 부인방법을 분석들로 하여,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들이 과거청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인하였는지 정리하였다. 이들은 진술의 회피, 문자적 부인, 그리고 해석적 부인기법인 책임의 부인, 완곡어법 및 법형식주의, 함축적 부인기법인 안보의 필요성, 피해자 존재의 부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함축적 부인기법인 손해의 축소, 맥락화를 사용하였다.

진술의 회피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고 답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청산을 시도하는 경우, 예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노태우, 이학봉과 같이 공식적인 역할이 인권침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 진술을 회피한다.

진술의 회피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인은 문자적 부인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가해자들은 과거청산 당시 중앙정보부에서의 고문, 수사관 입회 하 검찰관 조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 공판조서 조작, 최후진술 조작과 같이 사건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들은 5월 17일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비상계엄확대 이전 계엄군의 이동,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이미 알려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 자체는 인정을 하였다. 대신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

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계엄군 병력이동, 광주에서의 과잉진압 및 집단발포, 상무총정작전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광주학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로 광주에 투입된 지휘관들은 과잉진압 보고, 발포 건의·명령·보고, 실탄 수령·지급과 같이 폭력 및 학살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총검 사용 및 헬기 난사 등 일부 구체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이처럼 문자적 부인은 사건 자체 또는 사건에 대한 개입 여부를 부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문자적 부인 다음으로 빈번히 사용되었던 부인방법은 해석적 부인의 하나인 책임의 부인이다. 이것은 주로 하나의 사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되어 있을 때 사용되며, 주로 조직 내 행위주체의 위치에 의거하여 책임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첫 번째는 위계서열의 하부에 위치한 가해자들이 상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경북도경 파견 경찰인 이덕삼이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와꾸에 맞춰서 수사를 하였다는 진술이 이러한 부인에 속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도 11여단장 최웅은 자신이 현장지휘관, 야전지휘관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위계서열의 상부에 위치한 가해자들이 명령 하달을 부인하고 하부의 주도적인 업무 처리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하급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중앙정보부 6국 계장인 윤종원이 수사를 경북도경 경찰들이 주도했고 일일수사보고도 경찰 내 상급자에게 했다면서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상급자의 더 많은 책임의 부인이 있었다.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는 국무회의장 병력배치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명령 하달은 인정하지만 공무원 감금, 전화선 절단 등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충청훈련에 대해서 주영복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명령을 하는 위치가 아니라고 하였고,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충청훈련 강화 명령을 하달한 기억이 없다고 명령 하달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희성은 계엄사의 지휘권 일원화 명령 하달에 대해서도 자신은 지시를 하지 않았고 육군 작전참모부장이 그런 지시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안다고 책임을 부인하였고, 집단발포의 자세한 경위 역시 조그마한 말단 부대의 사건이므로 자신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최웅도 상부의 발포 명령은 없었고 현장 간부들에 의해 발포가 이뤄졌다고 책임을 부인하였다. 한편 조

직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분업체계에서의 역할을 토대로 책임을 부인하는 ‘수단과 목표의 해리’ 방법도 활용되었다. 이런 사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경북도경 순경이었던 임찬욱이 자신은 주로 감시업무만 해서 역할이 미미했다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행위의 실제 또는 잔혹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완곡어법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중앙정보부 윤종원 계장이 이덕삼 경사에게 물건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여 사건의 조작을 은유적으로 지시하였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도 초기 과잉진압에 대해 권승만, 김일옥 등 현장 지휘관은 교육, 심한 몸싸움이라고 표현하여 잔혹성을 은폐하는 해석적 부인을 하였다. 한편 범형식주의 역시 행위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법률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완곡어법과 비슷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이희성이 자위권 보수를 천명하고 집단발포를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부인한 것이다. 이희성을 비롯하여 신군부 핵심들은 자위권을 병사들의 정당방위라고 설명하면서 내란목적 살인에 대한 자신들의 명령 책임을 은폐하였으며, 그 결과 발포 책임자는 여전히 밝혀 지지 않았다.

안보의 필요성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함축적 부인의 대표적 방법이다. 한국의 국가폭력은 거의 대부분 안보를 명분으로 이뤄졌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학살 역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6국장이었던 이용택은 당시는 공산체제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절대 과제였고 그러다 보니 약간 무리도 따랐을 것이라고 하였고,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신군부세력은 5·17 비상계엄확대가 북괴의 남침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주장 하였다. 두 국가폭력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안보의 필요성은 모두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고 있고, 반공이면 사법살인과 민간인 학살도 용인되었다. 두 개의 적대적인 체제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 공산세력이 사회 혼란을 틈타 남침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설득논리였다.

함축적 부인 중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피해자 존재의 부인이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사실상의 가해자로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급박한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5.17 비상계엄확대의 이유를 설명하는 허화평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허화평은 학생, 재야, 정치권 등이 최규하 정권 접수를 하겠다고 덤비는 바람에 사회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의 확대가 필요했다고 하였다. 또한 계엄군 및 신군부 세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원인 역시 광주시민의 투석전 등 폭동 행위와 광주시민이 유포한 유언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잉진압은 광주시민들이 포고령을 어기고 경찰행위를 하는 군대를 먼저 공격하여 계엄군이 흥분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고,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역시 공수부대를 향해 진격하는 버스와 장갑차, 그리고 시위대의 사격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이었다고 이들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존재의 부인은 국가폭력에 언제나 수반될 수 있다. 국가폭력은 대립과 충돌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국가권력을 소유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들은 대립하는 상대방의 폭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당시 가해자들의 핵심적인 부인방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여섯 가지 부인방법은 모든 국가폭력 사건에 동일한 비중과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폭력의 유형이나 부인방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상황에 맞는 다른 부인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보안사, 중앙정보부, 군대, 대법원, 경찰 등 수많은 권력기관이 동원되어 준비·실행되었으며, 가해자들의 신분이 대통령, 장관, 군사령관에서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폭넓게 망라되었다는 점에서 가해자들의 부인논리는 다른 어떤 인권침해 사건 못지않게 매우 치밀하다. 따라서 위에서 정리한 여섯 가지 부인기법들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Ⅲ.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이후 가해자 측 지지자의 부인구조 분석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및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재심 무죄판결,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을 통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과거청산이 이루어졌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역시 의문사위의 진상규명, 재심 무죄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등 과거청산에 필요한 조치들이 실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의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인을 하였으나 진실을 은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과거청산 이후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제3자, 즉 방관자 중에서 가해자를 지지하던 수구세력들이 두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시민사회 여론과 정치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장은 수구세력에게 전반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실체가 있다는 주장은 박범진 전 국회의원의 ‘양심선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 박근혜의 대통령 후보 출마로 인해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사례들은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과거청산 이후에도 정치, 사회, 역사적 부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부인을 극복하고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인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여기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 과거청산 이후 어떤 내용과 사회심리학적 기법, 매체 및 활동을 통하여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인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분석 하겠다. 또한 가해자들의 부인과 비교를 하여 과거청산 이후 발생하는 가해자 측 지지자들의 부인이 갖고 있는 특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내용과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

2002년 9월 의문사위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조선·동아·중앙·한겨레·경향 등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는 의문사위 발표, 사건 진상규명의 의의, 사건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등을 비중있게 보도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거론되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처음 수사·공판 기록, 가해자 증언을 토대로 사법살인의 실체를 입증하였기 때문에 그 여파는 작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의문사위에서 비전향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자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이 색깔논쟁을 제기하였고, 이후 과거청산 운동에 대한 여론의 흐름은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과거청산 역시 수구세력들이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박정희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에 대한 책임 및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 활동에 대한 부정, 두 번째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에 대한 비판, 세 번째는 재심법원의 무죄판결에 대

한 부인, 네 번째는 박범진 전 국회의원과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양심선언, 다섯 번째는 2012년 9월 대선정국에서 발생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인혁당 사건 부인이다¹⁶⁾.

1) 박정희의 사건 조작 책임 및 국정원 진실위 활동 부인 : 문자적 부인의 사용

국정원 진실위에서는 2005년 12월 7일에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이 정권에 의해 조작·과장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의 조작과 과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안병욱 국정원 진실위 부위원장은 “인혁당 재건위 관련 8명의 사형 자체가 대통령 재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와 법무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형을 집행한 것도 청와대의 지시나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겨레, 2005.12. 7).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국정원 진실위의 발표 내용들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그렇다는 식이다”, “국정원 진실위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합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다”라고 국정원 진실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발표를 비판했다(조선닷컴, 2005.12.9).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간사 이영민도 『한국논단』 2006년 2월호에서 국정원 진실위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합부로 범죄자로 단정해 버렸다”, “과거사위원회는 관련자 증언이나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 했다(이영민, 2006).

이것은 2002년 9월 의문사위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당사자를 제외한 보수수구진영에서 제기한 첫 번째 부인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 과정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는 코드·맞는 사람들끼리 역사를 왜곡하였고 이영민은 국정원 진실위 발표야 말로 조작이며 허위라고(이영민, 2006)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이것은 박정희의 개입 정황을 부인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부인하는 해석적 부인, 또는 비판자를 비판하는 합축적 부인과는 다른 것이다. 박정희의 사건 개입과 관련해서 박근혜, 이영민 모두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16) 박근혜 후보의 부인은 2012년에 발생하여 연구대상 기간인 2002~2011년에 해당되지 않지만, 논문의 주제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례이고 부인을 한 사람이 여당의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추가로 분석하였다.

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는 문자적 부인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인혁당 재건위의 조작에 대해 비판하는 국정원 진실위를 역으로 비판하면서 조사결과 발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한편, 국정원 진실위의 2005년 12월 7일 발표 이후 진실위의 활동, 그리고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보수진영의 비판이 본격화되었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국가사랑모임(국사모)'과 자유개척청년단은 2006년 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백림사건,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KAL858기 폭파 사건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야비한 정치공작, 푸닥거리 놀음'으로 비판 하였다. 특히 인혁당 사건의 경우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김배영의 월북 문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구명운동 참여자 시노트 신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사자들이 통일운동가라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인혁당 사건의 고문, 조작에 대해서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독립신문, 2006.2.28).

2) 명예회복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에 대한 부인 : 해석적 부인의 사용

명예회복위에서는 2006년 1월 23일 도예중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명예회복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계자들이 "反유신활동을 하였고, 당시 폭압적인 탄압상황 하에서 학생운동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민주화운동의 확산에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들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연합뉴스, 2006.1.23). 여기에 대해 재향군인회 안보위원인 정창인은 독립신문 칼럼을 통해서 당시 국가가 이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의 국가반역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될 수 없다고 부정하였다. 이들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화가 아니라 김일성 추종세력 또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의 공산혁명활동, 즉 인민민주주의 활동"으로 이는 헌법에 반하는 반역활동, 즉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정창인, 2006.1.27). 이 주장은 인혁당의 존재 여부와 함께 인혁당 사건 논쟁의 핵심이 된다. 즉, 수구진영의 주장은 인혁당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계자들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산혁명을 일으키려 한 소위 '불순한' 행위자라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정창인은 노무현 정권이 과거사 규명을 한다면서 "인혁당에 연루된

간첩들이 민주화인사로 둔갑” 되었다고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다(정창인, 2006.1.28).

정창인은 이와 같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부정하면서, 이들의 민주화는 인민민주주의, 곧 공산혁명 활동 및 국가반역 활동을 의미하고, 사건 관련자들은 북한과 관련된 간첩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법형식주의적으로 해석한 ‘해석적 부인’이다.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반유신운동과 자주적 남북통일운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명예회복위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정창인은 이것을 인민민주주의요 공산혁명 활동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3) 재심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부정 : 문자적 부인의 사용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자 수구세력의 비판은 더욱 거세어졌다. 정창인은 독립신문에서 “법적 무죄가 반드시 사실상의 무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북한 공산군사독재체제에 충성하는 반역의 무리들”로서 사실상의 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정창인, 2007.1.30), 프리존뉴스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 선고는 반역활동의 정당화이며, 검찰의 항소포기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하였다(정창인, 2007.2.1). 이외에도 삼덕(필명)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공산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평양방송을 청취하고 필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들이 순백의 무죄가 아니라고 재심 결과를 사실상 부인하였고(삼덕, 2007.1.25)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과거의 오류를 오늘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삼덕, 2007.1.31). 백승복은 재심판결 무죄가 진실에 바탕을 둔 결백이 아니라면서 재심 결과를 부정하였다(백승복, 2007.2.1). 소나무(필명)는 이재오, 정동영이 인혁당 재심 무죄판결 후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한 것을 연좌제 부활의 꿈이라고 비판하였다(소나무, 2007.1.25). 이영민은 이 사건이 북괴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 사건으로 재심 재판이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맞춘 것이고 법원이 피고인들의 북한방송 청취 및 노트필기를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역시 정권에 아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도예종이 사형되기 직전 “조국이 하루빨리 적화통일 되기를 바란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 하나만 봐도 인혁당 재건위가 북괴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형 자체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이영민, 2007).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는 프리존뉴스에서 인혁당

재건위를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았던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고, “수괴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무리가 있었지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이적단체로 의율하거나 사건 관련자를 개별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이적동조죄,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죄 등으로 기소하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과거청산 결과를 부정하였다(제성호, 2007.2.3a). 또한 그는 남민전 사건의 주역으로 사형을 당한 이재문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 이 사건 희생자 2명의 가묘가 북한 애국열사릉에 설치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일반 시민에 대한 사건인지 아니면 세상을 바꾸려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인지가 규명되어야 한다고 부인 논리를 펼쳤다(제성호, 2007.2.3b). 한편 메이지 언론 중 조선일보의 인터넷 사이트인 조선닷컴에서 제성호의 주장을 소개하여 여론의 확산에 기여하였다(조선닷컴, 2007.2.3).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실체가 있으며 재심판결은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실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문자적 부인이며, 재심을 정치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재심의 신뢰성을 부정함으로써 부인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부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사실상의 유죄’라고 주장하는 근거의 실체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부인주체들이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창인은 사건 관련자들을 북한과 관련된 간첩으로 북한공산체제를 신봉하는 반역의 무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삼덕과 이영민은 하재완의 북한방송 청취 및 노트필기를 근거로 제시하나 이것은 당시 반공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볼 수는 있으나 인혁당 재건위의 구성 및 활동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사건의 실체 또는 실체를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문제가 있다. 이영민은 도예종의 소위 ‘적화통일’ 유언을 근거로 인혁당 재건위가 간첩단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의문사위 조사에 의하면, 당시 사형집행을 목격한 교도관들은 도예종이 이러한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이영민은 이러한 진술을 무시하고, 변조된 유언을 근거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제성호는 인혁당 재건위의 구성에 대한 근거 제시 없이 ‘인혁당 재건위’를 이적단체로 의율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미 의문사위 등의 조사를 통해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의 구성 자체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제성호는

이 사건이 세상을 바꾸려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사건으로 보고 이것을 사건의 실체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당시 반독재민주화운동, 자주통일운동을 하였다는 것이 곧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하고 공산혁명을 하려 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삼덕(필명)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비판자를 비판함으로써 문자적 부인의 신뢰성을 더하려고 하였다. 그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가 “김일성 똥마니” 송두율을 변호하였고, 의문사위와 국정원 진실위 역시 송두율을 민주화 인사로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과거청산의 전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삼덕, 2007.1.25).

4) ‘인혁당 관계자’들의 ‘양심선언’ : 문자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의 사용

2010년에는 자신이 인혁당에 가입했거나 주변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양심선언’이 계속 되었다. 2010년 6월에는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범진이 자신이 1차 인혁당에 입당을 했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그는 인혁당의 강령 내용이 “민족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해서 북한과의 협상으로 통일을 시도한다”였고, “조직망과 활동 방식에서 전형적인 좌파 혁명정당의 모습이었다”고 회고했으며(조선닷컴, 2010.6.29a), 노무현 정부 들어서 “과거사를 뒤집다 보니 과거의 모든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분위기가 생겨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선닷컴, 2010.6.29b). 그러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1, 2차 인혁당 사건의 재조사 및 의문사위, 국정원 진실위 조사의 재검증을 촉구하였고(뉴시스, 2010.6.29),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과 같은 수구단체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인혁당 과거사 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독립신문, 2010.7.5)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정보위원장실 방문을 통해 인혁당 사건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였다(독립신문, 2010.7.9). 한편 2010년 9월에는 시대정신 이사장인 안병직 교수의 박정희 시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안병직은 1960년대,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겪게 되었던 경험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인혁당), 통일혁명당(통혁당),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김정강 그룹과 관련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형식으로 강연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과장이 많이 되었으며, 그 실체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한 일이 별로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학생운동의 수준이 이들의 지도를 받을

정도로 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안병직, 2011: 146, 147쪽).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수사를 하던 공안부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기소를 포기하였고 법원에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죄만 인정되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박범진은 인혁당이 실재하였고 자신이 가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차 인혁당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별건임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까지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과거청산을 부정하였고,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역시 박범진의 증언이 1차 인혁당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토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비판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혁당 재건위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된 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천인공노 할 역사조작의 서막”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과거청산을 부정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독립신문, 2010.7.5: 2010.7.9). 한편 안병직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은 최소화하는 대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은 중화학공업화, 즉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조성된 정치적 긴장의 희생물이라고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이것은 근대화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정당화로서, 1960-1980년대 한국의 양대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와 성장주의 중 후자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한편, 안병직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뿐만 아니라 1980년 광주학살 역시 근대화의 성공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권, 생명권의 침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부인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안병직, 2011: 170~172쪽).

5) 2012년 대선정국에서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부인 : 해석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의 사용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년 9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9월 11일 오전에는 이에 덧붙여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어 그런 것까지 감안해 역사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며 재심을 비롯하여 의문사위, 국정원 진실위의 과거청산 성과를 부인하였다(연합뉴스, 2012.9.11).

이 중 첫 번째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은 일종의 범형식주의로서, 과거정권과 현 정권의 두 가지 법적 판결이 서로 경쟁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재심 판결의 권위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해석적 부인이다. 그러나 과거정권의 판결은 법원이 유신정권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문수사, 공판조서 조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판결로서 재심판결에 의해서 부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 현재 유효한 것은 재심법원의 무죄판결만 있는 것이다.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분석했듯이 박범진 전 국회의원의 1차 인혁당에 대한 발언을 토대로 별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부인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은 법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인한 8명의 희생자와 옥고를 치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 1월 법원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무죄판결 이후에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뭐가 진실인가. 역사적 진실은 한가지 밖에 없으니 앞으로 역사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2012년 9월 10일 발언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머니투데이, 2012.9.10). 이것은 2012년의 발언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갖고 있던 생각의 표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 9월 24일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 발언 이후에도 발언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2012년 9월 24일,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 역시 가족을 잃는 아픔이 얼마나 큰 지 잘 알고 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박정희 정권 당시 헌정유린 사건들과 사법살인에 대해서 사과 하였다(이투데이, 2012.9.24).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사과 발언 직전에 부친인 박정희의 행위가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여 과거 반민주,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그리고 과거 수년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자신의 인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11월 23일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을 공동발의 하였고(뉴스앤뉴스, 2012.11.26), 새누리당은 부마항쟁과 긴급조치 보상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발

표하였다(한겨레, 2012.12.11). 그러나 개별적인 심의를 통한 보상금 지급은 5·18 피해자 보상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들을 개별화시켜서, 그들의 트라우마를 더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긴급조치는 이미 법원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한겨레, 2012.11.27), 긴급조치에 의한 판결 전체를 일괄적으로 무효, 배상 결정하는 총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청자들을 심의, 보상하는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내용과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이 구속된 이듬해인 1996년부터 조갑제 등 일부 수구세력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에는 5·18 과거청산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수구세력의 비판이 6·15 공동선언에 집중되어 있어서 5·18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이 많이 확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노무현 정부 때 변화했다. 의문사위, 국정원 진실위의 과거청산에 대한 색깔논쟁이 대두되고 4대개혁입법 등을 둘러싼 좌우 대립이 심화되면서 5·18 과거청산에 대한 수구세력의 부인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부인은 첫 번째, 5·18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비판 및 전두환에 대한 변론, 두 번째, 5·18의 배후, 시민군 발포 및 무기피탈 시점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 세 번째, 북한의 기획, 또는 북한의 개입에 의한 5·18 광주학살 발생 주장, 네 번째, 영화 '화려한 휴가' 비판, 다섯 번째, 2007년 대선정국에서의 '광주민주화운동' 담론 부인, 여섯 번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부인이 있다.

1) 5·18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비판 및 전두환 변론 : 함축적 부인과 해석적 부인의 사용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인 논란은 5·18 수사의 정치적 배경과 헌법 부합여부,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구속, 처벌의 적절성 여부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조갑제와 지만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5·18 관련자 처벌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비판자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이들은 검찰이 1994년 11월에 12.12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1995년 5월에 5·18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을 때에는 김영삼이 이를 묵인하였다가, 이후 자신이 노태우 비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차단하고자 5·18 특별법 제정 및 관련자 처벌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의 5·18 수사와 재판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게 된다(조갑제, 1996; 지만원, 2010.1.13). 이와 함께 지만원은 5·18 재판 당시 핵심적인 진술을 했던 권정달 전 보안사 정보처장과 수사, 기소 및 선고를 하였던 관검사를 대상으로도 ‘비판자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그는 권정달이 검찰에 “동지들을 배신하는 진술을 했고”, 공판정에서는 “변호인들과 허화평, 허삼수, 유학성, 정호용 등 피고인들로부터 집중 질문을 받았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창피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비판하였다(지만원, 2010: 106, 107쪽). 이러한 비판은 제3자로 하여금 ‘권정달이 의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다 보니 법정 증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또한 지만원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없었는데 전두환이 정권탈취 목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5·18 관점사들의 주장은 12·12사태 직후 2, 3개월 내에 북한 대규모 도발가능성이 있었다는 CIA 보고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 하였다(지만원, 2009.12.9). 이러한 ‘비판자에 대한 비판’은 합축적 부인의 하나로서, 5·18 수사와 재판에 도덕적 흠결이 있고 재판 진행도 불합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와 재판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정당화의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5·18 특별법과 관련하여 일종의 법형식주의적 방식으로 해석적 부인을 하는 사례도 보인다. 이주천과 지만원은 5·18 수사와 재판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만원은 이미 1980년에 정승화와 5·18 광주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심 없이 다시 5·18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이다(이주천, 2010; 지만원, 2010.1.13). 또한 지만원과 조영환은 김영삼 정부가 15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를 연장, 소급 적용하였다면서 이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조영환, 2010; 지만원, 2010.1.13). 보통 법형식주의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불법적 행위의 발생을 부인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5·18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적 해석을 통해서 5·18 수사와 재판의 합헌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조갑제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청산할 수 없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80년~1990년 11년간 한국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10.1%로 세계 1위였고, 두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두환의 평화적 정권이양과 노태우의 북방정책은 민주화와 한국의 활동공간 확장에 기여하였다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업적을 설명하면서 이는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평가하였다(조갑제, 1996). 이러한 평가는 조갑제가 전두환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이기 때문에, 신군부의 12.12 쿠데타, 5.17 비상계엄확대, 5.18 광주학살로 이어지는 '다단계 쿠데타'를 합리화, 정당화하는 합축적 부인에 해당한다.

2) 5·18의 배후, 공수부대의 과잉진압, 무기탈취시기, 시민군 선 발포 등 주요쟁점 부인 : 문자적 부인과 합축적 부인의 사용

2000년대 들어와서 제기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들은 대부분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윤상원 일당의 폭동, 조총련계 한민전의 선동, 북한의 개입에 의한 반란이라는 주장이다. 이중 북한이 5·18을 기획하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남파되어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북한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주장과 여기에 대한 근거들은 다음 장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 여기에서는 북한군 개입 이외에, 5·18의 원인, 공수부대의 과잉진압, 무기 탈취 시기, 시민군 선 발포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부인을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부인들은 대부분 1997년 대법원 재판으로 확정된 5·18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자적 부인이며, 쟁점별로 합축적 부인이 같이 사용되었다. 5·18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부인은 주로 역사학도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그는 가해자 및 피해자들의 증언, 사진 및 영상자료들을 왜곡하고 취사선택하여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민들은 5·18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 역사학도 주장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5·18의 원인 : 합축적 부인과 문자적 부인의 사용

5·18의 원인과 관련하여, 역사학도는 제일 먼저 윤상원의 폭동과 이를 정당화하는 유언비어를 5·18의 원인으로 보았다.

"윤상원이라는 광주의 한 혁명가가 그가 사상 의식화 교육을 한 노동자들을 인솔하여 1980년 5월 20일에 광주시의 경찰서들을 파괴하고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시민군을 조직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광주사태의 원인은 윤상원씨의 폭동이다(역사학도, 2003.3.26).”

“만약 그(윤상원)가 군부 쿠데타설이 유언비어였다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아마도 그는 결코 광주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산불을 발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유언비어에는 네 가지 출처가 있었다. 하나는 서울대 운동권에서 날아온 전두환 쿠데타 유언비어요. 다른 하나는 윤상원이 광주시민들을 유혈 폭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하였던 유언비어요. 다른 하나는 김대중의 전국적 민중 봉기를 도우려던 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요. 다른 하나는 남한에 1975년 4월 월남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받은 남파 공작원들과 자생 간첩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였다(역사학도, 2005.4.6).”

역사학도는 이어서 윤상원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당시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몰랐는데 윤상원이 그것을 공개한 것을 근거로 윤상원이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윤상원이 당시에 “일주일만 이대로 버티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도 그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남침하겠다는 밀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었다고 역사학도는 추정하였다(역사학도, 2004.10.21; 2005.7.16). 2005년 역사학도는 5·18의 배후에 조총련계 한민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광주상황이 북한에서 실시간 방송되었는데 이것은 외국인 기자로 광주에 들어와 있던 한민전 관계자들의 행위로서, 광주지역 방송국에 불을 지른 이유 역시 광주시민에게 한민전의 선동 자료 혹은 구호만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5월 19일 광주에서 버스로 순경 4명을 깔아죽이고 이때 나주경찰이 광주로 출동한 틈을 타서 나주경찰서의 무기를 탈취한 것, 극비 장소에서 8톤의 다이내마이트를 탈취하여 도청 지하에 설치한 것 모두가 한민전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하였다(역사학도, 2005.5.21).

역사학도는 이처럼 윤상원의 폭동, 한민전의 선동, 각종 유언비어를 5·18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광주학살의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을 각종 유언비어와 북한의 사주, 한민전의 선동에 의해 윤상원 일당과 함께 폭동을 일으킨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존재의 부인기법으로,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역사학도는 함축적 부인을 하는 동시에 문자적 부인도 같이 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5.19 나주경찰서의 무기

를 탈취하였다는 것이나 윤상원이 광주시민들을 유혈 폭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유언 비어를 제조했다는 것 등은 사실관계와 다른 문자적 부인인 것이다.

한편, 역사학도의 부인 과정에서도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그는 2005년 4월 6일에, 윤상원이 유언비에에 의해서 '광주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는데, 3달 뒤인 7월 16일에는 윤상원이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윤상원과 북한의 연계설은 2004년 10월 21일에도 주장되고 있어서, 역사학도는 같은 시기에 유언비어설과 북한사주설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한 것이다. 만약 그의 주장처럼 윤상원이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면, 군부 쿠데타설이 유언비어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광주사태'를 일으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2) 공수부대의 과잉진압 부인 : 문자적 부인의 사용

역사학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전면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그는 정웅 31사단장이 5월 18일 17:40분에 공수부대에 폭동진압 명령을 내렸으며, 그 이전에는 7명의 공수부대 경비병들이 전남대 정문에 부동자세로 서 있기만 했다고 주장하였다(역사학도, 2005.4.26). 그리고 폭동진압을 할 때에도 “돌맹이와 화염병을 얼굴과 가슴에 맞으면서도 대오를 흩뜨리지 않고 그들은 걸어 행진하면서 시위대를 맨손으로 해산시켰”다고 과잉진압을 부인하였다(역사학도, 2005.5.21). 이는 광주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계엄군을 폭력적으로 공격하였다고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시민군 무기 탈취 시기 : 문자적 부인의 사용

수구세력들은 광주시민들이 경찰서에서 무기를 탈취한 시점이 5월 21일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5월 21일 13시경 도청 앞 발포 당시 시민들은 이미 카빈, M1 등 총기를 들고 있었으며, 이것은 시민들이 공수부대원보다 먼저 발포를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주장은 5월 21일 공수부대원의 집단 발포에 격분한 시민들이 지방 경찰서로 가서 무기를 탈취했다는 정부, 법원의 발표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학도는 5월 19일 나주 무기고 탈취 및 5월 21일 12시 이전 광주에서의 무장을 주장하였다.

5월 19일 나주 무기고 탈취는 김동문(필명 바로잡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김동문은 1980년 5월 19일에 '광주사태' 최초로 무기고가 탈취된 곳이 나주 예비군 대대라고 하면서, 그 앞에 세워진 5·18 민중항쟁 “사적비가 밝힌 무기고 탈취 시간대가 시민군이 진압군에 앞서 무장을 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적비에는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 이후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 앞 사적비 전문)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인한 시민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격분한 다수의 시민들이 군용차량을 이용하여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M1소총, 카빈소총 그리고 다수의 수류탄등을 획득하여 무장하고 획득한 무기의 상당수를 광주로 이송하여 광주항쟁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이다(김동문, 2007.2.11).”

그러나 김동문은 무기가 “탈취된 시간은 5월19일 오후 1시-3시 사이며”, “무기고 피탈시간대를 이틀 후인 21일 계엄군 발포로 시민학살이 되고 있어 무기를 든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사적비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김동문, 2007.2.11). 이것은 사적비가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탈취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며, 김동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월 21일 12시 이전 시민들의 무장 주장은 ‘강진·해남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저자 미확인)’이라는 논문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 해남에 도착한 시위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온다. 역사학도는 위 논문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 점심 후 해남에 광주의 무장시위대가 도착하였고 오후가 되면서 이틀 안 해남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긴급이사회를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볼 때, 무장시위대가 해남에 도착한 시간은 늦어도 12시를 갓 넘긴 시간이고, 광주에서는 5월 21일 12시 이전에 무기가 피탈되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결정적인 문제는 그가 근거로 삼은 논문에 광주에서 출발해서 해남에 도착한 시위대가 무장을 했다는 얘기가 없으며, 해남 시위대들이 5월 22일 오전 10시경에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을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학도는 일반논문을 자의적으로 해석, 왜곡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한 문자적 부인을 한 것이다(역사학도, 2008.2.9).

(4) 시민군의 선 발포 주장 : 문자적 부인의 사용

무기피탈 시간의 왜곡에 뒤 이은 수구세력의 부인은 계엄군보다 시민군이 먼저 발포를 했다는 주장이다. 역사학도는 그 근거로 안부웅의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1995.2.13)를 인용하고 있다.

“다행히 장갑차 1대만 빠른 속력으로 도망가는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여 계엄군 1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 장갑차는 분수대를 돌아 총장으로 쪽으로 갔습니다.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해 들어옴과 동시에 시위대 쪽에서 총소리가 연발로 났습니다.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하고 나간 뒤 저의 대대 정보장교인 장두혁 대위로부터 62대대 이창호 대위가 얼굴에 약간 스칠 정도로 총알을 맞아 비틀 비틀 하길래 자기가 부축해 주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역사학도, 2007.8.4).”

그러나 안부웅은 이미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시민군의 발포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총소리가 카빈 소리인지 M16 소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저의 대대는 당시 도청을 향해 시위대를 등지고 도망가는 상황이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시위대 쪽에서 발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빈 총소리인지 여부를 확인했던 것도 아닙니다(안부웅, 1999): 375쪽)”

“시위대 쪽에서 차량 돌진과 동시에 사격을 했다는 것은 당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총소리를 들었으며, 차량까지 돌진하는 상황에서 난 총소리라 막연히 시위대가 사격한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한 바를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안부웅, 1999): 391쪽).”

당시 시위대 중 소수는 카빈 소총을 들고 있었지만 실탄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무장한 것은 5월 21일 13시 발포 이후이다. 또한 공수부대가 도청앞 분수대 쪽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시위대가 무장을 하고 발포를 하였다면 공수부대의 피해 규모는 상당히 컸을 것이다.

(5) 광주민주화운동 최초 사망자 : 문자적 부인의 사용

역사학도는 ‘광주사태’의 최초 사망자를 공수부대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첫 사망자가 5월 19일 광주공원 앞에서 광주천변으로 떨어진 공수부대원으로서, ‘폭도’들이 돌

로 머리를 찍어 으깨어 죽였다고 하며, 시민군 김현채와 최종복의 증언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였다(역사학도, 2007.8.4). 시민이 아니라 계엄군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시위대의 폭력성이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문자적 부인이다. 당시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은 청각장애인 김경철이다. 그는 5월 18일에 친구들과 점심식사 후 집에 돌아가다가 공수부대원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5월 19일 새벽 3시에 사망했다. 그리고 국방부와 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계엄군이 처음 사망한 날도 5월 19일이 아닌 5월 20일이라고, 보안사의 「순직일자 및 장소」 보고서를 인용하여 밝혔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70, 125쪽).

(6)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숫자 : 문자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의 사용

역사학도는 광주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계엄군의 숫자를 200명 미만이었다고 주장하여, 계엄군을 약자로 만들고 시위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부인전략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계엄군의 숫자를 왜곡하는 문자적 부인임과 동시에, 시민군을 압도적인 무장을 하고 무려 1,000배나 많은 인원수를 토대로 계엄군을 공격한 가해자로 간주하는 '피해자 존재의 부인'이다.

“불과 이 백명 미만의 병력이 장갑차와 기관총과 예비군 무기와 수류탄과 낫과 도끼로 무장한 이십 만 명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어서 탈출구를 열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한 것은 발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무장 시위대가 3,000명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집요하게 공격하니깐 방어가 불가피하였다(역사학도, 2005.4.6).”

“5·18 측의 문서에도 그날(5.20) 시민군의 수가 이십만 명을 넘는다고 하였으니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여러 대학교와 형무소 및 주요 공공시설에 분산된 계엄군 수를 다 합하여도 이백 명이 안되었다. 아직 계엄군에는 공포탄조차 지급되지 않았으나 시민군은 전원이 실탄이 장착된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역사학도, 2005.7.16).”

그러나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의 숫자는 200명을 훨씬 상회한다.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7공수여단 병력만 해도 모두 774명(장교 94명/사병 680명)이었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투입된 계엄군 병력은 모두 47개 대대 20,317명

으로, 이중 특전사는 10개 대대 3,405명(장교 504명/사병 2,901), 20사단은 9개 대대 4,946명(장교 279명/사병 4,667명), 전투병과교육사령부는 28개 대대 11,966명(장교 3,944명/사병 8,022명)이었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62, 124쪽). 또한 계엄군은 대전차 무기인 크레모아, 화염방사기, 헬기 등 시위대에 비할 바 없이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5월 20일은 아직 시민군이 무장을 하기 이전이었다.

3)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 : 문자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의 사용

5·18의 북한 개입설은 임천용 등 탈북자들이 한국논단 2006년 11월호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사태에 개입했다고 증언을 하고(한국논단, 2006), 같은 해 12월 20일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확산되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공개 증언이 있기 전부터 역사학도, 지만원은 5·18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었다. 역사학도는 2005년에 이미 1980년 5월 22일 북한군이 다이어마이트 폭약을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하였으며(역사학도, 2005.4.6),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북한군이 당시 광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증언”한다고 하였다(역사학도, 2005.5.21). 또한 지만원도 탈북자들의 공개 발언이 있기 전인 2006년 봄에 북한에서 공작원을 파견했다는 탈북자의 증언들이 많았다고 소개하였다(지만원, 2006). 이런 글들을 봤을 때, 자유북한군인연합이 공개 증언을 하기 이전부터 북한군 투입문제가 수구세력 내에서 공유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 5·18 당시 북한군의 광주 투입과 관련해서 임천용 및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아래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그때는 계엄령이 내려져서 육지는 전부 봉쇄되어 있었고 그들(북한군 특수부대)은 전부 서해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광주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한 무리는 진압군 쪽 군복을 입고 계엄군 쪽에 침투하고 그리고 절반쯤은 시민군 쪽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광주에) 총체적으로 약 1개 대대가 내려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산하면 한 4백 50명 정도로 볼 수 있지요 (중간생략) 저는 보지 못해 장담은 못하지만 광주에 내려왔다가 돌아간 인원이 3분의 1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한국논단, 2006).”

“(자유북한군인연합 기자회견) 신천보구여단 300명을 포함하여 남파된 특수부대인원 총600명이 남포에서 출발하였다고 부분적으로 기록이 있으나 광주에 침투되었던 증인들의 자료에 따르면

신천복수여단 외 타 여단들에서 차출된 300명의 인원은 동해안의 루트를 이용했으며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 잠수함기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간생략) 1980년 5월 25일 부상인원을 포함한 약 400명 정도의 남파되었던 인원들이 1차로 남포항으로 도착했고 나머지 인원 70여명은 광주에서 죽은 40여명의 시신에서 일부 부위만을 채취하여 중부전선인 강원도 철원군 상요리 일대의 전선을 넘어 귀대하였다(역사학도, 2006.12.22)."

그리고 자유북한군인연합은 2009년에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집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임천용을 포함한 16명의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군의 광주투입과 관련한 증언을 하였다(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그러나 이들의 기자회견이나 증언들을 분석해보면, 북한군 침투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뀌고,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언이 없어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된다.

우선 전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는 불과 2달 사이에 북한군 침투 인원 및 경로, 복귀인원을 다르게 주장하였다.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 임천용은 2006년 한국논단 11월호에 '북한에서 450명이 서해안을 통해서 내려와 계엄군과 시민군에 절반씩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다가 이중 1/3만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는데 12월 20일 그는 자유북한군인연합 기자회견에서, '신천복수여단 300명은 서해안으로, 타 여단 차출자 300명은 동해안으로 침투하여 이중 470여명이 북한으로 귀대하였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르게 증언하였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군의 광주 침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두 간접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언집에 기록되어 있는 증언들은 TV에서 광주학살을 보았다거나, '5·18광주 영웅'을 목격했었다거나, 아니면 3자를 통해서 북한군의 광주투입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2006년 12월 20일 기자회견 당시 광주봉기에 직접 참가했던 북한군 관계자들의 증언 역시 임천용이 북한에서 직접 들었다는 내용을 옮겨 적은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기자회견문의 'A씨 현재 북한군 중장'의 증언은 임천용이 1980년대 군대 생활을 할 때 대대장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증할 사람은 임천용 밖에 없다(역사학도, 2006.12.22; 임천용, 2006). 이에 대해 12.12, 5.17, 5·18 등에 대해서 1980년대부터 많은 취재를 해 왔던 조갑제는 이 주장을 부정하여 눈길을 끌었다. 조갑제는 본인을 포함한 목격자들이 이 증언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계엄군의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점, 국군 사망자가 23명으로 적다는 점,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서 북한군이 들어올 수 없었고 북한군을 사

살한 국군이 없으며 정권에서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 탈북자 증언은 전언에 불과하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부정하였다(조갑제, 2008.11.8).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투입 주장은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치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문자적 부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자극하여, 5.17 비상계엄확대와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 및 총격을 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정당화하는 함축적 부인이기도 하다. 북한 특수부대에 맞서는 대한민국 계엄군의 이미지는 반공, 반북 정서 속에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만원, 역사학도, 김동문, 조영환, 이주천, 정창인 등 수구논객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보수언론매체를 통해서 북한군 광주 침투설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전사모, 자유북한군인연합 등 수구단체들은 '5·18 실체규명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반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 침투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들에 대한 재해석을 토대로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하였다.

임천용은 5·18 단체들의 비판을 다시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다. 첫째, 주민등록법이 발달한 한국에서 5·18 당시 희생자들 중 현재까지 신원과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점, 둘째, 나체바람으로 목과 팔이 잘려나간 여성과 두개골을 톱으로 조각낸 시신 등 살해 수법이 극도로 잔인한 시체가 있으며, 등 뒤에서 총에 맞아 죽은 시신이 많다는 점, 셋째,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점, 넷째, 탱크와 장갑차를 특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능숙하게 다루었다는 점, 다섯째, 정규군의 복장과 외모가 아닌 군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일반인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사진이 있다는 점이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임천용, 2007).

5·18 실체규명위원회는 2010년 6월 23일, 7월 9일 광주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체 규명을 촉구하였다. 7월 9일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시체 동영상의 북한TV에 방영된 경위,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실체, 망월동의 신원미상인들의 정체, 총상 사망자의 70%가 시민군이 소지한 총기에 의해 사망한 이유, 시민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윤기권이 북한으로 도주한 이유, 북한특수부대 침투 및 제3자 개입여부, 5·18 당시 북한부대의 정체 등에 대한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주장이었다(장

재균, 2010.7.10).

지만원 역시 그의 책 『솔로몬의 앞에 선 5·18』에서 전남 전역에 산재한 38개 무기고 위치 사전파악, 신원미상자 시체 12구, 카빈, M1 등에 의한 총상 사망자 숫자(시민 총상 사망자의 69%)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북한군의 개입을 주장하였다(지만원, 2009: 50~61쪽).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 5가지를 검토하겠다.

첫 번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신원불상자의 정체이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주민등록법이 발달한 한국에서 사망자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 북한군이기 때문에 신원불상인 채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18 당시 발생한 신원불상자 11명 중 6명은 2001년에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사를 통해 신원이 밝혀져, 현재 5명만 신원불상의 상태에 있다(경향신문, 2008.5.17). 그리고 5명의 신원불상자의 존재 역시 무연고자, 타지 주민, 독거인 등을 고려한다면 160여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숫자이다. 오히려 소수의 신원불상자는 임천용의 증언과 모순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30~300여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귀대한 북한군들은 광주에서 사망한 40여명의 북한군 시신 일부를 채취하였다고 한다. 이 주장이 맞다면 광주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은 5명이 훨씬 넘을 텐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 시신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5·18 당시 총상으로 사망한 시민들의 약 70%가 시민들이 예비군 대대 무기고 등에서 탈취한 카빈, M1 등에 의해서 죽었으며, 당시 계엄군이 사용하던 M16에 의해서 사망한 시민들은 3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쏜 자작극이 아니라면, 북한 특수군이 소요를 일으키고자 시민군으로 위장하여 같은 시민군을 사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유북한군인연합과 지만원 등은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천용은 “북한에서 내려간 특수요원이 양쪽 진영에 포진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내부교란 내지 배후교란이지요. 양쪽에서 소요를 일으켜 싸움을 붙이고 당사자들은 모르니까 말이지요. 봉기군 쪽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혼란상황을 이용해서 사상자를 내고 그러면 거기서 나는 사상자는 무조건 진압군 쪽에 원인이 있는 것이 되니까……(한국논단, 2006)”이라고 증언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논리적 오류이다. 시민군에 투입한 북한 특수부대가 계엄군과 시

민군 간 싸움을 붙이려고 시민군을 사살했다면 계엄군이 사용하는 M16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카빈 소총으로 시민군을 사살한다면 시민군끼리 총격을 벌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시민군들은 M16을 탈취하여 1,235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한국논단, 1996), 북한 특수군은 카빈소총 등으로 시민군을 사살한 것이 되므로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의 오류이다. 자유북한군인 연합, 지만원, 역사학도 등 수구세력들이 시민 측 총상 사망자 중 카빈, M1 등에 의한 사망자 숫자를 제시하는 근거자료는 육군본부에서 출간한 『계엄사』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이다. 『계엄사』에 의하면 민간인 사망자는 162명이고, 이중 총상 사망자는 117명으로, 88명이 카빈, M1 소총 등에 의해서 사망하였다(한국논단, 1996). 안기부 자료에 의하면 민간인 사망자는 166명, 이중 총상 사망자는 116명으로, M16에 의한 사망자는 36명, 카빈, M1, AR자동소총, LMG, 공기소총 등 무기 고에서 탈취한 총들에 의한 사망자는 80명이라고 한다(지만원, 2009: 51쪽). 그러나 5·18 당시 직접 사체 검사를 한 기관은 육군본부, 안기부가 아니라 광주지검과 보안사였다. 이중 보안사의 「사망자 실사보고」에 의하면 전체 시민 사망자 164명 중에서 M1, CAR 총사자 94명, M16 총사자 24명, 기타 총사자 14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보고서가 계엄사와 안기부의 사망자 분류의 출처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5·18 직후 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체를 검안한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서, 당시 사체검안위원회에 참석한 의사와 목사는 사망자가 M16 총탄을 맞은 경우 폭도로 분류되어 위로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총사자들을 비폭도로 구분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132명의 총사자 중에서 108명이 M1, 카빈, 기타 총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분류된 것이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125~127쪽).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보안사에서 작성한 검시조서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광주지검에서는 의사, 군검찰관, 경찰관, 군의관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가 사인규명을 목적으로 사망 후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시신 검시를 하였기 때문에 광주지검의 검시조서가 보다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검찰, 1999n: 325~667쪽). 광주지검이 작성한 보고서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에 의하면, 안기부, 보안사, 육군본부의 기록과 상이하게 민간인 사망자 165명 중에서 131명이 총을 맞아 사망했으며, 이중 M16 총상 96명, 카빈 소총 총상 26명, 기타 총상이 9명이다. 계엄군이 소지하고 있던 M16에 의한 사망자가 월등히 많이 나온 것으로, 수치상으로도 총사자의

대부분은 계엄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검찰 검시 결과,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들도 계엄군에 의해서 사살된 정황이 밝혀져서, '카빈 소총 총사자 = 시민군 사살'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일례를 들면, 카빈 소총 총사자로 검시 결과가 나온 고규석, 임은택은 광주교도소 앞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검시에 참여했던 부검 전문의 전호종 조선대 교수는 부검을 해야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외형만 보고 검시를 하여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였다(신동아, 1996).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만원 등의 북한특수부대 또는 광주시민의 총격에 의한 시민군 사망 주장은 광주지검의 검시조서에 적시되어 있는 검시 결과를 부정하는 사실관계 왜곡이며, 검시조서에 있는 카빈 소총, M1 소총 사망자의 숫자를 토대로 시민군 또는 제3자의 총격에 의한 시민 측 총사자의 인원을 추정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야 한다.

세 번째는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 습격사건 실체에 대한 의혹이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민주화가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교도소에 대한 습격을 여섯 차례나 시도했으며 죄수들을 구출해서 어떤 목적에,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5·18 단체들에게 물으면서, 이것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다(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15쪽, 26쪽). 5·18 실체규명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서 교도소를 공격해서 죄수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배후를 밝혀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장재균, 2010.7.10). 그러나 서울지검은 1995년 12월 28일 광주교도소 현장조사를 하면서, “광주교도소는 광주~담양간 국도와 순천행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 하며, “당시 시외곽으로 빠져나가려던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 총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시위와 무관한 시민들이 도로를 지나다 매복병사들로부터 무차별 난사를 당했다” 고 교도소 습격설을 부정하였고(경향신문, 1995.12.29), 당시 광주교도소장 한도희는 “공수대원의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의 시신과 부상자 모두 담양으로 가는 도로에 널려 있었다” 면서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면 교도소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로에 있을 수 있겠느냐”, “당시 교도소에는 3공수여단 병력이 중무장하고 있어서 교도소 습격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엄군이 시 인근 지역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다(연합뉴스, 1995.12.14). 이처럼 정부 수사기관의 조사결

과와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광주교도소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교도소 습격과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주장은 모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문자적 부인으로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38개 무기고의 공격에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지만원은 시민군이 5월 21일 12시부터 16시까지 불과 4시간 만에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하였는데, 이는 누군가가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무기고 약도를 38개조에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솔로몬 앞에 선 5·18, 2009: 58쪽, 59쪽). 그러나 당시 예비군 무기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는 경찰서, 과출소, 예비군 대대 무기고로 시민들의 위치 확인이 용이하였다. 또한, 수많은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무기 보관 장소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위대 뒤에 누군가 배후가 있어 조직적으로 38개의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만원은 시위대의 무기고 탈취라는 사실관계에서 출발하여 북한군의 38개 무기고 사전 위치 파악이라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창작하는 문자적 부인을 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시민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로 2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윤기권이 월복을 한 것을 보았을 때 광주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이다. 지만원은 “윤기권을 아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다. 그가 경찰 15명을 인질로 잡은 사실을 당시의 우리군은 몰랐지만 북한은 알고 있었다”면서 그것은 “그 현장에 북한 특수군 또는 간첩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지만원, 2009). 그러나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윤기권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 중 한 명으로서, 시민군 내에서 대단한 역할을 맡지 않았다. 따라서 5·18 시위대가 집단 월복을 하거나 핵심세력들이 월복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윤기권 1명의 개인적인 월복을 근거로 광주민주화운동과 북한과의 연계성, 또는 북한 특수군이나 간첩의 광주 침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근거한 문자적 부인이다.

여섯 번째는 5·18 당시 복면을 한 사람들(소위 '복면부대')이 정체를 숨긴 북한군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가 1988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1980년 5월 22일 오후부터 대량의 복면부대가 나타나서 프락치나 정보요원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서 연대생, 고대생 30명 또는 300명 또는 500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증언도 하였다(국회, 1989.1.26:

27쪽). 역사학도 등은 이러한 증언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여 300명의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하여서 복면을 쓰고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역사학도, 2009.4.14).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위대는 경찰의 채증을 피하기 위해서 복면 등을 착용하여 신분 노출을 피한다. 1980년 5월 22일에는 이미 시위대가 무장한 상태에서, 계엄군이 헬기 등으로 채증을 하면 추후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책으로 복면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 영화 '화려한 휴가' 비판 : 문자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의 사용

5·18과 관련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영화 '화려한 휴가'였다. 2007년 7월 25일 개봉한 '화려한 휴가'는 5·18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30만 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동영 등 여야 대선주자 및 유력 정치인에게는 '화려한 휴가' 관람이 '필수코스'가 되었다. 그러자 조갑제를 비롯하여,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 우파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 프리즌뉴스 등 수구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앞을 다투어 이 영화를 비판하였다. 조갑제가 가장 먼저 '화려한 휴가'를 비판하였으며, 이후 수구세력들은 그의 비판내용을 자신들의 부인논리로 삼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영화에서는 공수부대가 누군가로부터 사격명령을 받고 탄창을 M-16 소총에 일제히 끼운 뒤 무릎 꿇 자세를 취한 다음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하여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제히 사격한다. 이것은 완전히 조작이다. 그날 전남도청 앞에서는 그런 사격도, 그런 사격명령을 내린 장교도 없었다. 둘째, 공수부대의 발포는,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를 몰고 군인들을 향하여 돌진, 공수부대원을 깔아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자위적, 그리고 조건반사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이때도 공수부대 중대장들에게만 10발씩 지급되고 일반 사병들에게는 실탄이 거의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조갑제, 2007.9.7).”

이러한 비판은 5·18 당시 집단발포와 관련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문자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조갑제 주장과 달리 당시 공수부대 중대장뿐만 아니라 하사관에게도 실탄이 일부 분배되었으며, 두 번째, 공수부대를 향한 시위대 장갑차, 버스의 돌진이 공수부대의 5.21 도청 앞 첫 발포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한 공수부대의 일제 사격이 없었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당시 전남도청 내무국장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애국가를 틀었으며, 노래 소리와 함께 공수부대의 집중 사격이 있었기 때문이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85, 86쪽). 따라서 영화라는 특성 때문에 당시 사실관계를 그대로 재연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려한 휴가’ 영화가 당시 상황을 본질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화려한 휴가’에 대한 비판자들은 공수부대가 자위적 차원의 발표만 하였고 시위대를 향한 집중사격, 조준사격은 하지 않았던 것 인양 부인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한편 조갑제는 “애국가를 부르는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하는 장면”이 마치 “공수부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발포하는 듯한 상징성을 풍긴다”면서, “영화 관람자는 공수부대가 반란군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조갑제, 2007.9.7.) 이 비판은 당시 공수부대가 반란군이 아니라 정당하게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였다는 입장에 근거한 것 같다. 그러나 당시 공수부대의 전국 대학 배치는 신군부의 다단계 쿠데타 중 일부인 5.17 비상계엄확대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5.17 조치와 신군부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공수부대가 진압한 이후에 국보위 설치, 전두환 대통령 추대를 통해 쿠데타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공수부대의 시위진압은 신군부의 내란을 지원하여 저항세력인 광주시민들을 공격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수부대 예비역들은 조갑제의 부인논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강조하여 공수부대의 진압행위를 정당화하는 ‘피해자 존재의 부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광주진압 초기에 공수부대는 최루탄과 방패도 없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시민들의 투석과 차량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실탄을 휴대하지 않고 오로지 곤봉으로써만 진압했다. 계엄령 하에서 민간인이 군대에 대해 투석과 차량돌진으로 대항할 때 어느 정도의 진압이냐 걱정한다. 민간인이 무기고를 습격하여 소총, 기관총으로 중무장하고 헬기에 대해서도 사격하고 광주교도소도 습격했다(독립신문, 2007.9.21).”

위 주장은 공수부대가 초기에 살상행위를 저질러 시민의 저항이 거세어진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평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수부대에 시위대들이 투석, 차량공격, 사격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공수부대 예비역들은 이와 같은 함축적 부인과 동시에 문자적 부인도 사용하여, 시위대가 무장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하였고, 공수

부대는 시위진압에 최루탄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다.

5) 2007년 대선정국에서의 '광주민주화운동' 담론 부인 : 해석적 부인의 사용

영화 '화려한 휴가' 논란 이외에도 2007년 대선정국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쟁점으로 부각된 사례가 또 하나 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갑제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정부의 개념규정으로, 광주사태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용어는 후에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정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조갑제, 2007.8.5). 정창인은 “광주사태가 특정지역의 지역정서와 결부되어 있고 또 특정 정치세력과 너무나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평가이지 역사적 평가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정창인, 2007.8.7). 조영환 역시 5·18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하며, '사태'라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광주사태'가 더 맞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광주사태는 김대중세력과 전두환세력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전두환과 김대중을 동시에 초월한 상황에서 평가받아야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라면서, 폭동이란 단어는 의로운 광주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며 김대중 세력의 권력욕을 간파하고 민주항쟁으로 쉽게 찬양하기도 힘들다”고 하였다(조영환, 2007.8.6).

5·18 광주라는 한 사건을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항쟁, 광주사태 중에서 무엇으로 표현하는가는 5·18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수구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평가의 결과로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객관적인' 표현으로서, '광주사태'를 사용하길 선호하고 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현재의 담론은 '김대중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 권력을 누리기 위한 '핑계'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수구세력들은 5·18이라는 사건의 발생은 인정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광주사태'의 사용을 옹호하는 것은 담론투쟁의 형태로 나타난 해석적 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다. 이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담론의 사용을 꺼리는 것은 김대중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담론을 이용하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담론을 이상화하였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공식 인정받은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다. 1988년 정부의 ‘민주화합추진위원회’ 활동을 거치면서 이 용어가 공식화된 것이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역시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제정되었다.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이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전유물이므로 ‘객관적인’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야 할 것 없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46.5%가 5·18을 ‘민주화 운동’, 29.5%가 ‘민중항쟁’으로 인식하는 등 총 76%가 5·18에 대해 ‘민주화’, ‘민중’이라는 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5·18을 ‘폭동’ 또는 ‘사태’로 인식하는 비중은 각각 9%, 6.6%에 불과하여(프리존뉴스, 2008.5.15), 국민적 합의도 상당히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6)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 비판 : 합축적 부인의 사용

수구세력들이 행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 중 마지막은 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광주학살의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북한과 내통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계엄군을 공격하고 선량한 시민들도 희생하게 만든 가해자로 인식시키는 합축적 부인 전략이다.

지만원은 5·18 세력이 “북한과 내통하여 북한과 함께 반미-반정부-적화통일을 위한 행동”을 하였고, “5·18 단체의 정신적 조국은 북한”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네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5·18 진영의 거목’인 황석영과 윤이상이가 북한의 5·18 영화인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쓰고, 배경음악을 작곡하는 등 북한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5·18 사람인 김대중이 북한에 충성을 하였고 5·18과 북한은 김대중에 의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5·18 주모자 문익환, 서경원도 북한에 충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네 번째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5·18 최고의 공로자’라는 윤기권이 1991년 북한으로 가서 강연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다(지만원, 2010.5.8). 그러나 이러한 지만원의 주장은 반복,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왜곡, 해석한 것이다.

또한 수구 인터넷 언론들은 2010년 7월 9일에 광주에서 개최하려 했던 ‘5·18 실제규명 촉구대회’가 5·18 단체들의 ‘테러’에 의해서 무산되고, 5·18실체규명위원회 김동

문 고문이 전치4주 진단을 받는 등 부상자들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들은 '5·18 단체, 대낮에 테러단체로 나타났다', '5·18실체규명위, 광주에서 폭행당했다'는 선정적 제목을 뽑아서 5·18 단체들의 폭력성을 강조하였는데(울인코리아, 2010.7.10; 조영환, 2010.7.9), 이것은 은연중에 5·18이 5·18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에 의해 촉발되었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준다.

3.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부인주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주체들은 한국논단, 독립신문, 프리즌뉴스 등 수구 매체와 인터넷 카페인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뉴라이트 계열인 안병직과 제성호, 수구논객인 정창인, 이영민, 보수 정치세력인 박근혜, 박범진, 자유선진당이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주체들은 한국논단, 독립신문, 프리즌뉴스, 울인코리아 등 수구 매체와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 시민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 국민행동본부, 5·18실체규명위원회, 인터넷 카페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수구논객인 조갑제, 지만원, 역사학도, 김동문, 정창인, 조영환 등이 있다.

이들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생산해 낸 반공주의, 반북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각각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을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논단, 독립신문 등 수구 언론매체들이 두 사건 과거청산에 대한 비판 기사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한 과거청산이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과 전사모와 같이 개인을 기리는 카페들이 부인주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인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박범진, 안병직은 인혁당에 가담했거나 관련이 있었다는 양심선언, 증언 형태로 부인을 하였다. 또한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들과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은 당시 집단발포가 없었고 공수부대도 피해자라면서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부인을 하고 있으며,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북한군도 광주에 파견되어 '광주폭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 형태로 부인 하였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주체들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은 군인 출신

자들과 기독교 종교인들이 반공적 시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며 여론형성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인담론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만원, 정창인, 김동문, 역사학도 등은 육군 장교 출신, 월남전 참전 군인이거나 목사이다. 공수부대원들과 국민행동본부 역시 군인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갖고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있다. 김진홍, 이종윤, 김성광, 김진철 등 기독교 목사들은 강연과 설교, 수구적 인터넷 언론 매체 운영 및 반복주의적 원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청산 부인담론을 확산시켜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무화시키고 있다.

우선 군인 출신 부인주체들을 살펴보면, 역사학도와 함께 5·18 부인담론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한 지만원이 있다. 지만원은 육사 22기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7년에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으며(지만원, 2010: 표지), 시스템클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와 뉴스타운, 울인코리아 등 수구 인터넷 매체 기고,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등의 저술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기획과 연출에 의한 ‘광주사태’ 발생 및 김대중, 황석영, 윤이상 등의 북한 내통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사)월남참전전우회 전남회장을 맡았으며 전남매일신문 기자 출신인 김동문이 있다. 김동문은 뉴스타운에 ‘김동문의 세상바로잡기’라는 오피니언 리더 칼럼을 집필하고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글을 40여회에 걸쳐서 연재하는 등 다수의 광주민주화운동 부인 기사, 칼럼을 작성하였고, 아울러 5·18실체규명위원회 조직 및 활동에 참여하였다. 육사29기로, 육사 경제학과 교수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한 정창인은 주로 독립신문을 통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외에도 1992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서정갑이 본부장으로 있는 국민행동본부와 공수부대 예비역들이 ‘화려한 휴가’ 비판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에 참여하였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이었던 박세직 역시 회장 재임 중인 2007년에 ‘화려한 휴가’가 국군을 민간인 학살집단으로 매도한다고 비판하였다(박세직, 2007.10.5; 2007.11.8). 재향군인회는 2002년 회원인 지만원이 5·18 명예회복 고소 사건으로 체포되자 조직 차원에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에 관여하였다(재향군인회, 2002.10.25).

군인 외에 기독교 목사 역시 5·18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유포하는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부인주체는 역사학도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의 김대령 목사이다. 김대령 목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다음카페를 중심으로 다수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글을 게재하여, 5·18 부인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핵심적인 주체가 되었다. 또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인 김진홍 목사는 2004년부터 이메일과 공개 장소 강연을 통해서 광주사태가 친북세대를 길렀고(데일리서프라이즈, 2004.11.30), 현대사에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여서 문제가 되었다(오마이뉴스, 2006.2.9). 매송영락교회 김진철 목사는 ‘구국기도’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5·18이 ‘북한 김일성 공산정권이 특수부대원들을 보내서 무자비한 학살을 통하여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진철, 2009.8.19; 2009.8.27; 2009.11.7). 또한 이 ‘구국기도’라는 기독교 사이트는 김진철 목사 이외에, 조갑제, 조영환, 정창인, 서석구, 김성욱, 김필재 등 수구 논객들의 칼럼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등 반복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구국기도, www.korea318.com). 한편, 대형교회인 강남교회 김성광 목사가 운영하는 ‘신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구국기도’ 인터넷 매체에서는 5·18 북한군 특수부대의 광주투입 주장, 영화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대한 비판, 5·18 실체규명위 기자회견, 지만원의 5·18 명예훼손 사건 재판 소식 등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루어 신도들 사이에 유포하였다(신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구국기도, www.advkorea.com). 이외에도 탈북자 출신으로, 임천용 북한자유군인연합 대표와 함께 한국논단 2006년 11월호 인터뷰를 하였던 심주일은 현재 부천 창조교회 목사로서 극동방송에서 대북 설교방송을 하고 있다. 교회 목사가 공식 설교를 통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하였다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증언을 그대로 전과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대형교회인 강남구 대치동의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는 2008년 9월 28일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쓰라’는 설교 중에 “광주 5·18사건도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사실이 직접 가담했던 이, 또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하면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양심선언을 밝혔다. 그는 탈북자들이 “전기톱으로 얼굴을 자르고 여인의 등 뒤로부터 총을 쏜 흔적이 있는 사진, 이 같은 잔인한 행위를 대한민국 공수부대원이 했다고 믿고 있는 우리를 한심하다고 한다”며 “무기고를 탈취, 공수부대의 M16이 아닌 칼빈이나 다른 총으로 등 뒤에서 맞아 죽은 수가 M16으로 맞아 죽은 이보다 많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주장

하였다. 이종윤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 장신대 객원교수, 전주대 총장, 한기총 신학위원장을 맡았다(제주의소리, 2008.10.7). 개신교 안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종교인인 만큼 그가 다른 목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클 것이다. 따라서 개신교 목사들이 반복주의를 고취시키고 과거청산 성과를 부정하는 설교를 하여 신자들 사이에서 부인담론을 확산시키는 현상이 보다 일반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4.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부인시점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과 관련한 부인은 2002년 9월 의문사위 발표 이후 바로 발생하지 않고, 2005년 12월 국정원 진실위에서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에 박정희의 재가가 있었다고 발표한 시점부터 발생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 재심법원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8명에 대한 무죄판결, 2010년 6월 전 국회의원 박범진의 인혁당 가입 양심선언 직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부인기사 및 칼럼들이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이것은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정치지형과 관련이 있다. 2001, 2002년은 최종길, 장준하, 균의문사, 녹화사업, 삼청교육대 등 현대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사건들에 대해 의문사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시점으로 과거청산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의문사위가 비상보통군법회의 수사기록 분석 및 가해자들의 진실 고백을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4년 7월 의문사위가 종료될 무렵 장기수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색깔론으로 인하여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색깔론이 참여정부와 연계되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과거청산에 대한 보수-진보의 대립이 점차 가시화되었다. 특히 2004년 17대 국회 구성 이후 여당에서 추진하였던 과거사진상규명법 신설 등 4대 개혁입법은 과거청산에 대한 보수-진보의 대립을 더욱 격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정부, 법원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부인담론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 역시 1988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과거청산 과정에서는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조갑제와 5공 측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 등 소수의 인사만이 전두환을 변론하

는 정도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등장 이후 보수-진보의 대립이 상당히 심해지고, 2006년부터 북한 탈북자들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5·18 광주 개입을 주장하면서 관련 기사와 칼럼이 생산되고, 같은 글이 여러 수구 인터넷 매체에 중복 게재되는 등 5·18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졌다. 한편 200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5·18이 정치적으로 연계되어 등장하였다. 첫 번째는 영화 '화려한 휴가'와 관련한 논란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5·18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룬 영화가 무려 730만명 가량의 관람객을 동원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도 영화 관람을 앞 다투어 하였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숫자의 '화려한 휴가' 비판 칼럼, 기사가 생산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었다. 두 번째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광주사태 발언이었다. 이것은 '화려한 휴가'를 통해서 5·18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 나온 것이라 야당에 의해서 정치적 쟁점이 되었고, 보수 매체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담론을 비판하는 주장을 일부 펼쳤었다. 2009년, 2010년에는 2006년 자유북한군인연합의 북한특수부대 광주개입 주장의 연장선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다양한 기사, 칼럼, 사진, 영상이 수구 사이트에 대거 게재되었다. 이 당시에는 북한의 5·18 기획 및 연출, 5·18 세력의 북한 내통, 탈북자들의 5·18 증언, 북한특수부대와 연관된 5·18의 각종 쟁점에 대한 해석 자료 등이 많이 생산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6월에 출범한 5·18실체규명위원회 관련 기사들이 여러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지만원 5·18 명예훼손 재판 관련 소식도 2009년, 2010년에 조금씩 기사화되었다. 지만원 5·18 명예훼손 재판의 경우 2011년 1월 19일 무죄 판결이 나면서, 코나스넷, 뉴스타운, 독립신문 등 수구 인터넷 언론에 일제히 기사화되었고,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과 같은 수구 사이트에도 기사들이 펴글로 등재되었다. 또한 2010년 2월 22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강한 부인흐름을 타고 프리존에 '5·18 진상규명 축구방'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2010년 9월 30일 현재 총109건의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을 부인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한편, 2011년에 들어서면서 5·18 과거청산 부인담론은 급격히 줄어든다. 일례로, 대표적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 사이트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의 '5·18' 코너에는 2010년에 총143건의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글들이 등재되었으나, 2011년에는 단지 4건만 올라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1년에는 '5·18' 코너의 대부분이 제주 4.3과 관련된 글이었다. 아울러, 다음카페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중 '광주사태의 진실탐구마당'의 경우에도 역사학도가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을 부인하는 글이 2010년에 총86건 등재되었으나, 2011년에는 38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5.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활동과 채널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온라인 채널은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과거청산 부인의 핵심적 기능을 하였고, 오프라인 채널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담론을 현실 속에서 외화 하는 부차적 기능을 하였다.

온라인 채널에서 대표적인 담론생산 장소는 조갑제닷컴,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카페, 뉴스타운의 김동문의 세상바로세우기 칼럼 코너이다. 조갑제닷컴의 경우 영화 '화려한 휴가' 비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집단발포 문제를 제기하였다. 시스템클럽은 북한 특수부대의 5·18 침입과 북한의 연계와 관련하여 가장 주도적으로 담론을 생산하였고,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은 5·18의 각종 쟁점들에 대한 부인담론을 생산하는 동시에 사진,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뒤틀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담론은 주로 독립신문과 프리존뉴스를 통해서 생산되었다. 정창인, 백승목, 삼덕(필명) 등은 두 매체를 통하여,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이 2006년 1월 명예회복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을 때, 2007년 1월 제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과거청산을 부인하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한편 한국논단은 오프라인 매체로서는 유일하게 담론 생성 기능을 하였다. 한국논단에서는 2006년 11월 탈북자 임천용과 심주일 인터뷰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하였고, 이후 2006년 12월호, 2007년 2월호, 3월호에 임천용의 글과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성명서를 수록하여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 개입에 대한 담론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담론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똑같은 글이 여러 사이트에 게재되기도 하고, 최초로 담론을 생성한 글과 유사한 글들이 작성되어 여러 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개인들은 블로그와 카페 등에 역사학도나 지만원의 글을 옮겨서 전파하였다. 이런 결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5·18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3분의 2 이상은 5·18 과거청산을 부인하는 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론의 확산은 또 한편 설교와 강연 등 대중들을 향한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의 북한 특수부대 광주 개입을 내용으로 한

설교와 안병직의 명지대학교 강연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수구세력들은 기자회견, 고소고발 등을 통해서 온라인 속 부인담론을 오프라인에서 외화 시킨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에는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의 인혁당 과거사 조작 규탄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이 여기에 속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 공수부대 예비역들의 ‘화려한 휴가’ 제작진 고소, 5·18 실체규명위원회 출범 및 광주 기자회견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4 : 과거청산 부인채널과 기능〉

구분	영향력	채널	기능
온라인	대	수구 인터넷 웹사이트	부인담론 생산
		수구 인터넷 웹사이트 및 댓글	부인담론 확산
오프라인	소	기자회견, 재판, 고소 등 소규모 행위	부인담론 외화
		대중 설교 및 강연 등 대규모 행위	부인담론 확산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수진영의 문제제기와 확산은 「문제제기 및 부인담론 생산 → 온라인을 통한 부인담론 확산 → 수구단체의 행동을 통한 부인담론의 외화」라는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경우 조갑제가 조갑제닷컴을 통하여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적 대응이고 집단발포는 왜곡이라고 가장 먼저 문제제기 하였다. 그러자 다른 수구 인터넷 언론들이 뒤이어서 같은 논조의 ‘화려한 휴가’ 비판 글을 연달아 생산하였다. 그리고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들과 서정갑 대령이 대표인 국민행동본부에서 ‘화려한 휴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제작진을 고소하는 직접행동을 하였다.

북한특수부대의 광주개입 주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지만원이 한국논단 2006년 4월호를 통해서 북한군의 광주 개입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서 한국논단 2006년 11월호에서 임천용 등 북한 인민군 출신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 북한특수부대의 광주 개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자 프리존뉴스, 독립신문, 구국기도, 선진한국연합회, 재향군인회 등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여 전파하였고, 이어서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2006년 12월 20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온라인에서 북한군의 광주 개입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들과 부인담론이 재생산되어 확산되었

으며, 자유북한군인연합은 2009년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증언집을 출판하였다. 이 흐름은 계속 이어져서 4년이 지난 2010년에는 5·18 실체규명위가 결성되어서, 관련 의혹들을 규명할 것을 주장하는 촉구대회를 개최 하였다.

인혁당 사건의 경우, 박범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1차 인혁당에 가입했다는 양심선언을 하자, 조선닷컴, 프리즌뉴스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여 확산시켰다. 그리고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등 수구단체에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방문하는 직접행동을 하였다.

한편 보수언론의 담론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확산되는 모습도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화려한 휴가’인데, 조갑제가 2007년 9월 7일에 ‘화려한 휴가의 화려한 왜곡’이라는 글을 쓰고 나자 9월 9일 뉴데일리에서 조갑제의 글에 대한 인터넷 논쟁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뉴데일리, 2007.9.9). 이어서 9월 18일에는 조갑제닷컴에서 조갑제의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분석하고 조갑제의 논리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류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김수연, 2007.9.18). 이것은 인터넷 보수언론의 문제제기가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서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주천의 글을 보면 조선닷컴에서 2003년에 실시한 5·18 여론조사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비율이 93.88%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는데(이주천, 2010), 이것은 수구세력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대표적인 부인활동을 정리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박범진 양심선언 및 수구단체, 보수정당의 부인활동은 앞에서 정리를 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1) ‘화려한 휴가’로 촉발된 국군 예비역들의 부인활동

조갑제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하여 가장 먼저 2007년 9월 7일, 조갑제닷컴에 「‘화려한 휴가’의 ‘화려한 왜곡’」이라는 글을 써서 집단발포 장면이 왜곡되었으며, 국방부가 이 장면에 대해서 항의 및 해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조갑제, 2007.9.7). 그러자 일부 수구 인터넷언론에서는 조갑제의 글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며(뉴데일리, 2007.9.9), 네티즌 댓글 중 66%가 조갑제의 주장에 찬성한다고(김수연, 2007.9.18)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심형래 감

독의 영화 '디워'에 대한 폄하는 '화려한 휴가' 띄우기 음모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정창인, 2007.9.11).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공수부대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영화를 본 국민들에게 이제는 국군이 답해야” 한다고 군의 답변을 촉구하였다(국민행동본부, 2007.9.10). 조갑제는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이 공수부대를 살인집단으로 몰아가는 이 영화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국군의 정통성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장교들이 나서서 국방부장관의 해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갑제, 2007.9.11). 그리고 김성옥은 국방부가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나서기를 촉구하였고(김성옥, 2007.9.13),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직원 및 대선후보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마다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대해 비판 하였다(박세직, 2007.10.5; 11.8).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여론 흐름에 힘입어 2007년 9월 21일에는 전 공수부대 출신 장교들이 '화려한 휴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수부대 진압과정 왜곡, 공수부대를 반란군으로 묘사한 점 등을 비판하고 국방부 특별정훈교육 실시, 정치인 선거 목적 활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코나스, 2007.9.21), 이어서 예비역단체 대표 등 27명은 2007년 11월 26일, '화려한 휴가' 제작자와 감독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코나스, 2007.11. 26). 그러나 '화려한 휴가'에 대한 비판은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2) 북한 특수부대 광주 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5·18 실체규명 활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체규명은 탈북자들이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그 이전에는 발포명령 주체, 지휘계통 등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흐름이었는데, 북한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주장으로 인해서 수구세력에게는 새롭게 규명해야 하는 의혹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천 원광대학교 교수는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 설립을 처음으로 제기하였으며(이주천, 2007.8.7), 이후 수년간 역사학도, 지만원, 김동문 등 수구논객들과 독립신문, 프리존뉴스, 올인코리아, 뉴스타운 등 수구 인터넷 언론들은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 개입과 관련한 담론들을 온라인에서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북한군의 광주 개입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0일 5·18 실체규명위원회가 결성되었고(김동문, 2010.6.11), 2010년 7

월 9일에는 광주에서 5·18 실체규명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이 대회를 저지하려는 5·18 부상자회 회원 등과 5·18 실체규명위 측과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수구언론에서는 이를 5·18 단체가 5·18 실체규명위를 대낮에 테러했다고 보도하였다(올인코리아, 2010.7.10). 이처럼 5·18 실체규명위원회는 광주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북한군 광주 개입에 대한 3년 이상의 담론투쟁의 성과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외화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내분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김동문, 2010.10.25).

3)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5·18 명예훼손 재판을 활용한 부인활동

지만원에 대한 5·18 명예훼손 재판은 2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2002년, 2003년으로, 지만원은 2002년 8월 16일에 일간지 광고를 통해 광주시민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지만원은 당시 100일간 구속되었다가 2003년 1월 28일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독립신문, 2003.1.28). 두 번째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 1월 19일 1심 선고가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08년 5월 5·18 단체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지만원의 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이 5·18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지만원은 이 머리말에서 5·18이 김대중의 내란사건이고 북한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을 지휘하였으며,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사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지만원, 2009.9.4). 이 사건은 2009년 7월 기소되어 2011년 1월 19일 안양지법에서 무죄선고 되었다(뉴스타운, 2010.1.19). 지만원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인 기자회견, 고소행위와 달리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 및 온라인을 통한 담론확산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수구진영에서는 5·18 명예훼손 재판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재판 소식은 주로 뉴스타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프리즌 5·18 진상규명 축구방에서는 이 재판을 주된 이슈 중 하나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역사학도 등 수구논객들도 자신의 온라인 공간에 뉴스타운 등의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주의 환기 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뉴스타운은 5·18이 북한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이라는 지만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해석, 선전하였다(뉴스타운, 2010.1.19).

6.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의 원인

인권침해에 대한 가해자들의 부인은 자기방어, 자기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가해자들에게 인권침해의 시인은 사회적 지위, 업적, 재산, 가족, 인간관계 등 자신이 일평생 쌓아올린 성과들과 세계관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 동기는 이데올로기적이며 더 복잡하다. 이들은 민주정부 수립 이후 보수적 헤게모니의 공백 상태에서 과거청산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 과거 정부의 '정당한' 행위들이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들은 과거청산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 직업, 재산, 가족,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정체성, 사회적 가치가 부정되는 위협을 느끼게 되고, 과거청산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정체성을 복원하려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지자들의 이러한 과거청산 부인의 원인을 체계화하기 위해 과거청산 이후 부민주체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회적 무시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과거청산 부인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정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인정투쟁의 일환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 과거청산 부민주체의 정체성

한국에서 과거청산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보수와 수구의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에 두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과거청산 부민주체들은 과거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보수와 수구의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자유주의연대, 시대정신과 같이 자유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그룹과 다수의 우파 정치인들은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여전히 반공을 절대적 가치로 제시하는 '아스팔트 보수', '행동하는 보수'들은 수구세력에 해당한다(신동아, 2003.10).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민주체의 경우에도 박근혜, 안병직 등 소수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수구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수와 수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사상 또는 경향의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 보수주의의 기본 사상은 버크의 주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버크는 전통

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변화를 용납한다.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인간은 서로 불평등하며 지배는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온정주의적으로 민중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병곤, 2011: 15~17쪽). 이처럼 보수주의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인간을 자유롭거나 선량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로 이해한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이상적인 비전에 따른 인간의 사회 재구성 능력을 의심하여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부정하게 된다(이나미, 2011b: 51쪽). 이러한 보수주의의 특성은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의 주류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사회 주류로서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보다는 실리를 중시하고 극단적인 변화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수구는 보수주의와 달리,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고 전통을 지키고자 하며, 실리보다 원리와 원칙을 절대시한다. 수구의 이념으로는 과거의 정치체제와 질서로 돌아가자는 반동주의, 유대교와 같이 원래 그대로의 교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정통주의, 종교적 근본을 강조하고 과거 참 종교를 실현하였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근본주의가 있다. 반동주의는 정치에서의 수구, 근본주의와 정통주의는 종교와 문화에서의 수구라 할 수 있다(이나미, 2011b: 29~32쪽). 이렇듯이 수구는 과거의 이상향을 유토피아로 여기고 있으며, 보수주의의 귀족, 엘리트 위주 지배와 달리, 군주, 메시아와 같은 절대 권력자의 지배를 주장한다. 또한 수구파는 보수주의자와 같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기틀이 무너질까 염려하면서 옛것을 지키려 한다(이나미, 2011b: 90~92쪽). 이들은 온건한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자신들의 원칙, 경전의 원리가 훼손될 경우 생사를 걸고 투쟁을 하는 극단적인 성향을 띤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갑제, 지만원, 역사학도, 김동문, 정창인, 조영환, 한국논단, 자유북한군인연합, 국민행동본부, 일부 기독교 목사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부인주체들은 사회개혁을 추구하지 않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같은 권위주의적 보수정권으로 돌아가기를 회구한다는 점에서 수구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은 반공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이중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는 한국 보수주의의 전형적인 특성으로서, 수구세력 역시 한국의 보수주의자와 함께 이 두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성장했기 때

문에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국가주의와 근본주의는 절대 권력과 기본 원리를 중요시하는 수구세력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수구세력의 정체성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분석하였다.

(1) 부민주체의 '종교적' 신념으로서 반공주의

반공주의는 한국의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원래 보수주의는 급진적 변화와 유토피아를 반대하기 때문에 혁명적 실천을 통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의 형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보수주의의 반공 성향은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어, 반공주의가 한국 보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1945년 12월에 개최된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을 둘러싼 찬탁-반탁 논쟁 과정에서, 우익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좌익을 소위 '찬탁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계급과 기독교 신자들이 대거 남하하여 강력한 반공 그룹을 형성한 것도 반공주의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반공주의가 남한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편, 남한 지배층 역시 반공주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해방 이후 식민지 지주층을 대변하는 한민당과 좌파의 성장을 막고자 했던 미군정은 반공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강조하였고, 상해 임시정부 시기부터 일찍이 반공을 주창하였던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실리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반공주의를 표방하였다. 박정희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반공정책과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집권기간 내내 반공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에서는 '반공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1971년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파악하였다. 유신체제에서는 반공교육이 국민윤리를 비롯하여 전 교과활동에 실시되었고, 멸공사상까지 등장하였다(이나미, 2011a: 46-49쪽). 이러한 반공 담론은 노태우 정권 시기에 '무조건적 반공주의로서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차별화된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반공, 반북은 반정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핵심적인 논리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까지 반공주의는 경제적인 우위에 있었던 북한으로부터 남한의 체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의 중화학 공업화가 이뤄지면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반정부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반공주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동구권과 소비에트가 몰락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에 혼란이 생기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세력이 연달아 집권하면서 반공주의는 시민사회 내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반영하는 흐름이 보수혁신운동을 주창하는 시대정신의 반공주의 폐기 주장이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운동단체인 자유주의연대의 대표대행을 역임하였고, 현재 시대정신의 상임이사인 이재교는 보수진영이 반공주의를 버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남한의 승리로 끝났으며, 북한의 선전·선동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산주의든 뭐든 다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재교, 2011). 그러나 수구세력은 여전히 반공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들에게 반공주의는 단순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삶의 원칙이고 종교적 신념인 것이다. 반공이 더 이상 국시가 아니고, 반공이란 키워드로 세상을 읽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지만 이들은 변하기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하려면 빨갱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해. 토막 쳐서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해”라고 주장하는 60대 박원순 서울시장 폭행녀의 발언이나(허재현, 2012.1.16),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기획하고 연출하였으며,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서 광주폭동을 일으켰다는 지만원, 역사학도, 김동문 등의 주장은 반공주의에 대한 수구세력의 전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성장주의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는 전통적 덕성과 공동체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성장주의를 반공주의와 함께 대표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정권의 존재 가치를 경제발전에서 찾았다. 버크는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강조한 로크의 사유재산권과 이를 토대로 한 산업화의 비인간적 측면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서구의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무비판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였고,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정부 주도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성장만능주의 이면에는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국제적인 ‘경제전쟁’에서 승리하여 체제를 보존하고, 이 과정에서 절대적 통치권도 확

보하겠다는 것이다(김병곤, 2011: 24~26쪽). 그러나 성장만능주의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노동자·민중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였으며, 여기에 대하여 민중들은 반유신 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6월 항쟁과 같이 정권을 위협하는 거센 저항을 하였다.

성장주의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주체들이 모두 공유하는 사항이다. 보수주의자와 수구세력 모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경제성장을 향유하였고 지금도 그 추억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주의자인 안병직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광주학살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치적 긴장의 희생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안병직, 2011: 171쪽), 수구논객 조갑제는 전두환, 노태우의 여러 청산 불가능한 업적 중에서 1980년대 11년간 세계 1위였던 연평균 10.1%의 GDP 성장률을 가장 으뜸으로 꼽고 있다(조갑제, 1996). 다만 성장주의는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 중 사용 빈도가 낮은 정당화 기법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구세력의 부인내용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3) 국가와 국가 지도자를 절대시하는 이념으로서 국가주의

보수주의자들은 행정과 정치의 중앙집권화를 두려워하며, 지방분권화, 권력의 분산을 선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3권 분립, 대의제 민주주의는 모두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정치 체제인 것이다. 버크 역시 국가는 소극적 권력을 가져야 하며, 정부권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이나미, 2011a: 61쪽). 그러나 수구파는 권력의 중앙 집중을 선호한다. 이들은 과거에는 군주와 메시아에 충성을 하였으나, 근대화 이후에는 국가 또는 국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충성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주의이다. 한국 역시 8.15 해방 이후부터 군부독재가 종식되기 전까지 국가를 절대시하고,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승만과 박정희는 국가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전두환은 박정희의 뒤를 잇는 절대자였던 것이다.

안호상 등 이승만 정권의 지식인들은 1951년, 이승만을 신격화하는 일민주의(一民主義)라는 이념을 만들었다. 일민주의는 일민(一民)인 한국민족이 나누어지면 죽고 하나(一)가 되면 산다는 민족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하나가 미처 되지 못한 바 있으면 하나를 만들어야 하고, 하나를 만드는 데에 장애가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배제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이나미, 2011a: 52쪽). 일민주의에서 이승만은 단군신화의 홍익인간과 '의리를 무겁게,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화랑의 중의경사로 이어지는 건국과 통일의 역사를 계승하는 지도자이고, 국민은 지도자를 따르는 신종자로 규정된다. 그리고 전국 구석구석에 국가 주도로 국민회, 청년회, 부녀회가 구성되는데 모든 단체의 대표는 이승만과 영부인이다(이나미, 2011b: 307~309쪽).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 직후에는 행정적 민주주의, 1960년대 중반에는 민족적 민주주의, 유신체제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와 같은 소위 수식어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주의를 주창하였다. 박정희는 수차례 개헌을 통해서 권력 집중을 강화하였다. 5.16 직후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 되어 있는 헌법을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로 바꾸고, 계엄 선포의 조건을 대통령의 판단으로 맡기도록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선출직이던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 1969년에는 삼선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3회 연임을 가능하게 하더니,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발표하여, 3권 분립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1/3을 선출하고, 대통령 연임제한 조항이 사라져서 영구집권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사법적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조치권을 갖게 되었고,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은 폐지되었으며,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박정희 1인을 위한 국가체제가 성립되었다.

박정희는 1973년 연두기자회견에서 하나의 민족은 영원한 생명체이고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국가주의적 사상을 공식 표방하였다. 그는 이순신 신격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을 현대의 이순신으로 우상화하였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화랑 관창의 미담을 발굴, 전파하였다. 또한 군부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전 사회적인 군사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군부의 영향력은 김영삼 정권의 하나회 숙청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외에도 박정희는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을 모방하여, 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관 주도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의 격화로 농촌마을들은 개별화, 고립화되고, 국가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다(이나미, 2011b: 51~59쪽).

한편 전두환 정권은 소위 '땡전뉴스'와 같이 대통령과 집권당을 중심으로 미디어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언론을 통제하였고, 삼청교육대와 같은 사회정화운동을 벌여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과 학생과 재야의 민주화 운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등 국가주의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당시 신군부가 사회 각계의 요직을 차지하는 등 군사주의의 확산 역시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광주학살을 통해서 집권을 한 원죄로 인해서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영도자적'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과거청산을 부인하는 수구세력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수구세력들은 여전히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우선시한다. 이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통해서 체득한 진리인 것이다. 수구세력 중에서 군인 출신들은 이러한 국가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하다. 군인들은 한국전쟁, 월남전 등 실제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국가에 충성하였거나 아니면 이러한 삶을 영광스런 인생으로 모델화하여 살아 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과거청산 부인의 핵심 주체들이 군인 출신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만원, 정창인은 육사 출신이고, 김동문도 월남전 참전 이력이 있다. 공수부대 출신자들, 국민행동본부 등 예비역 단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의 핵심적인 주체이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도 부인의 흐름에 동참하였다. 박정희, 전두환이 만들고 확산시킨 군사주의, 국가주의가 과거청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추모하고 기리는 모임들도 과거청산 부인에 앞장서서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였다.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절대적 지도자'로 상징조작 하였던 국가주의적 통치가 낳은 직접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우상인 박정희와 전두환의 '존엄성'이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당하자 인혁당 재건위 사법살인과, 5·18 광주학살 과거청산을 극렬히 부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4) 종교화된 반공주의로 표현된 개신교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말 그대로 근본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도그마나 원리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절대 불변의 진리인 양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 때 근본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초, 불변, 원본을 버리는 것이 된다(김대식, 2011: 149쪽). 이러한 근본주

의는 한국사회에서 주로 개신교와 연관되어 나타났다. 개신교에서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20세기 초반 프린스턴 대학교의 「근본: 진리를 향한 증언」이라는 팸플릿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팸플릿은 성서무오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망, 예수의 부활과 승천 및 심판을 위한 제림, 사탄과 비기독교인들의 멸망,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과 하늘 나라에서의 영생을 타협할 수 없는 다섯 가지 기독교 교리로 내세웠다. 이것은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들과 분리하기 위해 다섯 가지 근본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대광, 2011: 56~57쪽).

한국에서 개신교 근본주의는 미국의 원 근본주의자들인 열성적 복음주의자들이 한국에 건너와 개신교를 선교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근본주의를 소개받은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처럼 자유주의자와 분리하겠다는 특정한 목적의식 아래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주의적 이념과 교리를 정통성 있는 '전통'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이길용, 2011: 47쪽). 미국의 선교사들은 근대학교와 병원 등을 설립하여 근대성의 시혜자로 부각이 되었고, 조선 대중들은 이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신교 근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07년 대부흥운동은 열광주의적 신앙운동으로 이어져 근본주의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1930년대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여 소수 신도들이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한국 개신교 신앙의 원 신화로 자리 잡아 근본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황용연, 2011: 88~91쪽). 또한 이 당시 한국 교회는 미국 근본주의 교회의 신앙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신교 내 진보주의적 경향들을 교단 차원에서 강력히 억제하였는데, 이 역시 근본주의의 내재화에 기여하였다.

개신교 근본주의는 8.15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공주의와 결합을 하면서 정치적이고 전투적으로 변하였다. 개신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종교적이고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를 반대하였다. 또한 1946년 3월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은 지주층과 개신교인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한국 개신교 인구의 70-80%를 차지하던 평안도와 황해도의 개신교인들이 대거 남하하였고 이들은 한국에서 강력한 반공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반공주의는 종교화되었다. 이들은 반공주의를 기독교의 '사탄론', '선민의식'과 결합시켜서, 공산주의자를 '악마의 대행자', '마귀'이며, 개신교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악마적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규정하였고(배덕만, 2010: 36~43쪽),

이에 따라 개신교는 반공의 상징이자 반공투쟁의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다(강인철, 2006: 74, 75쪽). 개신교인들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하여 반공담론을 유포하였다. 1960년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련)의 '이 대통령 각하께 드리는 건의문', 1965년 개신교인들이 여러 차례 발표한 한일협정 비준반대운동에 대한 입장, 1972년 한기련의 후신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KNCC)의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성명서' 등은 모두 반공주의를 토대로 하였다. 교회협은 1970년대 반유신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공산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한 민주화와 인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반면에 교회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개신교 세력들은 더욱 더 반공주의를 강화하였다. 한편 교회협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 개신교 지도자들과 접촉과 교류를 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통일문제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일선언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2월에 '민족과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반공주의와 결별하였다. 그러자 교회협 내 보수그룹과 교회협 외부 보수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1989년 12월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출범한다. 한기총은 출범 당시 규모 면에서도 교회협을 압도하였는데 이것은 개신교 반공주의의 위력을 대변하는 것이다(강인철, 2006: 71~91쪽).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기총을 비롯하여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2003년에는 1월에 대규모로 '나라와 민족을 여는 평화기도회'를 개최하였고, 3.1절에는 수구 단체와 연대하여 여의도에서 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금식기도회'를, 6월 21일에는 수구 단체들과 함께 11만 명이 참가한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신동아, 2003.10). 2004년 11월에는 서경석 목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기독교사회책임이 출범하였고, 2005년 11월에는 김진홍 목사가 주도하여 대중적 형태의 뉴라이트 운동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출범하였다. 또한 1만 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퇴행적 담론이 생산되고 있으며, 강남교회, 서울교회는 과거청산 부인담론을 전파하는 데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개신교 근본주의는 반공주의와 결합하면서 민주화 이후 수구세력의 상징이자 핵심 자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역사학도인 시온교회의 김대령 목사,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대표인 매송영락교회의 김진철 목사 와 같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기독교인들이 등장하여 설교, 강연, 온라인 집필을 통해서 반공·반북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2) 과거청산을 통한 부민주체의 사회적 가치와 존엄성 부정

수구세력들은 1960-1980년대를 거치면서 반공과 성장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였다. 정권이 생산한 이러한 가치들은 국민을 동원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1960~1980년대는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을 위한 거대한 반공 공동체'였으며, 가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정부 시책을 따름으로써 공동체의 재생산에 기여하였다. 이 당시 가치 공동체의 핵심적인 속성은 국가주의로서, 구성원들의 실천적 자기관계는 국가적 자부심, 국가적 명예감이었다. 즉 개인은 자신이 이룩한 성과의 사회적 가치로 인해 인정을 받지만, 또한 자신을 국가의 일부로 이해하여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실천적 자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공동체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6.29 선언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국회에서 광주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형식적인 민주화가 진척되었다. 그리고 동구권 몰락, 소비에트 해체와 함께 한국과 구 공산국가들과의 수교가 연이어 체결되었다. 이어 1993년에는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하는 문민정부가 등장하였다. 김영삼은 하나회를 해체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일부 보였다.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야당인 민주화 세력이 10년간 집권을 하였다. 이미 정치와 사회는 변화하고 있었지만, 야당의 집권만큼 수구세력에게 충격적인 것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50여 년간 수구세력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던 가치와 속성들을 해체시키는 통치를 하였고, 두 정부 집권 시기에 경제와 사회도 급격히 정보화, 개인화되어 다양한 가치가 분출되는 국면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성장을 위한 거대한 반공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구세력의 가치 공동체는 사라지고 이들의 가치와 속성, 능력, 생활 및 사고방식이 모두 부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악셀 호네트가 구분한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에서 세 번째 인정 방식인 사회적 가치 부여에 대응하는 무시형태로서, 이를 통해서 수구세력의 존엄성이 부정되고 있다. 즉, 수구세력의 주요한 정체성으로 규정하였던 반공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구세력은 이러한 사회 상

황에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수구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인 반공주의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약화되었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상황에서 반공의 근거는 북한 밖에 없는데, 남북이 서로 상생을 약속하는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반공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민주 진영의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되어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남과 북의 경제적 역량과 민주주의의 수준이 현격하게 벌어지면서 반공주의를 낡은 이념으로 치부하는 시민들의 정서가 확산되었다.

성장만능주의 역시 정치·사회적으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단적으로 확대되면서 20:80, 10:90으로 사회가 양극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성장과 함께 분배의 중요성도 역설하면서 분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별개로 고환율 유지, 비정규직 양산과 같이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노동정책이 지속되면서 분배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2012년 대선국면에서는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어졌으며,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복지를 강조하고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주의, 애국주의는 낡은 시대의 유산이 되어 버렸다.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가 확대되고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보다는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산업구조 역시 창의력을 강조하는 서비스 산업, IT 산업 중심으로 변하면서, 창의력의 원천인 자유로운 사고, 개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당시 전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던 군사문화 역시 민간정부가 연속으로 집권을 하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퇴색하였다.

근본주의적 가치는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원적인 가치들이 존중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기존에 냉전체제와 권위주의적 통치 속에서 억눌려 있었던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이 민주화와 함께 분출되었고, 민주주의의 원리 속에서 서로 이질적인 가치들이 서로 연대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반공주의의 쇠퇴와 대형 교회의 지배, 상속 체제에 대한 비판, 사학재단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요구의 확대 등

으로 반공주의화된 개신교 근본주의가 서 있을 자리도 좁아지고 있다. 물론 근본주의적 성향의 대형교회들은 여전히 많은 수의 신도와 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의 교류가 자유롭고 사회적 감시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는 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수구세력의 정체성이 해체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과거청산으로 이들이 의존하고 있던 권위주의 정권의 도덕성마저도 부정되었다. 이러한 부정은 권위주의 정권이 일구어낸 역사적 성과들의 정당성도 함께 문제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어 있는 수구세력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구세력은 자신을 개성화된 주체라기보다는 국가의 일부로 보고, 자신의 성과를 국가의 성과로, 국가와 정권의 업적을 자신이 참여하여 만든 공동의 업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청산을 통해서 자기 세대의 사고방식과 노력, 성과들이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정체성 복원을 위한 인정투쟁으로서 과거청산 부인

악셀 호네프의 인정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목표는 사회적 생활세계 내에서 가치부여의 기준으로 등장하기에 앞서 항상 이차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런 해석 내용은 어떤 사회적 집단이 자신들의 고유한 업적과 생활방식을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성공하느냐에 의존한다. 각 사회 집단들은 자신들의 생활방식과 결합된 능력의 가치를 치켜세우기 위해 상징적 수단을 통해 투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악셀 호네프, 2011: 243~244쪽). 이것은 한국의 수구세력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은 반공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사회의 가치부여 기준이 되지 못하자,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과거청산 부인이라는 방법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수구세력들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고 사형집행이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자, 인혁당 재건위의 실체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반공주의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의 광주 침투, 5·18 주역들과 북한과의 연계, 북한의 기획에 의한 '광주사태' 주장 역

시 반공주의 가치의 회복을 위한 집요한 시도이다. 또한 개신교 목사들은 5·18에 대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반공주의를 통한 근본주의적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보수주의자인 안병직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80년 광주학살이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정치적 희생이라고 주장하여 성장주의 가치를 상기시켰다. 이러한 과거청산 부인들은 결국 당시 정권과 인권침해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가주의의 상징인 박정희와 전두환의 가치를 복원시키려는 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청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모하는 모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부정적인 이유는 두 사건이 각각 박정희와 전두환의 도덕성과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과거청산 부인은 수구적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민주화 이행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들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세력으로 정립하여 집단적 자부심과 명예감을 얻고자 하는 시도이다. 근대화를 넘어선 탈근대의 시기에 가치부여의 인정방식이 개성화되었고, 주체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천적 자기관계도 자기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악셀 호네프, 2011: 247쪽). 그러나 수구세력은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부과되는 존중을 여전히 전체 집단에 귀속시키는 실천적 자기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가치 공동체, 즉 '성장을 위한 반공 공동체'를 인정형태로 회복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가치 공동체를 가상 속에서 유지하면서 자신을 여기에 귀속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구세력의 인정투쟁은 역사와 시대의 진보를 무시하고 잃어버린 것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며, 군사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한 사법살인, 양민학살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또한 악셀 호네프가 가치 공동체의 원리로 제시한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도 수구세력의 인정투쟁은 한계가 많다. 악셀 호네프는 주체들이 대등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각 주체들로 하여금 자기 다양한 인생길을 견제 하는 상호작용 관계의 방식 또한 무엇보다도 '연대'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악셀 호네프, 2011: 246쪽). 연대는 집단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집단 외부 개성화된 주체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체들 간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여 가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연대를 통해서 가능해진

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연대는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시민단체, 인터넷 미디어, 보수교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고수하는 가치, 속성 역시 도덕성과 시대적 정당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들은 탈전통, 탈근대적 사회환경 속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연대를 회복하려는 수구세력의 인정투쟁이 성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이다.

7. 소결 : 지지자의 과거청산 부인구조 정리 및 가해자의 인권침해 부인구조와의 비교분석

1) 지지자의 과거청산 부인구조 정리

지금까지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가해자 측 지지자의 부인구조를 부인내용, 부인의 사회심리학적 기법, 부인주체, 부인시점, 부인활동과 채널, 부인의 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사건의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부인주체, 부인내용, 부인의 사회심리학적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부인주체는 수구 논객인 정창인, 이영민, 삼덕(필명), 백승목과 뉴라이트 인사인 안병직, 제성호, 인터넷 카페인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과 정치인 박범진, 박근혜였다. 이들은 주로 당시 형량에 과도한 점이 있으나 인혁당 또는 인혁당 재건위에 실체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인민민주주의, 즉 공산폭력혁명을 일으키려 한 국가반역 세력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정희의 책임 문제, 재심법원의 무죄선고와 관련해서는 박정희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개입을 부정하고, 이들이 사실상 무죄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부인주체들은 피해자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반유신운동, 자주적 남북통일 운동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폭력혁명이라고 해석하였고, 2012년 대선정국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두개의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범형식주의적인 부인을 하였다. 안병직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중화학공업 중심의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긴장의 희생물이었다고 합리화하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의 핵심적인 부인주체는 지만원, 김동문, 조갑제,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 국민행동본부 등 군인 출신자들과 시온교회 김대령 목사(역사학

도),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 등 기독교 종교인들, 그리고 조영환, 이주천 등 수구논객, 자유북한군인연합으로 대표되는 탈북자들이다. 이들은 첫째 5·18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김영삼의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재판에 결정적 증거가 된 권정달의 증언이 동료들을 배신한 것이며, 5·18 판검사들이 당시 북한 대규모 도발가능성이 있었다는 CIA 보고서를 무시하고 수사 및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자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아울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었고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한국의 활동공간이 확장되는 등 두 전직 대통령이 청산불가능한 업적을 쌓았다고 정당화하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또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공소시효를 연장, 소급 적용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범형식주의적인 해석적 부인을 하였다. 두 번째, 역사학도는 문자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을 사용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왜곡된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5·18의 원인이 윤상원의 폭동, 한민전의 선동, 각종 유언비어라고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이것은 광주학살의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을 북한과 연계된 폭도로 규정하는 피해자 존재의 부인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나주경찰서 무기 탈취 시기, 윤상원의 유언비어 제조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문자적 부인이 같이 사용되었다. 공수부대의 과잉진압과 관련해서는 공수부대원들이 걸어서 행진하면서 시위대를 맨손으로 해산시켰다는 등 과잉진압 자체를 부정하는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역사학도는 시민군의 선 발포 여부에 대해서도 안부웅 공수부대 61대대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만 인용하여서, 시민들이 카빈 소총으로 먼저 계엄군에게 사격한 것처럼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최초 사망자 역시 시민이 아니라 계엄군이라고 왜곡하고,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숫자가 200명이라고 축소하는 문자적 부인을 하였다. 한편 공수부대원 숫자를 축소하는 것은 시민들이 압도적인 숫자를 토대로 무장을 하여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함축적 부인기법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간주하는 '피해자 존재의 부인'이다. 세 번째, 자유북한군인연합, 지만원 등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하여 사건에 개입하였다고 문자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광주 개입이라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문자적 부인이며, 5.17 비상계엄확대와 계엄군의 과잉진압 및 살상행위를 안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함축적 부인이다. 부인주체들은 신

원미상 시제들의 정체, 카빈소총에 의한 사망자가 시민 총사자들의 70%를 차지한다는 점,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 습격, 38개 무기고의 사전 파악, 시민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윤기권의 월북, 북면부대의 정체를 주요 의혹으로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주장 중 앞의 네 가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뒤의 두 가지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네 번째, 영화 ‘화려한 휴가’ 비판과 관련해서, 부인주체들은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없었던 것처럼 문자적 부인을 하였으며, 시민들의 폭력성, 불법성을 강조하여 피해자 존재를 부인하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다섯 번째, 2007년 대선정국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광주사태’ 발언을 계기로 ‘광주민중화운동’ 담론을 부정하는 해석적 부인이 있었다. 여섯 번째, 김대중, 황석영, 윤이상 등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으며, 5·18 단체들은 5·18 실체규명위원회 회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5·18의 피해자들이 사실상 가해자들이라고 부인하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지지자들의 과거청산 부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법은 문자적 부인이다. ‘인혁당 재건위의 실체가 있다’, ‘5·18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내려와 개입했다’는 주장, 그리고 5·18의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 부정은 부인주체들이 생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부인논리가 재생산되고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사건발생의 불가피성과 가해자들의 업적을 강조하여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의 북한 연관성 및 폭력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존재를 부인 하였으며, 비판자인 김영삼, 권정달, 5·18 판검사들을 비판하는 함축적 부인이 같이 사용되었다. 해석적 부인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한 해석, ‘5·18 광주민중화운동’ 담론 부정, 5·18 특별법에 대한 부정 등 범형식주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과거청산의 부인은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특정한 정치적 계기가 형성되었을 때 일어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2004년 초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7월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 논쟁, 2004년 17대 국회 구성 이후 지속된 4대 개혁입법으로 인하여 진보-보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부인담론 형성의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 이후 과거청산 주체들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부인이 발생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국정원 진실위의 발표, 명예회복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발표, 재심법원의 무죄판결 선고에 대한 수구세력과 박근혜의 부인이 그 예이다. 또한 대선과 같은 정치일정에 따라서도 과거청산 부인담론이 생산된다. 2007년 대선정국에서는 영화 ‘화려한 휴가’의 개봉, 이명박 후보 ‘광주사태’ 발언으로 5·18 광주민중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이 거세게 제기되었고, 2012년 대선정국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건 관련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과거청산 부인 발언으로 인혁당 재건 위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부인주체가 제기한 문제가 전체 부인주체의 호응을 받아서 부인담론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것의 사례는 2006년 말 자유북한군인연합의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 개입 증언 이후 몇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이 확산되었고, 2010년 박범진의 인혁당 가입 양심선언 이후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등의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전개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청산 부인활동과 채널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병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인담론의 생산과 확산의 중심적인 채널은 온라인 공간이다. 수구 논객들의 홈페이지, 카페, 수구 인터넷 언론들은 부인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댓글, 온라인 여론조사 역시 부인담론의 확산에 기여한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 재판참여, 고소고발 등 소규모 행위는 온라인 속의 이슈를 세상으로 외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중설교, 강연 등 대규모 행위는 부인담론을 확산하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으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의 공식담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활동의 주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과거청산 부인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해체되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정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8.15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의 보수정권 집권기간에 반공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라는 보수·수구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민주정부의 등장, 사회 민주화, 지식경제의 발전, 정보의 개방과 공유의 확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우선시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수구세력의 정체성은 사회의 가치부여 기준이 되지 못하였고, 이들의 가치공동체인 '성장을 위한 반공 공동체'는 더 이상 인정형태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에 수구세력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을 부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수구적 정체성의 회복과 인정형태의 복원, 집단적 자부심과 명예감이라는 실천적 자기관계의 형성을 도모하였다.

2) 가해자의 인권침해 부인구조와 지지자의 과거청산 부인구조 비교분석

가해자의 인권침해 부인과 지지자의 과거청산 부인은 모두 인권침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가해자들이 생산한 부인담론은 과거청산

이후 가해자 측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인내용의 기초가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인권침해 당시 생산한 부인담론은 과거청산 과정에서 보다 정교해지고, 과거청산 이후에는 가해자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 된다. 따라서 과거청산 부인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지지자의 부인에서 다양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가해자와 지지자는 사건 발생 당시 부인주체의 위치가 다르며, 과거청산 당시와 과거청산 이후로 부인을 하는 시점도 다르다. 그리고 가해자와 지지자는 각각 인권침해 사건과 이에 대한 과거청산 결과를 부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가해자와 지지자의 사회심리학적 부인 기법과 부인활동 및 채널 역시 이러한 부인주체, 부인시점, 부인대상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부인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가해자는 직접 인권침해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고 지지자는 인권침해 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켜본 사람이다. 따라서 가해자는 주로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지만, 지지자는 자기방어보다는 사건을 들춰내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데에 집중한다.

부인시점에 따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가 인권침해를 부인하는 시점은 보통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는 이행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 지배세력이 모두 신세력으로 교체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과도기적으로 구세력과 신세력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과거사 입법을 통해서 과거청산 기구가 운영되고 과거청산 주체들이 과거청산의 의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운신의 폭은 별로 크지 않다. 반면 지지자가 과거청산을 부인하는 시점은 민주정부 운영 중에 구세력이 다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힘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 이를 토대로 다시 과거의 것을 회구하는 반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는 부인세력이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과거청산 논쟁이 형성되면서 부인주체가 더 역동적으로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

부인대상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 가해자는 사건 당시 인권침해, 그리고 인권침해와 자신의 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부인한다.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했지만 책임이 없다', '국가안보, 경제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등 인권침해 사실 자체, 인권침해 행위 여부, 행위의 필요성과 책임성 등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인권침해 행위보다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

한 과거청산을 주요 부인대상으로 여긴다. 이들은 과거청산 주체들의 편향성, 증거 처리의 미숙함, 법적 해석의 오류 등을 지적하여 과거청산의 신뢰성을 공격한다. 아울러 기존 자료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근거를 찾아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재구성한다.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 개입 증인은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지지자들은 과거청산 내용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가해자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사실관계로 되돌아가려 한다.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의 경우, 가해자나 지지자 모두 문자적 부인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필요성, 피해자 존재의 부인과 같은 함축적 부인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해석적 부인이다. 가해자의 부인에서는 해석적 부인 중 책임의 부인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지지자는 스스로 책임질 것이 없으므로 책임의 부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지지자들은 범형식주의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과거청산 결정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과정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가해자들은 과거청산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낼 수 있는 별다른 부인채널을 보유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부인활동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치적, 사회적 세력관계에 따라서 부인주체들이 과거청산 구도를 뒤엎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과거청산 시기에 부인논리를 암암리에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부인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청산 이후 부인주체인 지지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병행하면서 부인활동을 전개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의 경우 온라인이 부인담론의 생산과 확산의 주요 공간으로 기능하였고, 오프라인 활동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 세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에서의 군중활동이 주도적인 부인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해자와 지지자의 부인 원인에도 큰 차이점이 있었다. 가해자는 그 동안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구축하였던 사회적 신망, 경제적 성과, 가족과의 유대 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방어적인 성격이 강했다. 과거청산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진실'과 '정의'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고 과거청산을 통해서 숨겨진 진실이 처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실질적인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실을 부인해야 했다. 이와 달리 지지자들은 직접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청산

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입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청산과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사회적 가치가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되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무시가 심화되면서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실천적 자기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과거청산을 부인하는 것이다.

IV. 과거청산 부인과 트라우마

1. 한국사회 과거청산의 한계와 과거청산 부인

과거청산 부인은 어느 사회에서든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수용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공공연히 부인을 하는 사람도 개별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과거청산 부인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집단적 부인은 과거청산 부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거청산이 과거사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 전체의 반성으로, 반인륜적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확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과거청산 부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과거청산은 개별 사건별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청산은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고, 반인륜적 법·제도·관행·문화를 개혁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회복하여 피해자의 역사를 국가와 시민의 역사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저한 과거청산은 부인의 씨앗을 제거하지만 철저하지 못한 과거청산은 부인의 토양이자 자양분이 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과거청산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과거청산 부인의 배경과 향후 과거청산의 과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과거청산은 현재적인 권력관계라는 거시적 규정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구체제의 전복이 시민사회와 민중의 힘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진행된다면 구체제의 개혁 과정이 급진적으로 전개되면서 과거청산이 보다 비타협적이고 철저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의 타협을 통해서 구체제가 신체제로 이행된다면 구세력이 주도권

을 잡고 체제 개혁을 하거나, 신세력의 혁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과거청산도 불완전하게 전개된다(조희연, 2002: 456-457쪽). 한국의 과거청산은 후자의 과정을 거쳤다. 1987년 6월 항쟁이 6.29 선언의 수용에 따른 형식적 민주화로 종료되었고 그해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로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군부정권이 연장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록 문민정부이기는 했으나 민정당과 3당 합당을 통해서 수립된 보수정부였다. 김대중 정부는 야당이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부였으나 대선에서 자민련과 연합을 하였고 IMF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보수적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가 아닌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조희연, 2002: 459쪽)의 과정을 밟았고, 그 결과 과거청산 역시 거시적 한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전개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은 민주화운동세력이 과거청산의 거시적 한계를 극복하고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를 통해서 형성된 최소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전개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 국회, 법원에 과거 정권의 실세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과거청산은 불가능했다. 집단발포 명령자, 지휘권 이원화 등 핵심적인 쟁점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신군부의 실세들은 반성과 사과 없이 사면되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선별적 보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체들은 개별화되었고 5·18 기념사업은 광주만의, 5·18 관계자만의 기념사업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18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통은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편, 김대중 정부 등장으로 정치적 공간이 확장되면서 과거청산의 거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 운동세력의 투쟁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정부조직으로 과거청산 기구들이 운영되었지만, 과거청산의 거시적 한계로 인한 영향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도 의문사위 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졌지만 정치권력과의 관계, 사법살인의 전모 등은 미진한 상태로 남았고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재심법원의 무죄 및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대법원의 배상금 축소 판결로 인해서 과거청산이 후퇴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것은 사법부 차원의 과거청산 부인으로,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 보수·수구세력의 과거청산 부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전, 장기간에 걸친 철저하지 못한 개혁으로 인하여 정치권과 시

민사회 내에는 여전히 보수·수구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였다. 그리고 민주화세력 단독으로 수립된 노무현 정부가 4대 개혁입법 등 과감한 개혁조치를 추진하려 하자, 보수·수구세력은 보수-진보 대립, 과거청산 관련 색깔논쟁을 통해서 정치적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과거청산을 후퇴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 과거청산은 거시적 규정성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청산은 독자적 대상과 논리를 갖고 있으며, 한국사회 과거청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한계로만 환원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과거청산의 한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거청산이 기득권 내에서의 인적청산, 반인권적 제도와 관행의 청산, 정부 권력 및 시민사회 내 인권 원칙의 확립과 같은 총체적인 관점이 결여된 채, 과거의 개별적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상·보상 위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5·18 청문회, 5·18 특별법 제정, 의문사위 조사 당시 몇 차례 사회적 충격은 있었으나 과거청산이 진정한 정치·사회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많은 부분 거시적 규정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과거청산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과거청산 운동의 한계도 검토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과거청산을 과거청산 5원칙에 입각한 개별사건의 문제 해결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하면서 과거청산을 현실적인 인권운동의 과제로 부각시키지 못하였고, 시민운동·민중운동의 과제와도 결합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유족·피해자 단체와 과거청산 단체들은 운동진영 내에서 고립되었고 운동의 성과도 포괄적인 과거청산으로 수렴되지 못하였다.

두 번째, 그나마 진행되었던 개별 사건 위주 과거청산도 법적 수사권한의 부재,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정부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진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과거청산의 첫 시작은 진상규명이다. 진상이 규명되어야 이에 근거하여 책임을 묻고 제도와 관행을 고치며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 시민 간의 진실 공유와 역사교육 역시 그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기구의 미약한 법적 권한으로 인해 과거의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과거청산의 동력도 많이 약화되었고, 시민과 언론의 관심과 기대감도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세 번째, 진실의 규명, 국민화합에 과거청산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의를 확립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청산의 경우 가해자 처벌은 논의의 문제로 치부되고, 진실규명, 명예회복 위주로 접근을 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죄의 개념이 수립될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자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김동춘, 2002: 446쪽).” 지금까지 통치, 안보, 화합 등의 이유로 국가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가 합리화되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5·18 가해자들도 화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되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고문 가해자의 경우에는 아예 처벌을 전제하지 않은 과거청산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부재는 사회적 규범 및 도덕적 사회의 해체로 귀결될 수 있다. 권력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 사회에서 정의를 내세우고 규범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과거청산을 통해서 폭력과 부인의 문화를 청산하고 반성과 시인의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 과거사 조사, 명예회복, 보상 및 배상, 그리고 5·18 책임자 처벌 등 십 수 년 동안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이 가해사실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한 일은 없었다. 가해자의 지지자들, 가해현장의 방관자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와 지지자들은 인권침해와 과거청산을 부인하고 역으로 과거청산 주체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있다. 과거청산을 통해서 피해자 고통의 공유, 가해에 대한 고백과 시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인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해자, 지지자와 과거청산 주체들 간의 상호대립이 가속화되었고 이것은 극단적 과거청산 부인으로 표현되었다. 반성과 시인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과거사와 인권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 문화적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지 않고 시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의 역사가 전체 시민의 역사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주의, 반공주의, 성장만능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수사 및 정보 조직에서도 조직 내 비인도적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거부자에 대한 조직 내 보호가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김동춘, 2002: 443-445쪽). 앞으로는 반성과 시인의 문화 형성이 과거청산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인권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과거청산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국가폭력과 관련된 고통과 트라우마의 치료를 통한 진정한 화해와 화

합의 모델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과거청산은 화해와 화합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진상규명, 책임자의 반성과 시인, 처벌 없이 화해와 화합은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당위적인 국민화합의 주장으로 가해자와 방관자들은 면죄부만 부여받았고 이것은 역으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확대에 귀결되었다. 진정한 화해와 화합은 진실과 정의의 기반 위에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통이 해소될 때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가 없을 때 과거청산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한 치료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 이념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인간화하고 고문과 학대, 살해를 정당화하는 인권침해자들의 병적인 사고와 폭력의 문화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침묵하는 방관자들의 정서가 계속 재생산된다면 언젠가 반인륜적 국가폭력은 재발할 수 있다. 인권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정립하고 조직 내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폭력을 승인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료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폭력을 자행하거나 이를 목격한 가해자와 방관자들의 트라우마 역시 치료가 필요하다. 끔찍한 폭력과 학살의 순간은 가해자와 방관자에게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가해자와 방관자의 트라우마도 화해와 화합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따라서 트라우마의 치료는 피해자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국가폭력과 관련된 사람들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청산이 진정한 사회적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과거청산 부인과 트라우마의 강화

트라우마는 '외상'으로서 "과도한 위협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일컫는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에 따르면, 외상이란 심각한 죽음이나 상해를 입을 위협을 실제로 겪었거나 그러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혹은 타인이 죽음이나 상해의 위협에 놓이는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공포를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주디스 허먼, 2012: 17쪽)." 이러한 트라우마의 증상은 과각성, 침투, 억제로 구분된다. 과각성은 과도한 각성 상태로서 환자들은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고 걱정스러워하며 긴장된 느낌, 피로감, 집중 곤란, 멍한 느낌, 과민한 반응, 수면 장애, 폭발적 격노 등이 동반된다. 또한 특정한 대상, 상황이 예상

되거나 그러한 대상, 상황에 접할 때 심각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침투는 외상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을 현재에서도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는 것으로, 깨어 있을 때는 생생한 지각, 착각, 환각과 같은 플래시백으로, 수면 중에는 외상성 악몽으로 침입을 한다. 역제는 회피증상, 둔감화 반응으로 외상의 중요 부분이 회상되지 않는 기억의 절단, 외상과 연관되는 생각, 상황, 느낌 등의 회피, 지각의 둔감화 및 왜곡, 부분적 마비 및 특정 감각의 상실, 흥미의 저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주디스 허먼, 2012: 70-91쪽).

이러한 트라우마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피해자들이 국가의 사법살인과 인권침해에 의해서 수십년 간 사회적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1990년 오수성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5·18 이후 26년이 지난 2006년에도 많은 수의 부상자, 유족, 구속자에게서 트라우마 증상이 관찰되었다(오수성 등, 2006).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5·18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에도 5·18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진행된 과거청산이 피해자의 사회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과거청산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 과거청산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진실규명과 피해회복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과거청산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거나 과거청산의 결과가 과거보다 후퇴한다면 피해자의 상처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과거청산으로 인해 국가폭력이 정당화되고, 피해자는 과거사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하여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과거청산 부인 역시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준다. 과거청산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지지자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과거청산이 부인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다시 상처를 입는다. 피해자들은 소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거청산 부인은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다. 공식적 국가 기구에 의해서 과거청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몇 개인들에 의한 부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권위가 있는 기관이나 유력 인사의 부인, 다수에 의한 부인담론의

형성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다시 자극하게 된다. 이러한 부인으로 피해자들은 과거의 고통이 다시 상기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침투와 억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과거청산 조치의 후퇴, 사회적 기억의 왜곡, 명예에 대한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주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각성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과거청산 부인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트라우마의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통이 다시금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과거청산 부인은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결과 발표, 명예회복위의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인정결정, 재심 법원의 무죄판결, 전 국회의원 박범진의 인혁당 ‘양심선언’ 등의 형태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심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의문사위와 국정원 진실위의 사건 조작 발표로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의 사회적 명예가 회복되었고, 부인 발언 당시에는 법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거나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결정된 이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범진의 인혁당 ‘양심선언’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1차 인혁당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부인 하나 하나가 유가족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인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2007년 1월 재심 무죄판결 이후인 2월 3일 제성호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에 기고하였고, 유족들은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기쁨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하재완의 부인 이영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분을 참지 못 하겠다”, “법학교수라는 사람이 결국 유신 박정희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사퇴하라”고 울분을 토했고, 사형수 도예종의 부인 신동숙 역시 “그 사람이, 인간이 맞나”, “당장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마이뉴스, 2007.2.5). 그러나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부인은 2011년 1월 대법원의 손해배상금 180억원 반환 판결이었다. 이미 인혁당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배상금의 2/3를 미리 지급받았고 대부분을 은인들 신세를 지고, 기부를 하며, 집을 사는 등에 다 사용했다(김형태, 2011.2.13). 그런데 대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이자 가산을 국가의 불법행위 시점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기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은 이미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다(한겨레21, 2011.2.25). 이에 대해 재심 변론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유족과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두 번 죽었다(김형태, 2011.2.13)”고 그들의 고통을 대변하였다. 이로 인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힘겨운 법적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1년 7개월 이후 발생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사건 관련 두 개의 대법원 판결 발언으로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법원의 판결마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 의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을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미 진행된 과거청산의 후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의 발언에 대한 유가족들의 분노와 고통은 심각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유가족들은 2012년 9월 12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가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말로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사람이 억울하게 여덟 분이나 사형을 당한 사건을 두고 가치가 없고, 자신에 대한 모함이라고 강변하는 박근혜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있는가”라고 항변하였다(4·9통일평화재단, 2012.9.12). 또한 사형수 이수병의 부인 이정숙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박근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끼야 해요. 한동안 텔레비전에 안 나올 때는 살 것 같았어요. 요즘은 텔레비전을 거의 못 봐요”라고 사건의 가해자를 연상시키는 기억을 회피하고자 하는 트라우마를 내비쳤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아아, 박정희가 내 남편을 죽였고 박근혜는 우리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였다(한겨레, 2012.9.13). 이러한 반응은 다른 유가족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사범살인의 희생자 송상진의 아들 송철환은 ‘기자회견 내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뉴스엔뉴스, 2012.9.12)’, 다른 유가족들도 기자회견 내내 “아이고 분해” “살려내야지”라며 오열을 하는 등(연합뉴스, 2012.9.12) 정신적 상처를 드러냈다. 이들의 상처는 9월 24일 박근혜 후보의 5·16, 유신, 인혁당 사건 관련 사과 발언에 의해서도 아물지 않았다. 유족과 관련자들은 9월 24일 발표에 대해 “이번 사과는 전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사과의 진실성을 믿지 않았고, “박 후보는 제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 달라”면서 고통의 단면을 표현하였다(4·9통일평화재단, 2012.9.24).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 권력기관인 대법원과 정치권 유력 인사인 대통령 후보가 과거청산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강화된 사례이다. 이와 달리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수구세력의 집단적인 왜곡담론 형성 및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강화되었다. 지만원, 역사학도, 자유북한군인연합 등 수구세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결과를 부인하고,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 침투에 의해서 5·18 폭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들의 주장은 일면 대단히 황당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사진, 영상, 증언, 문헌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서 5·18의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모르는 네티즌들, 특히 5·18 자체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은 10대~30대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인터넷 보수언론, 카페, 블로그,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서 대거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실제로 다음,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서 5·18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을 검색하면 대부분 수구세력이 작성한 글이 노출되고, 이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글은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수구세력의 5·18 왜곡담론 생성, 유포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구속자, 유족들의 사회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증가시키는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9월 28일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설교시간에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자유게시판에는 울분을 토하는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왔다. 부상자회 회원들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가만 놔두면 안 되고 그렇다고 목아지를 딸 수도 없으니 재단과 함께 고소하고 수도권 회원들이 한 번 가서 난리를 벌려보야”, “속이 뒤집혀서 못살겠어요. 언제 쳐들어 갈 것입니까”, “화가 북받치는 걸 참고 또 참았다”, “되먹지 못한 이종윤의 망언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5·18이 북한군이 침투해서 일어난 5·18이라고 하니 이종윤을 찢어 죽여도 회원님들이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와 같이 이종윤 목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격하게 표출하였다(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홈페이지). 이런 분노들을 모아서, 2008년 10월 19일, 5·18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서울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광주의 역사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한 이 목사의 발언은 양심 있는 기독교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면서 규탄 하였다(한겨레, 2008.10.19). 5·18 부상자들의 트라우마가 격한 행동으로 표출된 사례도 있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

사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2008년 5월 30일 전사모와 지만원 등을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연합뉴스, 2008.6.3). 그런데 2010년 10월 29일 열린 이 고소사건의 재판이 5·18단체 회원들의 분노로 중지되었다. 재판 당시 지만원 측 변론인 서석구 변호사는 영호남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강조하여 하였고 5·18 단체 회원들은 이에 격노하여 재판이 3차례나 휴정되었던 것이다(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홈페이지). 2010년 7월 9일에는 자유북한군인연합 등 수구세력으로 구성된 5·18실체규명위원회의 광주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서 5·18단체들이 물리력을 사용한 일이 있었다. 이 당시 실체규명위원회 회원 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5·18단체 회원 일부에게는 폭행혐의로 각각 600만원과 9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뉴데일리, 2011.3.18). 이러한 재판정에서의 소란행위와 수구세력에 대한 신체적 가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왜곡에 대한 분노가 외화된 것으로서, 과거청산 부인으로 인한 5·18 부상자, 구속자, 유족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오수성 등의 조사에 의하면, 부상자와 유족은 각각 64.6%, 43.6%가 가벼운 PTSD, 45.2%, 38.5% 이상이 중간 이상의 PTSD가 측정되는 등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오수성 등, 2006: 65쪽). 따라서 5·18단체의 주축인 부상자와 유족들이 5·18 왜곡 담론을 접했을 때, 이들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 트라우마가 격한 분노와 물리적 행위로 표현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도 5·18 단체들은 5·18이 북한 특수부대의 교란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06년 12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2010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영조 위원장의 5·18 민중반란 발언에 대해서는 사죄와 위원회 사퇴를 요구하는 등 5·18 왜곡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는 과거청산과 과거청산 부인의 극복,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조치, 전문치유센터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방된 공간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지지가 필요하다. “개방된 공간 속에서, 피해자는 사회를 향해 말할 수 있다. 그 힘으로 폭력의 부당함에 맞설 수 있다. 사회가 이를 인정하고 지지하여 여럿의 힘이 모이는 순간, 폭력의 부당함은 종료될 수 있다(최현정, 2009).”

V. 결론

1. 주요 연구내용 정리

본 논문은 한국의 과거청산 과정에 주목하였던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달리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러한 부인은 인권침해 이후의 부인, 과거청산 과정에서의 부인, 과거청산 이후의 부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스탠리 코언의 사회심리학적 기법을 부인 연구의 방법론으로 활용하여, 부인주체의 주관적 심리상황을 분석하였다. 스탠리 코언의 방법론은 문자적 부인, 해석적 부인, 함축적 부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사실 관계의 부인, 사실 관계의 인정 및 해석의 부인, 사실 관계와 해석의 인정 및 합리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 부인주체들이 부인을 하는 심리적 맥락을 파악하고 부인기법을 유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활용하여, 과거청산 이후 가해자 측 지지자들의 부인이 자신들의 수구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인정투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각각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의 존립기반을 위협했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었으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과거청산의 원칙이 충실하게 이행된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과거청산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도 활발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은 서구의 홀로코스트 부인에 비견될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만큼 풍부한 내용과 많은 자료로 인해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두 사건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가해자의 부인구조를 분석하였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청문회, 조사기구 내에서 증언, 진술의 형태로 부인을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과거청산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가해자들이 활용한 별도의 부인채널이나 가해자 측의 부인활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주요 쟁점은 고문수사, 검찰관 조사의 임의성,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의 조작, 공판조서 조작, 사형수의 최후진술 조작, 수사의 책임성 부인이었으며, 각각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문자적 부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수사의 책임성 부인에는 해석적 부인의 한 종류인 책임의 부인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외에 “물건을 만들라”는 식

의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해석적 부인도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데 기여하였다. 과거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안보의 필요성, 비판자에 대한 비판과 같은 함축적 부인도 같이 사용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주요 쟁점은 5.17 비상계엄확대와 관련한 부인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인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5.17 비상계엄확대는 광주민주화운동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수사 당시에도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시국수습방안 수립 참여 및 공유, 5.17 비상계엄확대 이유, 5.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관련 사항, 5.17 국무회의장 계엄군 배치 관련 사항이 다루어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 이유, 충청훈련 실시에 대한 책임, 계엄군 이동 관련 신군부 협의 여부, 계엄군의 과잉진압, 지휘체계 이원화, 계엄군 실탄지급 경위, 계엄군의 발포 경위 및 명령, 양민학살의 경위, 상무충정작전 지휘체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가해자 측에서 '잘 모른다',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을 회피하는 경우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문자적 부인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해석적 부인에서는 군부 내의 위계서열에 근거한 책임의 부인이 많이 발생했다. 상급자는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하급자는 상부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이 대략적인 부인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자위권이라는 법률용어로 사실상 발포를 승인한 법형식주의, 초기 과잉진압을 몸싸움으로 표현한 완곡어법도 해석적 부인의 하나이다. 함축적 부인은 안보적 이유로 비상계엄 확대가 이뤄졌고, 광주시민들의 포고령 위반, 과격 시위, 유언비어 유포로 '광주 사태'가 발생했다는 피해자 존재의 부인이 사용되었다.

두 사건의 과거청산 이후 가해자 측 지지자들의 부인은 과거청산 당시 가해자들의 부인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부인주체는 가해자들과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당시 주로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로, 군부독재의 군사주의 문화와 개신교 반공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군 예비역, 목사들이 많았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박근혜, 박범진 등 보수 정치인과 안병직, 제성호 등 뉴라이트 인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을 채널로 활용하여 부인담론을 유포하였으며, 소규모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고소고발 운동, 법정투쟁, 대중설교 및 강연의 방식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슈를 외화 시켰다. 그리고 진보-보수 대립, 대선과 같은 정치적 일정, 특정 부인주체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집중 부인을 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정희의 사건 조작 책임 및 국정원 진실위 활동, 명예회복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재심법원의 무죄판결, 박범진, 안병직 등 '인혁당 관계자'들의 '양심선언', 2012년 대선정국에서 박근혜 후보의 부인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들의 주요 부인논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형량은 다소 과도했으나, 인혁당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실체가 있으며 이들은 공산폭력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부인주체들은 박정희의 사건 개입을 부정하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사실상 유죄라고 문자적 부인을 하였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해서 범형식주의적으로 부인하는 해석적 부인을 하였다. 안병직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희생물이라고 합리화하는 함축적 부인을 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다수의 수구세력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과거청산 결과를 부인한 사례이다. 지만원, 역사학도, 김동문 등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재구성하였고, 자유북한군인연합의 북한특수부대 광주침투 주장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북한에 의한 '광주사태' 발생, 북한의 기획과 연출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3자의 전언에 의하거나 논리적 비약, 사실의 왜곡에 의한 것으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는 왜곡된 담론이 대거 유통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도서출간, 집회, 대중설교의 방식으로 선전, 선동이 일어나는 등 과거청산 부인은 심각한 수준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비판 및 전두환 변론, 5·18의 발생원인, 공수부대의 과잉진압, 시민군 무기 탈취 시기, 시민군의 선 발포 여부, 광주민주화운동 최초 사망자,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숫자,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 영화 '화려한 휴가', 2007년 대선정국에서의 '광주민주화운동' 담론,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북한 관련성이다. 수구세력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은 사실관계 왜곡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 부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비판에 대해서는 해석적 부인인 범형식주의, 전두환 변론 시에는 전두환의 업적을 강조하는 함축적 부인이 사용되었다. 또한 5.17 비상계엄확대와 계엄군의 과잉진압, 살상행위를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5·18의 피해자들이 사실은 가해자라는 함축적 부인도 함께 활용되었다. 한편, 지지자들의 과거청산 부인은 가해자들의 과거청산 과정에서의 부인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가해자들은 인권침해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방어에 치중을 하지만, 지지자들은 사건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데 집중한다. 가해자들은 민주화

이행기에 조사를 받거나 청문회에 출석을 하여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의제설정 등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민주화 이후 보수, 수구적 이데올로기가 활성화될 때 과거청산을 부인하기 때문에 보다 역동적인 담론을 생산할 수 있다. 부인대상에 있어서도, 가해자는 사건 당시 인권침해 여부, 자신과 인권침해와의 연관성 등을 주로 부인하는데, 지지자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청산을 부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책임의 부인을 많이 사용하나 지지자는 이러한 부인기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지지자는 과거청산 결정의 오류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비판하기 위해 법형식주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가해자의 지지자들이 과거청산 이후 부인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인정투쟁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우선 보수와 수구를 구분하고, 박근혜, 안병직 등을 제외한 다른 부인주체들을 수구로 규정하였다. 보수는 안전과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며 실리적이고 유평피아를 부정한다. 반면, 수구는 변화를 거부하고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유평피아로 상징하고 회귀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또한 보수는 권력의 집중을 경계하고 엘리트, 귀족에 의한 정치체제를 옹호하지만, 수구는 군주제, 메시아의 지배와 같은 절대 권력을 선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만원, 역사학도, 김동문, 한국논단 등 주요 부인주체들은 보수주의자보다는 수구세력에 가깝다. 이들은 8.15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형성, 발전한 반공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를 정체성으로 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한 거대한 반공 공동체'인 대한민국을 가치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로 동구권의 몰락, 소비에트의 해체, 남한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북한에 대한 체제적 우위, 사회의 민주화로 인한 개인의 자율성 증대, 김대중, 노무현 민주화 정부의 수립 등으로 이들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사회적 가치, 존엄성이 부정되는 무시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청산을 통해서 이들의 도덕성, 과거 업적의 정당성마저도 간접적으로 부정 당한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집단적 자부심, 명예감이라는 실천적 자기관계를 얻기 위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을 부인 하였다. 이런 부인을 통해 반공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등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 이들의 인정투쟁 전략인 것이다.

과거청산 부인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철저히 못한 과거청산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은 거시적 한계인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로 인해서

많은 한계 속에서 전개되었고, 그 결과 과거청산 부인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한계가 권력구조의 거시적 규정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전개되었던 과거청산의 한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첫 번째, 과거청산이 총체적 관점이 결여된 채 개별 사건 해결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과거청산은 진정한 정치·사회적 개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과제와도 결합되지 못하였다. 두 번째, 개별 사건 위주의 과거청산 역시 법적 권한, 정부기관의 비협조로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 번째, 진실의 규명, 국민화합에 과거청산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생략되면서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지 못했다. 네 번째, 과거청산을 통해서 반성하고 시인하는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 과거청산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가해와 방관에 대한 고백과 시인,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국가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트라우마의 치료를 통한 과거청산의 모델이 구축되지 못했다.

트라우마는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형성되지만 과거청산을 통해서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잘못된 과거청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철저하지 못한 과거청산은 과거청산 부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과거청산 후퇴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재심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제성호 교수의 부인, 대법원의 배상금 축소 판결,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법원 판결 부인으로 인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경제적 피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수구세력의 집단적이고 집요한 5·18 왜곡 담론의 생성과 유포로 인하여 사회적 고통을 겪고 트라우마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특수부대에 의한 5·18의 발생을 주장하는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5·18 실체규명위원회의 기자회견, 그리고 5·18 명예훼손 재판 당시 지만원을 변론하는 서석구 변호사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에 대해 5·18 부상자들과 유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고, 5·18 실체규명위원회 기자회견에서는 수구세력과 물리적 충돌까지도 서슴지 않는 격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는 철저한 과거청산과 함께 전문치유센터의 운영, 개방된 공간, 사회적 인정과 지지가 필요하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두 사례를 중심으로 과거청산 부인의 구조와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방법론과 인정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부인 메커니즘은 인권침해 재생산의 전제이며, 과거청산 부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중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과거청산 연구의 범위를 인권침해와 과거청산에 대한 부인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과거청산 연구는 과거청산의 원칙과 과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상 및 보상, 기념사업 및 기억운동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와 오승용의 연구를 제외하면,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연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재생산하는 전제가 사회의 부인구조라는 점에서, 부인하는 사회를 극복하고 시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및 온전한 과거청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과거청산의 부인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둘째, '부인'은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가폭력 사건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자적, 해석적, 함축적 부인으로 사회심리학적 부인기법을 분류하고, 가해자와 지지자가 실제로 어떻게 인권침해 사건과 과거청산을 부인했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부인의 방법들은 쌍용차동차 노동자 폭력진압, 용산참사, 제주강정마을 폭력사태와 같이 현 정부 하에서 발생한 여러 국가폭력 사건들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고, 국가폭력은 여전히 '부인'을 통해서 은폐,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인권운동은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회적 고통의 경감을 위해서 부인을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해야 하며, 본 논문은 부인을 개념화하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인권운동의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은 수구세력의 과거청산 부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에 의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재심 등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국가에 의해서 기념일로 제정 되었고 희생자들을 위한 국립묘지까지 조성되었다.

따라서 두 사건에 대한 과거청산 부인담론 생산 및 유포를 의미 없는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의 부인담론들에 노출될 경우 과거청산의 내용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수구세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은 매우 집요하고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구세력의 부인 원인과 부인내용, 진행 양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며,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제를 이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논문은 가해자와 지지자의 과거청산 부인을 비교분석하여 지지자의 부인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해자와 지지자는 모두 과거청산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와 방식 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부인은 자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지지자의 부인은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이다. 따라서 지지자들의 부인시점 역시 대단히 정치적으로 정해진다. 부인 대상의 경우, 가해자는 인권침해 사건, 지지자는 과거청산의 결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서 부인의 내용도 달라진다. 아울러 가해자와 지지자의 부인채널, 부인활동 역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인구조 비교분석을 통해서 현재 문제가 되는 지지자의 부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지자의 부인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본 논문은 과거청산의 부인을 과거청산과 피해자 트라우마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거청산 부인은 철저히 못한 과거청산을 배경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정의의 확립, 인권교육과 시인문화의 형성, 트라우마 치유 및 피해자 구제 등을 통해서 과거청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과거청산 부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가해자와 방관자의 부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과거청산 부인은 피해자의 트라우마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고통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거청산 부인의 범위가 넓고, 국내의 과거청산 부인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한계점도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곧 향후 과거청산 부인연구의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사회의 부인문화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부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인을 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권 침해 사건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부인문화를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사실을 시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위정자, 권력자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그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권위주의 정부 당시 발생하였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의 부인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재생산되었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했다. 언론은 인권침해에 대한 부인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언론이 가해자인 권력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보도한다면 국민들은 진실을 알 수 없으며, 가해자들은 쉽게 부인을 할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강압적인 통제와 함께 유화책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언론을 통제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표적으로 언론이 통제된 채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들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 정부가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였고, 언론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러한 언론통제와 미디어의 보도는 가해자들의 부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침해 당시 가해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인논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부족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위권 발동, 유언비어 유포와 같이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부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인논리를 생산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인논리는 이후 과거청산 과정, 과거청산 이후 부인주체들의 부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권침해 사건 당시에 어떤 부인논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생산되었고, 이후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가해자와 지지자, 방관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청산 부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재생산된다. 피해자들 중에는 정권에 대한 공포심, 가족에 대한 위협, 생계 곤란, 사회적 배제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가해자의 부인, 방관자의 침묵을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 역시 이미 부인구조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 피해자 침묵의 영향, 피해자가 갖게 되는 트라우마의 해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유형 등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과거청산 부인을 시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청산 부인의 구조와 원인은 분석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시인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보수 정치인과 뉴라이트의 과거청산 일반에 대한 부인, 그리고 수구세력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에 대한 실천적 대처방안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인과 관련하여 법을 통한 처벌,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방식이 나뉘어져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향성들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논의가 협소하게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인의 패러다임 창출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과거청산 부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1. 학술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 곽노현, 2006, 「전·노 재판 이후의 과거청산 : 과제, 원칙, 전략」,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 김동춘, 2007, 「과거청산 작업과 한국 민주주의」,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 5·18과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5·18기념재단.
- 김대식, 2011, 「헌상학을 통한 '근본주의'에 대한 보다 더 '근본' 적인 사유」, 『종교 근본주의 - 비판과 대안』,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김동춘, 2002,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조희연 편, 함께읽는책.
- 김병근, 2011,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징-근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11년 여름호, 역사비평사.
- 김상곤, 2006,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 김성천, 2006, 「5·18 특별법의 쟁점과 흐름」,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 김용철, 2007, 「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 : 탈군부정치의 역사결정적 국면의 원천으로서 광주항쟁」, 『5·18 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 5·18과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5·18기념재단.
- 민형배, 2007, 「5·18 기념공간의 형성과 지역정체성:1990년대 이후 쟁점과 과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 5·18과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5·18기념재단.
- 박영주, 2004, 「'5·18 트라우마티즘' 연구의 현황과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 박원순, 2006, 「5·18 특별법의 제정과 법적 청산」,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 배덕만, 2010,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대장간.
- 서중석, 2007, 「과거사 진상규명의 점검과 향후 과제」, 『역사비평』 2007년 가을호(통권 80호)
- 신일섭, 2006,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 스탠리 코언, 2009,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창비.
- 악셀 호네프, 2011, 『인정투쟁-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 책.
- 안병직, 2011,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좌익운동을 중심으로」, 안병직편, 『한국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 보수가 이끈다』, 시대정신.
- 안종철, 2007, 「과거청산과 미해결과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 5·18과 민주화, 5·18 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5·18기념재단.
- 양영태, 2006, 「5·18 판결, 그 미완의 과제」,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 오수성·신현균·조용범, 2006, 「5·18 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 회지: 일반』 Vol.25 No2, 한국심리학회
- 오승용, 2007, 「국가폭력과 가족의 피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 『담론 201』 10권 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 _____. 2012, 「오늘의 5·18: 쟁점과 진실」,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 5·18기념재단.
- 은우근, 2007, 「5·18기념사업에 대한 하나의 반성」,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 5·18과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5·18기념재단.
- 이길용, 2011, 「근본주의와 종교」, 『종교 근본주의 - 비판과 대안』,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이나미, 2011a, 「박정희 정권과 한국 보수주의의 퇴보」, 『역사비평』 2011년 여름호, 역사비평사.
- _____. 2011b, 『한국의 보수와 수구 - 이념의 역사』, 지성사.
- 이동진, 2009, 「기억의 '인혁당': 기억 운동과 기억 체제 사이」, 『사회와 역사』 제83집, 한국사회사학회.
- 이재승, 2010, 『국가범죄』, 앨피.
- 이호중, 2007, 「인혁당 재건위 재심무죄판결의 의미와 사법과거청산의 과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 보고대회 발표자료.
- 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광명기획.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웹사이트 내 5·18바로잡기 유형별 조사-보수웹사이트 텍스트를 중심으로』.
- 정근식, 2001, 「청산과 복원으로서의 5월 운동」,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 정웅태, 2006, 「5·18관련자 재판의 전개과정」,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 정호기, 2003, 「광주민중항쟁의 '트라우마티즘' 과 기념공간」, 『경제와 사회』 여름호(통권 제58호).
- 조용환, 2006, 「5·18특별법과 전·노재판의 문제점」,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 조현연, 2007, 「5·18 진상규명 투쟁과 광주청문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 5·18과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5·18기념재단.
- 조희연, 2002, 「민주주의 이행과 과거청산」,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조희연 편, 함께읽는책.
- 주디스허먼, 2012, 『트라우마-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열린책들.
- 지만원, 2010, 『솔로몬 앞에 선 5·18』, 도서출판 시스템.
- 최대광, 2011, 「기독교 근본주의의 정의와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종교 근본주의 - 비판과 대안』,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최정기, 2008,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발생 기제-광주 '5·18'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와 사회』 봄호(통권 제77호).
- 최현정, 2009, 「트라우마 이해」, 평화박물관(트라우마 강좌 교안).
- 황용연, 2011, 「근본주의:달함과 실패의 징후에 관하여」, 『종교 근본주의 - 비판과 대안』,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허일태, 2007, 「인혁당 재건위사건과 사법실인」, 『동아법학』 제40호.
2. 기타자료 : 조서, 회의록, 보고서, 신문기사, 논평
- 4.9통일평화재단, 2012.9.12, 「(성명서) 박근혜는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_____, 2012.9.24, 「9월 24일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대한 유족·관련자들의 입장 발표문」.

- 검찰. 1999a. 「권정달 진술조서 제3회」,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b. 「허화평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c. 「이학봉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e. 「주영복 진술조서」,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f. 「전두환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g. 「이희성 진술조서」,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h. 「권승만 진술조서」,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i. 「김일옥 진술조서」,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j. 「안부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k. 「안부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l. 「안부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m. 「안부웅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총구와 권력』, 조선일보사.
- _____. 1999n. 「광주지검 검시조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0권,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 경향신문. 1995.12.29. 「교도소주변 양민학살 확인」.
- 국민행동본부. 2007.9.10. 「영화 '화려한 휴가' 의 터무니없는 왜곡에 왜 軍은 침묵하는가?」, 『조갑제닷컴』.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주요 의혹사건편』, 상권(II). 국가정보원.
- 국회. 1988.11.18.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 _____. 1988.11.19.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 _____. 1988.12.7.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
- _____. 1988.12.19.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호」.
- _____. 1988.12.20.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호」.
- _____. 1988.12.21.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호」.
- _____. 1989.1.26.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호」.
- _____. 1989.1.27.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호」.
- 김동문. 2007.2.11. 「광주시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조작한 사적비 정제(2)」, 『뉴스타운』.
- _____. 2010.6.11. 「5·18 실체규명위원회 출범」, 『뉴스타운』.
- _____. 2010.10.25. 「5·18 실체규명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뉴스타운』.
- 김성욱. 2007.9.13. 「'화려한 휴가' 향군이 나서라」, 『프리존뉴스』.
- 김수연. 2007.9.18. 「'화려한 휴가' 비판 의견 압도적」, 『조갑제닷컴』.

- 김진철, 2009.8.19.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 할것입니다.」, 『구국기도』,
 _____, 2009.8.27. 「진실이 없는 역사는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구국기도』,
 _____, 2009.11.7. 「전두환 전대통령 안보정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평화의담에 세우자」, 『구국기도』,
 김형태, 2011.2.13. 「[김형태 칼럼] ‘인혁당’ 두 번 죽인 대법원 판결」, 한겨레신문,
 뉴데일리, 2007.9.9. 「조갑제 “화려한 휴가=화려한 왜곡”」,
 _____, 2011.3.18. 「5·18 실제규명위원회 폭행 4명 벌금 처분」,
 뉴스타운, 2010.1.19. 「지만원 박사 5·18 명예훼손재판 무죄」,
 뉴시스, 2010.6.29. 「선진당 “인혁당 사건, 전면 재조사 불가피”」,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II」,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2.10.25. 보도자료 「지만원 회원 체포는 부당하다」,
 데일리서프라이즈, 2004.11.30. 「“광주사태가 친북세대 길렀다” 메일 파문」,
 독립신문, 2006.2.28. 「“과거사위 즉시 해체하라” 전 국정원 직원들 ‘과거사 진상규명’ 비판」,
 _____, 2007.9.21. 「‘화려한 휴가’ 제작자에 민·형사 고소 검토」중 ‘공수부대출신들의 성명서」,
 _____, 2010.7.5. 「인혁당,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됐다」,
 _____, 2010.7.9. 「시민단체, 인혁당사건 재조사 촉구」,
 동아일보, 1974.4.25. 「민청학련사건 수사상황」,
 머니투데이, 2012.9.10. 「박근혜 “인혁당 판결 두개” 논란 ··· ‘통합’ 걸림돌 될까」,
 박세직, 2007.10.5. 「“향군회원은 이 나라 안보의 마지막 보루”」, 『코나스』,
 _____, 2007.11.8. 「“다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애국자라야”」, 『코나스』,
 백승목, 2007.2.1. 「인혁당사건 뒤집기, 역사조작 서막」, 『독립신문』,
 뉴스앤뉴스, 2012.9.12. 「인혁당 유족 “박근혜, 우릴 두 번 죽이다니”」,
 _____, 2012.11.26. 「박근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 발의」,
 소나무, 2007.1.25. 「이재오, 정동영의 연좌제 부활의 꿈」, 『프리존뉴스』,
 송경화, 2011.2.25. 「국가폭력 희생자들 우롱하는 대법원」, 『한겨레21』 제849호,
 삼 덕, 2007.1.25. 「32년 전에 사형 집행했는데, 이제 무죄?」, 『프리존뉴스』,
 _____, 2007.1.31. 「1월 27일자 조선일보에서 건진 화두」, 『프리존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8.28a, 「이덕삼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_____, 2006.8.28b, 「나갑열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_____, 2006.9.18. 「신홍수 증인신문조서(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
 _____, 2008.10.23a, 「김태근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_____, 2008.10.23b, 「김강진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신동아, 1996. 「검찰 작성 5·18사망자 165명 부검 자료」, 『신동아』 1996년 1월호,
 _____, 2003. 「똥똥 뭉친 한국 보수진영의 ‘역습’」, 『신동아』 2003년 10월호.

- 역사학도, 2003.3.26. 「대자보와 한국판 홍위병 등장에 비추어 본 5·18 사태」, 『조갑제닷컴』.
- _____, 2004.10.21. 「5·18 광주폭동은 반미주의의 뿌리이며 북괴군의 적화전략이다」,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 _____, 2005.4.6. 「광주사태에 대한 원희룡의 약속과 한홍구의 거짓말」,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 _____, 2005.5.21. 「폭동 주동자들이 문화방송국을 불태운 이유」,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 _____, 2005.7.16. 「대자보 정치와 한국판 홍위병 운동의 기원」,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 _____, 2006.12.22. 「5·18 광주사태에 개입했던 북한군의 실체에 대한 기자회견 보고서」,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 _____, 2007.8.4. 「5·18 광주시민군이 먼저 발포하였다」,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 _____, 2008.2.9. 「5·18 무장단체가 5월 21일 12시 이전에 무장하였다는 증거」,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 _____, 2009.4.14. 「광주에 침투한 300명의 불순세력과 북한군 300명」,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 연합뉴스, 1995.12.14. 「“5.18 당시 시민군 光州교도소 습격 사실무근”」.
- _____, 2006.1.23. 「‘인혁당 재건위’ 사건관련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 _____, 2008.1.23. 「인혁당 사건 생존자 33년만에 무죄 판결」.
- _____, 2008.6.3. 「5·18단체 명예훼손으로 전사모, 지만원씨 고소」.
- _____, 2008.9.18. 「인혁당 재심결정… 30년만에 명예회복 길 열려」.
- _____, 2009.7.22. 「인혁당 사건 생존자에 또 배상판결」.
- _____, 2009.11.17. 「인혁당 사건 장석구씨 재심 무죄」.
- _____, 2012.9.11. 「차 ‘인혁당’ 발언에 역사인식 논란 재점화」.
- _____, 2012.9.12. 「인혁당 유가족 “우리를 두 번 죽이지 마라”」.
- 오마이뉴스, 2006.2.9. 「김진홍 “광주사태, 민주화운동의 치명적 독”」.
- _____, 2007.2.5. 「“뉴라이트, 인혁당 희생자 두 번 죽이지 말라”」.
- 올인코리아, 2010.7.10. 「5·18 단체, 대낮에 테러단체로 나타났다」.
- 이영민, 2006. 「인혁당 조작은 조작이다」, 『한국논단』 2006년 2월호.
- _____, 2007. 「정권마다 재심하나」, 『한국논단』 2007년 3월호.
- 이주천, 2010. 「5·18의 진상 밝힐 때가 됐다」, 『한국논단』 2010년 5월호.
- 이투데이, 2012.9.24. 「[전문] 박근혜, 박정희시대 피해자에 사과 기자회견」.
- 일요신문, 2007.2.8. 「‘과거사’ 핵심인사 이용택 전 중정국장 인터뷰」.
- 임천용, 2006. 「북한 특수부대 출신자의 생생한 증언 - 5·18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한국논단』 2006년 12월호.

- _____. 2007, 「광주대학살의 주범은 전두환 아닌 김정일이다」, 『한국논단』 2007년 3월호.
- 전두환측, 1995, 「검찰질외에 대한 소견 및 논평」, 『월간조선』 95년 11월호, 조선일보사.
- 정창인, 2006,1,27, 「“국가반역이 민주화운동인가” “부끄러운줄 알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독립신문』.
- _____. 2006,1,28, 「광기의 집단최면에 걸린 반대한민국세력」, 『독립신문』.
- _____. 2007,1,30, 「‘무죄’의 의미」, 『독립신문』.
- _____. 2007,2,1, 「검찰의 직무유기」, 『프리존뉴스』.
- _____. 2007,8,7, 「국군을 적보다 더 미워한 무장폭동」, 『독립신문』.
- _____. 2007,9,11, 「‘디워’ 폄하는 ‘화려한 휴가’ 띄우기 음모」, 『프리존뉴스』.
- 제성호, 2007,2,3a,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아니다」, 『프리존뉴스』.
- _____. 2007,2,3b, 「인혁당사건 진실규명 시 풀어야 할 의문」, 『프리존뉴스』.
- 제주의소리, 2008,10,7, 「대형교회 목사, 43평화공원 폭도 추모 ‘망언」.
- 조갑제, 1996, 「전두환 구속은 정의를 구현하고 있나?」, 『월간조선』 1996년 1월호.
- _____. 2007,8,5, 「‘광주사태’ 라고 부를 자유도 없나?」, 『조갑제닷컴』.
- _____. 2007,9,7, 「‘화려한 휴가’의 ‘화려한 왜곡」, 『조갑제닷컴』.
- _____. 2008,11,8, 「“북한특수부대의 광주개입”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조갑제닷컴』.
- _____. 2007,9,11, 「장관이 침묵하면 현역 장교들이 발언할 때」, 『조갑제닷컴』.
- 조선닷컴, 2005,12,9, 「“인혁당 조작 주장은 모함” 박대표 밝혀」.
- _____. 2007,2,3, 「제성호 뉴라이트 대변인 “인혁당 사건, 정치공작 치부는 부당” 논란」.
- _____. 2010,6,29a, 「盧정부때 과거사조사 ‘짜맞추기’라 한 인혁당 실존한 지하黨이었다」.
- _____. 2010,6,29b, 「(박범진씨 일문 일답) “과거사=조작” 분위기에 침묵할 수 없었다」.
- 조영환, 2007,8,6, 「‘광주사태’가 맞다」, 『조갑제닷컴』.
- _____. 2010,7,9, 「‘5·18실체규명위’, 광주에서 폭행당했다」, 『프리존뉴스』.
- _____. 2010, 「광주사태의 폭란적 속성 간과하지 마라」, 『한국논단』 2010년 5월호.
- 지만원, 2006, 「단군 이래의 최대 사기는 ‘진보사기」, 『한국논단』 2006년 4월호.
- _____. 2009,12,9, 「역사바로세우기 판검사들은 심판받아야」, 『뉴스타운』.
- _____. 2010,1,13, 「5·18 역사는 이렇게 뒤집혔다」, 『뉴스타운』.
- _____. 2010,5,8, 「5·18세력은 북한과 내통된 빨갱이 세력」, 『뉴스타운』.
- _____. 2010,8,23, 「5·18 남측 주도자들 줄줄이 북한과 내통」, 『뉴스타운』.
- _____. 2010,8,26, 「5·18은 북한이 기획-연출했다」, 『뉴스타운』.
- 코나스, 2007,9,21, 「“反軍 영화 ‘화려한 휴가’ 규탄을」.
- _____. 2007,11,26, 「영화 <화려한 휴가> 고소당해」.
- 프리존뉴스, 2008,5,15, 「국민 15.6% “5·18은 폭동 또는 사태」.
- 한겨레, 2005,12,7,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정권차원 조작·과장」.

- _____. 2008.10.19. 「'4.3-5.18 폄하' 대형교회 목사 규탄」.
- _____. 2012.9.13. 「인혁당 아내 "죽어서 돌아온 남편 시신 손발톱 다 빠져·····"」.
- _____. 2012.11.27.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 발의에·····」.
- _____. 2012.12.21. 「새누리 "부마항쟁·긴급조치 보상법 연내 처리」.
- 한국논단. 1996. 「광주 15년 총, 누가 먼저 쓰았나」. 『한국논단』 1996년 1월호.
- _____. 2006. 「탈북 인민군 장교들의 충격 증언」. 『한국논단』 2006년 11월호
- 한국일보. 2007.1.23. 「인혁당 사형수 8명 32년만에 무죄 선고」.
- 허재현. 2012.1.16. 「외로운 '아스팔트 우파'」. 『한겨레21』 제894호.

3) 인터넷 웹사이트

- 49통일평화재단 홈페이지(www.49peace.org)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홈페이지(www.v518.org)
- 구국기도 홈페이지(www.korea318.com)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코나스 홈페이지(www.konas.net)
- 뉴데일리 홈페이지(www.newdaily.co.kr)
- 뉴스타운 홈페이지(www.newstown.co.kr)
- 뉴스시스 홈페이지(www.newsis.com)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홈페이지(www.korva.or.kr)
- 독립신문 홈페이지(www.independent.co.kr/news)
- 신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구국기도 홈페이지(www.advkorea.com)
-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카페(<http://cafe.daum.net/issue21>)
- 연합뉴스 홈페이지(www.yonhapnews.co.kr)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www.ohmynews.com)
- 올인코리아 홈페이지(www.allinkorea.net)
- 조갑제닷컴 홈페이지(www.chogabje.com)
- 조선닷컴 홈페이지(www.chosun.com)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www.systemclub.co.kr)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구 홈페이지(<http://systemclub.net>)
- 프리존 홈페이지(www.freezone.co.kr)
- 한국논단 홈페이지(www.kforum.co.kr)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denial of 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in Korea

- in the cases of the Committee to Reestablish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and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Kim, Bo Kyeong
Department of NGO
Graduate School of NGO
Sungkonghoe University

The thesis is a research on the denials that occurred in relation to clarifying the wrongs committed in the cases of the Committee to Reestablish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and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Since reprodu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assumes socio-psychological denial,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structure of denial in the incid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in the past authoritarian regimes.

The thesis took as the two cases of study the denials expressed by the perpetrators during the process of clarifying the past and the denials expressed by the supporters of the perpetrators after the process, surrounding the two incidents of the Committee to Reestablish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and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two incidents stand as representativ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1970s and 1980s, respectively.

The research used the method of recognition theory of Stanley Cohen and Axel Honneth, to analyze the socio-psychological techniques and the structures and causes of the denial of the past wrongs of the two cases. The socio-psychological techniques of the denials were analyzed by categories of literal denials, interpretive denials and imploratory denials. The structure of denial of the past wrongs were analyzed by subject of denial, techniques of

denial, point of time of denial, activities of denial and channels of denial. The research also includes analyses of the causes of the denial by the supporters of the perpetra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overcoming social ignorance types and recognition struggles for restoration of value community.

The research found that it was the literal denial that both the perpetrators and their supporters used most often. The perpetrators denied the key issues of the incid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their supporters denied the contents of clarification of the past and attempted to reconstruct the factual aspects. Imploratory denials were used by both the perpetrators and the supporters in justifying the cases of violation using the national security need. However, for interpretive denial, the perpetrators used denial by hierarchy and the supporters used legal-formalistic denial that highlight legal flaws in 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relatively more often.

Concerning the structure of denial, the thesis found that the perpetrators denied the facts as a defense of themselves in the investigating process of the hearings, investigating agencies and the prosecution that happened during the regime transition period. In comparison, the supporters, who are mostly military officers in the reserve and anti-communist protestant pastors sharing identity with the perpetrators, engaged in the activities of denial during the post clarification period when the influence of democratic forces became weaker. They did so through actively producing discourses of denial. The supporters mostly produced and disseminated such discourses on-line, and publicized them off-line through press conferences, public statements, filing legal cases, defense in the court, and public talks. And they maximized their denial at opportune moments of conflict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and public talks of the subject of denial.

The main motivation of the supporters' denial of the past wrongs comes from their fear of losing their identity. The supporters are mostly conservative forces who have experienced 'ignorance' that their values were negated and their identities of anti-communism, statism, and fundamentalism were dismantled by social change, regime change and clarification of the past. It is in response to this social ignorance that they engage in recognition struggles that is denial of 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and through such

engagement, attempt to restore their identity and value community of 'anti-communist community for growth.'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complete clarification of the past serves as background for its denial. 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has met obstacles in Korea - the macro obstacles of the limitation of the 'conservative democratization from the top,' and other obstacles such as lack of holistic perspectives in clarifying the past wrongs, insufficient authority given to investigating agencies, non-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agencies, clarification of the past without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lack of the culture of reflection and recognition of the wrongs of the state, and weak social awareness on the pain and trauma of the victims.

Denial of the past wrongs can lead to social pain and deepened trauma of the victims. Victims' pain and trauma became more acute because of the denial by the verdict of "not guilty" given by the court of review, the verdict of reduced reparation by the supreme court, the denial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Park Geun-hye on the court decision on the case of the Committee to Reestablish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 the case of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victims' trauma and pain deepened because of the collective and insistent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distorted discourses on the incident by conservative forces. The healing of these traumas requires thorough clarification of the past,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treatment center, open social space, social recognition and support.

* Key Words : the Committee to Reestablish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state violence, clarification of the past, denial of 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perpetrator, supporter of perpetrator, literal denial, interpretive denial, imploratory denial, recognition struggle, social ignorance, value community, trauma

*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generous financial support of the 2010 May 18 Professional Researchers Support Scheme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